

기획연구
2010-10

2010년 충남도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1)

정책기획단

기획연구
2010-10

2010년 충남도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1)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70-0 03350

기획연구 2010-10

2010년 충청남도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1)

발 간 사

2010년 7월 민선 5기 충남도정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표방하며 출범하였다. 민선5기 충남도정은 한편에서는 민선4기까지의 도정을 계승 발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도정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약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하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지역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여건 하에서 민선 5기 충남도정이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전략으로 도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러한 과제에 답하기 위해 충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은 2010년 8월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남정책기획추진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하였다. ‘기획단’은 도의 실국 체제를 고려하여, 기획, 자치행정, 경제통상, 교육, 사회복지, 문화, 농수산, 환경, 건설교통 분야를 나누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총괄재정분야를 추가하여 운영하였다. ‘기획단’은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비전 및 전략을 통한 정책개발과 로드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도의 기존 사업과 예산을 점검 평가하여 비효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사업과 예산을 조정하여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충남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 5기 충남도가 한정된 재원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과제를 각 분야별로 제안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민선 5기 충남도정의 기조로서 생활밀착형 지방자치와 내발적 지역발전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정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지양하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문(농수산,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과 도민의 역량 강화에 도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유치 등에 의한 외생적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남도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의 성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역이 자신의 운명을 외래자본이나 중앙정부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 역량을 키워 장기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제를 갖고, ‘충남정책기획추진단’(가칭)은 8월부터 12월말까지 각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추진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 십차례 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처음 하는 일이라 보고서의 내용이 여러 모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작업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정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말할 나위 없고, 충남도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와 시민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각 분과위원장을 맡아 헌신적으로 연구를 주도한 이정만(총괄재정), 장수찬(자치행정), 장수명(교육), 강현수(경제통상), 류진석(사회복지), 김교빈(문화), 허승욱(농수산), 이기훈(환경), 고은태(건설교통)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연구에 참여한 우리 연구원의 송두범, 고승희, 임명재, 신동호, 조영재, 김경태, 오혜정, 오용준 박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토론 및 정리 등을 함께 해주신 충남도 관계자와 정재현 초빙연구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 차 례 >

제 I 편 총괄 재정 분야	1
제1장 충남 재정의 현황 및 기본적 특징	7
제2장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35
제3장 사업예산의 총괄적 분석	51
제4장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59
제 II 편 기획 분야	83
제 II-1편 감사관실	89
제1장 충남 감사관실 일반현황	91
제2장 충남 감사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01
제3장 충남 감사관실 주요 사업 평가	109
제4장 충남 감사관실 전략 과제	115
제 II-2편 공보관실	121
제1장 충남 공보관실 일반현황	123
제2장 충남 공보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31

제3장 충남 공보관실 주요 사업 평가	141
제4장 충남 공보관실 전략 과제	147
제Ⅱ-3편 기획관리실	153
제1장 충남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155
제2장 충남 기획관리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67
제3장 충남 기획관리실 주요 사업 평가	201
제4장 충남 기획관리실 전략 과제	209
제Ⅲ편 자치행정 및 공무원교육원 분야	219
제Ⅲ-1편 자치행정	223
제1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일반현황	225
제2장 자치행정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241
제3장 자치 행정 분야 주요 사업 평가	261
제4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전략 과제	279
제Ⅲ-2편 공무원교육원	291
제1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일반현황	293
제2장 자치행정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307

제3장 자치 행정 분야 주요 사업 평가	315
제4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전략 과제	319
 제 IV 편 경제산업 · 투자통상 분야	 333
제 IV-1편 경제산업	339
제1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일반현황	341
제2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359
제3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주요 사업 평가	391
제4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전략 과제	415
 제 IV-2편 투자통상	 435
제1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일반현황	437
제2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455
제3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사업 평가	473
제4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전략 과제	491
 제 V 편 교육 분야	 503
제1장 충남 교육 분야 일반현황	509

제2장 충남 교육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549
제3장 충남 교육 분야 주요 사업 평가	585
제4장 충남 교육 분야 전략 과제	593
 제 VI 편 사회복지 분야	 645
제1장 충남 사회복지 분야 일반현황	651
제2장 충남 사회복지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671
제3장 충남 사회복지 분야 주요 사업 평가	705
제4장 충남 사회복지 분야 전략 과제	735
 제 VII 편 문화 분야	 763
제1장 충남 문화 분야 일반현황	767
제2장 충남 문화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787
제3장 충남 문화 분야 주요 사업 평가	807
제4장 충남 문화 분야 전략 과제	813
 제 VIII 편 농수산 분야	 825
제1장 충남 농수산 분야 일반현황	831
제2장 충남 농수산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851

제3장 충남 농수산 분야 주요 사업 평가	877
제4장 충남 농수산 분야 전략 과제	899
 제 IX 편 환경 분야	 925
제1장 충남 환경 분야 일반현황	931
제2장 충남 환경 사업 현황 및 환경 사업 예산 분석	951
제3장 충남 환경 행정(사업) 평가	965
제4장 충남 환경 행정(사업) 방향과 전략	971
부록	1007
 제 X 편 건설교통 분야	 1025
제1장 충남 건설교통 분야 일반현황	1029
제2장 충남 건설교통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053
제3장 충남 건설교통 분야 주요 사업 평가	1083
제4장 충남 건설교통 분야 전략 과제	1107

제 I 편 충남 총괄 재정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충남 재정의 현황 및 기본적 특징

제2장.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제3장. 사업예산의 총괄적 분석

제4장.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정만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철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동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 례]

제1장 충남 재정의 현황 및 기본적 특징	7
1. 2010년 재정규모와 5년간 추이	8
가. 재정규모	8
나. 재정규모의 추이	11
2. 세입구조의 특징	12
가. 세입재원별 구조	12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9
다. 지방채 발행 규모와 추이	22
3. 세출구조의 특징	25
가. 기능별 세출구조	25
나. 품목별 세출구조	28
다. 성질별 세출구조	31
 제2장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35
1. 세입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36
가. 세입구조의 문제점	36
나. 세입구조의 과제	39
2. 세출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47
가. 세출구조의 문제점	47
나. 세출구조의 과제	49
 제3장 사업예산의 총괄적 분석	 51
1. 재원별 사업구조	52
2. 사업집행주체별 사업구조	56
 제4장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59
1.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60
가.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60
나.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문제점	60
다.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도출	62
라. 충청남도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65
2. 투자가용재원의 확충방안	68
가. 민선5기 충남 예산 운영의 기본방향	68
나.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제약요인과 가능성	71
다.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	73
라.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78

[참고문헌]	81
----------------	----

[표 차례]

<표 1-1> 2010년 충남의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8
<표 1-2> 2010년 시군 포함 충남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9
<표 1-3> 2010년 시군 포함 충남재정의 시군별 비중(당초예산)	9
<표 1-4> 2009년 충남과 광역도의 재정규모 비교(결산 총계기준)	10
<표 1-5>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10
<표 1-6> 충남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11
<표 1-7> 광역자치단체(시/도)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11
<표 1-8>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조	12
<표 1-9> 충남과 동종 지자체(도 본청)의 살림규모 대비 자체재원 비중 비교	13
<표 1-10>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비교	13
<표 1-11> 충남 지방세(도세) 징수현황	14
<표 1-12>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15
<표 1-13> 충남 지방세(도세) 대비 취득세+등록세 비중	15
<표 1-14> 충남 지방세(도세) 체납현황(2010년 7월 현재)	16
<표 1-15> 충남의 지방세 수납액 현황	16
<표 1-16> 충남 세외수입의 구성항목별 비중	17
<표 1-17> 세외수입 수납액	17
<표 1-18> 충남 세외수입액 및 1인당세외수입액 추이	18
<표 1-19>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의 자치단체별 비교	18
<표 1-20>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19
<표 1-21>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20
<표 1-22>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현황(2010년)	21
<표 1-23> 충남의 지방채 현황 및 동종 지자체 현황 비교	22
<표 1-24> 충남의 지방채 발행 내역	22
<표 1-25> 충남 지방채의 회계별 발행내역	23
<표 1-26>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08 결산기준)	24
<표 1-27> 충남 개발공사 경영정보	24
<표 1-28> 충남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일반회계 기준)	26
<표 1-29> 2010년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27
<표 1-30> 전체 세출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비교	28
<표 1-31> 2010년 자치단체별 세출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비교	28
<표 1-32> 충남 세출예산의 성질별(품목별) 비중	29

<표 1-33> 2010년 충남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 이전지출 비중	29
<표 1-34>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일반회계)	30
<표 1-35> 2010년 자치단체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일반회계)	30
<표 1-36> 2010년 주민 1인당 인건비	31
<표 1-37> 충남의 전체 세출 정책사업비 비중	31
<표 1-38>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정책사업비 비중	32
<표 1-39> 충남의 전체 세출 대비 자체사업비 비중	32
<표 1-40>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비 비중	33
<표 1-41> 충남의 전체 세출 보조사업비 비중	33
<표 1-42>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보조사업비 비중	34
<표 2-1>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전망	43
<표 3-1> 충남 의존재원의 재원별 현황 및 비중(2008~2010)	52
<표 3-2> 2010년 세출분야별 의존재원 현황	54
<표 3-3> 정책사업의 재원별 규모 및 비중(2008~2010)	55
<표 3-4> 정책사업의 도청, 시군 시행 사업 비중(2008~2010)	56
<표 3-5> 2010년 정책사업의 분야별/시행주체별 비중	57
<표 4-1>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61
<표 4-2>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61
<표 4-3>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경상가용재원 산출방식	62
<표 4-4> 새로운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63
<표 4-5> 충남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66

[그림 차례]

<그림 1-1> 충남 및 지자체 지방재정규모의 연도별 변동률	11
<그림 1-2> 충남 및 지방의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19
<그림 1-3> 충남 및 지방의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21
<그림 1-4> 충남의 채무 추이	23
<그림 1-5> 충남 세출의 14대 부문별 구성(2010년 일반회계 기준)	25
<그림 2-1> 충남의 자체수입/의존수입 추이	36

제1장 충남 재정의 현황 및 기본적 특징

1. 2010년 재정규모와 5년간 추이

2. 세입구조의 특징

3. 세출구조의 특징

1. 2010년 재정규모와 5년간 추이

가. 재정규모

- 2010년 충남¹⁾ 본청의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3조 9,235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함
- 회계별 구성은 일반회계 3조 3,427억원(85.2%), 특별회계 5,808억원(14.8%)으로 이루어짐²⁾
- 순계기준³⁾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은 예산총계(3조 9,235억원)에서 중복계산분(2,304억원)⁴⁾을 제외한 3조 6,931억원임

〈표 1-1〉 2010년 충남의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단위 :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0 예산(A)	39,235	33,427	5,808
증감액(A-B)	594	1,047	-453
증감율	1.5	3.2	-7.2
2009당초(B)	38,641	32,380	6,261
2009최종예산	42,189	35,887	6,302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 2010년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당초예산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10조 6,199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함
- 회계별 구성은 일반회계 8조 7,772억원(82.6%), 특별회계 1조 8,427억원(17.4%)으로 이루어짐⁵⁾
- 순계기준 2010년 시군 포함 충남의 당초예산은 예산총계(10조 6,199

1) 이하 충남의 재정 및 예산이라 함은 시군을 제외한 본청 기준을 의미하고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시군 포함이라고 명시함.

2) 기금은 3,178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4조 2,413억원임.

3) 순계기준은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함.

4)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2,304억원)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전출입금 1,031억원, 용자금수입지출 400억원, 용자금회수 및 상환 43억원, 예탁/예수금상환 29억원 등임(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참조).

5) 기금은 6,076억원이며, 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11조 2,243억원임.

억원)에서 중복계산분(2조 6,911억원)⁶⁾을 제외한 7조 9,289억원임

- 시군을 포함한 전체 예산 중 본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이며, 시군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3.1%임⁷⁾

〈표 1-2〉 2010년 시군 포함 충남 회계별 재정규모(당초예산)

(단위 : 억원, %)

		합 계			도 본청			시군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2010예산(A)		106,199	87,772	18,427	39,235	33,427	5,808	66,964	54,345	12,619
	증감액(A-B)	2,726	3,722	-996	594	1,047	-453	2,132	2,675	-543
	증감율	2.6	4.4	-5.1	1.5	3.2	-7.2	3.2	5.2	-4.1
2009당초(B)		103,473	84,050	19,423	38,641	32,380	6,261	64,832	51,670	13,162
2009최종예산		114,714	96,093	18,621	42,189	35,887	6,302	72,525	60,206	12,319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표 1-3〉 2010년 시군 포함 충남재정의 시군별 비중(당초예산)

(단위 : 억원, %)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비중	전년대비 증감율		
합계	106,199	100.0	2.6	87,772	18,427
도본청	39,235	36.9	1.5	33,427	5,808
시군계	66,964	63.1	3.3	54,345	12,619
천안시	11,300	10.6	5.6	7,300	4,000
공주시	4,551	4.3	2.0	3,927	624
보령시	4,394	4.1	-11.6	3,599	795
아산시	7,374	6.9	10.9	5,405	1,969
서산시	4,866	4.6	7.2	3,904	962
논산시	4,116	3.9	-1.0	3,547	569
계룡시	1,158	1.1	-3.0	900	258
금산군	2,672	2.5	5.8	2,286	386
연기군	2,851	2.7	8.2	2,503	348
부여군	3,727	3.5	8.1	3,349	378
서천군	2,800	2.6	4.5	2,589	211
청양군	2,228	2.1	0.5	2,083	145
홍성군	3,518	3.3	7.2	3,332	186
예산군	2,902	2.7	6.1	2,751	151
태안군	3,040	2.9	-5.3	2,562	478
당진군	5,467	5.1	0.7	4,308	1,159

자료: 충남 도청 홈페이지(2010.9.2) 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6)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2조 6,911억원)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본청 내부거래(2,304억원)와 본청에서 시군으로 이전되는 외부거래(2조 4,607억원)로 구성됨. 외부거래의 대부분(83.3%)은 시군에 이전되는 보조금으로 2조 505억원에 달함.(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참조).

7) 시군계(6조 6,964)억원 중 천안시 등 7개 시의 비중은 56.4%이며, 9개 군의 비중은 43.6%임.

■ 2009년 총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1조 3,823억원 작음

- 2009년 결산기준 광역도의 평균 재정규모는 5조 7,947억원으로 충남보다 1조 3,823억원이 많음
- 충남의 2009년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액은 광역도 평균보다 각각 1조 1,170억원, 7,001억원, 2,523억원이 적음

〈표 1-4〉 2009년 충남과 광역도의 재정규모 비교(결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재정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충남	44,124	10,904	24,173	8,641	27,170
도 평균	57,947	22,074	31,174	11,164	105,748

자료: 2010년 충청남도 지방재정공시(2010.8).

■ 2010년 1인당 일반회계 재정규모, 동종단체(도) 평균보다 높음

- 그런데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⁸⁾은 164만원으로 동종단체(도) 평균인 142만원보다 2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도 단위에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제주도본청으로 394만원이며,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경기도 본청으로 89만원임

〈표 1-5〉 2010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천)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511	1,491	1,415	1,672	4,583	709
최 고 (단체명)	1,511 서울본청	1,553 부산본청	3,936 제주도본청	4,960 강원삼척시	14,010 충남홍성군	2,074 인천중구
최 저 (단체명)	- -	1,359 대전본청	887 경기도본청	648 충남계룡시	1,843 대구달성군	503 대전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1인당세출예산액.

8) 2010년 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총계기준)를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함(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참조).

나. 재정규모의 추이

■ 최근 5년간 충남 재정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연평균 11.2% 증가함

- 충남 재정규모(당초예산 총계기준)의 연도별 변동은 2005년 2조 5,236 억원에서 2009년에는 3조 8,641억원으로 연평균 11.2%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11.0%, 전체 지자체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10.9%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충남의 재정규모는 비슷한 규모의 증가세를 보였음

〈표 1-6〉 충남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005	25,236	-	11.2
2006	27,614	9.4	
2007	31,799	15.2	
2008	35,499	11.6	
2009	38,641	8.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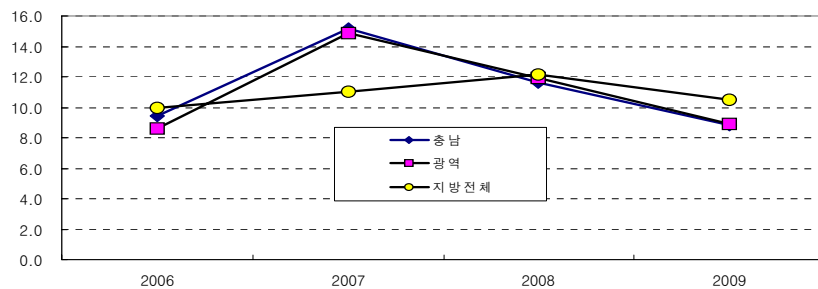
〈표 1-7〉 광역자치단체(시/도) 재정규모의 연도별 추이(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연도	금액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2005	560,977	-	11.0
2006	608,962	8.6	
2007	699,785	14.9	
2008	783,259	11.9	
2009	853,019	8.9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현황 지방예산규모.

〈그림 1-1〉 충남 및 지자체 지방재정규모의 연도별 변동률(%)



2. 세입구조의 특징

가. 세입재원별 구조

■ 2010년 일반회계 세입의 자체재원 비중 28.0%

- 2010년 충남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은 3조 3,427억원으로 이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⁹⁾ 의존재원의 비중은 72.0%임
- 자체재원의 핵심이 되는 지방세의 비중은 23.5%에 그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55.1%에 달함

〈표 1-8〉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조

(단위: 억원, %)

		금액	비중
자체재원	지방세	7,850	23.5
	세외수입	1,526	4.5
	소계	9,366	28.0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5,651	16.9
	국고보조금	18,410	55.1
	지방채*	0	0.0
	소계	24,061	72.0
합계		33,427	100.0

주: * 2010년 당초예산 총계기준 일반회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음.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도의 일반회계 예산.

■ 동종 지자체(도) 평균 보다 자체재원비중이 크게 뒤처짐

- 2009년도 결산공시 기준 살림살이(일반회계+특별회계) 중 자체재원의 비중은 24.7%로 동종 지자체(도)의 자체재원 비중평균인 38.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충남의 전체 살림살이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8년 29.8% 이후 3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자체재원의 확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9) 뒤에서 언급되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단위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자체재원의 비중과 재정자립도는 일치하지 않음

〈표 1-9〉 충남과 동중 지자체(도 본청)의 살림규모 대비 자체재원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충남				동중 지자체 평균(광역시도 본청)			
	살림규모* (A)	자체재원 (B)	자체재원비중 (B/A)	의존재원	살림규모* (A)	자체재원 (B)	자체재원비중 (B/A)	의존재원
2007	35,825	11,579	32.3	17,022	48,966	19,997	40.8	19,771
2008	39,141	11,669	29.8	19,365	51,926	22,612	43.5	25,983
2009	44,124	10,904	24.7	24,173	57,947	22,074	38.1	31,174

* 살림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을 의미하며, 재정공시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자료: 충남 도청의 재정공시(2010.9)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2010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46만원으로 도 평균 51만원보다 작음

- 충남의 2010년도 일반회계 기준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¹⁰⁾은 46만원으로 동중 지자체(도) 평균인 51만 1천원에 미치지 못함
- 도 단위 중에서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제주도 본청으로 109만 8천원이며,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전남 본청으로 31만 5천원 수준임

〈표 1-10〉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278	876	511	669	825	251
최 고 (단체명)	1,278 서울본청	1,097 인천본청	1,098 제주도본청	1,348 경기도본청	2,846 충남홍성군	1,694 서울종구
최 저 (단체명)	- -	693 광주본청	315 전남본청	146 충남계룡시	391 충북단양군	88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10)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함.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은 순계예산규모로,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규모로 산출함.

■ 2005~2009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2.1%에 그침

- 충남 지방세 수입은 2005년 7,441억원에서 2009년 8,09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는 동 기간 충남의 재정규모(일반회계)가 연평균 8.8% 증가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이며, 재정자립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¹¹⁾
- 레저세는 2005년 44억원에서 2009년 123억원으로 2005~2009년 동안 연평균의 29.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전체 지방세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2005~2009년 동안 각각 연평균 0.4%, 0.9% 증가하는데 그침

〈표 1-11〉 충남 지방세(도세)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연평균 증감률
소계	744,118	787,104	781,173	804,481	809,513	(100.0)	2.1
취득세	291,226	307,115	297,341	293,040	295,416	(36.5)	0.4
등록세	276,859	284,721	274,016	280,655	287,433	(35.5)	0.9
면허세	2,170	2,343	2,469	2,625	2,666	(0.3)	5.3
레저세	4,386	6,115	9,008	11,535	12,350	(1.5)	29.5
공동시설세	16,868	19,821	21,921	23,911	24,063	(3.0)	9.3
지역개발세	451	503	517	493	520	(0.1)	3.6
지방교육세	140,194	155,913	164,341	179,738	184,833	(22.8)	7.2
과년도수입	11,964	10,573	11,560	12,484	2,232	(0.3)	-34.3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자료를 기초로 작성성.

■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¹²⁾ 38만 5천원, 도 평균보다 낮아

- 충남의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38만 5천원 수준으로 동 중 자치단체(도) 평균인 45만 2천원보다 6만 7천원이 낮음
- 도 단위에서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가장 큰 도 단위 자치단체는 제주도 본청으로 84만 1천원이며, 가장 작은 도 단위 자치단체는 전남 본청으로 27만 5천원 수준임

11) 도 재정자립도 산출 시 제외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증가율은 1%대 이하로 나타남.

12) 2010년 지방세액을 2009년 12월 31일 기준 인구로서 나누어 산출함.

〈표 1-12〉 자치단체 유형별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136	761	452	442	391	126
최 고 (단체명)	1,136 서울본청	927 인천본청	841 제주도본청	753 경기광주시	1,357 충북진천군	923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	650 광주본청	275 전남본청	76 충남계룡시	134 충북단양군	33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 전체 지방세에서 (취득세+등록세)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충남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등록세의 비중은 2005년 76.3%에서 2009년 70.2%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큰 폭으로 증가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됨

〈표 1-13〉 충남 지방세(도세) 대비 취득세+등록세 비중

(단위: 백만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지방세(A)	744,118	787,104	781,173	804,481	809,513
취득세+등록세(B)	568,085	568,085	568,085	568,085	568,085
비중(B/A)	76.3	72.2	72.7	70.6	70.2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2010년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31억원임

- 2010년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누계 기준으로 83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468억원을 제외한 2010년 체납액은 363억원임
- 2010년 신규 체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동시설세로 155억원에 달하며, 다음으로 취득세(96억원), 지방교육세(95억원)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4〉 충남 지방세(도세) 체납현황(2010년 7월 현재)

(단위: 백만원)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 시설세	지역 개발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체납액	83,146	9,557	1,495	198	15,528	25	9,549	46,794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2010.9).

- 충남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세 수납비율은 최하 92.5%에서 최대 94.7%이며, 지방세 징수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표 1-15〉 충남의 지방세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미 수 납 액			
				B/A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2009	750,385	874,747	809,513	92.5%	65,234	10,346	54,888
2008	826,000	859,269	804,481	93.6%	54,788	7,412	47,376
2007	780,000	834,926	781,174	93.6%	53,752	9,200	44,552
2006	750,000	839,825	787,104	93.7%	52,720	11,202	41,519
2005	696,000	785,544	744,118	94.7%	41,426	3,847	37,579

자료: 각 년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05-2010).

■ 2010년 충남 세외수입액 1,516억원, 전년대비 15.4% 감소

-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외수입액은 전년도에 비해 15.4% 감소한 1,516억원으로 편성됨
- 2010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은 각각 21.9%, 78.1%로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2010년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 매각수입 및 잉여금 수입이 전년대비 각각 31.7%, 31.3% 감소했기 때문임

〈표 1-16〉 충남 세외수입의 구성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

		2009		2010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경상적 세외수입	소계	29,927	16.7	33,166	21.9	10.8
	재산임대수입	767	0.4	767	0.5	0.0
	사용료수입	4,051	2.3	5,188	3.4	28.1
	수수료수입	3,477	1.9	3,666	2.4	5.4
	사업수입	1,748	1.0	1,934	1.3	10.6
	징수교부금수입	4,705	2.6	6,376	4.2	35.5
	이자수입	15,176	8.5	15,232	10.0	0.4
임시적 세외수입	소계	149,252	83.3	118,441	78.1	-20.6
	재산매각수입	45,200	25.2	30,873	20.4	-31.7
	잉여금	80,000	44.6	55,000	36.3	-31.3
	전입금	3,762	2.1	7,695	5.1	104.5
	용자금원금수입	5,000	2.8	5,000	3.3	0.0
	부담금	14,028	7.8	18,813	12.4	34.1
	잡수입	761	0.4	560	0.4	-26.4
합계		179,179	100.0	151,607	100.0	-15.4

자료: 충남 2010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서를 기초로 작성.

- 연도별 세외수입 수납비율은 최하 97.3%에서 최대 98.7%로 큰 차이가 없으며, 세외수입 수납비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음¹³⁾

〈표 1-17〉 세외수입 수납액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실제 수납액 (B)	B/A	미 수 납 액		
					계 (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2009	269,874	285,681	280,830	98.3%	4,851	388	4,463
2008	238,447	367,261	362,442	98.7%	4,819	299	4,520
2007	370,667	388,464	376,725	96.9%	11,739	54	11,686
2006	382,480	427,577	415,978	97.3%	11,600	155	11,445
2005	399,930	425,650	414,607	97.4%	11,042	81	10,960

자료: 각 연도 충청남도 재정공시(2005-2010).

13) 〈표 1-16〉과 〈표 1-17〉의 세외수입액 차이는 예산과 결산의 차이임.

■ 2010년 충남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 7만 4천원 수준

- 2010년 충남의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7만 4천원으로 동종 지자체 (도) 도 평균 1인당 세외수입액인 5만 9천원을 상회하고 있음
-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주민 1인당 세외수입이 가장 큰 자치단체는 제주도 본청으로 25만 8천원, 가장 작은 자치단체는 전북 본청으로 2만 9천원에 그치고 있음
- 2005~2010년 동안 충남의 세외수입액은 1,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라 변동을 보이고 있음

〈표 1-18〉 충남 세외수입액 및 1인당세외수입액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외수입액 (백만원)	142,233	148,495	155,122	133,540	179,180	151,608
인구수 (천명)	1,953	1,963	1,974	1,996	2,019	2,038
1인당세외수입액 (천원)	73	76	79	67	89	74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자료를 기초로 작성.

〈표 1-19〉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의 자치단체별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42	115	59	226	434	125
최 고 (단체명)	142 서울본청	170 인천본청	258 제주도본청	844 강원태백시	2,206 경북울릉군	771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	43 광주본청	29 전북본청	71 충남계룡시	147 전남무안군	45 부산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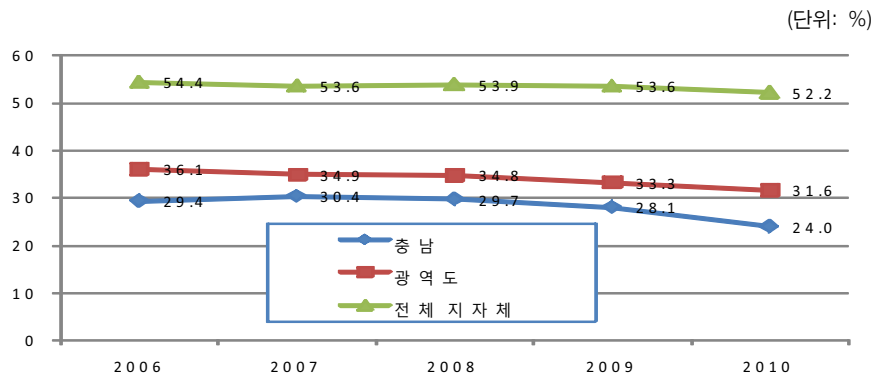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¹⁴⁾는 24.0%에 그침

-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 30.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에는 24.0%까지 떨어졌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인 52.2%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2010년 동종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립도인 31.6%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 2010년 광역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도는 경기도본청으로 59.3%이며, 가장 낮은 도는 전남본청으로 11.5%임

〈그림 1-2〉 충남 및 지방의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표 1-20〉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83.4	56.3	31.6	40.0	18.0	35.4
최고 (단체명)	83.4 서울본청	70.0 인천본청	59.3 경기도본청	67.4 경기성남시	48.6 울산울주군	82.9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	43.2 광주본청	11.5 전남본청	9.3 전북남원시	8.6 전남고흥군	11.4 부산서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재정자립도.

14)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여 전국 평균 및 시도평균은 순계 기준으로, 자치단체평균은 총계기준으로 작성함.

■ 2010년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임

- 시군을 포함한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본청의 재정자립도 24.0% 보다 높으나, 16개 시군별 격차가 심함
- 도시 평균은 36.7%이나, 군 평균은 23.8%로 도농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풍부한 천안시(54.5%), 아산시(52.3%)는 전국평균을 상회하지만, 서천군(11.8%), 청양군(12.2%), 부여군(14.9%) 등은 전체 군 평균(18.0%)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표 1-21〉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재정자립도 현황(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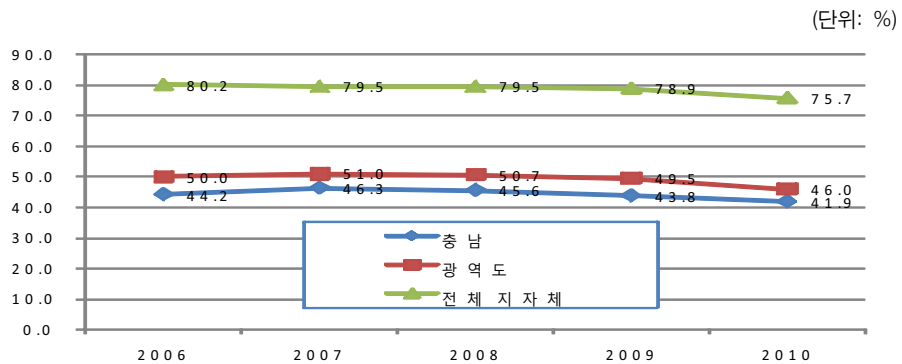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소계(A+B)	지방세(A)	세외수입(B)	일반회계예산
전국평균	52.2	56,797,485,027	43,210,787,983	13,586,697,044	108,755,214,683
충남평균	36.6	2,381,156,591	1,551,468,454	829,688,137	6,506,661,057
충남본청	24.0	761,607,996	610,000,000	151,607,996	3,167,700,000
충남 시평균	36.7	1,049,479,078	668,150,251	381,328,827	2,858,158,698
충남천안시	54.5	398,011,870	265,115,693	132,896,177	730,000,000
충남공주시	19.1	75,046,589	43,520,000	31,526,589	392,700,000
충남보령시	22.6	81,314,759	34,050,000	47,264,759	359,900,000
충남아산시	52.3	282,427,135	191,500,000	90,927,135	540,500,000
충남서산시	32.1	125,309,945	81,742,980	43,566,965	390,354,876
충남논산시	18.9	67,069,754	41,721,578	25,348,176	354,703,822
충남계룡시	22.6	20,299,026	10,500,000	9,799,026	90,000,000
충남 군평균	23.8	612,173,416	273,318,203	338,855,213	2,576,385,640
충남금산군	22.7	51,794,032	20,233,951	31,560,081	228,628,233
충남연기군	35.5	88,894,185	37,307,500	51,586,685	250,304,328
충남부여군	14.9	49,964,318	29,139,152	20,825,166	334,900,000
충남서천군	11.8	30,645,962	17,000,000	13,645,962	258,948,000
충남청양군	12.2	25,398,119	8,157,400	17,240,719	208,272,321
충남홍성군	27.9	92,811,397	28,150,000	64,661,397	333,214,690
충남예산군	18.5	50,807,000	26,800,000	24,007,000	275,079,519
충남태안군	21.1	54,008,505	21,020,200	32,988,305	256,198,618
충남당진군	39.0	167,849,898	85,510,000	82,339,898	430,839,931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재정자립도.

■ 2010년 충남(본청)의 재정자주도¹⁵⁾는 41.9%에 그침

- 충남의 재정자주도는 2006년 44.2%에서 2007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0년에는 41.9%까지 하락하였으며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75.7%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임
- 또한 2010년 동종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광역도 평균 재정자주도인 46.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
- 2010년 시·도에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도는 경기도본청으로 61.4%이며, 가장 낮은 도는 전남본청으로 30.2%임

〈그림 1-3〉 충남 및 지방의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표 1-22〉 지자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현황(2010년)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4.2	70.0	46.0	69.1	62.2	57.9
최 고 (단체명)	84.2 서울본청	76.7 인천본청	61.4 경기도본청	91.6 경기과천시	72.9 강원홍천군	89.3 서울강남구
최 저 (단체명)	-	65.2 광주본청	30.2 전남본청	52.2 전남목포시	48.0 전남신안군	30.8 부산북구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15) 자치단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과 비도가 특정화되지 않은 ‘자주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다. 지방채 발행 규모와 추이

■ 2009년 결산 기준 채무총액 8,641억원으로, 총 재정의 19.6% 차지

- 2009년 결산 기준 충남의 총 채무는 총액기준으로 8,641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9.6%를 차지하며, 이중 지역개발기금 등 채권과 연계된 금액 등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3,651억원임
- 2008년 동종 지자체의 재정규모 대비 총 채무의 비중은 18.3%로 충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8년에 18.2%로 약간 하락했던 충남의 재정규모 대비 총 채무비중은 2009년에 19.6%까지 상승함
- 충남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7년에 34.4%, 2008년에 전년 대비 213.3%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지방채관리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표 1-23〉 충남의 지방채 현황 및 동종 지자체 현황 비교

(단위: 억원, %)

	충남 본청					동종 지자체 평균(도 본청)				
	재정 규모 (A)	총채무 (B)	실질 채무 (C)	비중		재정 규모 (A)	총채무 (B)	실질 채무 (C)	비중 (C/A)	
				B/A	C/A				B/A	C/A
2006	33,377	5,456	n.a.	16.3	n.a.	n.a.	n.a.	n.a.	n.a.	n.a.
2007	35,825	6,359	1,063	19.5	3.0	48,966	n.a.	4,613	n.a.	9.4
2008	39,141	7,112	1,377	18.2	3.5	51,926	9,478	4,372	18.3	8.4
2009	44,124	8,641	3,651	19.6	8.3	n.a.	n.a.	n.a.	n.a.	n.a.

자료: 충남 홈페이지의 재정공시(2010.9)를 기초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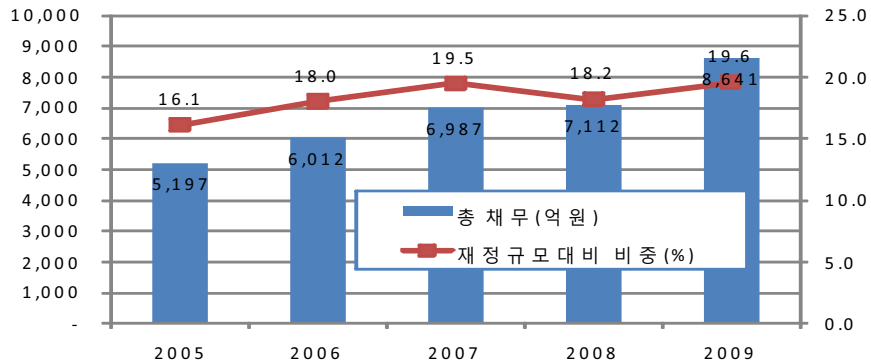
〈표 1-24〉 충남의 지방채 발행 내역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지방채 발행액	일반회계	0	300	3,605	1,980
	특별회계	1,094	1,170	1,638	1,615
	소계	1,094	1,470	4,602	3,595
	(증감율)	(-)	(34.4)	(213.1)	(-21.9)

자료: 각 연도 결산자료 참조.

〈그림 1-4〉 충남의 채무 추이



〈표 1-25〉 충남 지방채의 회계별 발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

구 분		08년도 현재액	증 감 액			09년도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639,031	225,072	359,536	134,464	864,102
일 반 회 계		83,480	159,540	198,000	38,460	243,020
특 별 회 계	소 계	4,000	-950	0	950	3,050
	안면도관광지개발	4,000	-950	0	950	3,050
	소 계	537,756	75,179	161,536	86,357	612,934
	지역개발기금	537,756	75,179	161,536	86,357	612,934
기 금	소 계	13,795	-8,697	0	8,697	5,098
	중소기업육성기금	13,795	-8,697	0	8,697	5,098

자료: 충남 재정공시(2010.9).

■ 충남개발공사(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 2,636억원, 부채비율 125.0%

- 국가 전체로 볼 때 2008년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47.3조원이며,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06년 이후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충남개발공사의 부채총액은 2,636억원이고, 부채비율은 125.0%로 전체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평균이 295.8%임을 고려할 때, 타(他) 개발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님
- 그러나 충남개발공사의 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여, 개선이 요구됨

〈표 1-26〉 도시개발공사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현황(2008 결산기준)

(단위: 억원, %)

	부채총액	부채비율
특별광역시 소계	170,499	298.4
SH공사	108,090	369.3
부산도시공사	17,869	257.3
대구도시공사	6,519	168.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29,257	232.4
광주도시공사	4,659	257.9
대전도시공사	3,954	208.7
울산도시공사	151	19.9
도 소계	77,328	290.1
경기도공사	52,644	455.8
강원개발공사	7,746	238.8
충북개발공사	1,842	349.1
충남개발공사	2,636	125.0
전북개발공사	2,956	312.0
전남개발공사	2,865	58.0
경북개발공사	891	84.7
경남개발공사	5,267	329.5
제주개발공사	481	69.9
합 계	247,827	295.8

자료: 행정안전부,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9.10.

〈표 1-27〉 충남 개발공사 경영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재무상태	자산	19,640	19,674	19,771	19,565	19,235
	부채	1,068	1,122	1,212	1,199	1,068
	자본	18,572	18,552	18,559	18,366	18,167
경영성과	영업이익*	115	160	-18	15	55
	경상이익**	3,804	2	12	-171	-186
	당기순이익***	3,804	-19	6	-193	-198
예산 결산 현황	사업 예산	세입	1,461	1,723	1,938	2,700
		세출	1,461	1,711	1,913	2,871
	자본 예산	세입	-	-	-	-
		세출	-	12	25	-

자료: 지방공기업 재정정보시스템.

주: * 영업이익 : 총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 관리비

** 경상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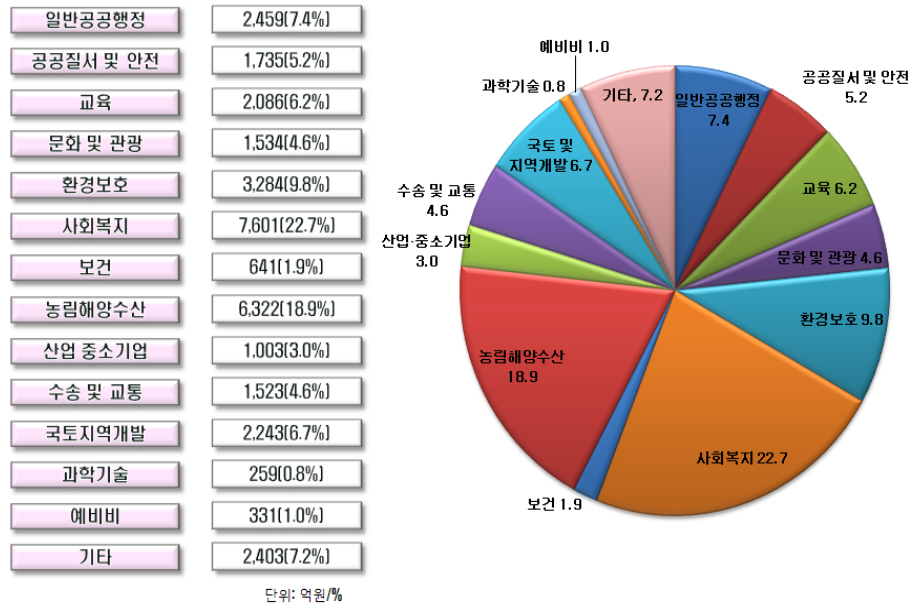
*** (당기)순이익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3. 세출구조의 특징

가. 기능별 세출구조

■ 세출의 14대 분야별 구성

〈그림 1-5〉 충남 세출의 14대 분야별 구성(2010년 일반회계 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에 대한 지출 비중이 51.4% 차지

- 2010년 충남의 기능별 세출(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22.7%이며, 금액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7,601억원임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 2010년에 크게 증가한 세출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41.3%(1,735억원) 증가했고, 보건 분야도 15.9%(641억원) 증가함
- 반면, 수송 및 교통(-9.7%), 일반공공행정(-10.3%), 국토 및 지역개발(-2.6%) 등의 분야는 전년대비 세출예산이 감소함

〈표 1-28〉 충남 세출예산의 규모와 구조(일반회계 기준)

(단위: 억원, %)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율
합 계	32,380	100.0	33,427	100.0	3.2
일반공공행정	2,740	8.5	2,459	7.4	-10.3
공공질서 및 안전	1,228	3.8	1,735	5.2	41.3
교육	2,173	6.7	2,086	6.2	-4.0
문화 및 관광	1,537	4.7	1,534	4.6	-0.2
환경보호	3,086	9.5	3,284	9.8	6.4
사회복지	7,203	22.2	7,601	22.7	5.5
보건	553	1.7	641	1.9	15.9
농림해양수산	6,090	18.8	6,322	18.9	3.8
산업·중소기업	989	3.1	1,003	3.0	1.4
수송 및 교통	1,686	5.2	1,523	4.6	-9.7
국토 및 지역개발	2,303	7.1	2,243	6.7	-2.6
과학기술	267	0.8	259	0.8	-3.0
예비비	336	1.0	331	1.0	-1.5
기타	2,187	6.8	2,403	7.2	9.9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 도 전체 대비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은 높은 반면, 수송 및 교통, 교육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2010년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¹⁶⁾,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을 검토한 결과, 충남의 사회복지 비중은 25.5%로 도 전체¹⁷⁾ 평균 25.3%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농림해양수산(16.1%), 국토 및 지역개발(8.8%) 분야의 비중은 도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나, 일반공공행정(11.5%), 수송 및 교통(4.0%), 교육(5.4%) 분야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해양수산 18.9%, 환경보호 9.8%, 일반공공행정 7.4%, 국토 및 지역개발 6.7%, 교육 6.2% 등으로 세출 비중이 높음

16) 본 연구는 세출의 기능별 비중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나, 현재 재정고 지방예산 세출통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금액만 나와 부득이 이 통계를 활용하여 분야별 지출비중을 도출함.

17)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를 의미함.

〈표 1-29〉 2010년 세출의 기능별 규모와 비중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기준)

(단위: 억원, %)

	충남		도 전체		전국 지자체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4,510	11.5	81,660	17.9	218,419	11.9
공공질서 및 안전	1,735	4.4	13,394	2.9	28,646	1.6
교육	2,115	5.4	28,748	6.3	84,238	4.6
문화및관광	1,552	4.0	22,682	5.0	91,543	5.0
환경보호	3,284	8.4	31,915	7.0	191,867	10.5
사회복지	9,990	25.5	115,693	25.3	420,533	23.0
보건	641	1.6	5,296	1.2	29,179	1.6
농림해양수산	6,321	16.1	53,919	11.8	140,809	7.7
산업/중소기업	1,003	2.6	10,556	2.3	37,509	2.0
수송 및 교통	1,565	4.0	33,017	7.2	201,953	11.0
국토 및 지역개발	3,448	8.8	25,848	5.7	168,335	9.2
과학기술	259	0.7	3,652	0.8	4,560	0.2
예비비	330	0.8	3,888	0.9	21,964	1.2
기타	2,474	6.3	27,108	5.9	192,700	10.5
합계	39,227	100.0	457,376	100.0	1,832,255	100.0

주: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세출예산통계를 기초로 작성.

■ 사회복지비 비중 : 2009~2010년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낮아

- 2010년 당초예산(일반회계) 충남의 사회복지비¹⁸⁾ 비중은 22.7%로 도 전체 평균인 23.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08년도에는 충남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09~2010년 동안에는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배분됨(0.5% 포인트 낮음)
- 2010년 도 단위에서 전체 세출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북 도청으로 29.3%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제주도 본청으로 14.0%에 그침

18)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관련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으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수준 사회복지비 비중을 총계 기준으로 작성함.

〈표 1-30〉 전체 세출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비교

(단위: %)

	2008		2009		2010	
	충남	도 평균	충남	도 평균	충남	도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	22.9	21.6	22.2	22.8	22.7	23.2

주: 일반회계 및 총계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표 1-31〉 2010년 자치단체별 세출대비 사회복지비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21.3	25.7	23.2	24.9	16.6	42.5
최 고 (단체명)	21.3 서울본청	30.5 광주본청	29.3 전북본청	38.6 전북전주시	26.3 충북음성군	64.9 광주북구
최 저 (단체명)	-	19.7 울산본청	14.0 제주도본청	14.0 강원삼척시	4.4 경북울릉군	19.8 서울서초구

주: 일반회계 및 총계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나. 품목별 세출구조

- 품목별 비중 : [자본지출+경상이전지출] 비중이 전체 세출의 81.4% 차지
 -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출의 품목별(성질별) 비중은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이 포함된 자본지출이 42.0%, 자치단체경상이전비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39.4%를 차지하여 81.4%를 차지함
 - 이전지출을 제외한 품목별 지출 비중은 내부거래 9.1%, 인건비 5.4%, 물건비 2.4%, 예비비 및 기타 1.0% 등의 순서임

〈표 1-32〉 충남 세출예산의 성질별(품목별) 비중

(단위: 억원, %)

	2009		201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율
합 계	32,380	100.0	33,427	100.0	3.2
인건비	1,684	5.2	1,809	5.4	7.4
물건비	786	2.4	801	2.4	1.9
경상이전	12,773	39.4	13,181	39.4	3.2
자본지출	13,310	41.1	14,033	42.0	5.4
용자및출자	79	0.2	96	0.3	21.5
보전재원	107	0.3	117	0.4	9.3
내부거래	3,305	10.2	3,058	9.1	-7.5
예비비및기타	336	1.0	331	1.0	-1.5

주: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 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성질별 세출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지출이 전체 세출의 67.3% 차지

-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은 2조 2,509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67.3%를 차지함
- 이는 충남 일반회계 세출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청 고유의 사업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표 1-33〉 2010년 충남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 이전지출 비중

(단위: 억원, %)

			금액	총세출 대비 비중
경상 이전	소계		13,181	39.4
	자치단체등 이전(A)	소계	11,339	33.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50	28.0
		징수교부금	204	0.6
		재정보전금	1,650	4.9
		자치단체간부담금	33	0.1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5	0.0
		기타부담금	96	0.3
	기타		1,842	5.5
자본 지출	소계		14,033	42.0
	자치단체등 자본이전(B)	소계	11,170	33.4
		자치단체자본보조	10,873	32.5
		공기관대행사업비	296	0.9
		예비교육성지원	1	0.0
	기타		2,863	8.6
자치단체등 경상 및 자본보조합계(A+B)			22,509	67.3
총 세출액(일반회계)			33,427	100.0

주: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 기준.

자료: 충남도청 홈페이지(2010.9) 성질별 세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¹⁹⁾ 18.7%, 주민 1인당 인건비 8만 6,123원

- 2010년 충남의 당초예산(일반회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18.7%로 인건비를 해결할 충분한 재정력을 지니고 있으나, 도 평균인 14.5%보다 높은 수준임
- 2010년 기준 충남의 주민 1인당 인건비는 8만 6,123원으로 도 전체 평균인 7만 4,004원보다 16.4%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도출됨

〈표 1-34〉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일반회계)

(단위: %)

	2008		2009		2010	
	충남	도평균	충남	도평균	충남	도평균
인건비 비중	12.8	11.5	12.6	11.2	18.7	14.5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표 1-35〉 2010년 자치단체별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단체별	예산액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총예산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합계	146,661,840	62,201,286	47,878,513	13,378,488	9.1	21.5	27.9
특별시	15,422,000	13,045,685	11,595,724	669,138	4.3	5.1	5.8
광역시	19,054,690	11,191,762	9,720,789	1,078,239	5.7	9.6	11.1
도	37,904,117	13,691,388	12,118,689	1,982,484	5.2	14.5	16.4
시	36,952,142	14,780,418	9,777,238	4,186,964	11.3	28.3	42.8
군	21,430,111	3,859,083	1,830,542	2,446,225	11.4	63.4	-33.6
자치구	15,898,781	5,632,950	2,835,531	3,015,438	19.0	53.5	-6.3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

19)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을 의미하며, 인건비는 기본급+수당+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의미함.

〈표 1-36〉 2010년 주민 1인당 인건비

	인건비(백만원)	주민수(명)	1인당인건비(원)
충남	175,482	2,037,582	86,123
도 전체	1,982,484	26,788,767	74,004

주1: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자료.

주2: 주민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다. 성질별 세출구조

■ 2010년 정책사업비²⁰⁾ 비중 88.8%로 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

-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총계기준) 충남의 정책사업비 비중은 88.8%이며,²¹⁾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88.7%와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 평균인 79.6%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도 단위에서 정책사업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전남 본청(91.9%)이며,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제주도 본청(77.4%)임
-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정책사업비 비중은 81.3%로 본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1-378〉 충남의 전체 세출 정책사업비 비중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정책사업비	26,065	28,772	29,674
일반회계예산(총계)	29,153	32,380	33,427
정책사업비비중	89.4	88.9	88.8

주: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20) 정책사업비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함.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품목'이 아닌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의 전면도입에 따라 품목예산에서 경상적 경비로 편성되는 부분(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사업예산에서는 정책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되므로 이전보다 투자 사업성 경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21)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충남의 정책사업비 비중은 90.2%이며, 동일 기준 도 단위 평균인 86.4%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38〉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정책사업비 비중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74.8	79.6	88.7	79.4	81.2	73.5
최 고 (단체명)	74.8 서울본청	83.6 대전본청	91.9 전남본청	87.1 경남양산시	85.7 전남장흥군	84.9 광주광산구
최 저 (단체명)	- -	76.0 부산본청	77.4 제주도본청	67.6 경남마산시	74.4 전북진안군	55.1 서울용산구

주: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 2010년 전체 세출대비 자체사업비²²⁾ 비중은 18.6%

- 충남이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의 전체 세출대비 비중은 18.6%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30.6%에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²³⁾
-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전체 세출대비 자체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 본청으로 49.0%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충남 본청으로 18.6%임
-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28.4%로 본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전국 평균인 39.0%보다는 낮은 수준임

〈표 1-39〉 충남의 전체 세출 대비 자체사업비 비중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자체사업비	6,651	7,263	6,206
예산총계	29,153	32,380	33,427
자체사업비 비중	22.8	22.4	18.6

주: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22) 자체사업비란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체 재원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책사업비 중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을 의미함.

23) 전국 기준 자체사업비 비중은 39.0%임.

〈표 1-40〉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비 비중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9.6	44.2	30.6	33.8	27.0	22.6
최 고 (단체명)	59.6 서울본청	52.4 인천본청	49.0 경기도본청	57.8 경기도과천시	43.4 대구달성군	47.1 서울강남구
최 저 (단체명)	- -	39.2 광주본청	18.6 충남본청	21.6 전남목포시	14.4 전북부안군	10.5 광주동구

주: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 2010년 충남 보조사업비²⁴⁾ 비중 70.2%로 높은 수준

- 2010년 충남의 일반회계 총계기준 전체세출 대비 보조사업비 비중은 70.2%로 동종 자치단체(도) 평균인 58.1%에 비해 높고, 전국 평균인 40.6%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임
-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보조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 본청으로 72.4%이며,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기도 본청으로 40.3%임
-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및 자본이전지출로 사용되며, 2010년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자치단체등에 대한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 비중은 67.3%임
- 시군을 포함한 충남의 보조사업비 비중은 52.9%로 본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41〉 충남의 전체 세출 보조사업비 비중

(단위: 억원, %)

	2008	2009	2010
보조사업비	19,414	21,508	23,467
예산총계	29,153	32,380	33,427
보조사업비 비중	66.6	66.4	70.2

주: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24) 보조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을 의미함.

〈표 1-42〉 2010년 자치단체 유형별 보조사업비 비중

(단위: %)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15.1	35.4	58.1	45.5	54.2	50.9
최 고 (단체명)	15.1 서울본청	43.4 광주본청	72.4 전남본청	61.3 전북남원시	70.2 전남신안군	73.0 광주광산구
최 저 (단체명)	- -	29.9 인천본청	40.3 경기도본청	22.3 경기과천시	41.7 대구달성군	23.6 서울종로구

주: 2010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계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지방예산지표를 기초로 작성.

제2장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1. 세입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2. 세출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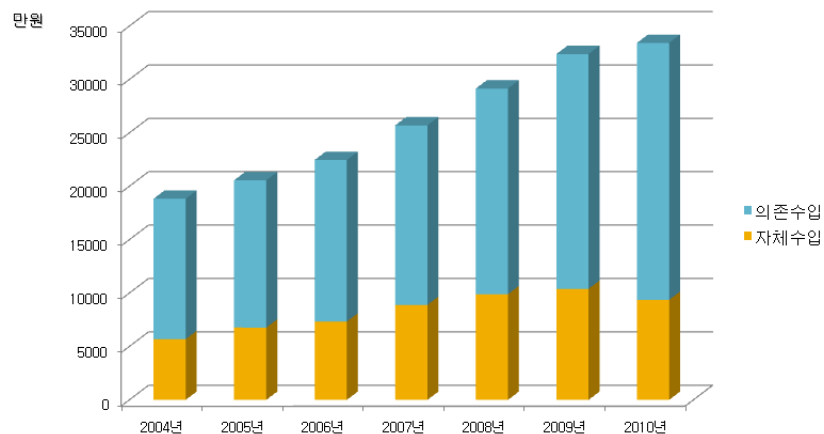
1. 세입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가. 세입구조의 문제점

■ 2010년 재정자립도 24.0%로 동종 지자체 대비 7.1%p 낮아

- 전체 세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의존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24.0%로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31.6%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2007년 30.4%에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물론 재정자립도 지표가 갖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체 재정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세입의 자율성 및 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2010년 충남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46만원으로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51만원보다 적음
- 지방교부세를 자주재원으로 인정하여 도출하는 재정자주도도 41.9%에 그쳐 실제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함

〈그림 2-1〉 충남의 자체수입/의존수입 추이



■ 소속 시군단위의 자체세입 기반 차이로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함

- 자체세입 기반의 지역적 편차가 심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사이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함
- 시군을 포함한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로 본청의 재정자립도 24.0% 보다 높으나, 16개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군단위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풍부한 천안시(54.5%), 아산시(52.3%)는 전국평균을 상회하나, 서천군(11.8%), 청양군(12.2%) 등은 전체 군 평균(18.0%)을 하회하고 있음

■ 2010년 재정자주도 41.9%로 동종 지자체 대비 4.1% p 낮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합계액의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주도가 충남의 경우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41.9%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평균 75.7%, 동종 자치단체도 평균 46.0%보다 낮은 수준임
-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가운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출 용도를 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비중이 낮고, 세출의 재량성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국고보조금은 지출의 용도와 사업의 내용이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지는 데다, 사업 집행 절차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따르며,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충남 전체 세입의 절반을 넘는 55% 이상을 차지함
-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경비는 국고보조금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데 충남의 경우는 2010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비가 2조 3,468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를 웃돌고 있음
- 결국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으로 5,058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은 이른바 일반재원으로 분류되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에 사용됨
- 국고보조사업비 이외의 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같은 경상경비와 필수적 지출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자체 기획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세 증가율 3% 미만에 그쳐

- 지방세 수입이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2.1% 증가하는데 그쳤고, 동 기간 충남의 재정규모가 연평균 8.8% 증가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함
- 지방세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전체 지방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침체로 2005~2009년 동안 연평균 1% 미만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0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38만 5천원으로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45만 2천원보다 6만 7천원이 낮음

■ 2009년 지방세 징수율은 92.5%, 징수율 점차 하락

-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수의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²⁵⁾
- 또한 조세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납세자에게 상대적 인 불이익을 유발하여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10년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누계 기준으로 83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468억원을 제외한 2010년 체납액은 363억원임
- 충청남도 지방세의 체납율과 체납액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면, IMF 시기 이후 급증했던 체납율과 체납액이 2004년 최저점을 찍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위 지방세 징수율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아직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2009년 6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45억 900만원

- 2010년 충남의 세외수입액은 전년대비 15.4% 감소한 1,5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은 각각 21.9%, 78.1%로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25) 보통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전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 누계액에서 전전년도 지방세 미징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 체납액을 감축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결국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됨.

- 2009년 6월말 현재 충남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45억 900만원으로 도가 20억 5,900만원, 시군이 24억 5000만원임
- 체납액의 발생 원인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능력의 약화이며, 납세태만 체납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²⁶⁾
- 세외수입의 구성이 잉여금, 자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위주로 되어 있어 변동이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아 재정운용의 중장기적 계획성을 저해하고 있음

■ 채무 : 채무비중의 증가

- 2009년 결산 기준 충남의 총 채무는 총액기준 8,641억원으로 전체 재정의 19.6%를 차지하며, 이중 지역개발기금 등 채권과 연계된 금액 등을 제외한 실질채무는 3,651억원임
- 2008년에 18.2%로 약간 하락했던 충남의 재정규모 대비 총 채무비중은 2009년에는 19.6%까지 상승함
- 충남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7년에 34.4%, 2008년에 213.3% 급속하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나. 세입구조의 과제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필요

- 충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은 타(他)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추정되기 때문에,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측이라고 보기 힘들
- 충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군 격차를 고려한 재정력이 약한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시군을 포함한 2010년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6.6%이지만, 천안시

26) '충남도,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도입' (최혜영기자), 매스타임즈(2009-07-21) 참조.

(54.5%), 아산시(52.3%) 등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음

- 충남 도청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한 도비보조금의 차등 지원 등을 통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 자주재원의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취약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의 세원배분구조 및 지방세 체계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재원의 확충에 한계가 있어 세원이양, 법정외세제도 도입 등 과세자주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재정분권개혁을 요구해가는 동시에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요청됨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0년 7월 현재 83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이 존재하고 있고, 2010년에만 36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전문인력으로 체납 전담반을 활성화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운영적 측면 및 납세 윤리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① 납세자의 편의성 증진(신용카드, 인터넷 등 적극 활용)
 - ② 지방세 세목의 축소와 간편화
 - ③ 취득세, 등록세 통합징수방안 검토
 - ④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부산 진구, 수원, 가평 등 많은 자치단체가 도입)²⁷⁾
 - ⑤ 조례에 의한 고지서 송달 추정주의 도입: 일정금액 이하 일반우편 송달, 인터넷 고지
 - ⑥ 소액지방세 자동이체 적극 유도

27) 가평군의 경우, 2008년 8월부터 가상납부계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에 세금을 이체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2009년 이용건수가 30,746건에 41억 9400만원이 납부 되 지방세수확보에 실효성을 거두었음.

- ⑦ 세무직 충원 및 업무량 완화
- ⑧ 체납세 징수 민간위탁제 도입 및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강화(일정금액, 일정횟수 이상)
- ⑨ 자동차 말소등록 간소화²⁸⁾
- 운영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①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강화
 - ② 신고납부세목 사전 자진납부 안내고지서 송달 및 전산망 연계 강화
 - ③ 징수포상금제도 적극 활용
 - ④ 담당자 체납처분 교육 강화
 - ⑤ 인허가부서와 연계를 통한 말소대상 업소 일체정리
 - ⑥ 주민망 등 주소추적을 위한 유관기관 전산망 연계
 - ⑦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²⁹⁾
- 결손처분을 행할 수 있는 규범화된 매뉴얼을 제정하여 사안별로 결손처분을 시행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시행한 체납액 징수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기간이내(5년) 납부자의 재산상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체납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체납세 징수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 관련 업무가 어려운 업무이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과 체납업무 담당자를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 체납업무부서의 전문화와 체납업무 전담자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 채권압류 등의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외부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28)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세에서 체납이 많은 세목임. 자동차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운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부과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과가 바로 체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만 존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9) 결손처분이란 납세(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압류할 재산이 있어도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총당하고 나면 체납세액에 총당할 잔여액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체납액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징수할 수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조세(징수금)채권의 징수행위를 잠정적으로 보류 또는 유보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이 이루어져도 향후에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결손처분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적극적인 결손처분 실시가 필요한 세목이며, 이를 통해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자체재원 채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적에 비례하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 유인책으로는 인사평정에서 우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배려하는 방안과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배치의 우선권 부여, 그리고 일정한 채납 개선 성과 이상을 기록하는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세와 세외수입 채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 채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 납세윤리 측면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윤리 교육 강화, 홍보물 제작 등이 필요하며,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마련, 경품제, 포상제, 주차장무료이용권 부여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신세원 발굴 필요

-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2009년)이 86만원으로 전국평균(96만 2천 원) 보다 낮으므로,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를 비롯한 온천자원 및 관광자원, 제조업체 등 신세원 발굴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현재 충남은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무회계부서 내에 신세원 발굴팀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도세) 및 지방소득세(시군세) 도입에 따른 과제

- 지방소득세(시군세) 및 지방소비세(도세) 도입으로 지방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도입된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특히 각종 세제개편과 부동산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감소를 보전하는 데에는 부족함

- 현재의 지방소비세로는 각종 세제개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보전에는 현저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는 대도시권역으로 재정보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장기적으로 재정보전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세원편중의 문제는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음
- 세원배분의 방향을 세원 배분 비율의 상향조정,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세원배분 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2-1〉 지방소비세 도입효과 전망

(단위 : %, 10억원)

구분	지방교부세			민간최 종소비 지출 최근3 개년 전국 비중	지방 소비세 추정 증가액 (C)	지역별가중치적용			재원증감액	
	최근 3개년 전국 비중	지역별 감소액				지역 별가 중치 (D)	가중치 적용후 지역별 배분비 율	지방 소비세 추정 증가액 (E)	(E-A)	(E-B)
		(A)	(B)							
전 국	100	450	2,250	100	2,400	-	100	2,400	1,950	150
서울	1.9	8.5	43.5	24.4	586	1.0	13.8	332	324	289
부산	2.9	13	64	7.5	180.5	2.0	8.5	205	192	141
대구	2.7	12	60	5.1	122.5	2.0	5.8	139	127	79
인천	1.1	5	24	5.2	126	1.0	3.0	71	66	47
광주	1.8	8	40	2.9	69.5	2.0	3.3	79	71	39
대전	1.1	5	24	3.0	73	2.0	3.4	83	78	59
울산	1.0	4.5	21.5	2.2	52	2.0	2.5	59	55	38
경기	7.3	33	164	21.8	523.5	1.0	12.4	297	264	133
강원	10.2	46	230	2.8	67	3.0	4.7	114	68	-116
충북	7.2	32.5	161.5	2.7	64	3.0	4.5	109	77	-53
충남	8.5	38	191	3.5	83.5	3.0	5.9	142	104	-49
전북	10.3	46.5	232.5	3.4	81	3.0	5.7	138	92	-95
전남	14.5	65	325	3.3	78.5	3.0	5.6	134	69	-191
경북	14.7	66	330	5.1	122.5	3.0	8.7	208	142	-122
경남	12.1	54.5	271.5	6.1	147	3.0	10.4	250	196	-22
제주	2.9	13	66	1.0	24	3.0	1.7	41	28	-25
수도권	10.3	46.5	232	51.5	1,235.5	-	29.2	701	655	469
비수도권	89.7	403.5	2,018	48.5	1,164.5	-	70.8	1,699	1,296	-319

A: 지방소비세 분리에 따른 내국세 총액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금액

B: A + "각종 세제개편을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내국세 총액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금액(2009년 기준)"

자료: 이상범, 2010: 179

■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검토 필요

- 경북은 도내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

하고 있음

- 충남도 우수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설정하여 독자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체납자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도 있으나, 경제력이 충분한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공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매 이전에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 등을 설명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됨
-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납부가 편리하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세 납부처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임
-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금액이 소액인 것이 대부분이며, 고의적인 체납이 아닌 경우에도 부주의로 인한 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자동차의 이전 등록 시 과태료를 확인하여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도 체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액 변상금 등은 항목의 성격상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도리어 행정비용을 소모하게 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 체납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자체재원 확충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체장이 체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에 체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의 납부의식 제고,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체납예방의 실효적인 방안으로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안정적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공공기관으로서 한계와 제약은 있지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용료와 수수료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어려움이 수반되나, 점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유리알카드’ 도입 검토 필요³⁰⁾
- 의료원 등의 운영효율성을 개선하여 세외수입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 투자사업 등 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도 기대할 수 있음
- 대규모 개발과 재원이 투자되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역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충남개발공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충남은 도시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며, 산업단지 수요에서도 최근 유입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는 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 필요

- 충남의 지방채는 2008년과 2009년에 발행액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규모 대비 지방채의 비중이 19.6%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재정규모대비 실질채무의 비중은 2008년 3.5%에서 2009년에는 8.3%로 급격히 증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0) 광주광역시시는 2007년부터 민간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인 ‘유리알카드’를 도입하고, 민간보조금 지원의 모든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유리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유리알카드는 2010년 7월말 현재 1,339개가 발급되었으며, 유리알카드 사용액의 0.6%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2007년 2,700만원, 2008년 4,400만원, 2009년 5,600만원 등 모두 1억 2,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림.

■ 공공시설투자에 민간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앙정부에서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활용하고 있는 BTL방식을 충남 차원에서도 사업성,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시설투자에 민간의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자원을 사회복지 등 긴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 과세자주권의 신장 및 세원이양
- 신세원 발굴을 위한 유인책 제공
- 지방세에 대한 소비과세 강화

2. 세출구조의 문제점 및 과제

가. 세출구조의 문제점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부응한 세출구조조정 필요

- 2010년 충남의 기능별 세출 중에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은 22.7%로 도 평균 및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그러나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심화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비 및 교육 지출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교육, 문화관광 분야의 지출비중은 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8.8%)는 도 평균(5.7%)보다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매우 높은 바, 합리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됨

■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지출 전체 세출의 67.3% 차지

-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은 2조 2,509억 원으로 전체 세출의 67.3%를 차지함
- 본청 고유의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도의 기능과 재정적 역할 정립이 새롭게 요청되는 동시에 시군 재정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게 되는 요인이 됨
-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재정여건이 좋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자체사업재원 마련 필요

■ 조직진단을 기초로 하여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구조조정 필요

- 2010년 기준 충남의 주민 1인당 인건비는 8만 6,123원으로 동종 지자체(도) 평균인 7만 4,004원보다 16.4%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도출됨
- 주민 1인당 인건비 수준이 높은 원인을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분석하고,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체사업비 비중 동종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

- 충남이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비의 전체 세출대비 비중은 18.6%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동종 지자체(도) 중에서 최하위임
- 게다가 대부분의 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지출(67.3%)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개발 등 도청의 독자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자체재원 중 행정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부담액을 제외한 후에 남는 재정으로 도의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임

■ 민간이전지출 지속적 증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한도액 설정 관리 필요

- 2010년 충남 일반회계 세출 중에서 민간이전지출은 982억원으로 세출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년대비 9.6%로 크게 증가함
-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한도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이전지출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타당성 검토 및 총 세출의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도액 설정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나. 세출구조의 과제

■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보건, 교육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필요

- 농어촌지역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충남의 특성상,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양극화의 진행이 가속화될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보건, 교육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동종 지자체(도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출비중이 떨어지는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개발분야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재원은 기존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 SOC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BTL 등을 통해 민간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시군 재정의 전략적 활용 및 재정력을 반영한 기초자치단체 차등 지원 필요

- 2010년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한 경상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액은 전체 세출의 67.3%를 차지함
- 이전지출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청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이전지출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 1인당 인건비 수준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구조조정 필요

- 2010년 기준 충남의 주민 1인당 인건비는 동종 지자체(도) 평균보다 16.4%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는 바, 주민 1인당 인건비 수준이 높은 원인을 조직지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³¹⁾
- 조직진단 및 업무과정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이 발견될 경우, 인건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1) 참고로 인건비와 관련된 충남의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비중은 11.5%로 도 전체(17.9%)에 비해 높지 않으며, 전체 지자체(11.9%) 수준이며, 일반회계에서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도 단위 평균 7.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제3장 사업예산의 총괄적 분석

1. 자원별 사업구조

2. 사업집행주체별 사업구조

1. 재원별 사업구조

■ 2010년 의존재원(보통교부세 제외한 용도가 특정화되어 있는) 비중 56.3%, 국고보조비 3년간 16.0% 증가함

- 충남의 일반회계 세입은 의존재원이 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2010년 동안 총세입은 연평균 7.1%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연평균 12.3% 증가함
- 총세입의 증가세보다 의존재원의 증가세가 높음에 따라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2010년 1조 2,311억원으로 전체 의존재원의 65.4%를 차지하고 최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광특보조³²⁾는 5,453억원으로 29.0%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금보조, 분권교부세³³⁾ 순임

〈표 3-1〉 충남 의존재원의 재원별 현황 및 비중(2008~2010)

(단위: 백만원, %)

	의존재원					총세입	총세입 대비 비중
	국고보조	광특보조	기금보조	분권교부세	소계		
2008	915,670 (61.4)	492,481 (33.0)	41,734 (2.8)	41,087 (2.8)	1,490,972 (100)	2,915,300	51.1
2009	1,072,223 (61.8)	570,889 (32.9)	45,132 (2.6)	45,504 (2.6)	1,733,748 (100)	3,238,000	53.5
2010	1,231,072 (65.4)	545,316 (29.0)	64,647 (3.4)	39,924 (2.1)	1,880,959 (100)	3,342,700	56.3
연평균 증감율	16.0	5.2	24.5	-1.4	12.3	7.1	-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32) 광특보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에 의거하여,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보조되는 재원을 의미함.

33)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함.

- 2010년 전체 의존재원은 사회복지, 농림해양, 환경보호에 70% 이상 지출됨
- 분야별 세출 대비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보호 89.1%, 사회복지 79.5%, 농림해양수산 75.1%, 공공질서 및 안전 68.1%, 보건 66.8%, 산업중소기업 64.2% 등으로 평균 의존재원 비율 56.3%보다 높은 편임
 - 2010년 의존재원은 사회복지분야에 32.1%,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5.3%, 환경보호에 15.6% 등 3대 분야에 70% 이상 지출됨
 - 국고보조금의 44.9%는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며, 농림해양수산(21.2%), 환경보호(19.3%) 등 3대 분야에 85.4%가 지출됨
 - 광특보조금의 36.6%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지출되고, 다음으로 국토 및지역개발(21.7%), 환경보호(10.0%) 등에 지출됨³⁴⁾
 - 기금보조는 문화 및 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분야에 투입됨
 - 분권교부세는 주로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보건분야에 투입됨
 - 한편 교육 분야는 의존재원 비율이 0.2%(교육비특별회계 제외), 일반공공행정 1.8%, 수송 및 교통 33.8%로 다소 낮은 편임

34) 광특보조는 지역개발 위주로 투입되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비중은 3.7%에 지나지 않음.

〈표 3-2〉 2010년 세출분야별 의존재원 현황

(단위: 억원, %)

	전체 세출		의존재원										비중 (B/A)
	합계 (A)	비중	소계 (B)	비중	국고 보조금	비중	광특 보조금	비중	기금 보조금	비중	분권 교부세	비중	
합계	33,427	100.0	18,810	100.0	12,311	100.0	5,453	100.0	646	100.0	399	100.0	56.3
비중	-	-	100.0	-	65.4	-	29.0	-	3.4	-	2.1	-	-
일반공공행정	2,459	7.4	43	0.2	41	0.3	3	0.0	0	0.0	0	0.0	1.8
비중	-	-	100.0	-	93.9	-	6.1	-	0.0	-	0.0	-	-
공공질서및안전	1,735	5.2	1,182	6.3	1,171	9.5	0	0.0	12	1.8	0	0.0	68.1
비중	-	-	100.0	-	99.0	-	0.0	-	1.0	-	0.0	-	-
교육	2,086	6.2	4	0	0	0.0	4	0.1	0	0.0	0	0.0	0.2
비중	-	-	100.0	-	0.0	-	100.0	-	0.0	-	0.0	-	-
문화및관광	1,534	4.6	867	4.6	171	1.4	417	7.7	248	38.4	31	7.7	56.5
비중	-	-	100.0	-	19.7	-	48.1	-	28.6	-	3.6	-	-
환경보호	3,284	9.8	2,926	15.6	2,375	19.3	545	10.0	6	0.9	0	0.0	89.1
비중	-	-	100.0	-	81.2	-	18.6	-	0.2	-	0.0	-	-
사회복지	7,601	22.7	6,039	32.1	5,533	44.9	204	3.7	79	12.2	223	55.9	79.5
비중	-	-	100.0	-	91.6	-	3.4	-	1.3	-	3.7	-	-
보건	641	1.9	428	2.3	193	1.6	0	0.0	170	26.3	65	16.2	66.8
비중	-	-	100.0	-	45.1	-	0.0	-	39.7	-	15.1	-	-
농림해양수산	6,322	18.9	4,750	25.3	2,610	21.2	1,998	36.6	132	20.4	10	2.4	75.1
비중	-	-	100.0	-	54.9	-	42.1	-	2.8	-	0.2	-	-
산업중소기업	1,003	3.0	644	3.4	124	1.0	520	9.5	0	0.0	0	0.0	64.2
비중	-	-	100.0	-	19.3	-	80.7	-	0.0	-	0.0	-	-
수송및교통	1,523	4.6	516	2.7	3	0.0	443	8.1	0	0.0	69	17.4	33.8
비중	-	-	100.0	-	0.6	-	86.0	-	0.0	-	13.4	-	-
국토및지역개발	2,243	6.7	1,278	6.8	90	0.7	1,186	21.7	0	0.0	2	0.4	57.0
비중	-	-	100.0	-	7.1	-	92.8	-	0.0	-	0.1	-	-
과학기술	259	0.8	133	0.7	0	0.0	133	2.4	0	0.0	0	0.0	51.4
비중	-	-	100.0	-	0.0	-	100.0	-	0.0	-	0.0	-	-
예비비	331	1.0	0	0.0	0	0.0	0	0.0	0	0.0	0	0.0	0.0
비중	-	-	-	-	-	-	-	-	-	-	-	-	-
기타	2,403	7.2	0	0.0	0	0.0	0	0.0	0	0.0	0	0.0	0.0
비중	-	-	-	-	-	-	-	-	-	-	-	-	-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2010).

■ 2010년 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비중은 25.6%에 그쳐

- 자치단체의 총 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정책사업의 75% 정도는 의존재원에 의해 수행되며, 자체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수한 자체재원을 통한 정책사업은 25.6%에 그침³⁵⁾
- 2010년 전체 정책사업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은 4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광특보조사업은 22.4%, 기금보조 및 분권보조사업은 각각 2.8%, 2.0%임

35) 행정안전부의 재정 통계(재정고)에서 보조사업 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 사업의 단위(세부사업)와 충청남도 내부 자료의 기준 사업 단위(세세부사업)가 다른 관계로 행정안전부 통계 수치와 충남 내부 자료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 즉 충남 내부 자료에 따른 정책사업비 대비 보조사업 금액과 비중(74.4%)이 행정안전부 통계의 보조사업 금액과 비중(79.1%)보다 다소 낮은 반면에, 자체사업 예산의 금액과 비중(25.6%)은 행정안전부 통계의 자체사업 예산 금액과 비중(20.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도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자체사업) 예산은 7,582 억원으로 전체 정책사업예산의 25.6%이며, 2008년 이후 금액 자체와 함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년대비 7.2% 감소 하여 도 지역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자체재 원 중 행정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매칭금액을 제외한 후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지속적 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임을 알 수 있음

〈표 3-3〉 정책사업의 재원별 규모 및 비중(2008~2010)

(단위: 백만원, %)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		2,606,509(100.0)	2,877,179(100.0)	2,967,397(100.0)
보조 사업	국고보조 사업	1,054,201(40.4)	1,212,663(42.1)	1,401,645(47.2)
	광특보조 사업	602,972(23.1)	719,242(25.0)	665,250(22.4)
	기금보조 사업	56,816(2.2)	63,905(2.2)	81,936(2.8)
	분권·특별 교부	62,058(2.4)	64,685(2.2)	60,280(2.0)
	소계	1,776,047(68.1)	2,060,495(71.6)	2,209,111(74.4)
자체사업		830,462(31.9)	816,684(28.4)	758,286(25.6)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2. 사업집행주체별 사업구조

■ 2010년 충청남도 정책사업 중 시군시행사업 비중이 74.4%에 달해

- 충청남도 정책사업예산의 74.4%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되며, 도청이 직접 시행하는 정책사업의 비중은 18.0%에 그치고 있음
- 전체 세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지출 비중이 67.3%에 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특징임
- 2008~2010년 동안 충청남도의 전체 정책사업비는 연평균 6.7% 증가했는데 비해, 시군이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는 연평균 7.5% 증가했음
- 그러나 2010년 예산에서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예산은 5,328억원으로, 2008~2010년 동안 연평균 3.7% 증가하는데 그침

〈표 3-4〉 정책사업의 도청, 시군 시행 사업 비중(2008~2010)

(단위: 백만원, %)

	도 시행		시군시행		기타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8	495,361	19.0	1,909,276	73.3	201,872	7.7	2,606,509	100.0
2009	517,530	18.0	2,150,265	74.7	209,384	7.3	2,877,179	100.0
2010	532,847	18.0	2,207,887	74.4	226,663	7.6	2,967,397	100.0
연평균 증감율	3.7		7.5		6.0		6.7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기타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공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포함됨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 ‘수송 및 교통 분야’ 도 직접시행사업의 가장 큰 비중(25.6%) 차지

- 2010년도 도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송 및 교통분야’로 지출비중은 25.6%이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17.7%), 공공질서 및 안전(11.8%), 국토 및 지역개발(10.2%) 순임
-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32.6%)이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23.4%), 환경보호(14.7%) 등의 순임
- 환경보호(99.0%)와 사회복지(97.8%) 지출은 시군 시행 사업비 비중이 95%를 상회하여 실제 시군단위에서 수행되는 반면, 수송 및 교통(88.3%)과 과학기술(88.1%) 지출은 도 시행 사업비 비중이 85%를 상회하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특성을 보임

〈표 3-5〉 2010년 정책사업의 분야별/시행주체별 비중

(단위: 백만원, %)

	합계	비중	도 시행	비중	시군 시행	비중	기타	비중
합계	2,967,597	100.0	532,847	100.0	2,207,887	100.0	226,663	100.0
비중	100.0	-	18.0	-	74.4	-	7.6	-
일반공공행정	236,957	8	48,492	9.1	188,315	8.5	132	0.1
비중	100.0	-	20.5	-	79.5	-	0.1	-
공공질서및안전	167,731	5.7	63,106	11.8	104,609	4.7	-	-
비중	100.0	-	37.6	-	62.4	-	-	-
교육	212,210	7.2	2,512	0.5	4,508	0.2	205,189	90.5
비중	100.0	-	1.2	-	2.1	-	96.7	-
문화및관광	148,997	5	33,127	6.2	115,859	5.2	-	-
비중	100.0	-	22.2	-	77.8	-	-	-
환경보호	327,473	11	3,306	0.6	324,152	14.7	-	-
비중	100.0	-	1.0	-	99.0	-	-	-
사회복지	736,234	24.8	15,892	3	720,306	32.6	-	-
비중	100.0	-	2.2	-	97.8	-	0.0	-
보건	64,172	2.2	5,651	1.1	44,377	2	-	6.2
비중	100.0	-	8.8	-	69.2	-	-	-
농림해양수산	612,024	20.6	94,436	17.7	516,515	23.4	1,031	0.5
비중	100.0	-	15.4	-	84.4	-	0.2	-
산업중소기업	99,318	3.3	19,862	3.7	79,449	3.6	-	-
비중	100.0	-	20.0	-	80.0	-	-	-
수송및교통	154,537	5.2	136,529	25.6	17,982	0.8	-	-
비중	100.0	-	88.3	-	11.6	-	-	-
국토및지역개발	149,249	5	54,280	10.2	88,785	4	6,170	2.7
비중	100.0	-	36.4	-	59.5	-	4.1	-
과학기술	25,603	0.9	22,569	4.2	3,030	0.1	-	-
비중	100.0	-	88.1	-	11.8	-	-	-
예비비	33,091	1.1	33,085	6.2	-	-	-	-
비중	100.0	-	100.0	-	0.0	-	0.0	-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충청남도 내부자료.

제4장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및 확충방안

1.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2. 투자가용재원의 확충방안

1.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가.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 투자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활용 가능한 투자재원으로서 경상적 세입총액에서 필수적인 세출경비를 제외한 투자재원을 의미함

■ 투자가용재원 산출의 필요성

-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과 전략적 재원배분
 - － 제약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과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원 가능한 투자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신규 투자사업의 실효성 확보
 - － 새로운 정책·사업의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원조달계획이 요구되며 이러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동원 가능한 투자재원의 산출이 필수적임

나.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문제점

■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 현재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에 공식적으로 산출되고 있음
- 목적에 따라 산출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2개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보다 투자가용재원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문제점

- 세입총계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하고 있음(<표 4-1> 참조)
- 세입총계에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어 세입 부문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미치지 않는 국고보조사업경비가 경상지출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투자가용재원에 포함되어 투자가용재원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을 보임

〈표 4-1〉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구분	항목
세입총계(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채
경상지출(Ⅱ)	경상비 및 의무적 경비 채무상환, 기타 제지출금
투자가용재원(Ⅰ - Ⅱ)	의존재원사업 자체가용재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문제점

- 세입합계에서 세출합계를 차감하여 가용재원을 산출하는데 가용재원은 다시 자체사업재원과 신규투자가용재원으로 구분됨(<표 4-2> 참조)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세입총계에 지방채가 포함되어 있어 세입 부문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는 반면에 자체사업가용재원에 사업의 연속상 계획된 연도에는 반드시 지출해야 할 경비인 계속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가 혼재되어 있어 투자가용재원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점을 보임

〈표 4-2〉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의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구분	항목	
세입합계(Ⅰ)	자체자원(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세출합계(Ⅱ)	경상비(인건비, 경상적 경비), 의존재원사업(의존재원, 지방비부담금), 채무상환(지방채상환,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등(예비비, 기타)	
자체사업가용재원(Ⅰ - Ⅱ)	자체사업재원(Ⅲ)	소규모 사업(시군구 10억 미만, 시도 20억 미만 사업), 계속사업, 투자심사제외사업, 시군구지원사업
	신규투자가용재원(Ⅰ - Ⅱ - Ⅲ)	

■ 경사가용재원의 개념과 한계

- 경사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적인 일반재원 수입에서 항시적인 필수소요비용인 경상비용을 차감한 것으로서 조건이 붙지 않은 재원으로서 순수하게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임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경직성 및 건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사가용재원의 규모와 비율 등을 산출하고 있음(<표 4-3> 참조)
- 그러나 경사가용재원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액이 포함되어 있어 재량적인 일반재원의 규모를 과다하게 계산하는 문제점이 있음

〈표 4-3〉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자치단체 경사가용재원 산출방식

구분	항목
일반재원 (Ⅰ)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기초), 재정보전금(기초)
경상비용 (Ⅱ)	인건비, 운영비, 조정교부금(광역), 재정보전금(광역),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광역)
경사가용재원 및 세입대비 경사가용재원 비율	경사가용재원 = (Ⅰ - Ⅱ), 세입대비 경사가용재원 비율 = 경사가용재원/세입결산액

다.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도출

■ 투자가용재원의 범위

- 상기의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제시한 산출방식을 기초로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을 도출함
-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총계에서 필수적인 지출경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함(<표 4-4> 참조)

〈표 4-4〉 새로운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

세입 합계 (Ⅰ)	자체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필수적 세출경비 (Ⅱ)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지방채상환, 예비비중 기타, 법정 의무적 보조사업
	기타 필수적 경비	경상적 경비, 계속비사업비, 선택적 보조사업
투자가용 재원(Ⅲ)	투자가용재원(Ⅰ - Ⅱ) 규모 및 세입 대비 비율	
재량적 사업예산 절감액(α)		
신규투자가용재원(Ⅲ+ α)		

■ 세입총계의 범위

- 세입총계는 지방채를 제외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함
-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기초), 재정보전금(기초), 시도비보조금(기초)이 모두 세입총계에 포함됨
- 지방채는 발행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성질상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사후적·임시적 재원이며 특정목적을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재량성 측면에서도 가용재원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총계에 제외함

■ 필수적 경비의 범위

- 필수적 경비는 법정 의무적 경비와 기타 필수적 경비로 구분
- 법정 의무적 경비는 지출 여부 및 증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비이고 기타 필수적 경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이지만 지출 여부 및 증감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다소 있을 수 있는 경비임
- 따라서 기타 필수적 경비는 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나 노력에 따라 사업비 증감 및 경비 절감이 다소나마 가능한 경비로서 세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됨

■ 법정 의무적 경비의 범위

- 인건비는 연도 간 인건비 증감에 따라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의 크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상의 인건비 자체는 법정 의무적 경비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채상환(채무부담행위 포함) 경비도 연도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의무적 경비라고 할 수 있음
- 예비비중 기타 경비는 지출 내역이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재정 교부금이 계상되어 있어 이는 법정 경비에 해당되므로 투자가용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보조사업비(지방비부담 포함)의 경우는 세입총계에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을 세입합계에 포함하고 있는 데다 반드시 지출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투자가용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보조사업 가운데에서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과 자치단체의 재량적 선택이 미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재량적 선택이 미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기타 필수적 경비로 분류하여 기본적으로 세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조사업 가운데서 의무적 보조사업과 재량적 보조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뒤에서 충남의 투자가용재원을 산출할 때에는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의무적 경비로 분류함

■ 기타 필수적 경비의 범위

- 경상적 경비는 의무적 경비이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다소 재량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구분함
- 계속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의 연속선상 계획된 연도에는 반드시 지출해야 할 의무적 경비의 성격을 가지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변경의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기타 필수적 경비로 분류하여 세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킴

라. 충청남도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자체재원이 경상적 세입총계 3조 3,427억원 가운데 28%에 해당되는 9,366억원이고 의존재원이 2조 4,061억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이렇게 자체재원이 적고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국고보조금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충남의 세입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투자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가용재원의 크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2009년도 당초예산의 세입총계 및 그 구성과 비교하면 절대 세입 규모는 증가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세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고 그 부족분을 의존재원으로 메움으로써 의존재원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함. 이것이 2010년도 투자가용재원이 2009년도 투자가용재원 규모보다 줄어들게 된 세입 측면의 요인임(<표 4-5> 참조)
- 한편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필수적 세출경비는 인건비, 보조사업비, 경상적 경비 등을 합쳐 3조 700억원으로 추계됨. 인건비, 지방채상환, 보조사업비, 계속비사업비는 충남도 예산문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우선 행정운영경비(2,403억원)의 인력운영경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연금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 관련 경비 593억원,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205억원 및 재정보전금 1,651억원, 각종 부담금 129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5억원을 합쳐 4,543억원으로 계산됨
- 결국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총계 3조 3,427억원에서 필수적 세출경비 3조 737억원을 제한 2,691억원으로 경상적 세입총계에서 약 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총계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3,234억원이었음. 2010년도 예산에서 2009년도 예산에 비해 자체재원이 줄어든 반면에 보조사업비를 중심으로 한 필수적 세출경비가 늘어난 데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5〉 충남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단위 : 억원)

			2009	2010
세입합계 (Ⅰ)	소계		32,080(100)	33,427(100)
	자체재원	지방세	8,604(26.8)	7,850(23.5)
		세외수입	1,792(4.7)	1,516(4.5)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4,802(15.0)	5,651(16.9)
		국고보조금	16,882(52.6)	18,410(55.1)
필수적 세출경비 (Ⅱ)	소계		28,846	30,700
	법정·의무적 경비	인건비	1,684	1,810
		지방채상환	166	286
		예비비 중 기타		
		보조사업비	21,508	23,468
	기타 필수적 경비	경상적 경비	4,892	4,543
		계속비사업	596	629
		재량적 보조사업	-	-
투자가용재원(Ⅰ - Ⅱ) 규모 및 세입 대비 비중			3,234 (10.08%)	2,691 (8.05%)

자료 : 충남 예산문서에 근거하여 산출

- 2011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2010년 10월 현재 충남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2011년도 투자가용재원으로 세입총계 3조 5,524억원의 8.2%에 해당되는 2,919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 근거를 보면 내년도는 경제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총액을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1,791억원 증가 등을 포함하여 2,097억원(6.2%) 증가된 3조 5,524억원으로 추계하는 한편 필수적 세출경비를 3조 2,605억원으로 추계하여 구하고 있음
- 그리고 2,919억원의 투자가용재원 가운데서 계속성 사업 등 경직성 경비 2,103억원을 제외한 816억원을 이른바 순수 가용재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러한 순수 가용재원에는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 분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의 여지는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신규투자가용재원의 산출

- 이렇게 산출된 투자가용재원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현재 투자가용재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에는 각종의 법령상 실질적으로 지출 의무가 정해진 사업들도 있고 중장기적 계획 하에 추진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삭감하거나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투자가용재원에서 실질적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는 한편 기존 사업예산을 절감하여 얻은 예산을 합치면 순수하게 신규 사업에 활용가능한 신규투자가용재원이 산출됨
- 충남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도 2011년도 2,919억원의 투자가용재원 가운데서 계속성 사업 등 경직성 경비 2,103억원을 제외한 816억원을 이른바 순수 가용재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 그런데 이렇게 추계된 순수 가용재원에는 이른바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경비절감 분이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의 여지는 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투자가용재원의 확충방안

가. 민선5기 충남 예산 운영의 기본방향

■ 민선 5기 재정운영 방향

-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와 민선 5기 전략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 재정투자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토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보다 복지·교육·문화 등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중시
- 성과예산제 및 투자사업의 사전심사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도모
- 도의 기능 재정립과 민간 및 시군 재원의 전략적 활용
-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소통과 신뢰의 민관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재정건전성 확보와 신규전략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 순세계 잉여금의 지방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모든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일률적 10%감액보다는 사업별 우선순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사업별 감액률 차등적용 가능)
- 성과 미흡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삭감
-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 추진
- 관서운영비·업무추진비·여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증가를 억제
- 기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신규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 부족한 재원 제약 하에서 예산운영 성과를 극대화하여 도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교육·문화 등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 위주로 가용재원의 집중적인 배분이 요구됨
- 7대 역점 과제(민선 5기 시책구상보고서)
 - ①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 ②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 ③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 ④ 선진국형 맞춤형복지·환경 실현
 - 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 ⑥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경제 육성
 - ⑦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
- 이러한 새로운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역점과제를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그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도함

■ 성과예산제도 등 재정성과관리제도 활용을 통한 재정효율성 향상

-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 어떠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성취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
- 성과 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며, 성과평가결과, 우수 사업은 증액하고 미흡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함
- 심층평가 결과 제시된 제도개선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예산편성시 감액 또는 사업 폐지함
- 한편 사업 및 예산 편성 이전에 투자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내·외부의 심사를 강화하여 재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용하여 부처별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반영하고,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 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함

- 개별 부서의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노력과 기본경비를 연계시키는 인센티브제 시행. 생산성 제고 실적이 우수한 부처는 예산협의시 부처의견을 최대한 존중. 생산성 제고 실적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 협의·보완시 강제 구조조정 추가 시행함

■ 도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등 민간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도민이 지역의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의 실현과 동시에 그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또한 도민참여형 재정모니터링시스템의 제도화와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재정운영과정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를 유도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충남은 전국 최초로 직접민주주의 실험으로 ‘21세기 타운홀 미팅 도민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혁신적 재정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도의 기능 및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의 재조정

-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행정기능 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민간 이양 사업 및 민관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 시민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공동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을 재편성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군간의 기능분담 재조정과 함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도의 전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광역적 단위(도 혹은 몇 개 시군의 연합)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복 투자를 회피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시군 재정의 전략적 활용

- 도 사업비의 태반이 시군으로 재배분되어 사업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도 예산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군 재정을 도의 전략적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도-시군간의 기능 재배분과 협력적 관계의 구축과 함께 도비 보조금을 기존의 포괄적인 사업 부문에 대한 영세적인 지원보다는 도의 광역적·전략적 사업에 중점 배분하는 한편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제약요인과 가능성

■ 전반적 재정여건

- 세입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 개선과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도세의 일부증가가 예상되나 정부의 취득등록세 감면 정책연장 등 세수 기반 약화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세출은 민선 5기 출범 공약사업 이행, 도청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노인·장애인·보육 등 복지수요의 증가 등에 의한 재정수요 증가 전망
- 결국 전체적으로 세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수요 급증으로 수지 불균형 초래 예상

■ 세입 확충의 여지 극히 제한적

-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과 국세중심의 세원배분체제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세입 확충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임
- 게다가 충남의 경우 세입의 70% 이상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입의 규모와 내용은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세원 재배분이나 이전재원과 관련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음

■ 세출 측면에서도 가용재원 확충 여지 제약

-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법령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지출이 많음
- 또한 자체재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성이 제약되는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이 전체 사업비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조정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 다만 과세자주권, 세원의 빈약성 등을 고려하면 세입 부문보다는 세출 영역에서 경비 절감을 통한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가능성과 필요성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투자가용재원 확충에는 제도적·현실적 제약과 한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확충, 경상적 경비 및 선택적 국고보조사업의 감축 등 필수적 경비의 절감을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의 여지는 제한적인 범위 내 일지라도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음
- 특히 민선5기 충남 도정의 새로운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가용재원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의 재검토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전략사업에 투자할 신규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투자가용재원 확충의 기본 전략

-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은 투자가용재원 산출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입의 확충과 세출 특히 필수적 경비의 절감이라는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에서 개발 가능함
- 기본적으로 세입 및 세출 양 측면에서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동시적으로 요구되지만 단기간에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출 부문의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한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의 재검토에 기초한 세출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 접근 전략으로 판단됨

다.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확충 방안

■ 기본방향

- 부족한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확충은 무엇보다도 자체재원의 확충이 중요하며 자체재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일반재원 위주의 중앙정부 의존재원의 확충과 함께 민간자금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세 수입의 획기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로 편중되어 있는 세원 이양과 함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정분권개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을 유도해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 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행의 법제도의 기본 틀 내에서도 세수 확대가 가능한 방안에다 초점을 두고자 함

■ 지방세 확충 방안 : ① 지방세 체납 개선

- 2009년도 결산 기준으로 충남의 지방세 징수률은 92.5%로 미수납액은 652억원으로서 전체 도 평균 징수율보다 다소 높은 편임. 그러나 지방세 징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 상위 도에 비해서는 아직 저조한 바,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의미함
- 2010년 7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누계 기준으로 831억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468억원을 제외한 2010년 체납액은 363억원임
- 중앙정부 편중의 세원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제약 속에서 지방세 체납의 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임

- 게다가 지방세 체납은 지방세수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산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체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지방세 체납은 제도적 측면에서 납세자의 윤리적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체납 요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체납 개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세 체납의 가장 큰 문제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 및 횟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해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징수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해가는 실효성 있는 지방세 체납개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그리고 재산 압류·공매처분 등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압박하는 강제징수 방법을 체계화하고 실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한편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손처분³⁶⁾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결손처분은 실질적인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는 못하지만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인력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체납업무 담당자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즉 결손처분 기준을 충족하는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이외의 징수 가능한 체납세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단체장의 지방세 체납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가 중요함
- 특히 체납 관련 업무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운 업무인 까닭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체납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적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의 징수 실적에 따라 금전적 인센티브와 함께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진작시킬 필요가 있음

36)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행하는 행정처분.

- 최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 지방세의 징수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상당한 징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체납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서 체납 부서 근무자는 장기 보직을 원칙으로 하여 체납 관련 법규 및 재산 압류·공매 처분 등에 정통하도록 하며 전담 부서 신설 초기에는 외부의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 한편 단체장이 지방세 체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그렇게 함으로써 체납 담당자 이외의 공무원들에게도 체납 개선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체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에게도 인허가 업무, 각종 제 증명 발급 업무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납부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함
- 사전에 체납을 예방하는 것은 직접적인 체납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체납을 예방하여 체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사전에 체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의 납세의식 제고, 납부 고지서의 전자 송달 및 납부 방식의 전산화 등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확충 방안 : ② 신세원 발굴

- 기존의 지방세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기존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신세원 발굴이라고 할 수 있음
- 충남에는 온천자원 및 관광자원 등 신세원 발굴 대상으로 논의되는 자원들이 비교적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기존 지역개발세³⁷⁾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세원 발굴 방안으로 평가됨
-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자원 및 시설 이용에 수반되는 환경오염 및 안전

37)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지하수(웅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1년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공동시설세와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개편된다.

문제 등 지역적 비용 발생에 대한 과세인 만큼 화력발전으로 인한 공해와 주변 지역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손실 등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 논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재 수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화력발전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 참고로, 2010 현재 국내에는 24개 화력발전소에서 연간 27만 9,897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데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의 40%에 달하는 11만 1,600Gwh를 생산해 70%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 전력 1kwh당 0.5원을 부과하면 충남은 연간 약 588억원의 지역개발세가 창출되는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력발전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충남에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활동을 주도해갈 필요가 있음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화력발전시설이 입지하는 10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공동 입법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현실적인 당위성, 다른 발전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 마련과 함께 10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입법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활동이 요구됨

■ 세외수입 확충 방안

- 세외수입원의 다양성과 사업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면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재원 확충 수단으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세외수입이 갖는 수익성과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은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제약을 받는 데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원이 되는 사용료나 수수료 등은 중앙정부의 공공요금관리정책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확충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

임. 특히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의 대상이 되는 상하수·청소·주차장 사업이나 제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행정은 주로 시·군 사무인 관계로 도의 입장에서는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의 확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다만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와 수수료 요금은 특정 편익과 비용의 연계 및 비용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효율의 현실화를 포함한 요금 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경상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동종 자치단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세외수입의 체납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충남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수익사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입장료 수입이나 사업 수입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임대 수입을 올리거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됨

■ 민간자금 적극 활용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과세자주권의 확대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세원 확보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투자사업에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부족한 공공재원을 보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민간영역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영역의 활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도 민간자금의 유치가 강조되고 있음
- 주요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³⁸⁾, BTL방식³⁹⁾, 지정관리자제도 등을 참고하여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8) PFI제도란 공공시설 등 사회자본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자금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주도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기법임.

39)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민간은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Transfer), 대신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여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공공시설 건축방식임.

- 특히 최근까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나 공공시설 관련 토건 사업에 민간자금을 유치해왔으나 앞으로는 사업 대상을 복지·교육·문화 사업으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민간 투자 및 참여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 기본방향

- 투자가용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출 절감은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등 필수적 경비의 억제·절감과 사업예산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사업비의 절감으로 이루어짐
- 경상경비는 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 단기간에 경비를 절감하기는 어렵지만 인건비를 포함하여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과 같은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하도록 함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재량적 자체사업을 절감 대상으로 하여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낭비성 사업 감축, 우선순위 재검토에 의한 세출구조조정, 계약방식 및 사업공법의 변경 등으로 절감함
- 보조사업의 경우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조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임의적(선택적) 보조사업의 감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절감
- 이렇게 절감된 예산액을 민선5기 도정의 비전과 전략과제에 적합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기초하여 전략적으로 집중 재투자할 필요가 있음

■ 경상경비 절감방안

- 인력운영비 : 조직 구조조정 및 신규증원 최소화, 정원대비 현원 결원을 일정비율 유지
- 기본경비 :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 최소화를 통한 해외·국내여비 절감, 시정간행물·유사홍보물 통폐합, 홈페이지 활용 사이버 홍보 활성화, 에너지 절약 및 사무용품·우편요금 등 절약, 관용차량 운영 정밀진단을 통한 차량유지비 절감

■ 사업비 절감방안

- 예산편성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투자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의 체계적 심사, 계약심사 기법의 적용, 각종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낮은 연구용역 최소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마을회관, 체육관·운동시설 등 공동활용), 공기단축을 위한 집중투자를 통해 실질 총사업비 절감, 재정사업 자율평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을 통한 세출구조조정, 민간위탁사업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예산배정 : 사업진척도 및 사업물량 제조사 등을 통한 배정유보·감배정
- 계약 :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설치나 외부 전문 심사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한 원가심사 강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유사사업 통합 발주, 계속비 계약제도 등 적용
- 사업집행 : 설계변경,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을 통한 절감,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로 목적외 사용금지, 옥외행사 최소화, 교육원 등 자체시설 활용을 통한 행사경비 절감, 각종 지역축제, 체육대회 등에 대한 민간보조금 절감, 조직내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설계비·연구개발비 절감
- 사후관리 : 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한 세출구조조정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집행잔액 등의 임의적 활용 제한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비

- 재정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예산누수를 예방

- 복지부분의 통합관리망 확충, 부정 의료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복지 급여의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
- 농업부문에서 개별 농가단위 직접보조에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간접보조 방식으로 전환

■ 성과정보의 활용

- 성과평가, 외부기관 지적 등 환류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 예산낭비신고센터, 여론조사 및 자체 심의기구 등을 적극 활용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지적된 사업 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 연례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은 이월예상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한 예산 현액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
- 김희선. 2008.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진단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 2006. 「충남 자체재원 확충의 실태와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박광배. 2006.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개선방안. 「열린충남」, 36: 127-145.
- 박진도. 2007.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개혁: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사회경제평론」 (28).
- 유재흥. 2009. 「지방재정운영의 분석과 효율화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태현. 201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와 측정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8: 23-40.
- 이상범. 201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과 세원배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26).
- 최병호. 2010.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와 개편 방향. 「지방재정과 지방세」 (28).
- 충남발전연구원. 2010. 「충남비전2020」.
- 충청남도. 2009. 「200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
- , 2009.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 , 2008.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제고방안」.
-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제Ⅱ편 충남 기획 분야 연구보고서

제Ⅱ-1편. 충남 감사관실

제Ⅱ-2편. 충남 공보관실

제Ⅱ-3편. 충남 기획관리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제선 (사)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박병남 (사)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기획실장

정재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차 례]

제Ⅱ-1편 충남 감사관실 연구보고서	89
제1장 충남 감사관실 일반현황	91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92
2. 일반 현황	94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98
제2장 충남 감사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01
1. 추진사업 현황	102
2. 사업비 분석	105
제3장 충남 감사관실 주요 사업 평가	109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110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12
제4장 충남 감사관실 전략 과제	115
1. 비전 및 전략	116
2. 전략별 추진사업	118
제Ⅱ-2편 충남 공보관실 연구보고서	121
제1장 충남 공보관실 일반현황	123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124
2. 일반 현황	125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29
제2장 충남 공보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31
1. 추진사업 현황	132
2. 사업비 분석	137
제3장 충남 공보관실 분야 사업 평가	141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142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45

제4장 충남 공보관실 전략 과제	147
1. 비전 및 전략	148
2. 전략별 추진사업	150
 제Ⅱ-3편 충남 기획관리실 연구보고서	 153
제1장 충남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155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156
2. 일반 현황	160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64
제2장 충남 기획관리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67
1. 추진사업 현황	168
2. 사업비 분석	192
제3장 충남 기획관리실 분야 사업 평가	201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02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212
제4장 충남 기획관리실 전략 과제	209
1. 비전 및 전략	210
2. 전략별 추진사업	212

[표 차례]

<감사관실>

<표 1-1> 감사관실 담당직원 직무 수행 현황	97
<표 1-2>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98
<표 2-1> 감사관실 예산현황	105
<표 2-2> 사업별 예산 현황	105
<표 2-3>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107
<표 3-1> 감사관실 성과관리체계	110
<표 3-2> 예산 운용 방향	113

<공보관실>

<표 1-1>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125
-----------------------------------	-----

<표 1-2> 도 출입 언론매체	126
<표 1-3>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126
<표 1-4> 자체 홍보매체 현황	127
<표 1-5> 공보관실 담당직원 직무 수행 현황	128
<표 1-6> 공보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129
<표 2-1> 공보관실 예산 비중	137
<표 2-2> 공보관실 예산 현황	137
<표 2-3> 2010년도 사업별 예산 구성 현황	138
<표 2-4>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140
<표 3-1> 공보관실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140

<기획관리실>

<표 1-1> 관련기관 단체 현황	160
<표 1-2> 관련 소위원회 현황	161
<표 1-3>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164
<표 2-1> 2010 예산집행 현황	179
<표 2-2>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현황	192
<표 2-3>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재원별 현황	193
<표 2-4> 예산 성격 분석 현황	193
<표 2-5> 연도별 기획관리실 예산 추세	194
<표 2-6> 정책기획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5
<표 2-7> 예산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6
<표 2-8>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법무 관련 예산 현황	197
<표 2-9> 정보화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8
<표 2-10>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9
<표 3-1> 정책기획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
<표 3-2> 예산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203
<표 3-3>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204
<표 3-4> 정보화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204
<표 3-5>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205
<표 4-1>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운영 현황	214

[그림 차례]

<감사관실>

<그림 1-1> 충남의 검경통보 공직비위 건수	94
<그림 1-2> 최근 3년간 비리 유형	95
<그림 2-1> 감사관실 예산 분석	106

<그림 2-2> 감사관실 연도별 추이	106
<그림 2-3>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107

<공보관실>

<그림 2-1> 2010년도 예산 구성 분포	138
<그림 2-2> 2009~2010년 사업별 예산 구성 현황	139
<그림 2-3> 공보관실 연도별 추이	139
<그림 2-4>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140

<기획관리실>

<그림 2-1>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재원별 현황	193
<그림 2-2> 예산 성격 분석 현황	194
<그림 2-3> 연도별 기획관리실 예산 추세	194
<그림 2-4> 정책기획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5
<그림 2-5> 예산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6
<그림 2-6>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법무 관련 예산 현황	197
<그림 2-7> 정보화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8
<그림 2-8>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199

제Ⅱ-1편 충남 감사관실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주요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감사관실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 대외적 여건

- 중앙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 지표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발표
-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외교부의 특채비리 등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연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며 다시금 공직자, 공적영역의 윤리가 국민적 관심으로 높아짐
- 정부에서는 실추된 이미지를 벗기 위한 방법으로 전방위적인 고강도 사정활동이 예상됨

■ 대내적 여건

- 충남도는 최근 전국적 관심을 끈 공직자들의 공금 횡령·유용 대형비리가 연이어 발생하며 공직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짐
 - 서산시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관련 공문서 위조, 지급청구서 허위작성(6억)
 - 논산시 : 특별회계 일일결산 미이행, 지출결의성 없이 직인 도용 인출(42억)
 - 홍성군 : 사무기기 업체와 공모 허위공문서 작성 부당 지출(113명, 7억)
 - 수산 종묘 매입 방류 사업 관련 뇌물수수(16명, 보령7/당진2/서산1/서천1/도청 전현직5)
 - 당진군수 : 뇌물수수, 여권위조 행사
- 국민권익위원회의 ‘09년 광역지자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순위 하락
 - ‘08년 3위 → ‘09년 11위(8단계 하락)

■ 원활한 도정운영과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자체 감사 기능을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척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 필요함

나. 전망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구의 개방형 감사시대

-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010.3.22)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정 차원의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제정이 필요함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2010.11.23)
-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하여 공공분야의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다가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개정(2010.3.22)에 따라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감사행정과 도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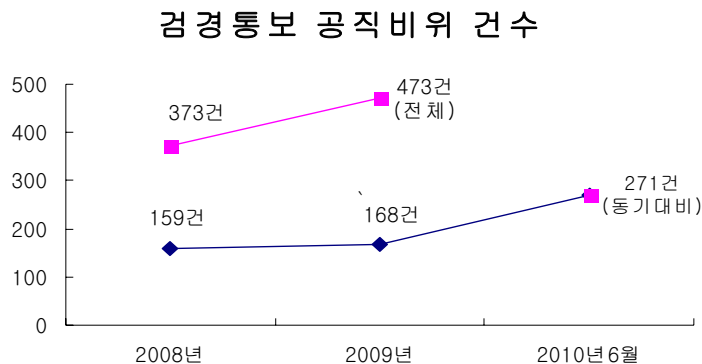
2. 일반 현황

가. 공직비위 현황

■ 검찰경찰 통보 공직비위 건수(2010. 8. 행정부지사 업무보고자료 기준)

- 2008년도 373건에서 2009년도 473건으로 점차 증가(26.8%) 추세이며, 2010년의 경우 6월까지 271건으로 2009년 동기 168건 보다 61.3% 증가함
- 이는 종래보다 비리 수사 영역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현행 감사시스템은 서류확인, 피감기관 직원 인터뷰의 한계

〈그림 1-1〉 충남의 검경통보 공직비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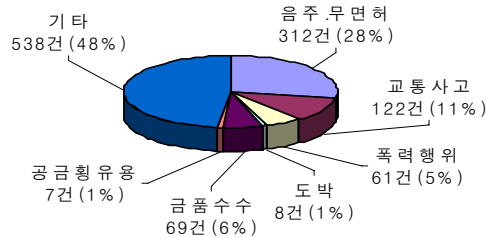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비리 유형(2010. 8월. 행정부지사 업무보고자료 기준)

- 2008년도 1월에서 2010년도 6월까지의 공직자 비리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포함)이 전체 1117건중에서 312건으로 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공금횡유용(7건/1%), 금품수수(69건/6%) 등 직위를 악용한 비위가 76건(7%)에 달함

〈그림 1-2〉 최근 3년간 비리 유형

최근 3년간 ('08.1~'10.6)비리 유형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현황(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기준)

- 2008~2010년 9월현재 비위 공무원은 227명
 - '음주운전' 적발이 전체의 59.5%에 해당하는 135명
 - '교통사고'가 6.2%(14명), '금품수수' 4.4%(10명), '폭력행위' 3.5%(8명) 순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현황
 - 82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5명은 파면 또는 해임처분 되었으며, 정직(6명), 감봉(32명), 견책(27명), 경고처분(1명), 11명은 심사가 진행중
 - '훈방·경고'가 70명, '불문'이 56명으로 절반 이상(55.5%)이 사실상 면책 처분
 - 38명은 '감봉', 32명은 '견책' 처분, '파면 또는 해임' 8명, '정직' 처분 8명

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

■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2010.8 행정부지사 업무보고자료 기준)

- 총 대상자 : 1,629명 (공개 229명, 비공개 1,400명)
 - 충남공직자 윤리위원회 : 1,559명(공개 179명, 비공개 1,380명)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 70명(공개 50명, 비공개 20명)
- * 도지사, 도의원 등

다. 감사운영방향(2010년도 업무계획)

- 수요자 중심의 감사구현 및 공직비리의 근원적 차단
- 취약분야 감사집중,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

1. 협력·문제해결 중심의 「종합감사」 운영

- 수감기관의 애로 및 문제사업 발굴, 해결방안 모색
-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 및 경미한 사항의 현지시정 확대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활성화

2. 지방재정 확충 및 취약분야 전략감사 강화

- 도세 및 각종 부담금에 대한 전산감사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지원
-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지원 및 계약심사 강화

3. 투명하고 부패없는 청렴공직사회 실현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적극 전개
-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의 활성화

4.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

- 상시 감찰활동 강화 및 비위공직자 일벌백계
-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 공직기본질서 저해행위 중점단속

5.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 활성화

-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한 감사결과 적극 공개
- 진정·생활 민원의 적극처리로 민원만족도 제고
- 주민 참여 명예 감사관제 운영활성화 노력

라. 감사관실 직원 임기 현황

■ 감사관실 직원 직무 수행 현황(2010.8. 행정부지사 업무보고 기준)

- 감사관을 제외한 전임 담당자의 평균 직무기간은 12.6개월이며, 2010년 8월기준으로 현 감사관실 담당직원 직무기간은 14개월임
- 감사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높아야 함에도 그 직무기간이 1~2년으로 짧아 제도적 한계를 보임

〈표 1-1〉 감사관실 담당직원 직무 수행 현황(2010.8.기준)

직 위	직 급	현직임용월 (부서임용월)	직무 수행 기간	전임자 임용월 (부서 임용월)	직무기 간
감 사 관	지방서기관	2010. 7	1개월	2008. 7	2년
총괄감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2009. 8 (2005. 7)	12개월	2008. 7 (2004. 7)	13개월
회계감사담당	"	2009. 8 (2008. 7)	12개월	2008. 7 (2005. 7)	13개월
기술감사담당	지방시설사무관	2007. 1 (2007. 1)	3년7개월	2006. 1	12개월
조 사 담 당	지방행정사무관	2009. 8 (2009. 1)	12개월	2008. 7 (2006. 1)	13개월
공직윤리담당	"	2009. 8	12개월	2008. 7 (2008. 7)	13개월
계약심사1담당	"	2009. 8	12개월	2009. 1 (2009. 1)	7개월
계약심사2담당	지방시설사무관	2010. 1	7개월	2008. 7 (2008. 7)	17개월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기구 및 정원

■ 감사관 - 7 담당(총괄·회계·기술·조사·공직윤리·계약심사1·2)

- 정원 33명 현원 35명으로 기능8급 2명 초과
- 소속위원회 :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의결)
주민감사청구심의회(주민감사 청구요건 심사·결정)

■ 최근 비리가 횡령·유용의 형태에 비해 세무 담당 직원의 수는 1명임

〈표 1-2〉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 급										7급				기능 8 급
			행정	시설	행정	세 무	공 업	농 · 축 · 해 · 녹 지	시 설			보 · 환 환 경	소 방	전 산	전 산	행 정	시 설		
				토 목					토 목	건 축	지 적						토 목	건 축	
정원	33	1	5	2	6	1	1	1	3	1	1	1	1	1	1	3	2	1	1
현원	35	1	5	2	6	1	1	1	3	1	1	1	1	1	1	3	2	1	3

나. 주요 기능

■ 총괄감사담당

-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수립, 예산·회계 집행
- 행정감사 종합계획 수립, 시·군 정기부분감사
- 의회업무 주관, 정부합동감사 수감·처분요구사항 처리

■ 회계감사담당

- 도 직속기관·사업소, 유관기관 정기·부분감사
- 감사원감사 수감·처분요구사항 관리, 대행감사

■ 기술감사담당

- 일반토목, 도시계획분야 감사, 종건소, 백제권 정기·부분감사
- 감사원 등 기술분야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 관리

■ 조 사 담 당

- 도지사 특명사항, 공무원 비위·진정사항 조사
-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비위관련 동향 관리
- 인터넷 민원 처리(민원부조리, 불친절·부패공직자)
- 주민감사청구 및 진정민원 처리
-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이첩민원 조사

■ 공직윤리담당

-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및 소방관서 정기감사

■ 계약심사 1담당

- 계약심사 분야 기획총괄·조정
-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분야 원가계산 심사

■ 계약심사 2담당

- 도로·건축, 조경분야, 시설공사 원가계산
- 상·하수도, 하천, 사업분야 시설공사 원가계산
- 토목·건설분야 기술용역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2장 충남 감사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총사업량

복무기강점검단 운영 : 5개반 / 교육·홍보 : 8,000명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 평가 : 16개 시·군

- 추진계획

상시 『복무기강 점검단』 편성·운영(5개반 34명)

부패개연성 업무(104개) 전면정비 및 업무담당자 연찬회 개최

청렴마인드 제고 특별 교육·홍보 강화

반부패 청렴대책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점검(16 시·군)

공직자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활성화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온정적 처리지양, 엄중조치

■ 각종감사 내실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총사업량

정기종합감사 : 28개 기관

(시·군 5, 직속기관사업소 6, 소방관서 7, 산하기관 10)

부분감사 : 3개분야(대형공사 집행, 민원처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 추진계획

정기종합감사계획 수립 : 2010. 1 (중앙 계획과 연계추진)

국도정 연계성 확보를 위한 지도성과 감사

지역여론 형성층 의견청취 등 현장감사 강화

지방재정 확충지원을 위한 취약분야 전산감사 확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심층 점검

- 기대효과

기관별 취약업무, 비리발생요인 등 사전차단

투명한 예산회계 집행 등 비효율적 낭비요인 제거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실현으로 행정변화에 능동적 대처

■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총사업량 :

진정·고충민원 : 감사원·권익위 등 이첩민원 및 도 접수민원 ('09년 394건)

민원처리 실태 점검 : 2회, 10개 기관

민원처리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추진계획

진정·고충민원의 완벽한 처리 : ' 08. 1 ~ 12(수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진정·고충 민원의 해결

민원처리실태 점검(상·하반기) : 도 본청, 시군, 소방서 등 대민원 처리기관

민원처리 제도개선 발굴 : 상·하반기

■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 기반구축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총사업량 : 200여건
 - 공사 5억원 이상 (전문 3억원이상)
 - 용역2억원 이상(일반학술 1억원 이상)
 - 물품 구매·제조 2천만원 이상

- 추진계획
 - 계약심사 대상 수요조사 : 2010. 1 (도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사·군)
 - 계약심사 자료 D/B 구축 : 2010. 1 ~ 12
 - 각 분야별 주요 심사내용, 절감액, 절감률 등 통계현황 작성
 - 절감액 사업재투자 : 2010. 6 ~ 12
 - 추경예산을 통해 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및 사업비 분석

■ 감사관실 예산은 2010년도 323,520천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3조 3,427억원)의 0.01%를 차지하고 있음.(일반회계 기준)

- 감사관실 예산 재원 : 전액 도비
-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 24,020천원이 감소

〈표 2-1〉 감사관실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0년도	10년도 예산 중 구성비	2009년도	09년도 예산 중 구성비	증감	증감비
323,520	0.01%	347,540	0.01%	△24,020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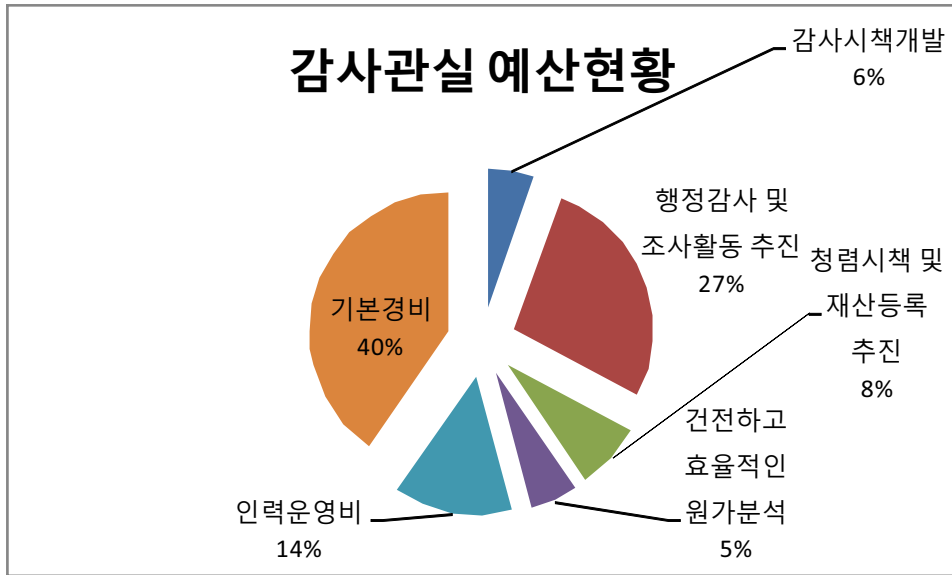
■ 사업별 예산 현황

-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가 감사관실 전체예산의 54.3%에 이룸
-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사업비가 23,080천원이 증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원가분석사업비가 50,000천원이 감소함
 - 원가계산시스템 구축('09년도) : 50,000천원

〈표 2-2〉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본예산		비교증감	
		2010년	2009년		
정책사업비	감사시책개발	17,650	17,650	0	0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	88,314	65,234	23,080	35.4%
	청렴시책 및 재산등록 추진	24,800	22,380	2,420	10.8%
	건전하고 효율적인 원가분석	17,400	67,400	△50,000	△74.2%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44,820	44,340	480	1.1%
	기본경비	130,536	130,536	0	0
계		323,520	347,540	△24,020	△6.9%

〈그림 2-1〉 감사관실 예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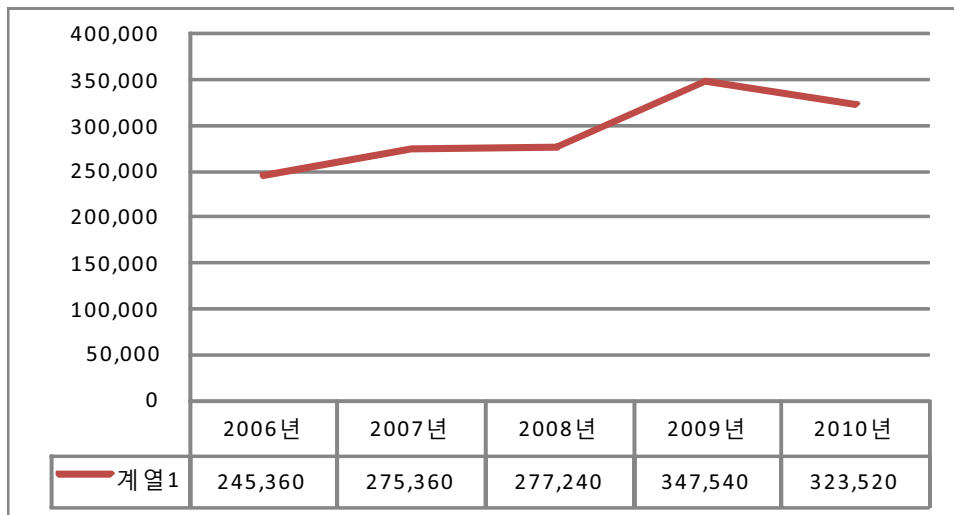


나. 사업예산 추세분석

■ 감사예산 추세분석

- 감사관실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 245,360천원에서 2010년 323,520천원으로 연평균 8.0%증가율을 보임

〈그림 2-2〉 감사관실 연도별 추이 (단위: 천원)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 감사관실 예산의 재원은 전액 도비

라. 집행 형태별 사업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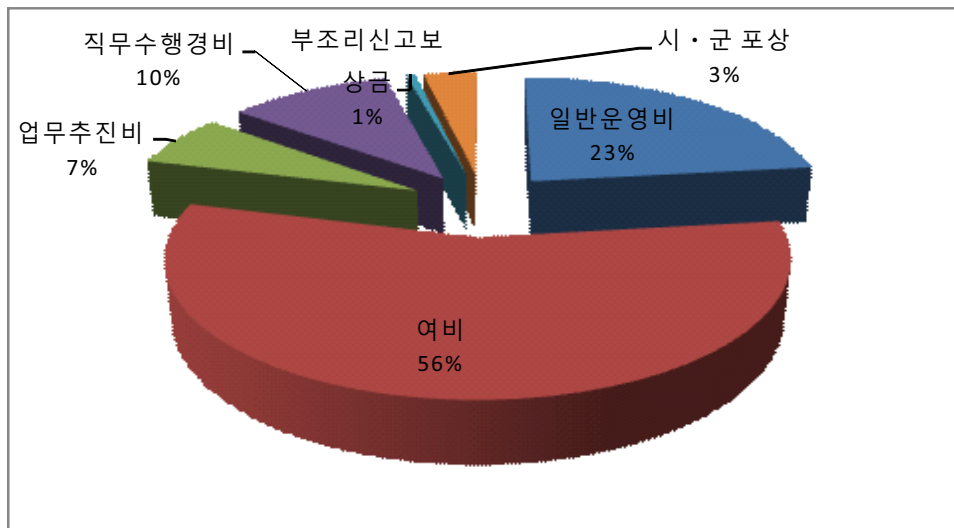
■ 감사관실의 주요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며, 사용형태별로 보면 여비가 전체 예산의 55.8%를 차지하고 있음.

-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사업의 추진용 비용이 73%임
- 보상금, 포상금이 11,000원으로 4%임

〈표 2-3〉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구분	금액(천원)	비고
일반운영비	74,700	
여비	181,000	비중 : 55.8%
업무추진비	20,980	
직무수행경비	33,840	
부조리신고보상금	2,000	
부패방지우수 시·군 포상	11,000	
계	323,520	

〈그림 2-3〉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제3장 충남 감사관실 주요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주요 사업 성과관리체계

■ 감사관실 예산 계획의 단위사업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청렴문화 정착,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강화임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1)감사시책개발사업, 2)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사업 이며,
- 청렴문화 정착은 3)청렴시책 및 재산등록 추진
- 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강화는 4)건전하고 효율적인 전문성강화 임

■ 주요 사업으로는 1)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2)각종감사 내실운영, 3)도민이 체감하는 위민업무 수행, 4)계약심사 기능강화로 예산절감 기반구축임

■ 감사관실의 성과관리체계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 도민체감 위민업무 수행, 각종 감사의 내실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의 이행을 향상과 기타(도정홍보율, 연가사용율, 조기집행율, 혁신활동율)로 이루어짐

〈표 3-1〉 감사관실 성과관리체계

지표명	가중치	비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25/100	
도민 체감 위민업무 수행	20/100	
각종감사 내실운영	25/100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 이행을 향상	20/100	
기타	10/100	

나. 평가기준 및 주요 사업 평가

■ 예산의 적합성

- 사업 예산의 규모와 내역이 사업 내용과 부합 여부

■ 사업의 실효성

- 사업 목적에 부합된 사업 결과의 실효 여부

1) 예산의 적합성

■ 감사관실의 주요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여비 등 업무 추진비용이 차지함

- 공직 비리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실현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 시스템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무한 실정임

2) 사업의 실효성

■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직윤리관 정립,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의 주요 방안이 있으며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시 운영하고 전자민원 창구를 운영하여 비리의 사전 예방,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여 하고 있으나, 공직비위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각종 감사 현황 및 성과

- 정기 종합감사 : 28개기관(시·군5, 소방관서7, 직속기관·사업소6, 산하기관10)
- 부분감사 : 민원처리 실태 점검 5개 기관
- 종합감사, 부분감사 성과(10.7.31 현재)
 - 행정상 : 390건 (시정 164, 주의 174, 현지조치 52)
 - 재정상 : 1,968백만원 (추징 210, 회수 104, 감액 등 1,654)
 - 신분상 : 84명(경징계 1, 훈계 83)

■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에 비하여 감사를 위한 각 사업들이 일정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직비위 건수가 늘어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될 정도의 비리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감사 기법의 개발, 예방적 차원의 감사 정책의 개발이 요구됨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 감사관실 예산은 총액 324백만원이며, 주요 사업의 예산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가용재원 산출이 무의미함

나. 예산 운용 방향

■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한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서류 검토와 인터뷰 형태의 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한 시책 및 정책개발이 필요.
- 현재 감사 시책 및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사업운용, 인력비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인 시책 및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전무한 상황임
- 공직자 비리의 가장 큰 두가지 형태는 공직자의 회계부정과 외부 청탁에 의한 비리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리감독의 체계화 및 교육이 필요함. 이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입법 예고된 감사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의 감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따르지 않으면 비록 전문성 향상은 기대될지라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표 3-2〉 예산 운용 방향(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조정안	증감	비고
감사관실	감사시책개발	18	38	20	확대(예산확보)
감사관실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	88	88	-	
감사관실	청렴시책 및 재산등록 추진	25	25	-	
감사관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원가분석	17	17	-	
감사관실	인력운영비	45	45	-	
감사관실	기본경비	131	141		
	소계	324	344		
	합계	324	344		

제4장 충남 감사관실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사업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는 도민참여 감사역량의 구축

- 지방차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재정과 인적 구성은 중앙정부와 관료들의 주도로 집행되는 ‘민선관치’ 적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음.
-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행정 처분과 집행에 대해 도민이 직접 고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도민 참여 감사제도 도입 운영. 도민에 의한 관료 감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도정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도정 협력과 참여를 키워 나감.

■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제도 운영

- 관료에 의한 관료의 감시의 내적 한계, 지사로부터 감사의 제약으로 인한 자체 감사의 독립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적 합의제 감사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도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 합의제 독립감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사 권능의 도민 이양

- 일부 관료와 기득권 집단의 특권과 반칙을 넘어서 ‘도민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는 자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사의 권능의 일부를 도의회와 도민에게 돌림으로써 참된 견제와 균형을 실천함.

■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도민 참여 보장과 처리결과의 공개

- 감사 계획의 수립과 감사의 실행, 처분 결과와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감사 결과를 환류하는 정책 중심 감사를 실현.

나. 추진 전략

- 독립적 합의제기구로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 감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
- 감사 전 과정 정보의 인터넷 공개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

- 사업 필요성 「공공기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적 감사기구 구성 의무화됨. 자체 감사 역량의 강화와 자치 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 개요 : 도지사 직속 합의제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지방정부 직 공무원으로, 위원중 3인은 도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 임기는 3년
 - ② 사무국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여 1사무국 2과(감사과 조사과)로 편성(사무국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채용)
- 기대효과
 - ① 독립적 감사 기구의 구성을 통해 자체 감사역량의 강화 및 견제와 균형을 실현
 - ② 감사위원의 임명에서 도의회의 추천을 반영함으로써 지사의 권능 일부를 도민에게 위탁하는 분권 행정의 모범 제시.
- 추진일정
 - ① 조례제정 2010년 10월 임시회
 - ② 감사위원회 구성 2010년 12월 중
 - ③ 감사위원회 업무 개시 2010년 1월 1일

■ 감사자문위원회 및 도민감사단 구성 운영

- 사업 필요성 행정의 집행과 평가가 관료 중심으로 집행되는 ‘민선관치’적 한계를 벗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행정 처분과 집행에 대해 도민이 직접 고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도민 참여 감사제도 도입 운영. 도민에 의한 관료감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도정의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도정 협력과 참여를 키워 나갈 수 있음. 감사 계획의 수립과

감사의 실행, 처분 결과와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감사 결과를 환류하는 정책 중심 감사를 실현.

- 개요

- ① 감사자문위원회 1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 및 도민들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계획, 집행, 환류 전반에 걸친 자문.

- ② 도민감사관 30인 내외로 구성하여 도민 고충, 감사 착안 사안을 제보하고 감사 과정에 참여.

- 기대효과 도민의 참여에 의한 감사의 실시로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도민에 의한 도정의 견제와 균형을 형성함.

■ 감사 전 과정 정보의 인터넷 공개

- 사업 필요성 내,외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계획과 감사 처분, 감사 결과 사업 반영 결과 등 감사의 전과정을 인터넷에 공개

- 개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감사 상황 현황판 제작 게시

- 기대효과 감사 전과정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소요예산

제Ⅱ-2편 충남 공보관실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공보관실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 대외적 여건

- 지방화시대·세계화시대로 변화하며 국가에 대한 투자(국가를 보고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지방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유치, 국책사업유치 등을 놓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
- 주민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단체장의 역할이 과거의 행정업무의 역할에서 지역의 홍보, 지역기업의 마케팅 지원까지 영역과 정책이 확대·변화하고 있음

■ 대내적 여건

-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확산되면서 자치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여야하는 현실이지만, 자치단체 조직의 구조와 경직성이 새로운 행정 수요와 높아진 도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발적인 정책과정 참여,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과거의 일방적 발신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발신된 내용의 수용과 반응을 보이는 쌍방향 소통능력 제고가 자치역량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

나. 전망

■ 쌍방향적 소통을 통한 정책고객관리 중심의 소통기획 조정

- 공보관실 중심의 홍보에서 각 실국의 정책홍보와 만족도 제고 등 정책고객관리(PCRM)를 종합적으로 기획-평가-환류 하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소통기능과 기획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시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는 과정을 창출하는 것이 도정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임.

- 일방적인 전달형의 홍보기능, 사후적 정책모니터링, 환류 없는 의견 수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창출해야 함.

2. 일반 현황

가. 주요업무 추진 현황

■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2009년도 기준)

- 기자회견 · 도정브리핑 · 방송인터뷰 · 대담(258회)
- 보도자료 제공(1,724건)
- 도정 이미지광고 (16회)
- 꽃박람회 홍보(인터넷 : 다음사이트 배너 및 검색창설치, 모바일 가입자를 통한 문자 전송

〈표 1-1〉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연도	기자회견 등	보도자료 제공	도정 이미지광고	비고
2009	258	1,724	16	행정감사

* 2009년도 자료는 충남도의회 행정감사 제공자료(2009.11.20) 참조

■ 정기간행물 운영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 운영실태 전수조사 대상업체(165개소)에 대한 서면조사
 - 비정상 운영업체에 대한 조사 및 행정예고 2회 실시
 -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취소 18, 등록취소 유보 7

■ TV 난시청 해소

- TV난시청 가구에 스카이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
 - 사업비 분담(09년) : KBS28%, 방송통신위 30%, 도21%, 시·군21%
 - 사업비 분담(10년) : KBS40%, 도30%, 시·군30%

연도별 추진실적 : 총 6,220가구 1,355백만원

- 05년 982가구 250백만원 - 07년 1,963가구 442백만원
- 08년 1,242가구 216백만원 - 09년 2,033가구 447백만원

■충남도 홍보관 운영 및 관리

- 홍보관 개요
 - 위치 :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511-1(행담도휴게소 內)
 - 건립연도 : ' 00. 5월 착공, ' 01. 1월 준공 ※개관 : ' 01. 5월
 - 규 모 : 연면적 1,319㎡(399평)
 - 1층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200평)- 당진군에 위탁(신평농협에 재위탁)
 - 2층 : 道 홍보관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199평)- 道 공예조합에 위탁
 - 사 업 비 : 총 24억원(건축비 16, 내부시설 8)
 - 도비 20억원, 당진군비 4억원(1층 농협판매장 내부시설비)
- 홍보관 운영실적
 - 꽃박람회 홍보관 역할 수행
 - 도청 이전신도시 건설 홍보

나. 언론 및 홍보 매체 현황

■도 출입 언론매체 현황

- 246개 언론사 165명의 기자가 충남도에 출입하고 있음

〈표 1-2〉 도 출입 언론매체

구 분	계	일간지		TV	인터넷 신 문	케이블 방 송	지역 신문	잡지	기타
		중앙	지방						
언 론 사	246개사	18	17	5	12	4	150	23	17
출입 기자	165명	18	34	16	14	6	47	22	8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

〈표 1-3〉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계	일간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인터넷 신 문	인터넷뉴스 서비스(포털)
174건	1	71	20	2	10	10	59	1

■ 자체 홍보매체 현황

〈표 1-4〉 자체 홍보매체 현황

도정신문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영문 잡지	점자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순간(월3회) 매 85천부	TJB 위탁운영 운영인력 5명	인력 1명 1일 1,300여명 접속	연 2회 매 5천부 1,122개소 배부	분기 발간 매 1천부 시각장애인용	충남넷 온라인 도정홍보	3개블로그 1일3,000여명

다. 공보관실 중점과제(2010년도 업무계획)

■ 테마별 기획홍보전략 수립, 집중 홍보

- 국제행사, 지역균형발전, 서민생활 안정, 지역녹색성장 등

■ 주요계기 활용, 도정비전 국내·외 홍보 확산

- 민선4기 성과, 민선5기 취임, 해외순방, 투자유치 등

■ 도민 여론의 적극적인 수렴과 홍보정책에 반영

- 주부 명예기자 운영, 도정신문 독자코너 운영 등

■ 인터넷 네티즌 공약을 위한 사이버 도정홍보 강화

- 충남넷·인터넷방송·신문 운영, 세계대백제전 온라인 홍보 등

라. 공보관실 직원 임기 현황

■ 공보관실 직원 직무 수행 현황(2010.8. 행정부지사 업무보고 기준)

- 공보관은 1년을 주기로 보직이 변경되고 있음

〈표 1-5〉 공보관실 담당직원 직무 수행 현황(2010.8.기준)

직 위	직 급	현직임용월	직무 수행 기간	전임자 임용일	직무기 간
공 보 관	지방서기관	2010. 7	1개월	2009.7	1년
홍보기획담당	지방행정사 무관	2009. 1	1년8개월	2008.7	6개월
보도지원담당	지방행정사 무관	2010. 7	1개월	2008.7	2년
미디어담당	지방계약직 '가' 급	2007. 3	3년6개월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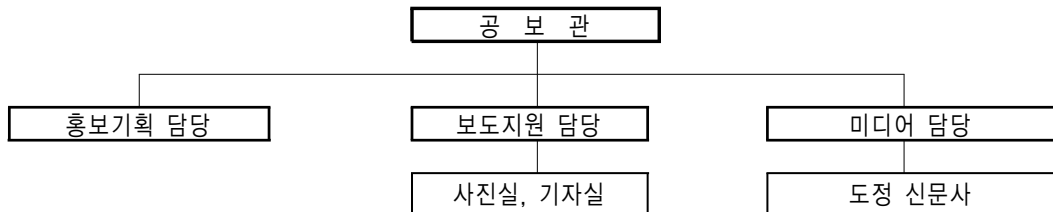
가. 기구 및 정원

■ 공보관 - 3 담당(홍보기획, 보도지원, 미디어) / (2010.8월기준)

- 정원 25명, 현원 27명으로 별정직 6급 1명, 기능직 8급 1명 초과

〈표 1-6〉 공보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무기 계약
		4급	5급	6급	7급	가급	라급	6급	7급	8급	7급	8급	
정 원	25	1	2	6	4	2	1	-	2	1	1	3	2
현 원	27	1	2	6	4	2	1	1	2	1	1	4	2



나. 주요 기능

■ 홍보기획

- 공보관실 소관 업무의 종합 계획 수립 · 조정 · 총괄
- 국정에 대한 주요 사항의 홍보
- 홍보정책 개발 및 연구
- 도정홍보 특집 등 홍보전략 수립
- 도보 및 도청 홍보물 발간
- 정기 간행물 등록 관리
- 도 홍보관 운영 · 관리

■ 보도지원

- 보도계획 수립 및 시행
- 보도자료 작성
- 도정기록 사진촬영 및 홍보용 사진 관리
- 도청 출입기자실 운영
- 언론사와의 업무 협조 유지
- 사이비 기자 단속
- 도정홍보 사항 분석 평가
- 언론매체 모니터 운영
- 신문·잡지 등 구독
- 도정광고 업무

■ 미디어

- 충남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총괄
- 홈페이지 서버운영 및 자료관리
- 홈페이지 자료관리부서 지정 및 최신자료 업데이트
- 홈페이지 관련 실과협조사항 처리
- 웹서비스 운영관리
-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선정·간담회 개최·의견처리
- 도정주요 시책의 인터넷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인터넷 신문 발행
- 충청남도 공식 블로그, 트위터 운영
- 유선방송 관리 및 TV 난시청 대책
- 도정신문 발간
- 도정신문 명예기자 제도 운영
- 영자신문 및 점자신문 발간
- 그 밖에 도정 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충남 공보관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

- 예산액 : 920백만원(공보관실 770, 대백제전 조직위 150)
도정광고 670, 케이블방송 광고 50, 입법사항 공고 50, 대백제전 150
- 추진계획
전방위적 홍보를 위해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1일 4~6건)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신문 등 인터뷰 및 대담 방송(수시)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실·국·원별 정례/수시브리핑 운영(주 2회)
충남 비전 및 정책사업 특집보도 및 광고 게재로 이미지 부각(수시)
홍보기법 향상을 위한 언론인 초청, 홍보관계자 교육(1회)
- 홍보대상 언론기관 : 5개분야 331개 언론사
방송 9, 신문 280, 인터넷 9, 잡지 23, 기타 10

■ 「2010 세계대백제전」 전략적 집중 홍보

- 추진계획
기획 및 특집기사 보도 : 5개분야 331개 언론사
- 대백제전 준비상황, 운영 프로그램, 백제문화단지 등 소개
중앙·지방신문 및 잡지 등에 섹션기사 및 홍보광고 실시
- 신문 92, 인터넷 9, 잡지 31, 케이블방송 4, 전광판 1(서울)
일본 홋카이도 HTB 교차 홍보(대백제전 ↔ 삿포르 눈축제)
- TJB 삿포르 눈축제 방영(3월), 홋카이도 HTB 대백제전 방영(9월)
- 사업기간 : 2010.2~11
- 예산 : TJB 협찬 비용 지급(4천만원)

■ 자체 도정홍보를 위한 신문·잡지 발간

- 「도정신문」 발간 배부

발행근거 : 충청남도 도정신문조례(' 90. 12. 15 창간)
 발행주기·부수 : 월3회(매월 5/15/25일) / 매회 85,000부
 규 격 : 타블로이드판, 12면(8면 칼라인쇄)
 배부대상 : 국회, 도 시군의원, 시·군 및 읍면동(통리반장) 등
 예 산 액 : 850백만원

-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잡지」 발간

추진목적 : 외국인에 대한 도 주요정책 홍보로 충남이해 도모
 충남의 문화관광·국제행사 홍보로 충남체험 메시지 전달
 제 호 : Chungnam, Heart of Korea(' 05. 12. 31 창간)
 발행부수 : 연 2회(상/하반기), 매회 5,000부
 배 부 처 : 1,122개소(국내 824개소, 국외 298개소)
 예 산 액 : 40백만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 발간

제 호 : 충남도정 소식(2002. 7. 1창간)
 발행부수 : 季刊(3/6/9/12月) 매회 1,000부
 제작분량 : 점자 40페이지, 한글 30페이지
 배 부 처 : 시각장애인협회 및 구독희망 시각장애인

■사이버(온라인)를 통한 도정 홍보

- 충남넷 홈페이지 도정 홍보기능 강화

사업비 : 192백만원
 포털사이트 다음/네이버에 홈페이지와 링크, 「홍보사이트」 구축 운영
 문화관광, 대백제전, 지역축제, 투자유치, 특수정책 등 홍보

- 인터넷 방송국(Cni-TV) 운영

개 국 : 2008. 2. 1 (주소: tv.chungnam.net)
 사업비 : 232백만원(연간)
 운 영 : 전문인력 아웃소싱(PD·앵커 등 5명)

- TJB(대전방송)과 용역계약(' 09. 6. 9 ~ ' 10. 12. 31)

사업내용 :

- 도정 및 의정뉴스 영상콘텐츠 제작·홍보(183편)
- 실생활 중심의 도민참여형 기획 프로그램 제작(36편/경제뉴스, 문화 교양강좌, UCC 공모전 개최 등)
- 도정소식 영상 3개 방송사 제공 및 케이블TV에 연계 송출
- 인터넷방송 명예 VJ요원(24명) 활동 강화

• 인터넷 신문발행

창간일 : 2008. 9. 1 (주소 : <http://news.chungnam.net>)

운 영 : 1명(전문계약직)

예 산 : 16백만원

사업내용 :

- 도정 및 의정뉴스 제작, 네티즌 홍보
-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네티즌 참여 확대
- 인터넷 신문 네티포터(명예기자) 운영 활성화(390명)

■ 「도 홍보관」운영 관리

- 위 치 :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511-1(행담도휴게소 內)
- 건립연도 : ' 00. 5월 착공, ' 01. 1월 준공 ※개관 : ' 01. 5월
- 규 모 : 연면적 1,319㎡(399평)
 - 1층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200평) - 당진군에 위탁(신평농협에 재위탁)
 - 2층 : 道 홍보관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199평) - 道 공예조합에 위탁
- 건설비용 : 총 24억원(건축비 16, 내부시설 8)
 - 도비 20억원, 당진군비 4억원(1층 농협판매장 내부시설비)
- 추진계획
 - 도 + 시·군 공동으로 홍보관을 활용하여 활성화 도모
 - 16개 시·군에 홍보공간을 배분하여 공동 활용
 - 시·군이 순회하며 정례적으로 관광 및 홍보 이벤트 병행
 - 도청이전 신도시 홍보관으로 활용

- 도청이전 신도시 조감도 및 이용계획도 설치
 - 홍보 동영상 상영(7분), 홍보안내 리플릿 비치, 배너 설치 등
- “2010 충청방문의 해”, “2010 세계대백제전” 홍보공간으로 활용

■ 「전자도보」 발간

- 발간주기 : 旬刊(매월 10, 20, 30일)
- 게재내용 : 자치법규·행정규칙, 고사·공고, 시·군 행정 등
- 배 부 처 : 도, 시·군, 유관기관, 기타
- 배포방법 : 도보 발간 공문으로 알림→ 道 홈페이지 접속 후 열람
- 추진계획 :
 - 도보를 PDF파일로 전자화하여 道 홈페이지 게재
 - CD로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및 자체 보관

■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 정기간행물 등록(' 10. 5. 20현재) : 169개 업체
 - 일간 1, 주간 69, 잡지 42, 인터넷신문 56, 인터넷뉴스서비스 1
- 추진계획
 - 정기간행물 등록 처리기한 단축(25일 → 20일)
 - 정기간행물 운영실태 조사계획 수립(7월)
 - 정기간행물 운영실태 조사(8월~9월)
 - 1차 : 등록업체에 간행물 납본요구 공문 발송
 - 2차 : 시·군별 일제조사 후 현지 정밀조사 실시
 - 운영실태 조사결과 법규위반 업체 계도 및 행정조치

■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추경예산)

- 사업대상 가구 : 2,000여가구
- 소요 사업비 : 579백만원(도비 174, 시·군비 174, KBS 231)
 - 도, 시·군, KBS 와 공동사업으로 추진(KBS 사업비 40% 부담)

- 사 업 내 용 : TV난시청 가구에 수신장치(스카이 위성) 설치
- TV난시청 해소사업 신청(13개 시·군 2,631가구)
- 신청가구에 대한 KBS에 실사 의뢰(4월), 사업대상 가구 확정(9월)
- 소요예산(도비 174백만원) 추경확보 및 사업 추진(9월~12월)
사업비 : 도 30%, 시·군 30%, KBS 40%

연도별 추진실적 : 총 6,220가구 1,355백만원

- 05년 982가구 250백만원	- 07년 1,963가구 442백만원
- 08년 1,242가구 216백만원	- 09년 2,033가구 447백만원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사업비 분석

■ 공보관실 예산 총액은 3,090,736천원(2010년도)

-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하여 246백만원이 증가(8.6%)하였으며, 도정시책홍보 2,938백만원(95%), 행정운영경비 152백만원(5%)임
- 재원 : 전액 도비

〈표 2-1〉 공보관실 예산 비중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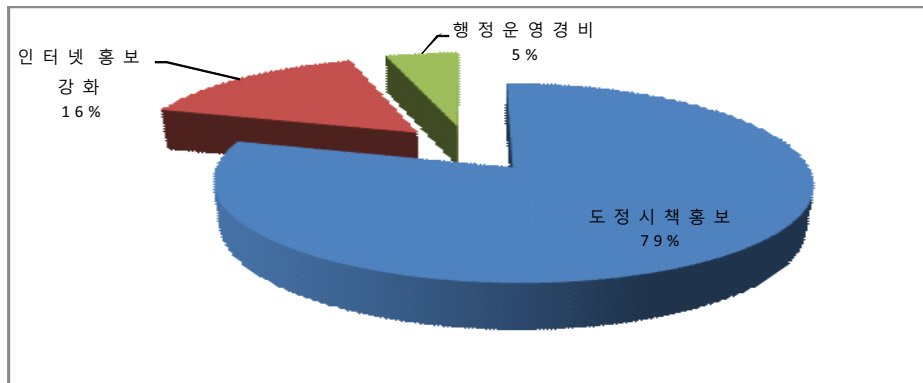
2010년도	10년도 예산 중 구성비	2009년도	10년도 예산 중 구성비	증감	증감비
3,090,736	0.09%	2,844,470	0.09%	246,266	8.66%

- 도정시책홍보 비용 2,455백만원 중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비용은 1,680백만원임
 - 도정신문(850), 영문잡지(40), 점자신문(20), 도정광고(670), 케이블 방송광고(50), 조례입법예고 등 공고료(50)

〈표 2-2〉 공보관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2010년	2009년	비교증감	
도정시책홍보	2,455	2,098	357	17%
도정홍보 정책개발	621	317	304	95.9%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및개발	986	1000	△14	△1.4%
효율적인 도정홍보	810	720	90	12.5%
충남 홍보관 관리	38	61	△23	△37.7%
인터넷 홍보 강화	484	596	△112	△18.8%
충남넷 홈페이지서비스 향상	192	314	△122	△38.9%
인터넷 신문방송 시스템	292	282	10	3.5%
행정운영경비	151	150	1	0.6%
인력운영비	11	10	1	10%
기본경비	140	140	0	0
계	3,090	2,844	246	8.6%

〈그림 2-1〉 2010년도 예산 구성 분포



- 전체 3,090백만원 중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가 242.6백만원(7.9%)
 - 도정홍보 정책개발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백만원,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10백만원,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95.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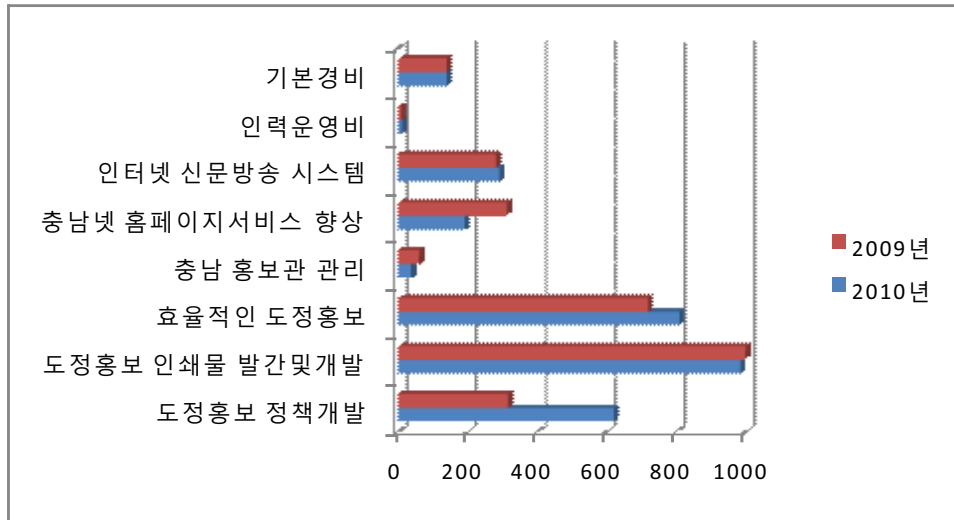
〈표 2-3〉 2010년도 사업별 예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사업별 주요 구성현황
도정시책홍보	2,455	
도정홍보 정책개발	621	신문구독료 172, 업무추진비 137 HD장비구입 270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및개발	986	도정신문 850
효율적인 도정홍보	810	도정광고비 720
충남 홍보관 관리	38	
인터넷 홍보 강화	484	
충남넷 홈페이지서비스 향상	192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140
인터넷 신문방송 시스템	292	인터넷 방송 운영 222
행정운영경비	151	
인력운영비	11	
기본경비	140	
계	3,090	

* 사업별 주요 구성현황 기준 : 1억원 이상

- 2009년도에 비하여 2010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도정홍보 사업비(50백만원증가), 도정홍보 정책개발 비용(303백만원증가)이 증가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비스 비용이 소폭 감소하였음
 - HD 장비 구입 27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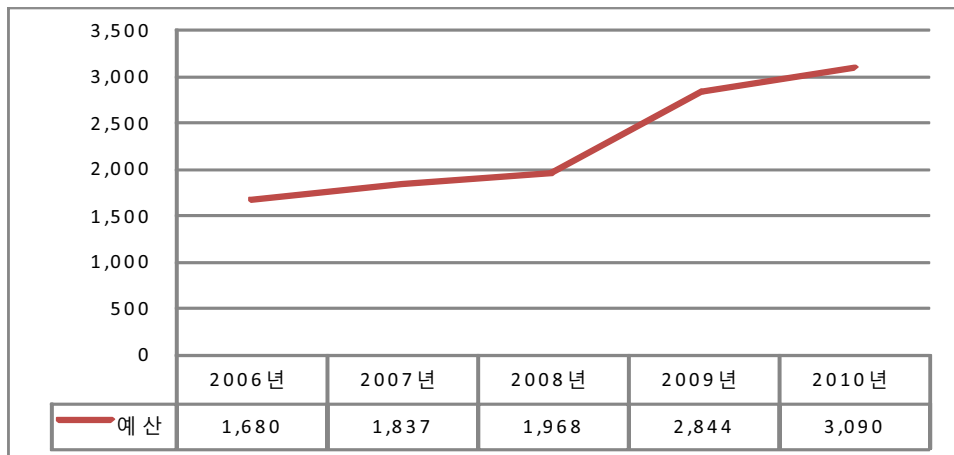
〈그림 2-2〉 2009~2010년 사업별 예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공보관실 예산 추세분석

-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6년에 1,680백만원에서 2010년 3,090백만원으로 연평균 21.0%증가율을 보임

〈그림 2-3〉 공보관실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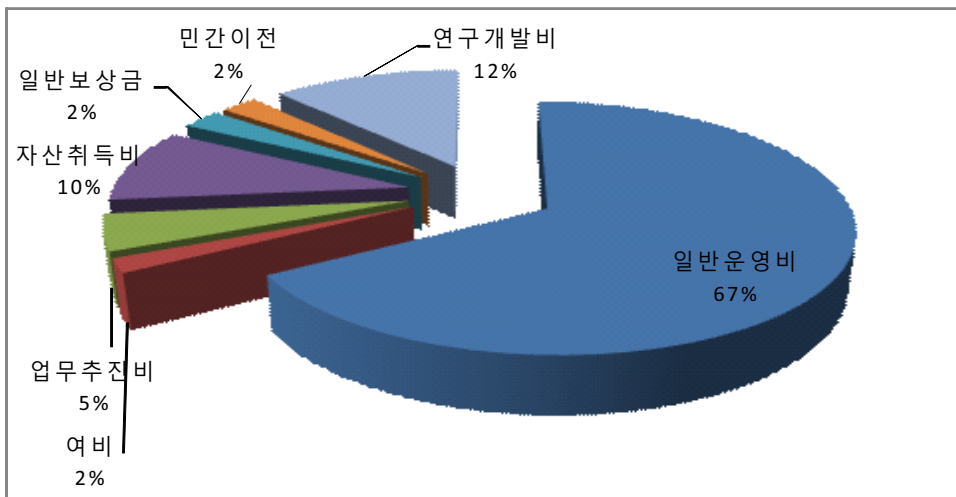
나. 집행 형태별 사업비 분석

■ 공보관실 예산의 집행 형태별 사업비를 분석하면 일반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음.

〈표 2-4〉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구분	금액(백만원)	비고
일반운영비	2,062	신문구독료,도정신문 발간, 도정 광고 등
여비	57	
업무추진비	148	
자산취득비	300	
일반보상금	79	
민간이전	73	
연구개발비	372	
계	3,091	

〈그림 2-4〉 집행 형태별 예산 분석



제3장 충남 공보관실 분야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주요 사업 성과관리 체계

■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는 도정의 주요 사항과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임

- 홍보 방법으로 크게 자체 홍보물 발간(도정신문, 영문잡지, 전자신문), 광고/공고, 홈페이지 활용, 홍보관 운영임.

〈표 3-1〉 공보관실 사업별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	비고
TV 난시청해소	10	
도정뉴스 지역 케이블방송 송출량	10	
도정홍보 보도자료 제공 향상 및 질적수준 제고	20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우리도와 일보훗카이도와 교차 관광 홍보	10	
입법사항등에대한 일간신문 공고	15	
조기집행율	1.7	
충남인터넷 방송시스템 운영 활성화	15	
포털사이트에 도정홍보사이트 연계 구축	10	

나. 평가기준

■ 공보관실의 주요 업무는 도정에 대해 도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얼마나 충족시켰는지와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잘 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홍보 기능
 - － 도민들이 도정의 소식, 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했는지 여부
 - － 도정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였는지 여부
- 환류 기능

-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잘 되는지 여부
- 가용재원 산출가능성
 -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여 가용재원으로 산출 가능성이 있는지

다. 주요 사업 평가

1) 주요 사업 목록

■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

■ 「2010 세계대백제전」 전략적 집중 홍보

■ 자체 도정홍보를 위한 신문·잡지 발간

- 「도정신문」 발간 배부
-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잡지」 발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문」 발간

■ 사이버(온라인)를 통한 도정 홍보

- 충남넷 홈페이지 도정 홍보기능 강화
- 인터넷 방송국(Cni-TV) 운영
- 인터넷 신문발행

■ 「도 홍보관」운영 관리

■ 「전자도보」 발간

■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

* 공보관실 주요 사업은 아니나, 예산상 / 자체 성과체계 상 포함시킴

2) 주요 사업 평가

■ 홍보 기능

- 도정 정책 홍보를 위해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 자체 매체(온·오프라인)를 통한 홍보
 - 도 홍보관 운영
- 도정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도민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는지의 여부를 봤을 때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강화 사업과 2010 세계대백제전 전략적 집중 홍보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자체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신문·잡지 발간 등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도정의 정보를 단편적으로 일회성 홍보가 아닌 주요사업,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관리(후속 관리)가 필요함.
- 필요한 정보가 주민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등 도민의 입장에서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
- 또한, 충남넷 홈페이지의 경우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민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정확성(정보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도 차원의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 되고 있음

■ 환류 기능

- 도민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것 이외 도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처리되는 환류기능 또한 중요한 업무임
- 공보관실에서의 의견, 여론수렴 매체는 언론, 자체 발간 매체 - 신문, 잡지, 홈페이지이며, 자체 발간 매체의 경우 환류 기능이 매우 약함
- TV 난시청 해소 사업은 KBS의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만 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상 공보관실이 아닌 타 실국의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함.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 공보관실 예산은 총액 3,090백만원으로 도정시책홍보 비용 2,938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52백만원으로 각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어 가용재원 산출의 의미가 약함

- 도정홍보정책개발 620백만원,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및개발 986백만원, 효율적인 도정홍보 810백만원, 인터넷 신문방송 시스템 292백만원, 충남넷 홈페이지서비스 향상 192백만원, 충남 홍보관 관리 38백만원임

나. 예산 운용 방향

■ 공보관실 예산 운용은 기존 사업비를 시대 변화에 맞는 실질적인 홍보 전략 개발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 개발 및 이에 따른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

- 예산 대비 홍보 효과 등 여건을 고려하여 인쇄물 홍보(910백만원/경직성 경비제외) 및 사이버 홍보(405백만원/경직성 경비 제외)조정 필요
- 충남도정의 홍보와 충남도 홍보의 연계를 고려하여 충남도의 문화와 산업, 관광 등이 도정의 정책과 함께 홍보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에 기여 유도
- 또한, 현행 인터넷 방송운영 민간 위탁제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

제4장 충남 공보관실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쌍방향적 소통 기획과 조정을 통한 도민이 주인인 도정 창출

■도정 소통전략 기획 체제의 구축: 소통과 평가의 환류 시스템의 구축

- 현대 행정에서 소통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음. 고객이 월급을 주다는 프로슈머(Prosumer)가 상징하는 것처럼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쌍방향적 소통이 홍보의 중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 즉 “도청의 발신이 관료, 여론주도층, 도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도민, 관료, 여론주도층이 발신한 것이 도청과 지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로 전환하며, 나아가 전달된 내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소통의 핵심임.

■도민이 주인인 도정의 창출

- 일방적인 전달형의 홍보기능, 사후적 정책모니터링, 환류 없는 의견 수렴체제를 극복하여 도민이 발신하는 내용에 반응하는 도정을 창출함으로써 도민이 주인인 도정을 창출함.

■쌍방향 소통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의 사회자본 확장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현

- 특히 소통기능과 기획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다시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는 과정을 창출하여 도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도정의 핵심적 경쟁력으로서 도민참여형 혁신도정을 실현. 이를 위해 공보관실 중심의 홍보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홍보와 만족도 제고 등 정책고객관리(PCRM)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평가 환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민이 발신하는 내용에 대해 반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소통을 통해 도민 참여의 참된 자치시대의 소통을 만들어 냄.

나. 추진 전략

■소통을 중심으로 한 도정소통전략의 홍보 기획

- 도정 공보의 전달에서 도정 소통의 기능을 확대
- 공보관실에서 홍보기획관실로 개편하여 정책고객관리(PCRM) 기획 조정 업무를 총괄
- 소통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매체의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

■도정홍보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한 도정홍보 종합 기획

- 도정 홍보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정 홍보비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소통능력 대비 과대 집행 언론 홍보비 재조정
- 균형 있는 지역언론 발전 지원 및 뉴미디어를 포함한 언론매체별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소통을 중심으로 한 도정소통전략의 홍보 기획

■ 홍보기획관실 개편

- 사업 필요성 : 도정의 필요에 의한 정보의 전달에 치우친 공보기능에서 도민들과의 소통에 의한 홍보기능으로 확대전환하고, 정책고객서비스(PCRM) 기획 조정 업무 전담 기능으로 기획적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
- 사업내용
 - ① 정책고객관리(PCRM) 기획 조정 업무 총괄
 - ② 미디어센터 신설 충남도 발간물 통합 관리
 - ③ 소통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매체의 실태 조사 및 대안 마련
 - ④ 도민 발신 반응 시스템 구축
 - 도민 발신 반응 체제 : 도민 민원게시판 ‘이거리를 바꾸주세요’ 사이트, 트윗, 페이스 북 등
- 기대효과
 - 도민 중심의 정책 고객 서비스 제공
 - 일방적 도정의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체계 마련

■ 도정소통전략의 기획환류 시스템 구축 추진

- 사업 필요성 : 소통의 통로와 매체 설계, 소통방법 개발로 도민과의 소통하는 도정운영 체계 마련
- 사업내용
 - ① 도정 소통의 전반적 조사 및 분석
 - 주요 소통 대상자 파악, 소통채널방식 수용성 분석

② 소통방안 마련

- 핵심 리더십에서의 전략관리체제 구축
- 관료대상 전략성과 홍보연계 시스템 구축
- 여론 주도층 중심 시민 참여 방법 개발

③ 도민 삶의 질, 여론, 만족도 정기조사와 도정 이해관계자 공개 통한 환류 추진

• 기대효과

- 도정에 도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마련

나. 도정홍보사업조정위원회를 통한 도정홍보 종합 기획

■ 도정 홍보사업조정위원회 신설

- 사업 필요성 : 도정 홍보에 대한 종합 관리를 통해 소통능력 대비 과대 집행 언론 홍보비를 재조정하고 균형 있는 지역언론의 발전을 도모

• 사업내용

- ① 도정 홍보비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 ② 도 각 실국에서 발주하는 연간 홍보계획 사전 심의
- ③ 소통능력 대비 과대 집행 언론 홍보비 재조정

• 기대효과

- 소통능력 대비 과대 집행 언론 홍보비를 재조정
- 균형 있는 지역언론 발전 지원
- 뉴미디어를 포함한 언론 매체별 홍보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제Ⅱ-3편 충남 기획관리실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기획관리실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 대외적 여건

- 세계화 및 경제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무역·투자자유화,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전략 등으로 전세계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임. 그러나 세계화 시대는 일상생활의 장소이자 기업의 입지인 지역 단위의 중요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 생활영역, 공공서비스 등 각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추동함. 정보화의 추세 적응 정도에 따라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사이의 디지털 분단도 가속
-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됨에 따라 기존 산업사회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 대두. 지식 창출 활용 능력이 경제발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혁신 창출 및 전파 구조가 지역발전에서 중요해짐.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녹색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하고 있음. 환경위기가 국제적인 정치안보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한편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음.
-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 입주해 있어 온실가스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고 있어 능동적인 대처가 없으면 외부환경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개편 강제될 가능성도 있음.
- 세계경제에서 중국 경제의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한·중·일로 구성된 동북아가 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중심축의 이동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무역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호 경제의존도가 증대하면서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충·남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대내적 여건

- 국가적으로 급속한 출산율이 하락(2009년 1.15)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충남의 경우 2005년에 이미 노령인구의 비중이 14.5%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조만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함.
- 한국경제는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경제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격차로 산업, 기업, 지역, 고용, 소득 각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사회적 계층 이동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설비자동화 등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고 있음.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약화되며 동시에 성장의 분배개선효과도 약화됨. 충남의 경우도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이 속속 입지하면서 충남의 취업계수는 17.9명(전국 평균 23.9명)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함.
- 세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중앙의존형 지방재정구조, 수도권규제의 지속적 완화, 감세(세제개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지방재정 세입이 2008-20012년 기간 동안 25조7,387억원 순감소예산-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환경 변화는 충남도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충남의 지방재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한 각종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있음. 지금까지 선호된 개발 방식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개발 이익을 전제로한 외부 자본 유치였으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의 자본 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거래 감소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주 수입원인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충남도내 각종 개발사업 특히 충남도 역점사업인 충남도청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충남개발공사의 운영에도 난관이 조성될 수 있음.
- 충남북부와 남부의 지역간 경제와 산업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북부지역(천안, 아산, 서산지역이 충남전체 부가가치의 3/4 이상 차지)은 수도권 기업 이전 덕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내륙지방

과 남부해안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에서 소외되어 도내 수도권 인접 지역과 나머지 지역간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북부의 성장동력을 남부 지역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남부지역의 내생적 성장잠재력 개발이 필요함.

- 북부 지역의 급격한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외부지향적 발전 과정에서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음. 북부 이전 기업과 대학이 충남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권 보다 수도권에 더 긴밀한 경제적, 인적 연계를 가지고 있음. 고급인력과 연구개발 기능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고 충남은 산업생산으로 특화되어 있어 1인당 지역 총생산 수준에 비해 지역의 소비수준은 낮은 형편임. 아울러 북부지역은 산업기능의 성장에 맞는 생활 기반 시설이 취약해서 피고용인들인 이주민들의 정착의지도 낮은 형편임.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중소기업의 연계 발전이 미흡하여 대기업과 연계한 부품 소재 산업을 발전시킬 과제도 안고 있음.(대기업 사업체 수는 1.5% 지만 종업원 수 32.6%, 생산액 61% 부가가치 56.5% 차지)
- 충남도는 전체적으로 교통과 교류의 중심지로서 입지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세종시를 비롯한 국가중심 기능의 선도지역, 서북부 지역의 산업발전 거점의 확보,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의 확보라는 강점을 갖추었음. 또한 환황해권 생산 교류의 거점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서해안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도청이전신도시의 건설과 녹색성장 정책을 수용할 자원을 보유하는 등 기회요인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충남도내 지역간 재정력과 경제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부합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중심성 및 공간 통합성의 결여,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미흡이라는 약점과 더불어 수도권규제완화와 부유층 중심 감세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의 저하, 수도권 및 대전과의 비교 우위 약화, 다양한 FTA의 추진으로 1차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위협 요인을 안고 있음.
-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확산되면서 자치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높여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편제 되고 운영되어 온 도정의 특성상 중앙정부 의존성이 여전함. 특히 국비를 관내 지역에 배분, 집행하는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일방적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계속되어 왔음.

-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증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발적인 정책과정 참여, 상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과거의 일방적 발신 중심의 소통이 아니라 도민으로부터 발신된 내용의 수용과 반응을 보이는 쌍방향 소통능력 제고가 자치역량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자주재원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가치와 비전, 도정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함양하여야함.

나. 전망

■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변화 - 견제와 균형, 참여와 소통의 시대로

- 부활한지 20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치아래 형식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견인차가 아닌 부패와 재정탕진의 온상이 되어 주민생활 향상의 장애가 되어 옴
- 또한, 특정 정당이 사실상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옴.
-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은 21세기의 핵심이 사람임을 보여주었으며, 도민(주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지방자치의 주체로 부각되었으며, 지방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참여와 소통, 견제와 균형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가치로 부각됨

2. 일반 현황

가. 기획관리실 일반 현황

■ 2010년도 기획관리실 예산 : 6,627억원

- 일반회계 3,289억원, 특별회계 2,662억원, 기금 681억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0억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539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51억원 - 통합관리기금 681억원
 -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178억원 - 예비비 331억원

■ 관련 기관 · 단체 현황

〈표 1-1〉 관련기관 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남개발공사	50명	김 광 배	지역발전 촉진개발 및 발생 이익금으로 지방재정 간접 보충
(재)충남발전연구원	40명	박 진 도	시·군 및 도 당면 현안과제 연구를 통한 지역발전
(사)충청남도의정회	148명	김 성 진 (4대 의원)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의정발전에 관한 사업추진
(재)충청남도장학회	3명	도 지 사	장학지원사업, 학술, 연구 지원사업 등
충청남도학생기숙사	14명	이 종 춘	도민의 대학생 자녀 학비부담 경감과 면학환경을 지원

■ 소관 위원회 현황

- 도정조정 · 평가, 정책개발 기능 : 8개
 - 예산집행 · 투자심의 기능 : 2개
 - 자치입법 심사 · 규제개혁 및 행정구제 심의 : 4개
 - 기타(정보화추진협의회 등) : 5개
- ※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심판위원회

〈표 1-2〉 관련 소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위원장(의장)	주요기능
조례규칙심의회	11명	도 지 사	자치법규안(조례·규칙) 심의
행정심판위원회	15명	도 지 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
도정조정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도정 주요정책심의·조정 의결
자체평가위원회	25명	서 만 철 (공주대총장)	도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
도정평가단	190명	이 병 하	도정 주요업무 현장평가 및 시책건의
정책자문교수단	60명	이 효 선 (단국대교수)	도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문
녹색성장위원회	30명	행정부지사 강 일 구 (호서대교수)	도 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 수립 자문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산하기관 경영평가 주요사항 결정
행정서비스현장 심 의 위 원 회	15명	행정부지사	행정서비스 현장 제·개정 등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5명	행정부지사	의원에 대한 상해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액 심사
투자심사위원회	15명	기획관리실장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타당성· 적합성 등 심의 자문, 민간투자 심사
재정계획및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방재정계획 재정공시 심의 및 자문
지방교육공무원인사 위원회	7명	행정부지사	청양대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자문
도비 유학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	10명	행정부지사	도비 유학 장학생 선발 계획수립 및 장학생 선발 심 사 등
교육정책협의회	12명	행정부지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협의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등
규제개혁위원회	12명	행정부지사 오 열 근 (변 호 사)	규제의 신설·완화 등에 대한 심사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7명	문 종 욱 (충대법대학장)	공무원의 징계 등 심사결정
정보화촉진협의회	20명	기획관리실장	지역정보화 기본방향 등 심의
균형발전위원회	25명	행정부지사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지원 심의

나. 주요 업무 추진 계획(2010년도 도의회 업무계획 보고 기준)

■ 지역발전 역량의 제고

-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
-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지원
- 녹색성장 정책 추진
- 지방재정 조기 집행 추진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활성화
-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 제3차 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건설 종합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국방대 논산이전 추진
-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정보화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특성화 지원

■ 사회통합 및 인적역량 제고

- 민생 5개분야 ‘행·검 합동단속’ 실시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운영
-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확대·운영
- 대학생 도비 해외유학 제도 운영
- 청소년 기숙형 인성교육기관 설립운영
- 중국어 캠프·방과후 중국어학교 추진
-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 추진
-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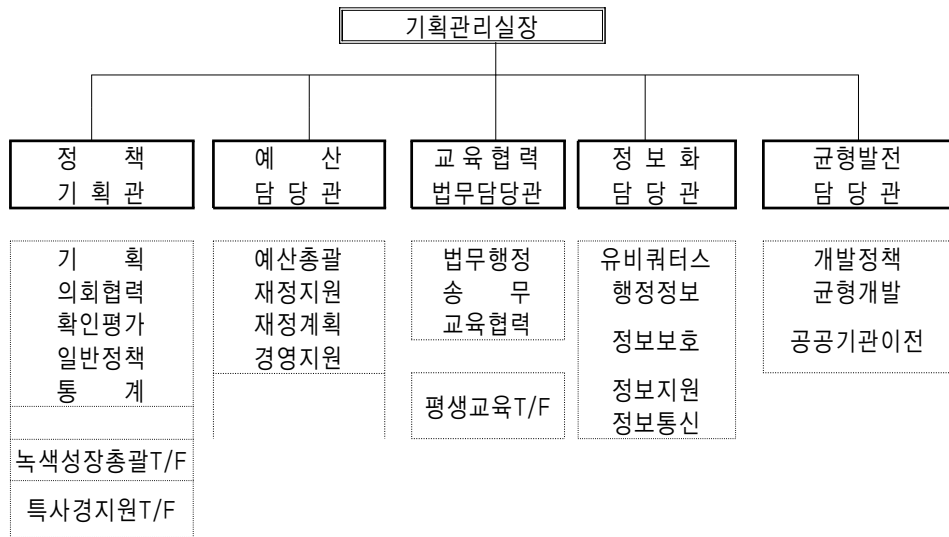
■ 도정성과 창출을 위한 행정역량 제고

- 도민의식조사 정례화
- 충남미래포럼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행정 강화
- 국·도정 및 시·군정간 업무연계 강화
- 부서 성과관리 운영
-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운영
-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
-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 충남통계 제공서비스 기능개선
- 2010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실시
- 2011 정부예산 확보 추진
- DDos 자체대응체계 구축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기구 및 정원

■ 1관, 4담당관, 20담당, 3T/F



〈표 1-3〉 감사관실 기구 및 정원 현황 (단위 : 명)

담당관별	계	일반직(정원/현원)									계약직
		고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직	
계	123/120	1/1	1/1	4/3	21/22	37/40	33/30	9/8	0/1	13/14	4/1
정책기획관실	30/28	1/1	1/1	-	6/6	9/9	7/7	2/1	0/1	1/2	3/0
예산담당관실	23/23	-	-	1/1	4/4	8/8	9/7	0/2	-	1/1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18/20	-	-	1/1	3/4	6/7	5/5	1/2	-	1/1	1/0
정보화담당관실	40/36	-	-	1/0	5/5	10/12	8/8	6/2	-	10/9	
균형발전담당관실	12/13	-	-	1/1	3/3	4/4	4/3	0/1	-	0/1	

※ 특사경지원단 T/F : 7명(5급 1, 6급 3, 7급 1, 8급 1, 기능 1) 별도

나. 주요 기능

■ 정책기획관실

-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총괄, 충남발전연구원 지원 육성
- 녹색성장 시책 추진, 대백제전 총괄 지원
- 도의회 운영 협력 및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
- 행정선진화, 성과관리 및 국·도정시책평가
- 통계 심사·분석·공표 및 간행물 발간
-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등 특사경 지원단 운영

■ 예산담당관실

-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
- 국비보조균형발사업, 광특예산, 교부세 등 정부교부금 관리
- 경영수익사업 관리 및 시·군 예산운영지도 등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 자치입법 심사 및 공포, 규제개혁, 법규 해석
-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소송사무조정
- 교육지원 및 도민 인재육성 지원

■ 정보화담당관실

- 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추진
- 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및 행정정보화 등 전자지방정부 구현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등 지역정보화 추진

■ 균형발전담당관실

- 국토·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지역개발관련 道 장기비전 구상
- 지역균형발전·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 지방분권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

제2장 충남 기획관리실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기획관리실의 주요 업무

- 도정 종합기획·조정 기능 강화
-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
-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 「유비쿼터스 충남」 실현
-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도정종합기획 · 조정 기능 강화

【1】 도정 종합기획 · 평가 · 환류 시스템 구축

- 계획 :
 - 익년도 시책 구상보고회 개최
 - 익년도 도정운영의 기본 틀 작성
 - 주요업무 실천계획 작성
 -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추진 :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주요업무 계획·추진상황 보고
 - 도민평가시스템 운영
- 평가·환류
 - 성과관리
 -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 목표 관리제

【2】도정운영 조정

- 간부회의 운영

지사사항 정리·전파, 분기1회 추진상황 분석 보고, 환류
현안사항 등 보고, 토론

-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 위원(실국장)
내용 : 도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심의·조정 의결

- 수요토론회 운영

주제 : 기획관리실장, 참석 : 실국장, 관련 실과장
내용 : 정책입안시 사전의견 수렴,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

【3】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 구 성 : 16개 시도지사(' 99. 1. 23)
 - ※ 회장(선출) : 부산시장, 부회장 : 대전시장, 전남지사
- 사 무 처 : 1총장, 1국 2실 5부, 32명 ※재외공관(29명)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2·7월), 임시회(회원 3분의1 이상 발의)
- 운영경비 부담 : 서울·경기 2억 2천만원, 기타 시·도 9천만원
- 주요활동 : 시도 공동현안 등 대정부 건의
 - ※ ' 10년도 : 실무협의회(4. 16), ' 09년도 : 3회(협의회 2, 간담회 1)

② 충청권 행정협의회

- 구 성 : 3개 시·도지사(대전, 충남북, ' 95. 3. 3)
 - ※ 회장(시·도 직제순 윤번제) : 대전시장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필요시)
- 주요활동 : 충청권 발전 공동 노력
 - ※ ' 10년도 : 미개최, ' 09년도 : 2회(세종시건설촉구선언/3. 25, 11.24)

③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 구 성 : 서해안권 5개 시·도지사(인천·경기·충남, 전·남북/' 03. 2. 21)

- ※ 회장(시·도 직제순 윤번제) : 인천시장
- 회의운영 : 정기회 2회(상·하반기), 임시회(회원 5분의 3 요구시)
- 주요활동 : 황해권 발전 공동 노력
- ※ ' 09년 이후 미개최, ' 08년도 : 1회

【4】국정감사 및 도정결산

① 국정감사 대응

◆ 감사시기 : 매년 9. 10 부터 20일간(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수감현황 : 매년 1~2개 위원회 ※ ' 09. 10, 행정안전위 수감
 - 9 ~ 10월은 국정감사 수감체제로 행정력 집중
- ⇒ 道 현안사업 등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기회로 적극 대응

② 도정결산

◆ 도정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환류시켜 도정발전 도모
- 매년 6·12월말 등 2회 도정운영 결산 브리핑

- 상반기 결산 : 도정의 주요성과 정리, 기자회견 홍보
- 연말결산 : 한 해 동안의 주요성과 정리, 송년기자회견
 - 전국단위시책 평가결과, 道政을 빛낸 10大 시책 등 포함

【5】거버넌스적 도정운영 체계구축

① 「지역국회의원 초청」 도정설명

- 주요도정과 현안 설명, 공조·협력 체제 구축
- 지역현안 사업 정부예산 확보 협조요청 등

② 「고향사랑모니터 초청」 도정설명

- 중앙정부의 정보획득과 지역현안을 협의하는 매체로 활용
- 위촉인원 : 행안부 등 34개 부처청 85명(4~5급 중심)
 - ※ 중앙청사(' 10. 4. 20/44명), 과천청사(' 10. 5. 6/19명) 구분 실시

【6】도의회 운영 지원

- ◆ 구성 : 6개 상임위(운영,행자,문화복지,농경,건소,교육) 45명
- ◆ 회기 : 연간 10회 114일(既 운영 4회 32일 → 앞으로 6회 82일)

□ 제9대 도의회 개원 지원

- 당선자 「의정설명회」 개최(7.2) : 도정 현황설명(기획관리실장)
- 「院」 구성 및 「개원식」 개최(7.12~7.14 / 본회의장)

□ 회기운영 지원계획

- 구 성 : 8대/5개 상임위 38명 ⇒ 9대/6개 상임위 45명
 - 교육위원회 신설, 지역구 의원 2명 등 7명 증원
- 하반기 회기 운영(6회 82일)
 - 개원식(7.12~7.14), ' 09년 결산감사(9.1~9.16)
 - 행정사무감사 및 ' 11본예산 승인 등(정례회 11. 16~12. 21)
 - ⇒ 업무보고(2회), 도정질문(2회), 행감(1회), 예산안 심의(2회) 등

□ 의원 의정활동 지원

- 2011년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10. 10)
- 도정 현안사항 수시보고, 예산반영시 사전 협의 등

【7】국·도정시책 평가역량 강화

①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 '09년 평가개요('10년 실시)
 - 평가기간 : '10. 3 ~ 6월(평가기준 : '09.12.31) ※ 사·군 실적 포함
 - 평가시책 : 17개 부처, 8개 분야, 38개 시책, 148개 지표
 - 평가결과 공개('10. 6) 및 인센티브 시행('10. 7)
 - ※ '08년 : 2개 분야, 9억원(산림환경 7억원, 경제살리기 2억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지표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취합 및 실적입력('10. 2 ~ 3)
 - '09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현지검증 실시('10. 4)
- 향후 추진계획
 - 중앙부처, 市·道, 평가단 합동 실적검증 참여('10. 6)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회 개최('10. 7)

② 사·군 통합평가 실시

□ '09년 평가개요('10년 실시)

○ 평가대상 : 16개 市·郡, 8개 분야, 36개 시책(29개 실·과)

※ 市部와 郡部로 구분평가, 세정종합평가는 관련조례에 따라 개별평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정성평가

□ 그동안 추진상황

○ 사·군 실적 입력 및 통합평가단 구성('10. 5)

○ 통합평가단 회의 개최, 교차검증 및 실적 확정('10. 5)

□ 향후 추진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통합평가 결과 보고·확정(' 10. 6)

○ 평가결과 공개(' 10. 7/홈페이지)

○ 재정인센티브 시행 및 포상 실시(추경 4억원 반영·지원)

※ '08년도 정부 재정인센티브 9억원 중 6억원 사·군 지원

【8】 주요업무 환류기능 활성화

① 「실국원장 책임경영제」 운영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16개 실·국본부원

○ 평가항목 : 3개 관점 7개 항목

－ 주요업무, 공약사항, 지시사항, 시책홍보, 부서별·시책별 고객만족도, 조직역량강화

□ 발전방안

○ 제도의 실행력·객관성 담보를 위해 평가목적, 방법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평가규칙 등) 마련 필요

○ 부서(課)별 평가체계인 「성과관리」와의 통합 관리 확대

⇒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 측정된 항목별 결과값 활용

②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

□ 평가개요 및 추진사항

○ 성과관리 평가계획 수립('10. 3)

- ▶ 평가대상 : 道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全부서(68개)
- ▶ 평가주체 : 자체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25명)
- ▶ 평가항목 : 지표달성도(52%), 고객만족도(26%), 지표성격(22%)

○ 성과관리 평가 기본계획 보고(자체평가위원회, '10. 4)

○ 실과별 성과지표 선정('10. 4)

○ 과제별 지표 심의·확정(성과관리소위원회, '10. 4)

□ 향후 추진계획

○ 고객만족도조사('10. 11 ~ 12)

○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실시(6월말·12월말 기준)

□ 사후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공개(道 홈페이지), 4급 이상 관리자 목표관리 반영(70%)

– 조직 및 인사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우수부서(10개) 포상 실시

○ 평가결과 자체분석, 도정 반영·지표 고도화 등 추진

③ 「목표관리제」 추진

□ 운영개요

○ 대 상 : 1~4급 일반별정직공무원(91명)

– 부지사 2, 실·국·본부·원장 16, 실·과·사업소장 73

○ 평가기간 : 2010. 1 ~ 12. 31(1년)

< 평가체계 >

목표관리 점 수	목 표 달 성 도	+	부서평가	+	부 서 가 감 점	+	합동평가 가 감 점	+	조정점수
(100점)	(70점)		(12점)		(△4 ~ 3점)		(△4 ~ 5점)		(10점)

• 목표달성도 : 실·국장책임경영제(2~3급), 성과관리(4급)

• 부서평가 : 업무노력도, 추진력 등 평가(평정자)

• 부서 가감점 : 전국단위 수상실적, 징계사항

• 합동평가 가감점 : '09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반영

• 조정점수 : 확인자(도지사, 행정부지사)가 부여

※ 2010년도 목표관리 기본계획 수립('10. 4)

□ 향후 추진계획

○ 목표관리 실시계획 수립 및 가점신청서 취합('11. 2)

○ 목표평가서 제출 및 평가 실시('11. 3)

⇒ 향후 평가방법 개선, 목표관리제를 성과계약제로 전환 검토

④ 산하기관 경영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道 산하기관의 주요업무 등 경영 실적

－ 道 최대 지분소유 및 연간 출연(보조)금 5억 이상 기관·단체

※ 충발연, 여성개발원, 신용보증재단,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등 12개기관

○ 평가시기 : 4~5월 ※ 2010평가완료(' 10. 5)

○ 평가방법 : 외부전문가 위주 평가단(30명) 구성, 서면·현장평가

－ 기관별(연구기관·산업진흥·문화체육), 부문별(관리·경영·고객만족도) 가중치 차등 적용

○ 결과환류 : 기관장 연봉 연계 성과급 차등지급(10%~ -5%)

□ 발전방안

○ 기관별 특성, 규모에 적합한 지표 발굴로 실질적 평가체계 확립

－ 주요사업 위주 평가지표 선정, 기관별 가중치 부여 및 평가기준(평가산식) 현실화 등

○ 공정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평가시스템 도입 검토

【9】도지사 공약 및 지시사항 체계적 관리

① 도지사 공약사업

○ 당선인 공약사업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10. 6)

－ 인수위와 협조, 도민·NGO·전문가 등 의견수렴후 확정

○ 민선5기 도지사공약(목록) 확정·발표('10. 7. 1)

○ 도지사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10. 8)

○ 취임 100일, 공약사업 선포식('10. 10. 7)

○ 살·국별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실시('11. 1)

② 도지사 지시사항

- 관리대상 : 각종회의, 보고회, 현장방문시 등 지시사항
- 관리방법 : 관리번호 부여 → 이행 → 확인평가 등

③ 도민 건의사항

- 관리대상 : 시군 방문·간담회 시, 도정평가단 건의사항 등
- 관리방법 : 관리번호 부여 → 추진·회신 → 확인평가 등

【10】도민과 함께하는 정책개발 강화

① 도정평가단 운영

- 인 원 : 190명(道 추천 70, 市郡 추천 120)
 - 5개(일반행정·경제통상·농림수산·복지환경·건설소방)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임 기 : 2년(제7기 : '09. 6. 5 ~ '11. 6. 4)
- 주요기능 : 도정 주요시책 평가 및 시책 건의 등
 - ⇒ 평가단 전체회의(7월), 분과위원회별 현장평가(9월), 임원회의(분기별) 등 개최, 도정 시책관련 의견수렴

②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 인 원 : 971명(남 562, 여 409)
 - 자발적 참여 원칙, 지역(인구수)·성·연령·직업별 안배
- 주요기능 : 설문조사 참여, 정책 제안, 주민 홍보 등
- 임 기 : 2년(제2기 '09.11.20 ~ '11.11.19)
- 운영방법 : 주요시책 전화설문 및 온라인 의견수렴
 - ※ 그동안 전화설문 28회, 건의사항 처리 37건, 연찬(간담)회 4회 등
 - ⇒ 매월 道 주요시책 선정 전화설문 실시, 도정에 반영

③ 학연관 합동 정책연구포럼 운영

< 정책자문교수단('96년 출범) >

- 구 성 : 충남·대전지역 대학교수 11개분과 60명
 - ※ 단장 : 이효선 단국대 교수
- 임 기 : 2년('10. 3. 4 ~ '12. 3. 3)

- 운 영 : 전체회의(연 2회), 분과위(실국별, 수시개최)
- ※ 지금까지, 총 171회 모임 개최(전체회의 18, 분과위 153)
- ⇒ 주요정책 수립·집행·평가 참여 및 분야별 도정시책 자문

④ 충남발전연구원 운영

□ 설립현황

- 설치근거 :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5. 1제정)
- 성격 : 비영리재단법인, 기금 125억원(道70 + 시군30 + 자체25억원)

•이사회 : 이사장(도지사), 이사 15명(당연직 4, 선임직 11), 감사 2명
 •기구·인력 : 1실1처3부1팀 40명(연구29, 사무11),
 •원 장 : 박진도

□ 운영상황 및 성과

연 구 수 행

- ▶ 道·市郡정책과제를 무상으로 우선연구, 대규모 용역은 실비로 수행
- ▶ 15년간 3,070건 수행(무상연구 1,898, 유상용역 584, 기타 588)

비 영 예 산

- ▶ 운영비 지원(' 10년 25억원 ← 저금리로 인한 기금이자 감소와 무상연구 증가 반영)
- ▶ 이사회 및 감사 등을 통해 지도감독(임원취임 및 예산 승인권 등 행사)

□ 향후 운영방향

- 안정적 운영여건 제공 道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능력 향상
- 도정의 쌍크탱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11】 「고품질 통계」 생산으로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 제공

- ◆ 국가위임조사 :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인구동태 통계 등
- ◆ 道 자체조사 :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충남통계연보 등 작성 발간

□ 추진계획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5년주기) : ' 10. 10. 19 ~ 11. 15 (27일간)
- ' 10. 11. 1 기준, 총 50개 항목 조사 (6천명 중사)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5년주기) : ' 10. 12. 1 ~ 12. 13 (13일간)
- ' 10. 12. 1 기준, 총 109개 항목 조사 (3천명 중사)
- 2009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5종) : ' 10. 6. 4 ~ 7. 9(36일간)
- ' 09. 12. 31 기준, 광·제조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체 조사
-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 ' 10. 12
- 시군의 경제활동별(17개 부문) 부가가치를 합계하여 추계
- 그 외 매년 충남통계연보 및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작성제공

□ 발전방안

- 지역발전 정책수립의 기본자료인 지역통계 적극 개발
- 고용·실업률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생산 등

【12】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전략 및 정책방향(3대전략 10대정책)

전 략 1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기후변화적응 등 3개 정책

전 략 2 :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 자원순환 녹색산업 등 4개 정책

전 략 3 : 건강하고 행복한 녹색생활 문화조성

- 녹색도시(마을) 조성,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실천 등 3개 정책

□ 주요 추진과제

실천과제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등 30개 과제
단위사업	온실가스 감축(2020년까지 30%),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2015년까지 1%), 녹색기술 및 산업육성 등 130개 사업

□ 추진 기반조성

- ① 추진체제 구축 : 녹색성장위(30명), 녹색성장총괄T/F(3명),

- 추진단(25부서 102명), 녹색포럼(40명), 그린스타트(54개 단체) 등
- ② 제도마련 : 녹색성장위 운영규정, 녹색성장조례(제정작업 중)
- ③ 추진상황 점검 : 정례보고회(분기 1회), 평가(상·하반기)

【13】민생 5개분야 행·검 합동단속반 운영

— < 특사경 운영 현황 > —

- ◆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장 : 자치행정국장/단원 7명
- ◆ 원산지, 식품, 청소년, 환경, 공중위생 등 5개 분야 중점 단속
- ⇒ 법률특별보좌관(법무부 파견 검사) 상주, 단속활동 총괄 지휘

□ 추진상황

- 道↔대전지검 「쇠고기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협약 체결('08. 9)
- 특사경지원단 및 행·검 합동단속반 구성, 원산지표시 단속

- ◇ 시·군 특사경 전담조직(61명) : 팀장(5급 겸직) 및 팀원 2~5명
- ◇ 합동단속반 : 6개반 530명(지검/지청6, 시군498, 농관원 등 유관기관26)

- 道·16개 시군↔대전지검·5개 지청 업무협약 체결('09. 7)
- 5개 단속분야로 확대, 민생 보호와 법질서 확립위한 행·검 상호협력
- 단속실적(' 08.9월 이후) : 63,535개소 집중점검, 연 21,302명 투입
- 위반업소 386개소 적발(송치99, 조사중117, 과태료79, 행정처분91)

□ 향후 추진계획

- 지역별, 시기별 특색에 따른 맞춤형 상시 기동·합동단속 실시
-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단속 및 시·군 교차단속 추진
- 검찰,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 원산지표시 등 민생 5개 분야의 법질서 확립 추진

2)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1】 2010 예산집행 현황

- 예산현액 4조 3,133억원 중 46.0%인 1조 9,850억원 집행
- 〈 ' 10. 5. 31현재〉

〈표 2-1〉 2010 예산집행 현황

분 야	예산현액 (억원)	집행액 (억원)	집행율	잔 액 (억원)	비 고
합 계	43,133	19,850	46.0%	23,283	※ 예산현액
일반행정	7,837	3,156	40.3	4,681	43,133
투자통상	740	228	30.8	512	- 일반 회 계
경제산업	2,834	643	22.7	2,196	33,427
문화체육관광	1,787	1,093	61.2	694	- 특 별 회 계
농림수산	7,381	3,959	53.6	3,422	5,808
복지환경	13,225	6,897	52.2	6,328	- 기 금
건설소방	9,329	3,874	41.5	5,455	3,178
					- 이월사업
					720

- ※ 경기회복 동력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추진
- 목표액 1조 9,856억원 (도 1조8,886, 개발공사 등 970) 중 1조 8,065억원(개발공사 등 301억원 포함) 집행(91.0%)

【2】 하반기 재정전망

〈 세입전망 〉

-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도세 증가 둔화
 - '10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는 200억원 증수 전망(6,100 → 6,300억원)
- 지방소비세도 당초예산 반영액 보다는 200억원 증액 전망되나
 - 재정보전금 등 500억원의 신규 세출수요 발생으로 가용재원 300억원 감소 실정
 - ※ 당초예산 계상(부동산교부세) 1,200억원 → 전망액(지방소비세) 1,400억원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는 예산반영액 보다 362억원 증액
 - 교부결정(3,806 → 4,168억원)

⇒ 하반기 일반재원 세입증가 규모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

< 세출전망 >

- '10년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법정경비 일부 유보,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추경수요 상존
 - 재정보전금 152억원, 천안의료원신축 48억원, 재난관리기금 39억원 등
- 도청신도시 분양가 확정에 따른 도청사 부지매입비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수요 발생
 - 도청사 부지매입 225억원, 일자리 창출 25억원(예비비 기집행 27억원)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사·군 순방 건의사업 등 세출수요 제기 전망

【3】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기반구축
 - 채납세금 징수, 新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확충, 철저한 지방 채무관리
- 실물경기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영
 -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및 지속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
 - 고용 친화적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도모 및 미래성장분야 중점지원

【4】 추경예산 편성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뒷받침 등 세출수요 반영을 위해 7 ~ 8월중 제1회추경 편성 추진 방침

3)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

【1】 행정처분시 「민간전문가 참여제」 추진

- 행정처분전 전문가 사전 자문, 청문대상자 도우미 지원

- 청문주재자(5명)·청문도우미(9명) 위촉·시행(' 08. 6월부터)
- ※ 대학교수, 변호사 등 직능별 위촉(변호사 5명, 교수, 법무사, 세무사 등)
- ' 10년도 운영실적 : 청문주재 8회 25건
- 청문도우미 : 상시운영(전화상담 등)

【2】 편리하고 정의로운 행정쟁송 운영

- 행정심판 운영 : 81건 접수, 52건 처리(인용 25건)
- 소청심사 운영 : 74건(기각 36, 변경 16, 취소 5, 취하 1, 이월 16)
- 행정·민·형사 등 소송수행 지원 ※ ' 09년 행정 23건, 민사 36건
- 소송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지원
- 소송수행요령 실무교육, 소송판례 신속입수·전파 등

【3】 자치법규의 고품질화를 위한 법제심사

- 부서별 사전 자치입법 지원을 통한 심사프로세스 개선
- 법률교육 강화, 자치입법실무 교재 등 내부행정망에 게재
- 지방화시대에 대응하는 자치입법 심사 강화
-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입법체계, 과잉 규제 등
- ※ 자치법규 심의(5월말) : 총 36건 심사완료

4)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인재」 육성

【1】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 도·농간 영어격차 해소, 이농방지 등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확대·운영

- '07년) 30읍·면 → ' 08년) 100읍·면 → ' 09년부터) 171 읍·면

※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 07. 9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 추진상황 및 성과
- 도내 171개 읍·면에 「원어민 영어교사」 1명씩 배치
- 초등학교 대상 週 3회 교육(이용률 43.9%, 만족도 80%)
- ※ 중앙정책 채택(' 08. 9) /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TaLK)

- 예 산 : 86억원(도비 26, 시군비 43, 교육청 17)
-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영어수혜 확대로 공교육 신뢰 제고

□ 애로사항

- 교육자력 능력을 구비한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애로(농촌 기피)
- 사실상 읍면과 같은 환경인 洞지역 학생 수혜 제외

□ 향후 추진방향

- 자격 있는 우수 원어민교사 확보 노력 전개
 - 자격심사 강화, 검증된 우수교사 재계약 추진
- 농촌 洞지역 학교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 검토
- 영어페스티벌, 원어민교사 멘토링제 등 프로그램 내실화

【2】 대안교육시설 「충무학교」 운영

□ 추진상황

- 개 교 : 2010. 4. 7, 남중생 38명 입교
 - ※ 現 시설여건 등 감안 남중생 우선 실시후 남·여 중고생으로 확대
- 교육시설 : 현충사 내 충무교육원 시설 정비 활용
 - ※ 시설 신축(' 10. 11월 완공 계획) : 교육관·생활관 2,862㎡
- 교육내용 : 진단 → 상담 → 치유 + 맞춤형 대안교육
 -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활동, 일반교과 등
- 운 영 : 대안교육전문교사 등 17명 구성, 학기제 운영
- ' 10년도 예산 : 100억원(국비 30, 도비 35, 교육청 35)
 - ※ 시설비 90억원(국비 30, 도비 30, 교육청 30), 운영비 10억원(도비 5, 교육청 5)

□ 향후 추진방향

- 교육성과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 교육계획에 반영(' 10. 6)
- 교과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전국 확대 추진 건의

【3】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

□ 추진상황

- 공주大 '재외동포 장기교육기관' 선정(' 08. 12)

- 6개 기관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09. 11)
 - 도, 공주시, 공주대,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월드옥타
 - ※ ' 10년도 장단기 20개과정/2,000명 예정(' 09년도 18개과정/1,650명)
- 공주大 옥룡캠퍼스 유희시설 리모델링 추진(' 10 ~ ' 12)
 - 강의실, 기숙사, 전통문화체험장, 컨벤션 홀 등 25,735㎡(11개동)
 - 예산 : 180억원(국비 90, 도비 30, 시비 30, 공주大 30)
- 문 제 점
 - 국가시책 사업, 국비 상향 조정 필요 : 72억원(40%) → 90억원(50%)
 - ※ ' 10년 30억원, ' 11년 24억원, ' 12년 18억원
 - ⇒ 목표액 90억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 향후 추진방향
 - 재외동포 교육의 중심지로 조기정착
 - 공주시 추진 '한민족 교육특구' 와 연계 시너지 효과 발현
 - ⇒ 재외동포 교육허브 역할 수행으로 한민족 공동발전 비전 제시

【4】 대학생 「도비유학 장학제도」 운영

- 추진상황
 - 대 상 :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생
 - ' 07 ~ ' 09년까지 각 2명씩 6명 선발(수료 1, 유학중 3, 대기 2)
 - ※ 인지도 상승으로 점차 우수인재 지원 증가 추세
 - 年 4,500만원 한도(등록금·체제비 등), 2년간 지원(전액도비)
- 문 제 점
 - 신청자 자격미달(어학요건 등)로 목표인원 보다 적게 선발
 - ' 07)5명 목표 → 2명 선발, ' 08)5명 → 2명, ' 09)3명 → 2명
 - 유학국가 편중(일본1, 독일1, 미국4)
- 향후 추진방향
 - 그동안 운영결과 분석, 문제점 보완 개선방안 마련
 - 대대적 홍보를 통한 우수학생 지원률 제고 등
 -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학생 학적관리 등 대책마련
 - 매학기 성적표 제출, 체험수기 제출 등 추진
 - ' 11년 대상자 선발(' 10. 12) : 4명(이공계 2, 백제사 1, 국제통상 1명)

【5】전문계高「해외 인턴십」추진

□ 추진상황 및 성과

○ 대상학교 : 도내 34개 전문계高(공 15, 농 3, 수 1, 상 13, 종합 2)

※ 「해외인턴십반」 운영(원어민 교사 23개교 지원)

○ 선발인원 : ' 08) 10명 → ' 09) 40명 → ' 10) 40명 이상

－ 학생선발 : 서류전형(내신, 봉사활동 등)+영어필기면접

○ 대상국가 : ' 08) 1개국(호주) → ' 09) 4개국(호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 ' 10) 5개국(일본추가)

○ 인턴십 기간 : 3개월(12주)

－ 어학·기술연수(현지대학 등)+기업인턴십(응용과정)

○ 지 원 : 학비, 홈스테이비, 왕복항공료, 학생관리비 등

○ 예 산 액 : ' 08) 1.2억원(道) → ' 09) 7억원(道)
→ ' 10) 8억원(道 4, 道교육청 4)

⇒ 우수학생 입학, 면학분위기 조성 등 전문계高 가시적 변화

□ 향후 추진방향

○ 학교현장에서의 인원 확대 요구 고려, 점진적 확대 신중 검토

○ 우수 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 및 사전교육 강화

○ 장기체류 비자 협의 등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5) 「유비쿼터스 충남」 실현

【1】정보화 역량 강화 및 역기능 예방

① 정보화 업무 사전 심의·조정기능 강화

○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 정기(2회), 임시(수시)

－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심의

○ 정보화책임관(기획관리실장) 지정·운영

－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

○ 정보화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심의·조정 확행

－ 시군 정보화사업의 중복여부 협의 조정

※ ' 09년까지 270건, ' 10년도 25건 심의

②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개설

- 道·교육청·한국교총·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T 공동협약(' 09. 6)
 - 대형TV 및 IPTV 회선 설치, 교육콘텐츠 등 지원
 - ' 09)5개소 → ' 10)61개소 ※ 운영성과에 따라 증설 추진
- ⇒ 소외계층 아동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道民 정보격차 해소

- 주부, 농어민,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화 소외계층 지원
 - 컴퓨터활용,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 등(75천명)
- 장애인 정보화 지원, 정보화 기기 등 보급
 - 장애인 방문교육·컴퓨터 문제해결(270명), 중고PC 등 보급(1,410명)
- 향후 추진방향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강화
 -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

④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업무 협약체결('10. 2)
 - 인터넷상담 협력기관(7개소) 선정('10. 2)
 - 인터넷문화교실 대상학교(26개교) 지정('10. 4)
 - ※ ' 09년 정보윤리 및 인터넷중독 상담·예방 53,000명
 - 향후추진계획
 - 인터넷 중독학생 집단 상담치료 실시(26개교, 4,160명)
 - 학생·학부모·교사 등 예방교육(26개교, 7,800명)
 - 인터넷중독쉼터 캠프 추진(' 10. 7 ~ 8)
- ⇒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도모

【2】지역정보화 기반 확충

①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 '01~' 09년까지 40개 마을 조성, 37개 마을 운영
 - 마을별 테마 홈페이지 등 정보콘텐츠 구축
-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인근 정보화마을 통합운영 : 1개소, 지정해제 : 2개소

※ 운영실태 분석결과, 마을 자립운영 및 운영활성화 여건 미비

○ 향후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신규조성 중심보다는 운영 활성화에 중점

– 주민 자발적 참여유도와 정보화마을간 경쟁을 통한 활성화 도모

② 농어촌지역 스마트 인프라구축 추진

◆ 오지지역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해 광가입자망(BcN) 이용환경 구축
– ' 10 ~ ' 14(5년간) / 1,190개 마을 대상

○ 농어촌 스마트 인프라 구축 협의회 발족(방통위, '10. 4)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대상지역 선정('10. 4)

– 15개 시군, 70개 마을

※ ' 10사업비 : 1,028백만원(국비257, 도비77, 시군비180, 민자514)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사업자 선정(' 10. 5 ~ 6)

– 시군별 실태조사 및 구축(' 10. 6 ~ 12)

– 농어촌 광 가입자망(BcN) 구축 중장기 계획수립(' 10. 10)

【3】 행정정보화 구축사업 추진

①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시도행정복구(DR)시스템 위탁관리 협약체결(한국지역정보개발원, ' 10. 1)

※ DR : 행정포탈의 장애에 대비한 back up 시스템

○ 행정포탈 기능개선 및 오류장애사항 처리(월평균 250건)

– 신문스크랩 게시방법 변경 및 용량 확대 등 공보업무 개선

○ 행정포탈 연계시스템 지속적 확충 : e-호조, 지리정보 등

○ 향후 추진계획

– 행정업무 기능개선 및 활성화계획 수립(' 10. 6)

– 재난·재해상황을 대비한 시스템 모의훈련 실시(' 10. 12)

②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강 및 운영체계 개선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운영

- 1단계 : 침해대응센터 및 관제시스템 구축(' 08. 12 ~ ' 09. 3)

- 2단계 : 중앙 ↔ 시도 연계장비 등 구축(' 09. 4 ~ 8)

○ 향후 추진계획

- 도 ↔ 시군 연계장비 등 3단계 사업 추진(' 10. 5 ~ 7)

- 24시간 상시감시체계 확립(3교대 8명 보안관제 운영)

6) 성장과 상생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1】「제3차 道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 ◆ 제3차 道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동 반영 재수정계획 추진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등 반영
- ※ 제3차 道종합계획(' 01. 8월)·수정계획 수립(' 08. 1월)
- ⇒ 민선5기 여건 및 정책방향 등 추가 반영 추진

□ 제3차 道종합계획(수정계획) 개요

○ 근 거 : 국토기본법 제6·7·13조

-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 국토종합계획 20년 단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국토기본법 제 19조)

○ 성 격 : 道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상위계획 수립, 하위계획의 기본)

○ 주요내용

< 투자계획(' 08~' 20) > : 76조 2,889억원(국비 36조 3,337,
지방비 10조 2,036, 기타 29조 7,516)

□ 재수정 추진상황

○ 연구용역 계약(충남발전연구원) : ' 01. 3

▶ 용역범위 : 충청남도 전역(2011 ~ 2020)

▶ 용역기간 : ' 10. 3. 24 ~ ' 11. 2. 23(103백만원)

○ 연구자문단(단장 : 기획관리실장) 구성(9분과) : ' 01. 4

- 분과별(반장 : 실국장) 발전전략 창출, 아이디어 제시 및 자문

○ 착수보고회 개최 : ' 10. 4

□ 향후 추진계획

○ 관련부서 및 시군, 도민의견 수렴(' 10. 7)

○ 연구자문단 자문, 중간 보고회 개최(' 10. 10)

○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 12)

○ 최종보고회 및 국토해양부 승인 신청(' 11. 2)

【2】 서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수립

◆ 서해안을 「환경해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융복합 벨트」로 구축
- 서해안권 : 우리도 포함, 인천·경기·전북 4개 시도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07.11.27제정)에 근거
⇒ 우리도 주관, 4개 시도 공동으로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 추진상황

○ 계획수립 용역 수행(' 09. 1 ~ ' 10. 7)

▶ 시·공간범위 : 4개 시도, 25개 시군·구/' 10 ~ ' 20
- 우리도 : 보령·아산·서산·서천·홍성·태안·당진(7개 시군)
▶ 용역비 : 2,375백만원(국토부, 4개시도 5억원씩 균등분담)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 4개 지방연구원 공동

- 우리도 사업규모 : 40건/80,170억원(시도별 8조원 규모)

- 국토해양부에 종합계획(안) 결정요청(' 10. 5)

○ 지구환경보전상징화사업(선도사업), 개발계획 착수(' 10. 3)

※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시도별 선도사업 1건 선정, 개발계획수립 병행

□ 향후 추진방향

○ 중앙 관계부처 협의, 종합계획 결정고시(국토부)

○ 선도사업 개발계획 승인신청(사업비 480억원)

⇒ 선도사업 2011년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

【3】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 ◆ 천수만 주변지역의 개별계획(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등)을
종합·조정·신규사업 발굴,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 골프, 승마, 해양·항공레저, 웰빙메디칼 등 One-stop기능
- ⇒ 서해안권의 국제관광·휴양 거점지역으로 육성

□ 추진상황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기본구상 수립(' 09. 8)

- ▶ 위 치 : 서산시 부석면, 태안군 태안읍·남면 일원
- ▶ 사업규모 : 36,878천㎡(신규개발 계획 1,265천㎡)/' 10~' 20
- ▶ 소요사업비 : 5조 68억원(국비 3조 439, 지방비 770, 민자 1조 8,859)
- ▶ 구 상(안) : 17개사업(기존 추진 2, 구상사업 10, 교통망 확충 5)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T/F 구성(' 09. 10)·운영

- ※ 종합계획 수립 방향 토론, 천수만 지역 현장방문(' 10. 4) 등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방향설정 워크숍 개최(' 10. 3)

□ 향후 추진방향

-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 10. 12)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 의견수렴

- 선도사업 발굴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10. 12)

【4】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추진

- ◆ 낙후된 道內 8개 시·군에 성장동력 사업 집중투자 육성
 - 공주·보령·논산시, 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군
 - ※ 전국 최초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07. 3. 30)
- ⇒ 낙후 시·군의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추진상황

-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07. 3) 및 시행규칙(' 07. 5) 제정

- ▶ 재 원 : 道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전입금
광특 지역개발계정 道 배정분의 10%이내
- ▶ ' 08~' 12년(5년간)/국·도비 2,900억원(580억/년)/52개사업
 - 市 : 60억/년 , 郡 : 80억/년

- 최근 3년간(' 08~' 10) 47개 2,664억원(시군비, 민자 포함) 투입

－ ’ 08)825억원(24개사업), ’ 09)1,019(15개사업), ’ 10)820억(8개사업)

□ 문 제 점

-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추진 지연
- 보통세·광특 채원 감소로 예산확보 어려움(’ 10년 42억 미확보)

□ 향후 추진방향

- 사업 추진실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조례 개정)
- ’ 12년 이후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 지속여부 등 검토

【5】 광역경제권(5+2) 연계·협력사업 추진

- ◆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따라 충청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 － 【5+2】 : 충청·수도·호남·대경·동남권, 제주·강원권
 - － 충청권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충청권 3개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 추진상황

-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09. 9)

- ▶ 시·공간적 범위 : 3개 시·도 행정구역/’ 09 ~ ’ 13(5개년)
- ▶ 소요사업비 : 6개분야 50개사업/31조 7,225억원
- ▶ 주요내용 : 선도·전략산업, 인력양성, 교통물류 중심의 발전계획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종합계획

- 지식경제부 공모,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 － 시도 연계·협력사업 91건 제안(’ 10. 1),
 - － 최종평가(’10. 4) → 우리도 2건 선정(대전 1건, 충북 3건)
 - ※ 총 사업비 : 522억원(충남 125, 충북 307, 대전 90)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

- ◇ 구성 : 3개 시도지사 공동위원장, 위원 15명
- ◇ 역할 : 광역계획·시행계획 수립,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 등
- ※ 사무국 : 사무총장, 2개과 13명(시도 공무원 파견6, 연구원 등 7)

□ 향후 추진방향

- 금년도 추경편성시, 국비 매칭에 대한 지방비 확보
- 선정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 마련(’10. 7)

【6】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우리 道로 8개기관 이전 추진
－ 이전 완료 2, 공사중 1, 행정절차 이행 5
⇒ 道 차원의 행·재정 지원 강화로 조기이전 완료 추진

☐ 추진상황

- 이전완료(2) :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경찰교육원(아산)
- 공 사 中(1) : 국립특수교육원(아산), 공정 70%
- 행정절차이행(5) : 경찰대학(아산), 경찰수사연수원(아산),
한국중·서부발전(보령,태안), 국방대학교(논산)

☐ 문 제 점

- 한국중·서부발전(주)는 한국전력공사로 재통합 여부를
용역 진행중에 있어 유보상태
- 행정절차 이행중인 5개 기관은 2012년까지 물리적으로 이전 불가

☐ 향후 추진방향

-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T/F팀 운영
 - － 도시계획 시설변경, 토지보상 업무 시·군과 적극 협조
 - － SOC, 주거안정, 세제지원, 편의시설 적극지원
- 이전대상 기관 정부예산 확보 지원 및 애로사항 적극 해결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328,948백만원(2010년도)로 도 일반회계 예산(3조 3,427억원)의 10.0%를 차지

※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예산 : 6,627억원
 일반회계 3,289억원, 특별회계 2,662억원, 기금 681억원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0억원(교육관련 예산 2,085억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539억원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51억원
- 통합관리기금 681억원
- 시군 시책추진보전금 178억원
- 예비비 331억원

- 예산의 재원별 분류를 하면 도비 300,367백만원, 국비 1,581백만원, 광비 27,000백만원
 - 정책기획관실 : 4,047백만원(도비), 예산담당관실 54,955백만원(도비)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 208,373백만원(도비), 400백만원(광비)
 - 정보화담당관실 : 5,323백만원(도비), 1,581백만원(국비)
 - 균형발전담당관실 : 27,669백만원(도비), 26,600백만원(광비)

〈표 2-2〉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도	10년도 예산 중 구성비	2009년도	09년도 예산 중 구성비	증감
기획관리실	328,948	9.84%	348,438	10.76%	△19,619
정책기획관실	4,047	0.12%	4,206	0.13%	△158
예산담당관실	54,955	1.64%	60,287	1.86%	△5,332
교육협력법무담당관	208,773	6.25%	217,605	6.72%	△8,833
정보화담당관실	6,904	0.18%	6,727	0.17%	177
균형발전담당관실 (재무활동)	54,269 (53,771)	1.62%	59,613 (58,300)	1.88%	△5,473 (△4,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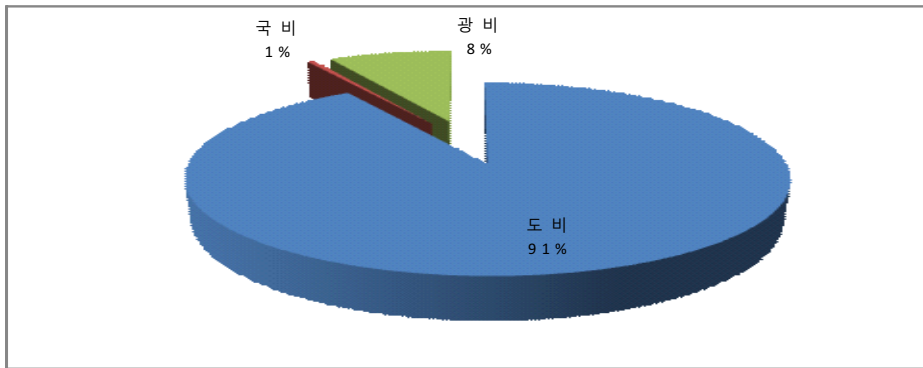
※ (재무활동)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으로 내부거래지출

〈표 2-3〉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자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년도	도비	국비	광비
기획관리실	328,948	300,367	1,581	27,000
정책기획관실	4,047	4,047		
예산담당관실	54,955	54,955		
교육협력법무담당관	208,773	208,373		400
정보화담당관실	6,904	5,323	1,581	
균형발전담당관실	54,269	27,669		26,600

* 광비 : 광역발전특별회계

〈그림 2-1〉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자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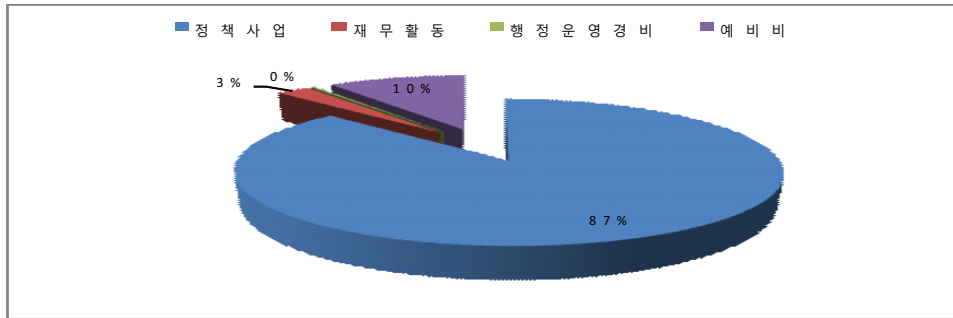
■ 기획관리실 예산 성격 분석

- 기획관리실 예산 328,948백만원 중 사업비 예산은 287,032백만원이고, 재무활동비 7,93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897백만원이며, 예비비는 33,085백만원임
- 국비 1,581백만원과 광비 27,400백만원은 모두 사업비 예산임

〈표 2-4〉 예산 성격 분석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도비	국비	광비
사업비	287,032	258,051	1,581	27,400
재무활동	7,934	7,934		
행정운영경비	897	897		
예비비	33,085	33,085		
계	328,948	299,967	1,581	27,400

〈그림 2-2〉 예산 성격 분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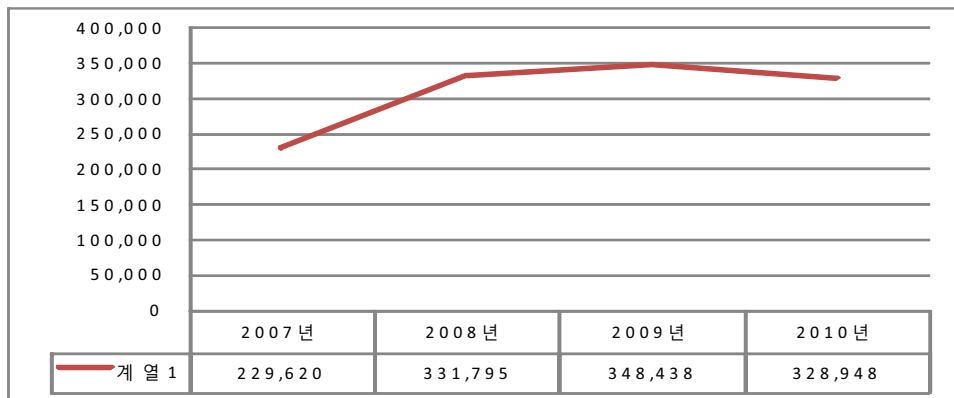
■ 연도별 기획관리실 예산 추세

〈표 2-5〉 연도별 기획관리실 예산 추세 (단위: 백만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기획관리실	229,620	331,795	348,438	328,948
정책기획관실	167,133	216,870	4,206	4,047
예산담당관실	54,283	57,388	60,287	54,955
교육협력법무담당관	281	372	217,605	208,773
정보화담당관실	7,723	9,214	6,727	6,904
균형발전담당관실	200	29,951	59,613	54,269

* 2007년, 2008년에는 기획관리실 산하 각 담당관실의 명칭과 예산이 다름

〈그림 2-3〉 연도별 기획관리실 예산 추세 (단위: 백만원)



나. 주요 사업의 사업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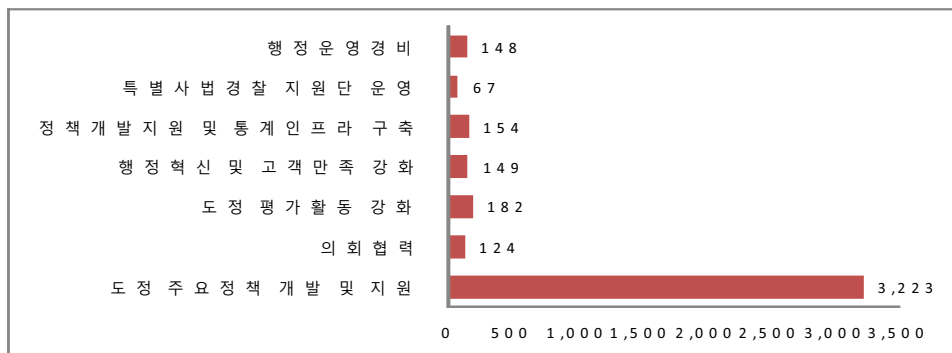
■ 정책기획관실 예산 : 4,047백만원

- 정책기획관실 사업비의 재원은 전액 도비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2,500백만원(61.8%)을 제외한 순수 예산은 1,547백만원

〈표 2-6〉 정책기획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비고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	3,223	
주요정책 개발 및 실무지원	668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500	
정책관련 위원회 운영	50	
2010대백제전 지원	5	
의회협력	124	
시각장애의원 의정활동지원 및 도 의정회 운영지원	70	
도의회의원 후생복지 지원금	54	
도정 평가활동 강화	182	
도정주요업무	50	
도민평가단 운영	132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강화	149	
행정혁신 발굴 및 실무지원	149	
정책개발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	154	
각종 통계조사	129	
통계자료 발간 및 관리	25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67	
서민생활보호및법질서 확립	67	
행정운영경비	148	
인력운영비	36	
기본경비	112	
계	4,047	

〈그림 2-4〉 정책기획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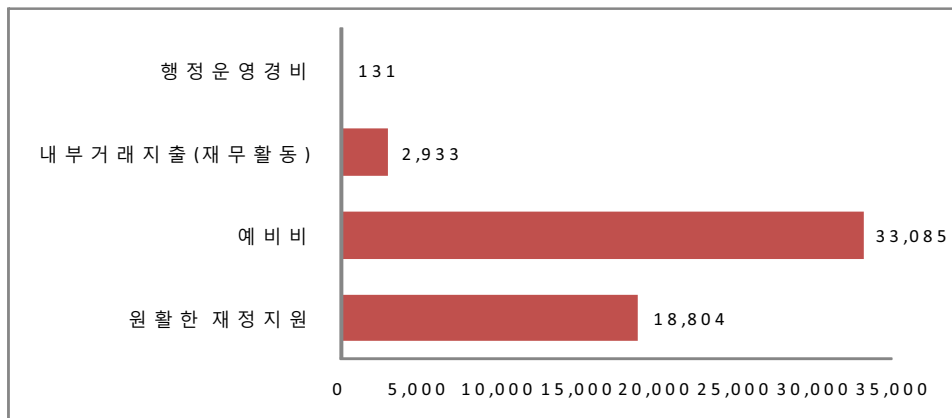
■ 예산담당관실 예산 : 54,955백만원

- 원활한 재정지원 18,804백만원, 예비비 33,085백만원, 내부거래지출(재무활동) 2,933백만원이며 이중 원활한 재정지원 사업중 시군재정지원이 17,829백만원으로 예산의 32.4%을 차지함
- 행정운영경비 131백만원

〈표 2-7〉 예산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비고
원활한 재정지원	18,804	
건전재정운영 추진	156	
시군재정지원	17,829	
도정 현안사업 추진	820	
예비비	33,085	
예비비	33,085	
내부거래지출(재무활동)	2,933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933	
행정운영경비	13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	
기본경비	85	
계	54,955	

〈그림 2-5〉 예산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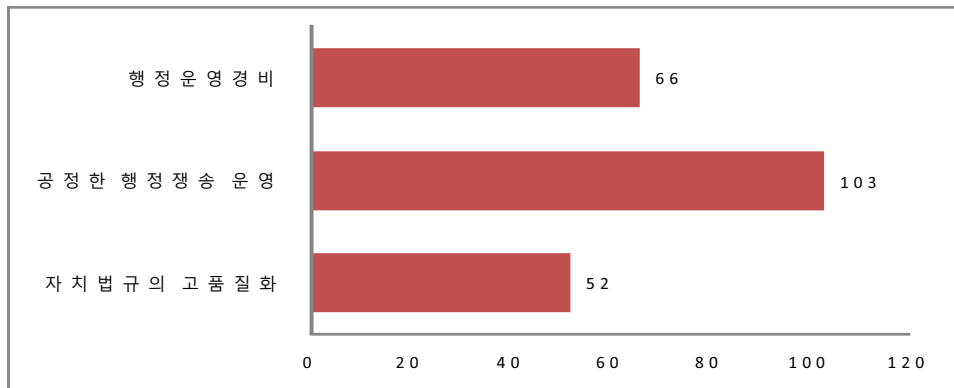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예산 : 208,772백만원(광 : 400, 도: 208,372)

- 교육관련 예산을 제외한 법무관련 예산은 220.5백만원
 - － 교육관련 예산 : 205,941.5백만원
 - 미래인재양성 200,904백만원(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6,531백만원, 자치단체등이전 4,348백만원), 독립대학 육성 38백만원, 청양대학 육성지원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5,000백만원
- 정책사업비 155백만원(법률서비스 제공사업 52백만원, 행정심판및소청심사위 운영 33백만원, 소송업무 수행 70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66백만원

〈표 2-8〉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법무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비고
자치법규의 고품질화	52	
법률서비스 제공	52	
공정한 행정쟁송 운영	103	
행정심판및소청심사위 운영	33	
소송업무 수행	70	
행정운영경비	66	
기본경비	55	
인력운영비	11	
계	221	

〈그림 2-6〉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법무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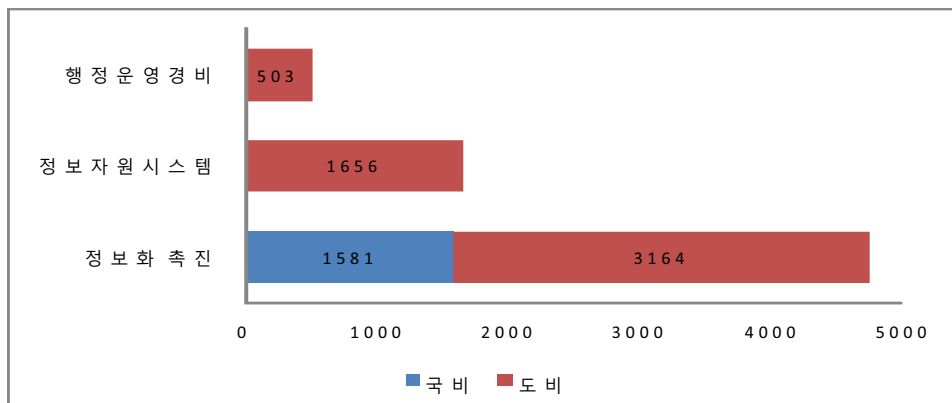
■ 정보화담당관실 예산 : 6,904백만원(국 : 1,581, 도 : 5,323)

- 정책사업 4,745백만원,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1,656백만원
- 행정운영경비 503백만원

〈표 2-9〉 정보화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국비	도비
정보화 촉진 및 U-충남 기반구축	4,745	1,581	3,164
정보화사업개발육성 (공공요금 및 제세)	1,252 (1,191)		
정보화촉진	57		
행정정보화시스템구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190 (910)	832 (832)	358 (78)
농어촌등소외계층정보화지원	244		
지역정보화추진	420	257	163
정보보안시스템 구축및운영	915		
정보격차해소	667	492	175
정보자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	1,656		
정보시스템유지보수	1,236		
개인용컴퓨터및상용s/w구입	405		
행정운영경비	503		
기본경비	498		
인력운영비	5		
계	6,904		

〈그림 2-7〉 정보화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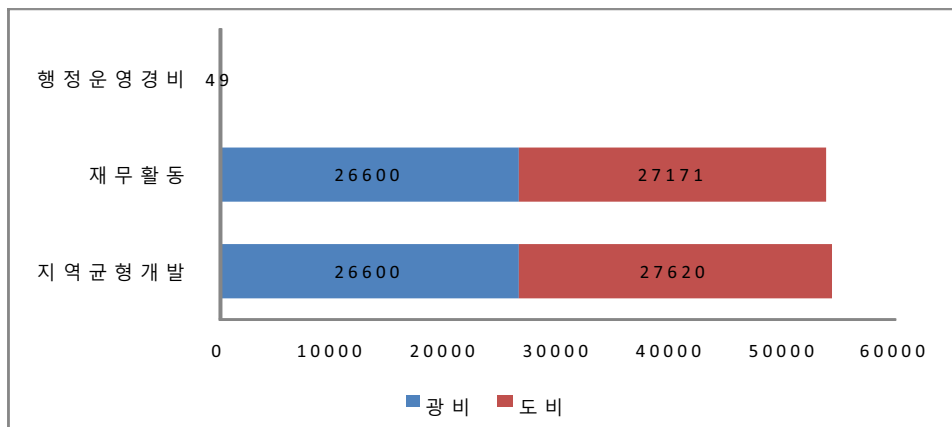
■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 : 54,140백만원(광 : 26,600, 도 : 27,540)

- 지역균형개발 320백만원, 재무활동 53,771백만원(균형발전 특별회계)
- 행정운영경비 49백만원

〈표 2-10〉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금액	광	도
지역균형개발	320	26,600	27,620
개발정책추진	110		
도정 개발정책 추진 및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110		
지역혁신협력체계 구축	185		
지역혁신협력체계 구축	185		
공공기관이전 및 지방분권 추진	25		
공공기관이전 및 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 지원	18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추진	8		
재무활동	53,771	26,600	27,171
내부거래지출	53,771	26,600	27,171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3,771	26,600	27,171
행정운영경비	49		
인력운영비	3		
기본경비	46		
계	54,140		

〈그림 2-8〉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제3장 충남 기획관리실 분야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기획관리실 주요 사업 성과관리 체계

■ 정책기획관실 성과관리 체계

-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성과지표는 도정성과창출 평가 시스템을 확립(15/100)과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추진상황 점검(15/100), 민생5개분야 행·검합동단속 실시(13/100)임
- 정책기획관실 예산의 주요사업은 정책개발 및 지원(723백만원/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제외), 도정 평가활동 강화(182백만원), 정책개발 지원 및 통계인프라 구축(154백만원), 행정혁신 및 고객만족 강화(149백만원)의 순임

〈표 3-1〉 정책기획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100)	비고
도정성과창출 평가 시스템 확립	15	
도정주요정책에 대한의견 수렴, 심의·조정기능강화	4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적 도정운영	4	
창의실용행정시행으로 도민 만족도 향상	4	
통계정보서비스 만족도 향상	4	
행정업무방식 개선	4	
녹색성장 세부실천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추진상황점검	15	
도의회 부의안건 신속처리율	4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민생5개분야 행·검합동단속 실시	13	
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통계작성 공표실적	7	
특별사법경찰 단속조치 실적	8	
행정생산성 향상 시책 발굴 및 반영율	8	
혁신활동율(제도개선 및 제안 건수)	2.7	
기타	3.6	

■ 예산담당관실 성과관리 체계

- 예산담당관실의 주요 성과지표는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00),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18/100),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차년도 예산 준수율(12/100) 등 임
- 예산담당관실 예산의 주요 사업은 건전재정운용(18,805백만원)임

〈표 3-2〉 예산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100)	비고
경기회복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20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차년도 예산 준수율	12	
예산효율화 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재원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재투자율	10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	18	
지역개발기금 적기 융자 지원	5	
투융자심사 내실화를 위한 사전현지실무심사 강화	5	
지역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광특회계 인센티브 확보	10	
건설한 충남개발공사 운영 지원	10	
혁신활동율(제도개선 및 제안 건수)	2.7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기타	3.6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성과관리 체계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의 주요 성과지표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달성도 (20/100),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15/100), 사회통합기반 구축(15/100),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율(15/100), 행정처분시 전문가 참여를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15/100) 임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예산의 주요사업은 미래인재 양성(200,904백만원), 청양대학 육성지원(내부거래지출 5,000백만원), 지역인적자원 개발(2,6120백만원)의 순임

〈표 3-3〉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100)	비고
규제개혁 및 갈등해소 노력	5	
도민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15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미래인재 양성사업 달성도	20	
법질서확립 홍보 우수사례	5	
사회통합기반 구축	15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60일 이내 처리)율	15	
행정처분시 전문가 참여를 통한 도민만족도 제고	15	
혁신활동율(제도개선 및 제안 건수)	2,7	
기타	3,6	

■ 정보화담당관실 성과관리 체계

- 정보화담당관실의 주요 성과지표는 도민 정보화 수준 향상지원(14/100),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14/100), 정보격차 및 인터넷 중독 등 해소사업 목표달성율(11/100)임
-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의 주요사업은 정보자원시스템정보화 촉진 및 U-충남기반 구축(4,745백만원), 정보자원시스템 유지(1,656백만원)의 순임

〈표 3-4〉 정보화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100)	비고
전자적 업무처리 이행 수준	5	
혁신활동율(제도개선 및 제안 건수)	2,7	
개인정보보호수준	7	
도민 정보화 수준 향상 지원	14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웹 접근성 준수 수준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보안수준 질적 개선	5	
정보격차 및 인터넷 중독 등 해소사업 목표달성율	11	
정보보안 수준	7	
정보통신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	3	

정보화 추진 우수시책	11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개설	14	
EA성숙도 수준	7	
기타	3,6	

■ 균형발전담당관실 성과관리 체계

-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주요 성과지표는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60/100), 국방대 논산이전 및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략 마련(15/100),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율(15/100)임
-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의 주요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53,900백만원), 지역혁신협력체계 구축(185백만원), 개발정책 추진(110백만원)의 순임

〈표 3-5〉 균형발전담당관실 사업 성과관리 체계

지표명	가중치(/100)	비고
도정홍보율(보도자료제공건수)	3,7	
국방대 논산이전 및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략 마련	15	
기초생활권(시군단위) 발전계획 수립율	15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	60	
혁신활동율(제도개선 및 제안 건수)	2,7	
기타	3,6	

나. 평가기준

- 기획관리실 사업은 도정의 운영을 위한 사업, 시군과 연관된 사업, 도의 회 및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 부서(실국)와는 차별화되어 도정 운영의 기획·조정, 지원적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기획관리실 사업의 특징과 성격을 반영하여 목적의 명확성, 사업 예산의 적절성, 지속필요성을 들 수 있음.

■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하며,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명확해야 함
- 주요 평가 지표는 성과지표의 존재 여부이며, 기획관리실의 특성을 살린 기획·조정·협력의 성격이 담겨 있는지를 고려.

■ 사업 예산의 적절성

-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함.

다. 주요 사업의 평가

1) 목적의 명확성

■ 기획관리실의 사업들이 도정 운영을 위한 기획·정책개발·협력·조정의 역할을 위한 사업들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적합함.

- 다만, 단위 사업중 도정종합 안내영상물 및 책자제작 및 도정 안내자료 발송비는 주요 정책 개발사업과는 정책과 단위사업의 결합성이 약함. 도정 홍보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보관실의 업무로 이관조정의 고려가 필요.

2) 사업 예산의 적절성

■ 정책개발을 위한 예산 -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등의 비용은 현상유지의 최소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 예산의 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음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 투자가용재원 산출은 전술한 주요사업에서 국비, 기금, 광역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한 도비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보면 가용한 재원 확보 예산이 극히 미미함

- 평가 대상 사업의 2010년 사업비 중 도비는 300,367백만원임
- 정책기획관실의 사업비 4,047백만원 중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2,500백만원을 제외하면 1,547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의회 지원, 정책평가,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
- 예산담당관실 예산 54,955백만원 중 시군재정지원(17,829백만원), 예비비(33,085백만원),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상환(2,933백만원), 도정 현안사업 추진(820백만원)와 운영경비(131백만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임으로 가용재원 산출의 의미가 없음
-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예산 중 법무 관련 예산은 221백만원으로 가용재원이 없음
- 정보화담당관실 예산 6,904백만원 중 대부분의 사업비가 공공요금 및 체세비(1,191백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910백만원), 시스템유지 보수비(1,236백만원)로 사용되고 있음
- 균형발전담당관실 예산 54,140백만원 중 지역균형발전사업지원(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53,771백만원을 제외하면 369백만원으로 기타사업 추진에서 제외할 사업이 없음

나. 예산 운용 방향

■ 기획관리실 예산 중 정책기획관실 사업비의 증액 필요

- 충남도정의 전략적 정책능력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한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를 확대가 필요함
 - － 충남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 확대(2,500백만원)

제4장 충남 기획관리실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도의 권한 미약과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 중앙정부와 반분권적 중앙언론, 지방의회의 견제와 대립 가능성 개발지상주의적 사고와 개발위주 사업관행, 취약한 시민사회역량을 고려하여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질적 성과의 산출
- 사람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내 내생적 발전 역량의 증진에 초점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추구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정책 실현
- 수요자 중심, 상향식 참여를 고취하는 정책과정과 정책 추진
- 민주주의, 인권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치 실현
- 중앙정부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협력
-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와 동반자적 관계 유지

나. 추진 전략

■ 참여와 소통의 충남도정 실현 : “도민이 주인인 충남도정”

- 도민이 도정의 주인인 소통과 참여의 자치 실현
 - 충남도 자치현장 제정
 - 도민 주도(창조) 행정체제구축과 주민참여역량 강화 사업 지원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 성과평가체제의 통합과 평가 기준의 혁신
 - 행정과정 자발적 공개 제도화

■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의 충남도정 :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전략적 집중”

- 자기주도적 협력 체제의 구축
- 도민참여형 집행력 형성 추진(거버넌스적 집행력)

■ 효율적 재정 운영전략의 수립과 집행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한 행복 충남 창조”

- 효율적 재정전략 수립과 시행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참여와 소통의 충남도정 실현

■ 도민이 도정의 주인인 소통과 참여의 자치 실현

• 사업 필요성 :

- 제한된 자주재원과 국비의 관할 지역 배분과 집행에 중심을 둔 자치행정 수행으로는 민선자치의 비전을 달성 할 수 없음. 핵심가치와 비전 중심의 행정을 도민의 참여 속에서 실현함이 필요.
- 이를 위해 정책 기획 능력을 강화하고 소통에 기반 한 도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발전 시켜 도민이 주인인 도정을 실현함. 정책고객, 이해관계자, 일반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다시 정책에 환류 하는 도민 주도 행정체제를 구축함.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기획, 사후적 정책모니터링, 환류 없는 의견 수렴 체제를 지양하고 상호적인 의사소통, 계획과 결과 전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조건의 형성,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수렴 될 수 있는 자치행정과정을 만들
- 소통과 참여를 위해선 투명한 행정과정이 전제조건임. 자발적이고 상시적 정보공개 행정체제의 구축, 거버넌스적 행정과정의 설계와 실행, 핵심적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획 실행을 실현함.
- 전통적으로 행정은 공무원의 고유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제는 도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모든 정책과정과 집행,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이러한 도민 주도 참여행정 속에서 책임과 창의를 통한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전면적인 정보공개와 투명한 행정을 통해 폐쇄적인 관료제를 극복함.

• 사업내용

① 충남도 자치현장 제정

- 더 넓고 깊은 시민참여와 생활 자치로 충남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민주도 자치도정’의 정신과 방법을 담은 충남자치의 기본 정신과 방법을 담은 충남자치의 기본조례로 자치현장을 제정함. 자치현장은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이며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본 방법과 실천방식에 대한 사회

협약으로서 성격을 지닌다.

- 주요 내용은 거버넌스를 기본으로하며, 주체로서의 주민의 역할과 참여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강령적 내용으로 구성.
- 주민참여의 원칙과 자치단체의 책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 거버넌스체제의 내용이 명시.
- 자치현장의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 추진

② 도민 주도(창조)행정체제구축과 주민참여역량 강화 사업 지원

- 혁신적 주민참여 의사결정 제도화 : 충남도민정상회의
- 정책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 거버넌스적 정책기획 체제 구축
- 「충남주민참여센터」의 설립과 「소통과 참여위원회」 구성 운영
- 다양한 시민참여문화의 형성과 활성화 : 「사회창안대회」, 「불만합창단」, 「이거바사이트」(개선이 필요한 거리를 촬영하여 사이트에 올려 시정을 요구하는 도민참여사이트-시·군과 공동 운영 필요), 「예산낭비신고센터」, 「명예도민제 확대」(내국인, 출향인등) 운영 등

○충남도민정상회의 : 21세기마을회의 방식의 도민 참여 정책토론 및 결정제도 도입

○정책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도정자문교수단을 충남도정책기획위원회로 개편
연구자, 현장전문가, 공직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책기획단을 구성
도정의 전략과제와 현안 정책 대안을 탐색하여 제출

○소통과참여위원회 : 도민과의 소통 및 참여의 확충을 위한 자문
소통과 참여 취약 계층인 참여 보장
쌍방향적 소통의 기획과 성과 평가 자문

○ 주민참여지원 전문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을 유도, 지원

도민의 참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각종 주민참여 과정의 설계와 운영 및 컨설팅, 갈등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전문 사회적기업을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발굴 육성하는 한편으로 도민참여 역량의 강화를 지원.

이를 통해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수요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 협동적 의사결정과 갈등 해결의 필수적 수단인 액션러닝(Action Learning)과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의 확산을 촉진함.

주민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사회적 기업에 도민정상회의, 도민참여예산제운영 등 위탁운영,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도민 참여 역량 강화 사

업 진행 및 갈등조정 관리를 위한 시민배심제의 운영 등의 위탁 운영 방식을 통한 지원 육성 추진.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 도민과 시민사회, 이해관계자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참여해 사업 순위의 합리적 결정에 참여. 예산과정을 통해 도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표 4-1〉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운영 현황

지역	광역단체	기초단체	지역	광역단체	기초단체
서울	0	0	경기	0	14
인천	0	0	강원	0	9
부산	1	2	충북	0	9
대구	0	6	충남	0	4
광주	0	5	전북	0	8
대전	1	2	전남	0	22
울산	0	2	경북	0	7
제주	0		경남	1	9

* 인천 연수구는 9월 17일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 없음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④ 성과평가체제의 통합과 평가 기준의 혁신

- 실국장책임경영제, 성과평가,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성과평가체제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과관리제도의 환류기능강화 및 비효율 제거.
- 공급자의 공급 중심 목표 달성, 일상적 과업 중심의 측정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와 새로운 공적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평가
- 공적가치창조 중심의 평가 기준은 ①새로운 공적 가치의 창조, ②지속가능한 환경의 조성, ③운영능력의 함양으로 영역을 나누어 평가.

⑤ 행정과정 자발적 공개 제도화

- 주요정책의 기획과 의사결정, 집행, 평가와 환류 관련 정보 상시 공개
- 도지사 보고자료,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인터넷 공개
-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진행 경과, 용역 결과 인터넷 공개
- 주요 현안에 대한 도민 합의를 위한 도민 참여방식의 의사결정도구로 도민 정상회의(21세기마을회의방식) 개최

- 기대효과

- 민주적 지방자치의 광범위한 도민참여, 투명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방통행식 행정에서 도민 참여, 도민 창조행정으로 발전

나.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의 충남도정

■ 자기주도적 도정 협력 체제의 구축

- 사업 필요성

도민의 행복 위한 전략적 집중 시스템의 구축

- 폭증하는 도민 수요와 한정된 재원과 자원으로 인한 능동적인 대응의 제한으로 인해 민선5기 도정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 도민 행복 창조를 위해선 도정 어느 한 분야도 소홀 할 수 없으나 도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함.
- 충남도정의 전략적 선택의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사회도래, 부동산개발 주도 성장의 종언 등의 도정 환경과 사람투자 전략을 통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도민 참여의 보장,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 행복한 교육의 구축 3대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도정의 만족도와 도정의 결과물로서 행복한 도민은 먼저 도민이 도정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 충남도정을 우리 집 살림살이로 느끼는 주민이 늘어나야 가능할 것임, 아울러 혁신적 도정의 선택과 집중점을 형성하고 이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도민에게 변화의 희망, 삶의 질의 실질적 제고로 나타나야 할 것임.
- 도민의 행복을 이한 전략적 집중을 실현하기 위해 소통과 참여, 환류의 도정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면서 공직자와 유관기관, NGO, 일반 도민들이 자기 주도적 도정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직접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정 운영시스템을 구축함.
- 아울러 도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잘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한 내포적 발전의 핵심적 전략으로서 충남사회적경제의 총괄적인 육성, 고령화와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 및 행복한 교육을 창출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도민의 행복을 창출함.

- 사업 내용

- 정책의 기획-결정-집행-평가-환류 전 과정을 도정의 참여자,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의 구축
- 도정의 주요 단계(시기별) 정책 목표와 방향의 개방적 공유(비전중심 소통)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전략적 단계의 설정과 단계별 기본 과업의 정립과 공유를 통한 자발적 쌍방향 소통 구조 형성, 자기주도적 협력자 제안의 개방적 접수와 검토, 압축적 토론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 전략적 과제의 선정과 전략적 과제 수행을 위한 도민참여형 집행력 형성 추진(거버넌스적 집행력 구축) : 전략적 과제로서 3개영역(도민참여, 사회적경제, 행복교육)에 대한 도민참여형 집행력 형성의 추진을 위해 유연단위를 통한 거버넌스 추진 핵심의 구축 추진
- 거버넌스적 집행단위는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인적 자원의 충원과 기존 사업의 총괄적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3대 영역에 대한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의 정형을 창출하고 성과에 기초한 시군의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 함 필요.

- 기대효과

- 도민에게 변화의 희망, 참여의 기회를 제공
- 실질적인 충남도의 행복한 변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다. 효율적 재정 운영전략의 수립과 집행

■ 효율적 재정전략 수립과 시행

- 사업 필요성

- 재정 수요의 폭증에 비하여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하여 신규가용재원의 규모가 매우 작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사업의 조정과 개선을 위한 종합 점검이 필요함.

- 사업내용

- 효율적 재정전략 수립과 시행을 위해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국실 재정담당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 비용은 감축하고 효과는 제고할 방안을 수립하고 함께 시행 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실행함
- 특히 분산된 유사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시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
-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의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사업, 사업비 부담이 큰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마련

• 기대효과

- 효율적 재정 전략으로 신규 세원의 발굴 등 수입의 증가, 세출이 감소,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을 통한 가용 재원의 창출, 동일비용의 더 큰 효과 산출, 재정 지출의 전략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체제 개선, 민간자본의 도정 참여 촉진 등.

라. 기타 사업 아이디어

■ 도지사직인수인계조례의 제정

- 당선 시점부터 취임까지의 시기는 도정 준비의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에 대한 계통적 지원과 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않음.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예산과 인력,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충남인권보호기본조례제정 및 공익변호인단 설치 운영

- 충남도의 각종 정책의 인권영향평가옴브즈만제도의 도입, 취약계층인 노약자의 학대, 결혼이주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상담, 지원. 공익소송을 대행 지원하는 공익변호인단 구성 운영

■ 품앗이은행설립운영

- 도민간의 자발적인 품앗이를 교환하는 다자간 품앗이거래시스템 구축 운영. (예, 서울시 품앗이지역화폐 S-머니). 재정적 투입이 없이 지역민 간의 상호 부조를 촉진하고 협력하도록 촉진하되 자원봉사하거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역경제의 위기 대응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음.

■ 충남남북교류협력조례 및 남북협력기금 설치

- 쌀 문제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준비

■ 충남도금고의 지역순환형 금융기관 참여

- 도금고에 신탁, 새마을금고 등 지역순환형 금융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권 확대에 간접 기여.

■ 충청을 빛낸 인사 기념관 설립 운영

- 출향인을 중심으로 충청을 빛내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의 토털 명예의 전당을 건립(사이버 명예의 전당과 병행).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

■ 도의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직자 승진제

- 도의원과 시민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를 심사, 특별 승진을 추천하면 지사가 이를 수용하는 제도

■ 주요시책 시군분담제(규칙)의 창조적 운영

- 참여와 소통행정을 위한 프로젝트팀제 운영(규칙-지사명령) 구성 운영을 통해 시군의 참여와 협력, 총 정원제의 우회 방법 강구 필요.

제Ⅲ편 충남 자치행정 및 공무원교육원 분야 연구보고서

제Ⅲ-1편. 충남 자치행정

제Ⅲ-2편. 충남 공무원교육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고승희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차 례]

제Ⅲ-1편 자치행정분야 연구보고서	223
--------------------------	-----

제1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일반현황	225
---------------------------	-----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26
2. 일반 현황	233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239

제2장 자치행정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241
------------------------------------	-----

1. 추진사업 현황	242
2. 사업비 분석	247

제3장 자치 행정 분야 주요사업 평가	261
----------------------------	-----

1. 평가대상 주요사업 요약	262
2.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71
3. 예산 운용 방향	278

제4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전략과제	279
---------------------------	-----

1. 비전 및 전략	280
2. 전략별 추진사업	281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290

제Ⅲ-2편 충남 지방공무원교육원 분야 연구보고서	291
----------------------------------	-----

제1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현황	293
---------------------------	-----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94
2. 교육운영 현황 및 계획	297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303

제2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307
---------------------------------------	-----

1. 추진사업 현황	308
2. 사업비 분석	311

제3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사업 평가	315
----------------------------	-----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316
2. 예산 운용 방향	318

제4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분야 전략 과제	319
1. 비전 및 전략	320
2. 전략별 추진사업	322

[표 차례]

<자치행정>

<표 1-1> 중소도시 인구변화	229
<표 1-2> 정주환경 시설	230
<표 1-3> 자치단체 간 갈등사례	231
<표 1-4> 충남의 주요통계	233
<표 1-5> 도 인구현황	234
<표 1-6> 재정자립도 현황	235
<표 1-7> 예산결산액 현황	235
<표 1-8> 충남 시·군 경쟁력	237
<표 1-9> 자치행정국 예산 내역	247
<표 1-10> 자치행정국 사업별 본예산 규모	248
<표 1-11> 자치행정국 정책사업 본예산 규모	249
<표 1-12> 소관 부서별 사업비	250
<표 1-13> 재원유형에 따른 소관부서별 사업 수 현황	252

<공무원 교육원>

<표 2-1> 2009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현황	298
<표 2-2> 2010년 신설·폐지·통합과정	301
<표 2-3> 2010년 교육인원 선발계획	302
<표 2-4> 2010년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308
<표 2-5> 공무원교육원 예산	312
<표 2-6>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교육훈련 예산	313
<표 2-7>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	314

[그림 차례]

<그림 1-1> 주요 사업비의 재원유형	251
-----------------------------	-----

제Ⅲ-1편 자치행정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주요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1) 지방분권의 중요성 강화

■ 거점성장 전략에서 분권화의 중요성 심화

- 국가운영의 핵심 : 집권(centralization) ⇒ 분권(decentralization)
 - 지방의 다양성을 경시하는 성장거점 전략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균형개발 전략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됨
 - 1980년대 이래, 인구 500만 이상의 75개국 가운데 12개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있음(Kingsley, 1996, Perspectives in Devolution, APA Journal, 62(4)).
 -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지역의 고른 발전과 균형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동
- 시장개방과 국제교류의 활성화
 - 국가 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과거 중앙정부의 우산아래 있었던 지방정부도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도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필요성이 증대됨
- 공공서비스 체감지수에 대한 관심 제고
 - 공공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주민과의 접촉면에 있는 지방행정, 지방정책의 적실성과 대응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지방분권의 형식적 제도화에서 실질적 제도화로 전환

- 구체적 지방분권 로드맵의 제시
 - 김대중 정부 때 100대 운영과제 중 하나로 분권을 강조한 이래,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의 핵심과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논의됨
 -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제정
- 형식적인 사무이양
 -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1994년 당시 중앙과 지방의 사무비

중은 87:13 이던 것이 2002년에는 73:27 로 지방으로의 사무배분 수준이 증가했으나 핵심적인 사무는 지방이양에서 제외되고 있음.

- 지방공무원의 인력과 능력이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제도화への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 지방정부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 증대

■ 지방정부 자기 책임성의 강화

-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서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지방정부가 되어서는 안 됨. 더구나,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음.
-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수동적인 반응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해결자로서 새롭게 자리매김 되어야 함.

■ 지방정부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지방정부에 대해 사회저변층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고양된 서비스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쾌적한 환경, 양질의 문화 및 교육서비스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전,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내 균형발전, 급증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 세계화로 인한 외국과의 협력 능력의 제고를 위한 내실있는 교육훈련 체계의 마련의 시급함.

나. 향후 전망

1) 국가선진화와 자치행정의 연계 강화

■ 자치행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지방화의 본격적인 진전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중앙중심의 성장이 아닌 지방, 균형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와 지방의 동반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할 것임.

-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47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프랑스 역시 1982년 「지방분권법」의 제정 이후 40여개의 지방분권 개혁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보충성의 원리 및 권한이양 등을 명시 함.
 - 우리나라 역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수도권 비대화 문제의 해결과 지방균형 관점의 강조로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분권이 활성화 된다고 가정하면,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완화된 수평적이고 유기적으로 변모할 것임.

■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생성

- 지방정부 간 경쟁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단
 - 자치행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지방정부 간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임.
 -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쟁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것임.
- 지방정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해소
 - 지방정부 간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이를 위한 조직, 인사, 재무 차원의 제약조건 해소를 위한 요구가 더욱 많아질 것임.

2) 지역 불균형의 심화

■ 중소도시의 쇠퇴

- 지방 군급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의 급격한 감소, 주택노후화, 정주 기반시설(의료, 문화, 사교육 등)의 열악 등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 중소도시의 인구변화

- 수도권에 위치한 31개 중소도시 중 인구감소는 5곳뿐인데, 지방도시는 82.2%가 감소함.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하고 있어,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표 1-1〉 중소도시 인구변화

(단위 : 천명, 도시수, %)

구분	시급도시				군급도시				전체		
	2000년	2005년	감소	증가	2000년	2005년	감소	증가	2000년	2005년	수
수도권	8,709	10,150	2 (6.5)	25 (80.7)	275	265	3 (9.7)	1 (3.2)	8,984	10,415	31 (100.0)
지방	10,709	10,857	33 (25.6)	17 (13.2)	4,194	3,757	73 (56.6)	6 (4.7)	14,903	14,614	129 (100.0)
전체	19,418	21,007	35 (21.9)	42 (26.3)	4,469	4,023	76 (47.5)	7 (4.4)	23,887	25,030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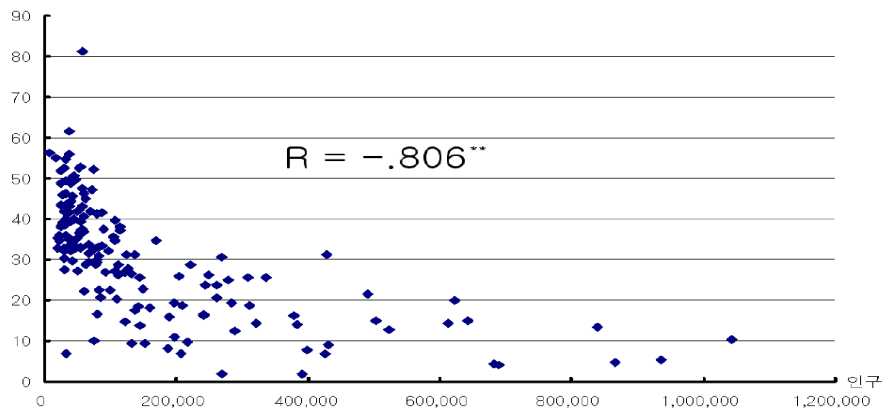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2005, 통계청

출처: 임준홍, 윤정미(2008), 도시재생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실태 분석, 「충청지역연구」, 제1권, 제1호.

• 도시규모와 노후주택 비율

- 지방중소도시의 노후주택의 비율은 시급도시에는 전체 주택의 25.8%가 노후주택이며, 군급주택에는 40%가 노후주택임. 이는 수도권 도시보다 2배 정도 높은 노후화 수준임.

노후주택비(%)



출처: 임준홍, 윤정미(2008), 도시재생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 실태 분석, 「충청지역연구」, 제1권, 제1호.

- 정주환경 시설 실태

- 의료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학원시설 수 모두 지방도시가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함. 수도권 집중이 강화된다면, 이런 현상 역시 심화될 것임.

〈표 1-2〉 정주환경 시설

구분	노후주택비율(%)		의료시설 ⁵⁾ (수/천)	문화기반시설(수/10만명)		학원시설 ⁶⁾ (수/만명)	
	시급	군급		시급	군급	만인당 학원수	만인당 강사수
수도권	13.3	22.3	17.34	2.65	9.86	39.13	115.72
지방	25.8	40	8.86	4.84	8.11	16.01	38.15
전체	21.4	39.2	10.96	4.07	8.19	21.73	57.32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2005, 통계청
 2005년 한국도시연감, 2006, 행정안전부
 2006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7, 문화관광부

■ 대도시 및 거점도시의 집중 증대

- 반면, 대도시와 지역 거점도시로의 집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자치행정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증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 군급 지역부터 도시 자생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중앙으로의 집권화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임.
 - 2000년 중소도시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46,136천명)의 51.8%인 23,887명으로, 이 중 지방중소도시에 14,903천명(32.3%)가 거주하였음. 그러나, 2005년에 수도권 인구는 15.9% 증가한데 반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3) 지역 내 갈등의 심화 및 해결의 필요성 증대

■ 지방정부 간 갈등의 증대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증시되면서 중앙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 공공시설 이전, 세계적 대회의 유치 등으로 지방정부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 간의 갈등 및 협력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이 다양화되고 있음.

〈표 1-3〉 자치단체 간 갈등사례

정부간관계	사례성격	사례명
광역↔광역	기피시설	
	유치시설	당진항 분리지정 호남고속철도 분기선갈등
	관할구역	해상도계갈등
	관할권한	용담댐수자원배분
광역↔기초	기피시설	
	유치시설	충남도와 홍성군 의료원 현대화사업 갈등
	관할구역	
	관할권한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기초↔기초	기피시설	천안시와 아산시의 쓰레기소각장 예산군 축산폐수처리시설 갈등사례 천안시 신방동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갈등 홍성군 화장장 현대화 사업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부고속철도 역사명
	관할구역	예산상수도 취수장일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갈등 고속철도역 택시공동영업구역 지정 갈등 천안-아산 행정구역 조정 갈등 군산내항 4공구 가호안 축조사업 갈등 태안·웅진군간 모래채취 해상갈등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및 본부이전 갈등
	관할권한	

출처: 최병학(2010), 지방정부의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조례제정방안 연구, 『충청지역연구』, 제3권, 제1호.

- 향후, 이런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에 대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행정능력의 향상이 요구되는 실정임.

4) 지방정부 자율성 및 재정력 증강의 필요성 증대

■ 지방정부 자율성은 자치행정 성공의 전제조건

- 지방정부간 경쟁과 협조의 심화는 이들 간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할 것임.
-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는 지방마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 신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는 선순환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될 것임.

■ 재정력의 확충 없는 자치행정은 중앙정부에의 의존성을 심화시킬 것

- 지방정부 재정의 열악성은 진정한 자치를 위한 걸림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임. 따라서 향후에도 지방정부 재정력 확충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국가재정 총 규모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별 비중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60:40 이었던 것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1.4: 38.5% 였다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62.40: 37.60이 되었음.
- 그러나, 이런 재정규모에서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으로부터의 의존재원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재정과 관련한 지방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황임.(행정안전부, 「국가-지방간 관계정립을 통한 지방분권의 비전과 전략 수립」, 2008.)

2. 일반 현황

가. 지역주요 통계

■ 충남지역 자치행정관련 주요통계는 아래와 같음.

〈표 1-4〉 충남의 주요통계

구 분	단 위	2010년 5월 현 재	비 고
○ 행 정 구 역		16 시·군 (7시 9군)	4,469리, 959통, 23,901반
○ 읍·면·동	개	211	26읍, 145면, 40동
○ 도 공 무 원 (여성공무원)	명	3,613 (535)	일반 1,845, 소방 1,768
○ 민주평통위원	명	748	남 606, 여 142
○ 이 · 통 장	명	5,554	이장 4,523, 통장 1,031 (남 5,008, 여 546)
○ 도정 모니터	명	240	남 161, 여 79
○ 주민자치센터	개소	159	' 05 까 지 (1 0 9) , ' 0 6 (1 0) , ' 07(15), ' 08(10), ' 09(10), ' 10(5)
○ 주부모니터	명	481	
○ ' 10 공무원 임용시험	명	48	일반 10, 소방 33, 별정1, 계약 4
○ 휴양시설	구좌	157	M캐슬 110, 한화 18, 금호16, 대명 13
○ 공무원노동조합	노조	2	충남도청노조, 충남선진노조
○ 취미클럽	분야	23분야, 1,810명	산악회, 해토, 축우회, 마라톤 등
○ 지방세 과징	억원	7,210	도세 3,700, 시군세 3,510
○ ' 09 채권 현황	억원	7,954	일반 987, 특별 6,956, 기금 11
○ 도 유 재 산(토지)	필지	72,710필지 146,836천㎡	건물 776동 371천㎡
○ 국 유 재 산(토지)	필지	31,980필지 29,651천㎡	건물 4동 1천㎡
○ 비영리민간단체	단체	330	' 05 까 지 (2 1 8) , 0 6 (2 4) , ' 07(37), ' 08(16), ' 09(23), ' 10(12)
○ 자원봉사자	천명	207	男 103, 女 104
○ 제3차 도서종합개발	백만원	59,417	6시군 328건
○ 제4차 도계가꾸기	백만원	12,340	7시군 274건
○ 소도읍 육성	읍	15	' 05까지(5), ' 06(4), ' 08(2), ' 09(1), ' 10(3)
○ 소규모숙원사업	백만원	226,099	16시·군 3,271건

- 행정구역은 16개 시군에 211개의 읍면동, 통과 리는 5,554개가 있음. 그리고 도 전체 공무원은 3,613명으로 이중 여성 535명, 소방공무원이 1,768명이 있음. 주민자치센터는 159개에 이르고 있음.
- 그 외, 지방세 수입은 7,210억원으로 이 중 도세가 3,700억원, 시군세가 3,51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도유재산 규모는 72,710필지에 이르고 있음.
- 도내 비영리단체는 330개, 자원봉사자는 20만 7천명, 주부모니터 481명이 있음.

나. 도 인구 및 재정현황

■ 인구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인구는 2백1만8천5백3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규모는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동 기간 내 남성인구의 증가가 여성인구의 증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는 2004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도내 전체 인구 대비 13.06%(2004년)에서 14.92%(2009년)가 되고 있어, 충청남도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5〉 도 인구현황

구분	인구		남	여	65세 이상	
	총계	전국 대비(%)	소계(명)	소계(명)	소계(명)	광역대비(%)
2004	1,953,406	0.61	982,648	970,758	255,030	13.06
2005	1,962,646	0.62	988,190	974,456	261,797	13.34
2006	1,974,433	0.62	995,826	978,607	266,702	13.51
2007	1,995,531	0.63	1,007,900	987,631	271,346	13.6
2008	1,995,531	0.63	1,007,900	987,631	293,688	14.72
2009	2,018,537	0.63	1,020,317	998,220	301,248	14.92

출처: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www.lais.go.kr>)

■ 재정자립도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중 10번째로 28.1%를 기록하고 있음.

〈표 1-6〉 재정자립도 현황

순위	지자체명	재정자립도(%)
1	서울특별시	90.4
2	인천광역시	75.7
3	경기도	64.1
4	울산광역시	59.3
5	부산광역시	55.5
6	대전광역시	54.5
7	대구광역시	50.7
8	광주광역시	42.9
9	경상남도	32.5
10	충청남도	28.1

출처: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www.laiis.go.kr>)

■ 예산결산액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예산결산액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중 8번째로 4조 3천6백37억7천4백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표 1-7〉 예산결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순위	지자체명	예산결산액
1	서울특별시	25,338,774
2	경기도	14,291,497
3	부산광역시	8,792,663
4	인천광역시	7,828,308
5	경상남도	6,571,253
6	전라남도	5,639,998
7	경상북도	5,567,828
8	충청남도	4,363,774
9	광주광역시	3,514,347
10	대전광역시	3,229,015

출처: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www.laiis.go.kr>)

다. 행정내부 관리

■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정보공개 신청 대비 공개율은 93.87를 보이고 있음.

구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 ($A \div B \times 100$) (단위 :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건수(A) (단위 : 건)	신청건수 (B) (단위 : 건)
2007	83.23	5,995	7,203
2008	75.2	7,781	10,347
2009	93.87	398	424

출처: 지방행정증합정보시스템(<http://www.lais.go.kr>)

■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비율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 비율은 70.69%를 보이고 있으며 총 위원 1,624명 중 시민위원은 1,148명임.

구분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 ($A \div B \times 100$) (단위 : %)	위촉 위원수 (A) (단위 : 명)	총 위원수 (B) (단위 : 명)
2006	68.11	1,072	1,574
2007	64.53	1,095	1,697
2008	68.36	955	1,397
2009	70.69	1,148	1,624

출처: 지방행정증합정보시스템(<http://www.lais.go.kr>)

■ 공무원 1천명 당 비위발생 비율

- 2009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공무원 1천명당 비위발생비율은 1.37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이나 2007년의 0.59명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치임.

구분	공무원 1천명당 비위발생비율 A÷(B÷1,000) (단위 : 건)	비위발생건수 (A) (단위 : 건)	공무원수 (B) (단위 : 명)
2004	-	-	3,173
2005	-	-	3,205
2006	1.55	5	3,227
2007	0.59	2	3,372
2008	5.04	17	3,372
2009	1.37	5	3,637

출처: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http://www.laiis.go.kr>)

라. 지역내 시군 경쟁력

- 충청남도 내 16개 시군의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천인당 전문업 종사자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천인당 병상수, 하수도 보급률, 천인당 범죄발생건수, 십만인당 국외여행 업체수를 기준으로 도시경쟁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8〉 충남 시군 경쟁력

구분	5년간 인구증가율 (%)	1인당 GRDP (천원)	재정 자립도(%)	천인당 전문업종사 자수(명)	1인당 도시공원 면적(m²)	천인당 병상수 (개소)	하수도 보급률(%)	천인당 범죄발생 건수(건)	십만인당 국외여행업 체수(개소)
천안시	18.4	24,899	54.0	8.8	21.1	9.4	88.3	38.6	9.7
공주시	-3.3	16,500	17.5	7.3	23.2	22.8	62.2	37.5	10.2
보령시	-2.4	21,260	21.7	4.4	20.7	8.0	58.4	45.9	6.5
아산시	26.1	50,510	53.9	3.5	28.5	8.3	44.4	33.6	6.8
서산시	4.2	41,572	32.2	6.0	65.1	6.6	57.4	46.6	5.0
논산시	-4.7	16,024	16.3	3.7	20.1	14.0	46.7	32.9	5.4
계룡시	33.5	10,510	20.4	1.1	182.3	2.4	95.0	34.4	0.0
금산군	-5.8	21,931	21.0	2.5	23.9	14.1	46.6	34.8	12.1
연기군	-4.4	21,918	23.4	3.9	9.8	9.4	53.4	30.1	12.5
부여군	-9.7	16,550	13.7	3.3	35.0	15.7	36.5	23.6	16.8
서천군	-9.5	22,305	12.4	2.5	44.8	16.5	21.5	41.6	8.2
청양군	-10.1	21,371	15.2	3.2	16.1	4.5	36.1	31.1	0.0
홍성군	-6.2	16,295	22.9	4.6	26.9	10.8	57.8	41.6	11.2
예산군	-6.6	15,251	18.0	2.4	11.3	8.0	52.6	33.9	12.3
태안군	-0.2	22,860	21.7	7.9	30.4	7.6	37.7	115.9	0.0
당진군	18.7	34,335	37.0	6.9	12.6	4.2	55.6	33.0	6.5
평균	2.4	23,381	25.1	4.5	35.7	10.1	53.1	41.0	7.7
표준편차	13.9	10,435	12.9	2.2	41.4	5.3	18.5	20.9	4.9

자료출처 : 재정자립도는 재정고(<http://lofin.mopas.go.kr>), 범죄발생건수는 해당시군 통계연보 기타 통계는 충남통계연보의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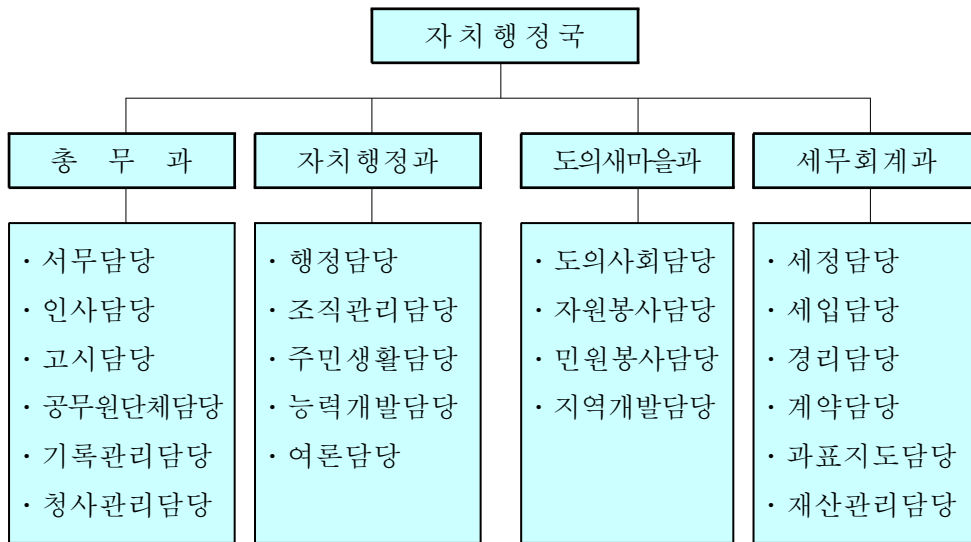
출처: 임병호(2010), 충청남도 시군의 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충청지역연구」, 제3권, 제1호.

- 인구증가율은 계룡시가 지난 5년간 33.5%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아산시(26.1%), 당진군(18.7%), 천안시(18.4%)이며, 청양군(-10.1%), 부여군(-9.7%), 서천군(-9.5%)이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함.
-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산시로 5천 51만원이고, 서산시(4천1백57만원)와 당진군(3천4백33만원), 천안시(2천4백89만원) 등이 높으며, 계룡시(1천51만원)와 예산군(1천5백25만원), 논산시(1천6백2만원), 홍성군(1천6백29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음.
-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54%인 천안시이며, 아산시(53.9%)와 당진군(37%), 서산시(32.2%)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서천군(12.4%), 부여군(13.7%), 청양군(15.2%), 논산시(16.3%) 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문인력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 천명당 8.8명을 보이고 있는 천안시이고, 태안군(7.9명)과 공주시(7.3명), 당진군(6.9명)이 높았으며, 계룡시(1.1명), 예산군(2.4명), 금산군(2.5명)과 서천군(2.5명)은 상대적으로 낮음.
- 1인당 공원면적은 계룡시가 182.3m²로 단연 높았으며, 서산시(65.1m²)와 서천군(44.8m²), 부여군(35m²)이 높음.
- 천 명당 병상수는 공주시(22.8개)가 가장 높고, 서천군(16.5개), 부여군(15.7개), 금산군(14.1개)이 높은 순위, 계룡시(2.4개), 당진군(4.2개), 청양군(4.5개), 서산시(6.6개)는 낮음.
- 하수도보급률은 계룡시가 95%로 가장 높고, 천안시는 88.3%, 공주시는 62.2%, 보령시는 58.4%로 높은 반면, 서천군은 21.5%, 청양군은 36.1%, 부여군은 36.5%, 태안군은 37.7%로 낮음.
- 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태안군이 115.9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부여군(23.6건), 연기군(30.1건), 청양군(31.1건), 논산시(32.9건)가 상대적으로 낮음.
- 여행업체수는 부여군이 16.8개로 가장 높고, 연기군은 12.5개, 예산군은 12.3개, 금산군은 12.1개로 높으며, 태안군은 0.0개, 청양군도 0.0개, 계룡시도 0.0개로 낮은 수준임.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기구 및 정원

-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세무회계과를 중심으로 21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음.



- 자치행정국 정원은 174명으로 5급이상 37명, 6급이하 13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기능

■ 총 무 과

- 복무관리 및 보안업무, 의전·의식행사 종합조정
- 공무원 인사운영, 임용시험 및 면허·자격시험 관리
- 공무원 후생복지 및 공무원 노조 업무총괄
- 문서보존·관인 관리, 청사·관사 시설물 유지관리

■ 자치행정과

- 국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총괄 및 행정구역관리
- 시군 행정 및 인사운영지원, 지방행정 여론수렴
- 도 및 시군 조직·정원 관리, 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 시군의회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

■ 도의새마을과

- 국민운동추진 총괄, 새마을 운동 조직관리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건전생활 시책수립 추진
- 자원봉사 종합계획수립 추진, 민원제도·여권 총괄
- 도서·소도읍·도계마을·소규모 숙원사업 추진

■ 세무회계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 일반회계 자금배정, 도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및 감독
- 국·도비 세출예산 경리,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계약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시·군세 업무지도, 국·공유재산 관리

제2장 자치행정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충남 주요 자치행정정책은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지방자치 기반조성,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민선 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자치행정국 중점 실천과제》

- ①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지방자치 기반조성
- ②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 ③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 ④ 민선 5기를 선도하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 2010년도 자치행정국의 세부사업은 4개 과에서 40개 부문에 걸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무회계과가 13개 부문으로 가장 많고, 자치행정과가 12개, 도의새마을과가 8개, 총무과가 7개 부문으로 나타났음.

■ 총무과 : 7개 부문

- 생동감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 － 화합 한마당 행사(연2회), 취미클럽 지원(20개 클럽), 철도할인지속추진(25%), 휴양시설운영(157구좌) 등 지원시책 전개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 －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인사문화의 확립
 - － 실국장 토론회를 통한 인사안 심의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우리지역 우수인재 적극 선발
 - － 2010년 신규채용목표: 240명 정도('09년 198명 대비 21%증가)

-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운영
 - 개인별 평균 복지비용 지원확대(900천원->1,100천원)
 - 단체보험가입: 4,078명
- 건강관리실 운영
 - 건강관리실 건강·체력검사 실시: 400명 정도
 - 건강증진 재활프로그램 운영: 150명
- 정보공개 내실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 정보공개처리율 제고: 90 -> 95%이상
 - 주요기록물 DB구축: 1,540천매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정기점검:매월, 수시점검:4회
 - 청사 환경개선공사의 적기 추진: 쾌적한 근무환경 유지

■ 자치행정과 : 12개 부문

-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 운영
 - 시군방문: 16개 시군, 1일 2시군
 - 사회단체별, 직능별 폭넓은 대화: 실국 주관
-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 도·시군 인사교류: 1:1 대등교류
 - 인사교류자 행·재정적 인센티브(교류수당, 평가가점 부여 등) 지원
- 이·통장 및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 이통장 워크숍(1회) 및 임원 간담회(1회) 지원
 - 자율방범 연합회 워크숍(1회) 및 체육대회(1회) 지원
- 활력있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 조직진단(수시): 상반기 자체 직무분석, 상시적 조직진단체제 유지
 - 조직개편(2회): 기구정원 신규행정수요 등 변경요인(수시), 하반기 조직재설계
 - 사무배분(3회): 사무위임, 민간위탁, 위임전결 관련 자치법규 정비
- 법정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원활한 시군의회 운영 지원
 - 충남시군의회의장 협의회 개최지원
 - 충남시군의회사무국(과)장 협의회 개최 지원
 - 도지사, 시군의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운영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운영
 -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2회
-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 5개소
 -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1회
-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 연찬회 및 도지사와의 대화: 2회
 - 우수모니터단 정책탐방 등 선진지 견학실시: 1회
- 국외훈련 내실화로 훈련성과 제고
 - 2011년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10명
- 대단위 개발사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운영
 - 타사·도 대규모 현안사업장 현장체험 교육: 120명
- 상시학습 운영 및 직원능력개발 지원
 -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도입으로 상시학습체제 구축
 - 공무원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 도의새마을과 : 8개 부문

- 「새마을운동」 명품브랜드로 재창조
 - 새마을지도자 5천명 중 3천명 이상 「공사환경 명예감독관」 임명
 - 해외봉사단 운영 1회 30명, 촉진대회 1회 개최 5천명 이상 참석
 - 참 아름다운 마을 3마을 이상 육성
- 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도의사회 교육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운영

- 충효예교실 운영
- 여성도의교실 운영
- 범도민 스승 존경운동 추진
 - 선생님과 만남의 광장 행사: 출향인사 등 참여
 - 전국청소년적십자 백일장 대회
 - 스승존경 제자사랑 글 및 편지 공모
- 사회단체 공익활동 증진 지원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평가위원회 개최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찾아가는 수요자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10회
 -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
- 도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민원인 만족도 제고: '09년 93% -> ' 10년 95%
 - 민원처리 기간단축 우수공무원 표창: '10년 2명
- 도서종합개발 사업추진
 - 사업비 60억원 차질없이 지원
 - 도서종합개발 로드맵에 의한 사업지도 및 점검: 연2회
-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
 - 사업비 191억원(국비 36, 도비 3, 군비 139, 민자 13) 차질없이 지원
 - 소도읍 육성 로드맵에 의한 사업지도 및 점검: 연2회

■ 세무회계과 : 13개 부문

-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
 - 세수목표액 대비 징수율 95%이상 달성
 - 세수확보 시책추진: 보고회,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체납세금 징수율: 현 년도 95%이상, 전년도 25%이상

- 채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
 - 300만원 이상 채납자 압류재산 일괄공매 추진
- 성실·납세법인 인센티브 제공
 - 성실·납세법인 선정 시상: 3월/5개법인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고액성실 납세자 자긍심 고취
- 지방세 구제업무 신속·정확한 처리
 - 지방세 관련 위원회 통폐합: 5개 위원회 -> 1개 위원회
 -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10일(90일 -> 80일)
 -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처리상황 SMS 문자서비스 제공
- 원활한 자금배정 및 이자수입 증대
 - 공금예금 이자수입 목표액: 15,000백만원
-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 중앙부처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제로화
 -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2회), 워크숍 개최(1회)
- 대가지급 모바일 서비스 시행
 - 대가지급 모바일 서비스 희망자 100% 제공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계약 80% 시행
- 낭비없는 물품구매 및 관리
 -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 물품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전자태그 시스템 구축
-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세무조사 목표액 대비 95%이상 달성(목표액 40억원)
 - 수직적 통제에서 수평적 세원관리로 전환
- 전사적 재산관리
 -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수립 의회의결
-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 공공용 토지의 합병으로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 및 잔여지 발굴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 자치행정국의 예산현황은 세입 9,989억원(지방세: 7,850, 세외수입: 848, 교부세, 1,201, 보조금: 90), 세출 3,134억원(경상경비: 947, 사업경비: 547,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640)임.

■ 충남의 2010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일반회계의 경우, 3,134억 7,554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3조 3,427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로 자치행정국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없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분석함.

- 자치행정국 예산은 2009년에 비하여 197억 5천76만7천원이 감소하여 5.93%가 감소하였음.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의 축소는 특히 전년도에 비해 세무회계과의 세출예산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함.

〈표 1-9〉 자치행정국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합 계		333,226,307	313,475,540	△19,750,767	△5.93%
자치행정국	총무과	41,621,591	49,592,464	7,970,873	19.15%
	자치행정과	5,951,818	14,110,042	8,158,224	137.07%
	도의새마을과	26,505,290	21,899,561	△4,605,729	△17.38%
	세무회계과	259,147,608	227,873,473	△31,274,135	△12.07%

-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 79억 7천 87만 3천원이 증가하여 19.15% 증가하였음.
- 자치행정과는 전년도에 비해 81억 5,822만 4천원이 증가하여 137% 증가하였음.
- 도의새마을과는 전년도에 비해 46억 572만 9천원이 감소하여, 17.38% 감소하였음.

- 세무회계과는 전년도에 비해 312억 7413만 5천원이 감소하여 12.07% 감소하였음.

나. 소관 부서별 사업비 분석

1) 사업별 본예산 규모

- 자치행정국의 2010년 예산인 일반회계의 경우, 3,134억 7,554만원은 크게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음.

〈표 1-10〉 자치행정국 사업별 본예산 규모

(단위 : 천만원, %)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계	333,226,307	313,475,540	△19,750,767	△5.93%
정책사업	248,567,890	212,641,222	△35,926,668	△14.45%
재무활동	0	6,075,000	6,075,000	100%
행정운영경비	84,658,417	94,759,318	10,100,901	11.93%

- 정책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359억 2,666만 8천원이 감소하여 자치행정국 예산감소분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음. 그 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증가함. 그러나, 정책사업비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국 사업의 특성상 경상적인 성격의 것이 많은 까닭에 실제,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이미 말한 것처럼, 경상경비: 947, 사업경비: 547,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1,640로 실질적인 사업경비 보다 경상경비와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이 훨씬 많은 편임.
- 자치행정국 본 예산에서 정책사업 예산은 67.83%를 차지하고 있음.

- 자치행정국 정책사업 예산은 크게 일반공공행정과 국토 및 지역개발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일반공공행정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일반행정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지역 및 도시 부문이 속해 있음. 이들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11〉 자치행정국 정책사업 본예산 규모

(단위 : 천만원, %)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계			248,567,890	212,641,222	△35,926,668	△14.45%
일반 공공 행정	지방행 정·재정 지원	선진세무 행정실현	206,670,675	166,844,331	△39,826,344	△19.27%
	일반 행정	활기찬 직장분위 기 조성	9,660,357	9,999,228	338,871	3.51%
		선진자치 도정 구현	5,817,418	13,980,182	8,162,764	140.32%
		으뜸 충남도민 의식함양	3,799,690	4,580,681	780,991	20.55%
	국토 및 지역 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개발	22,619,750	17,236,800	△5,382,950	△23.80%

- 선진세무행정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9.27% 감소하여 1,668억 4,433만 1천원으로 책정되었음. 이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 역시, 선진세무행정실현, 국공유재산관리, 안정적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관리, 세외수입업무 선진화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며, 회계행정운영예산만이 증가함.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51% 증가하여 99억 9,922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음. 구체적으로는 후생복지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행정지원강화, 공무원 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고시관리, 기록관리 선진화 예산을 감소하였음.
- 선진자치 도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40.32%가 증가하여, 139억 8,018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시군 및 유관기관 자치역량 강화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능력개발, 주민만족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예산은 감소하였음.
- 으뜸 충남도민 의식함양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0.55% 증가하여 45억 8,068만 1천원으로 책정되었음. 구체적으로는 도의 정신 고취와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예산은 증가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감소하였음.

- 지역개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3.80% 감소하여 226억 1,975만으로 책정되었음.

2) 소관 부서별 사업비

■ 2010년 자치행정국 정책사업비는 2,126억 4,122만 2천원임.

〈표 1-12〉 소관 부서별 사업비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계	248,567,890	212,641,222	△35,926,668	△14.45%
세무회계과	206,670,675	166,844,331	△39,826,344	△19.27%
총무과	9,660,357	9,999,228	338,871	3.51%
자치행정과	5,817,418	13,980,182	8,162,764	140.32%
도의새마을과	26,419,440	21,817,481	△4,601,959	△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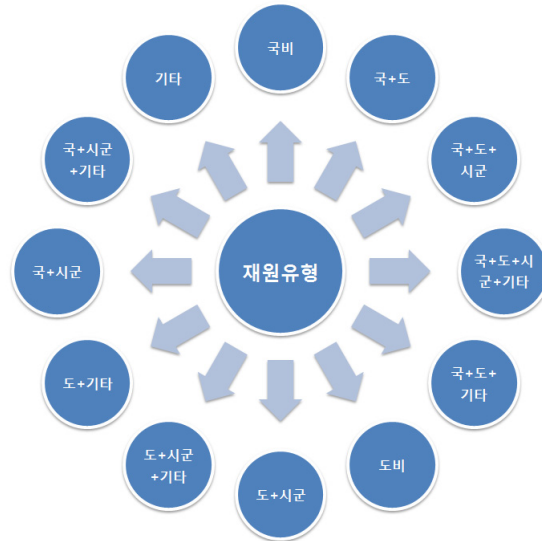
- 세무회계과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9.27% 감소하여 1,668억 4,433만 1천원으로 책정되었음.
- 총무과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3.51% 증가하여 99억 9,922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자치행정과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40.32%가 증하여, 139억 8,018만 2천원으로 책정되었음.
- 도의새마을과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17.42% 감소하여, 218억 1,748만 1천원으로 책정되었음.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 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재원유형은 다음 <그림 1-1>과 같이 모두 12가

지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1〉 주요 사업비의 재원유형



■ 자치행정국 사업예산 중 도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36개로 98%, 국비+도비+시군비+민자인 것이 1개로 0.5%, 도비+시군비로 이루어진 것이 2개로 1.0%, 도비+시군비+균특회계로 이루어진 것이 1개로 0.5%를 차지함.

- 총무과의 주요 사업예산은 모두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 자치행정과의 주요 사업예산은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단,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5개의 신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5억원 중 도비 40%, 시군비 60%를 할당하고 있음. 2010년 자치행정과 예산 중 특징적인 것은 6월 2일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예산, 15,900백만원이 도비로 책정되었다는 것임. 이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가 2010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140%이상 증가 한 것을 설명함.
- 도의새마을과의 주요 사업예산 중 일부는 도비 이외로 충당되는 매칭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 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도의사회 교육을 위한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여성도의교실의 운영에 총 1,367백만원을 배정하면서 도비

410백만원, 시군비 957백만원을 배정함.

-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6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군특 42억원, 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을 배정함.
- 소도읍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91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국비 36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39억원, 민자 13억원을 배정함.
- 세무회계과의 주요 사업 예산은 모두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것임.

〈표 1-13〉 재원유형에 따른 소관부서별 사업 수 현황

구분	국비	국 + 3/4	국 + 3/4 + 시군	국 + 3/4 + 시군 + 기타	국 + 3/4 + 기타	도비	3/4 + 시군	3/4 + 시군 + 기타	3/4 + 기타	국 + 시군	국 + 시군 + 기타	기타	계
총무과	-	-	-	-	-	7	-	-	-	-	-	-	7
자치 행정과	-	-	-	-	-	11	1	-	-	-	-	-	12
도의새 마을과	-	-	-	1	-	5	1	1	-	-	-	-	8
세무 회계과	-	-	-	-	-	13	-	-	-	-	-	-	13
계	-	-	-	1	-	36	2	1	-	-	-	-	40
(%)	(0.0)	(0.0)	(0.0)	(0.50)	(0.0)	(98.0)	(1.00)	(0.50)	(0.0)	(0.0)	(0.0)	(0.0)	(100.0)

주 1) □ : 도비

2) 기타 = 융자 + 자담

라. 주요 사업의 사업비 분석

1) 사업비 중 도비 분석

■ 자치행정국 사업예산은 타 실국에 비해 경상경비가 많은 편임. 이런 현황은 총무, 자치행정, 세무회계 등과 같은 행정내부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의 특징에 기인한 것임.

■ 따라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치행정국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

으로 편성된 도비로 집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비나 군특회계, 시·군 비와 매칭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도의새마을과의 사업에서 발견됨.

2) 부서별 주요 사업의 사업비 분석

■ 주요 사업이라 함은 충남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제시된 것에 기초한 사업임. 자치행정국의 사업은 도의새마을과를 제외하고는 행정내부 사무가 많은 까닭에 단순히 사업비 규모로 그 중요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이 분석의 목적이 예산분석을 통한 도 자치행정 정책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가용재원의 산출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하에서 사업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임. 그러나, 각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제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이루어질 것임.

■ 총무과의 예산은 모두가 도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은 도정운영지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 구내식당 운영지원, 도정자료 관리이며, 이중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가장 증가함.
- 2009년에 비해 감소한 예산은 각종행사의전지원,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공무원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직원자녀보육지원비,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와 고시관리,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예산임.
- 전체적으로 총무과의 예산은 2009년에 비해 늘어난 항목보다는 줄어든 항목이 많음.
- 총무과의 사업예산 규모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깨끗한 청사환경관리>직원자녀보육지원비>고시관리>주요기록물전자화>각종의전행사지원>공무원격려 및 행정동우회지원>도정운영지원>공무원단체 관련업무 등>구내식당운영지원의 순서임.
 - 공무원복지관련 예산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청사관리예산, 고시 및 기록물 관리, 의전지원 등이 그 다음임. 공무원단체 예산인 가장 적음.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감	비고
총무과	도정운영지원	289,504	291,728	2,224	
	각종행사의전지원	422,200	419,400	△2,800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1,177,469	1,099,635	△77,834	
	공무원격려 및 행정동우회지원	577,200	411,020	△166,180	
	맞춤형복지제도운영	3,410,100	4,485,800	1,075,700	
	직원자녀보육지원비	953,280	840,000	△113,280	
	공무원후생복지부담 금	1,407,116	1,269,381	△137,735	
	구내식당 등 운영지원	5,500	10,200	4,700	
	공무원단체 관련업무 등	214,000	16,000	△198,000	
	고시관리	573,708	567,608	△6,100	
	도정자료관리	134,280	149,456	15,176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491,000	439,000	△52,000	

■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운영되는 상생협력갈등관리와 국비인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도비로 이루어짐.

- 2009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은 유관기관 및 단체운영, 선거관리, 상생 협력갈등관리, 공무원능력개발지원이며, 특히 지방선거로 인한 선거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에 비해 감소된 예산은 자치행정관련 운영, 공무원국내교육훈련, 공무원장기교육훈련, 주민자치센터설치임.
- 2009년과 예산규모가 같은 사업은 지방행정시책추진,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도정 모니터 운영임.
- 자치행정과의 예산규모는 선거관리>공무원국내교육훈련>유관기관, 단체 운영>공무원장기교육훈련>공무원능력개발지원>주민자치센터설치>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자치행정

관련운영>지방행정시책추진>도정모니터운영의 순서임.

- 2010년에 한해 특징적으로 증가한 선거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공무원 교육훈련예산이 가장 많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운영 예산이 그 다음임. 그 외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자치행정관련 운영, 지방행정시책추진 예산은 1억원 이하로 작은 규모임.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감	비고	
자치 행정과	자치행정 관련 운영	71,800	69,300	△2,500	
	유관기관, 단체운영	995,000	1,104,000	109,000	
	지방행정시책추진	60,000	60,000	0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	82,400	82,400	0	
	선거관리	602,424	9,251,359	8,648,935	
	상생협력갈등관리	10,000	100,000	90,000	특별교부세 100%
	도정모니터운영	36,500	36,500	0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2,073,404	1,773,404	△121,142	
	공무원장기교육훈련	685,642	684,500	△1,142	
	공무원능력개발지원	230,160	430,160	200,000	
	주민자치센터설치	560,000	272,500	△287,500	
	태평양전쟁전후국외 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	146,035	116,059	△29,976	국고보조금 100%

■ 도의새마을과의 예산은 비영리민간단체육성,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여권발급업무,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지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도비 이외의 예산이 포함된 사업임.

- 2009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은 도의새마을교육지원, 새마을단체육성지원, 비영리민간단체육성,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 여권발급업무추진,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이며, 특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균특회계를 통해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에 비해 감소된 예산은 충남정신발양지원, 스승존경운동추진, 사회단체육성지원,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도자원봉사단운영, 민원상담위원운영, 소도읍육성사업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도계가꾸기지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임.

- 2009년과 예산규모가 같은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범죄예방추진, 바르게살기운동단체육성, 통일안보단체육성, 자유총연맹단체육성, 시군자원봉사단운영 임.
- 도의새마을과의 예산규모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소도읍육성사업지원>사회단체육성지원>새마을단체육성지원>자원봉사센터운영>도계가꾸기사업>도의새마을교육지원>여권발급업무>비영리민간단체육성>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자원봉사코디네이터>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자유총연맹단체육성>자원봉사보험료지원>민원상담위원운영>시군자원봉사단운영>스승존경운동추진>바르게살기운동단체육성>범죄예방추진>충남정신발양사업지원>자원봉사활동지원>통일안보단체육성임.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 규모가 큼. 반면, 이들 사업은 도비이외에 국비, 군특에 의해 매칭이 이루어짐. 그 다음으로 사회단체육성 등 도내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많음.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예산이 규모가 큼. 반면, 범죄예방추진, 충남정신발양사업지원, 통일안보단체 육성은 예산규모가 작음.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비고
도의새마을과	충남정신발양사업지원	69,300	11,700	△57,600	
	도의새마을교육지원	336,640	409,640	73,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10,000	310,000	0	
	범죄예방추진	30,000	30,000	0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61,500	579,500	518,000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	35,000	35,000	0	
	통일안보단체 육성	5,000	5,000	0	
	비영리민간단체육성	0	310,500	310,500	균특: 245,000 도비: 65,500
	스승존경운동추진	55,000	40,000	△15,000	
	자유총연맹 단체육성	165,000	165,000	0	
	사회단체육성지원	1,108,283	1,098,000	△10,283	
	새마을운동활성화추진	3,600	4,000	400	
	자원봉사보혐료지원	85,846	66,035	△19,811	국고보조금 100%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293,252	274,260	△18,992	국고보조금: 259,010 도비: 15,250
	자원봉사활동지원	12,360	8,760	△3,600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	222,000	192,000	△30,000	
	도자원봉사센터운영	600,000	575,000	△25,000	
	시군자원봉사단운영	42,400	42,400	0	
	여권발급업무추진	306,540	368,266	59,377	국고보조금: 323,400 도비: 44,866
	민원상담위원운영	57,969	55,620	△2,349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	2,276,000	5,099,000	2,823,000	균특: 4,199,000 도비: 900,000
	소도읍육성사업지원	5,000,000	3,944,000	△1,056,000	균특: 3,600,000 도비: 344,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	11,533,750	7,477,300	△4,056,450	
	도계가꾸기 사업	2,010,000	515,000	△1,495,000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1,800,000	201,500	△1,598,500	균특: 200,000 도비: 1,500

■ 세무회계과의 예산은 모두가 도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상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증가된 예산은 지방세운영,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세

외수입업무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 세입결함분보전 중앙정부차입금임.

- 2009년에 비해 감소된 예산은 체납세 정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관리,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임.
- 세무회계과의 예산규모는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세입결함분보전 중앙정부차입금>국공유재산관리>물품수급및관용차량관리>지방세운영>체납세정리>결산 및 재정연감작성>세외수입업무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임.
-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등이 많은 반면, 지방세 운영, 체납세 결산,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세외수입선진화 성과평가 등 조세관련 업무는 예산규모가 작음.

구 분		'09 본예산	'10 본예산	증 감	비고
세무회계과	지방세운영	279,800	280,200	400	
	체납세정리	200,000	100,000	△100,000	
	국공유재산관리	1,361,255	1,246,585	△114,670	
	물품수급 및 관용차량관리	1,183,620	1,098,120	△85,500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59,000	61,000	2,000	
	세외수입업무선진화 를 위한 성과평가	23,000	32,426	9,426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203,562,000	164,026,000	△39,536,000	
	세입결함분보전 중앙정부차입금	0	6,075,000	6,075,000	

3) 충남도 자치행정 예산구조의 특징

■ 자치행정 사업비의 경우, 정책사업보다는 경상적 사업이 많은 편으로 각 사업에 있어 국비의존도 보다는 충남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도비예의 비중이 높음.

-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세무회계국의 세입결함분보전 중앙정부차입금 예산 이외에는 2009년에도 수행된 것임.
- 총무과와 세무회계과의 사업은 주로 인사, 직원복지, 공무원단체 운영,

기록전산화, 지방세, 체납세, 국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징수 등으로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임.

• 도의새마을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사업이 많음.

■ 이처럼, 지방자치국은 경상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있어 변동분도 그렇게 크지 않음. 단, 2010년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선거관리 비용의 증가에 기인함.

■ 또한, 사업성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자치국의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로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예를들어, 총무과의 고시관련 예산이 작다고 해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사업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함.

• 단, 도의새마을과의 경우 사업성 예산이 비교적 많아, 예산규모로 각 사업을 평가해 볼 수 있음.

제3장 자치 행정 분야 주요사업 평가

1. 평가대상 주요사업 요약

2.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3.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평가대상 주요사업 요약

〈평가대상 주요 사업 선정 기준〉

■ 평가대상 주요 사업은 충청남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의 자치행정국 예산에 나타난 사업을 근거로 판단함. 이들 사업들과 그 예산 내역은 이미 밝혔음. 단, 사업평가를 보다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루틴 한 사업
 - － 총무과: 도정운영지원, 각종행사의전지원, 깨끗한 청사환경관리, 고시관리
 -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관련운영, 유관기관 단체운영, 지방행정시책추진
 - － 도의새마을과: 여권발급업무추진
 - － 세무회계과: 지방세 운영, 체납세 정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수급 및 과용차량 관리, 결산 및 재정연감작성, 세외수입업무선진화를 위한 성과평가
- 사업비가 1억원 이하이며,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작은 마이너 한 사업
 - － 총무과: 구내식당 등 운영지원
 - －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 － 도의새마을과: 충남정신발양사업지원, 통일안보단체육성, 스승존경운동, 새마을운동활성화
- 2010년도에만 해당하는 특이 사업
 - －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 국가사업의 위임처리 및 중앙정부 주도사업
 - － 자치행정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
 - － 도의새마을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가. 공무원 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 목적

-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도정의 활력도모
-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세부 사업개요

- 화합한마당 행사(연2회: 63,000천원)로 결속과 재충전의 장 마련
- 취미클럽지원(20개 클럽, 25,000천원)을 통한 결속강화
- 4계절 휴가문화 정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철도이용할인, 공무원휴양시설(157구좌)를 통한 휴식처 제공
- 자녀 보육료 지원, 임대주택 지원, 학자금 대부, 금강 복지회 및 상조회 운영 등 효율적인 후생복지 지원시책 지속 전개

나. 복지 및 후생복지 제도 내실 운영

■ 목적

- 개인 필요에 맞는 여가 선용 및 직원 후생복지 실현
- 복지만족도 향상에 따른 근로의욕 고취 및 행정의 생산성 증대

■ 세부 사업개요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사업기간: 2010.1.1. - 2010. 12.31.
 - 대상인원: 4,078명(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포함)
 - 총사업비: 4,485백만원(복지비용 3,670, 단체보험 815)
 - 개인별 평균 복지비용 지원확대: 900천원 -> 1,100천원
 - 단체보험 가입: 4,078명(일반직 1,997, 소방직 1,803, 기타 278)
- 직원자녀보육비 지원
 - 사업비: 840,000천원
-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
 - 사업비: 1,269,381천원

다. 정보공개 내실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 목적

-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 주요 기록물의 D/B 구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 및 전자 도정 구현

■ 세부 사업개요

- 도정자료관리
 - 사업비: 149,456천원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 사업기간: 2010.1. – 2010.1
 - 사업비: 428백만원
 - 정보공개처리율 90-95%로 제고
 - 정보공개제도 편람제작 및 배부

라. 상생협력갈등관리

■ 목적

-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공동노력 구체화
- 공무원의 공공갈등 전문성 제고 및 예방 및 해결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포럼」 운영
 - 연구조사(정책포커스 발간 :2회, 연구과제:2회)
 - 교육연수(세미나:2회, 교육:1회, 협의체운영:수시, 논문발표대회:1회)
 - 현장지원체계 구축
- 4대 권역별 포럼운영 활성화
 - 공공갈등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2회)
 - 공공갈등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마. 주민자치센터 설치

■ 목적

-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도모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설치: 154개소(2009년) -> 159개소(2010년)
 - 사업기간: 2001 - 2012년
 - 사업비: 5억(도비 40%, 시군비 60%)/5개소
-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현지 점검(연 2회)
- 센터별 현황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 공유
- 2011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수요조사
-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연찬회

바. 도정 모니터 운영

■ 목적

- 도정 모니터를 통해 주민들의 정책체감도 및 생활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향상
- 도민들의 작지만 가치 있는 도정 아이디어 발굴, 친서민 정책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

■ 사업개요

- 제2기 주부모니터단 확대 구성 및 운영: 481명
-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추진
 - 연찬회 및 도지사와의 대화: 연2회
 - 우수 정책제안 요령 등 교육 강화 및 off-line 활동 지원
 - 우수모니터단 정책탐방 등 선진지 견학 실시 및 인센티브 운영
- 제안과제의 채택률 제고를 위한 도 아이디어 숙성 자문단 구성
 - 운영: 7명(외부전문가 4, 우수모니터 3)
 - 분야별 전문성 및 현장성을 연계한 제안과제 숙성 자문
 - 대면회의(중요사항) 및 비대면 자문 등으로 운영

사. 공무원 장기 교육훈련

■ 목적

- 국외 훈련 내실화로 미래인재 양성 및 도정 경쟁력 강화
- 세계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분야별 국제전문인력 양성

■ 세부 사업개요

- 매년 10-12명씩 10년간(2008-2017) 젊고 참신한 인재 선발
- 국외 훈련 희망자 「훈련예정분야 부서 선근무제」 실시
- 해외 우수사례의 도정 접목을 위한 훈련 중 공무원 활용도 제고
- 해외 선진 국가 우수 교육기관 발굴 협약체결)

아. 상시학습 운영 및 직원능력개발 지원

■ 목적

- 지속적인 학습문화 분위기 조성으로 도정 우수인재 양성
- 다양한 학습 지원으로 새로운 지식 습득 및 역량개발

■ 세부 사업개요

- 공무원능력개발 지원
 - 직장교육, 명사특강, 원어민과 대화, 외국어 스터디 그룹 지원
 - 연간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도입
 - 사업비: 430,160천원
- 공무원국내교육훈련 지원
 - 공무원의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성과 제고
 - 사업비: 1,773,404 천원

자. 도의새마을교육지원

■ 목적

- 사회지도층의 사회활동 강화를 위한 지식습득 기회제공
- 충효예의 전통미풍 양속을 계승발전, 건전윤리의식 함양

■ 세부 사업개요

-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충효예교실, 여성도의교실 운영
- 교육인원: 32,732명
- 교육시기: 2010.2 - 2010.12.
- 사업비: 1,367백만원(도비 410, 시군비, 957)

차. 새마을단체육성지원

■ 목적

- 새마을 단체의 육성을 통해 지역개발에 이바지
- 지역개발과 지역 의식개발에 기여

■ 세부 사업개요

- 사업비: 579,500

카.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 비영리민간단체의 육성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
-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도정 모니터 실시

■ 세부 사업개요

- 사업비: 315,500

타. 사회단체 육성지원

■ 목적

-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의 도정 참여 확대

■ 세부 사업개요

- 사업기간: 전년도 10월 - 익년도 2월
- 사업비: 1,094백만원
- 추진절차
 - 2010년도 지원계획공고 및 2009년 정산서 제출 통보: 2009.10.19.
 - 2009년 사업정산 및 평가: 2010.1.8.
 - 2010년 사업 선정 발표: 2010.2월
 - 2010년 조기집행 독려: 2010년 4월까지 60%이상 집행
 - 2010년 정산 및 평가

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목적

- 밝고 명랑한 사회조성 및 함께하는 자원봉사 기반 구축
- 수혜자 중심의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

■ 세부 사업개요

- 자원봉사보험료 지원
 - 사업비: 66,035천원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 사업비: 274,260천원
- 자원봉사활동지원
 - 사업비: 8,769천원

- 시군자원봉사활동지원
 - 사업비: 192,000천원
- 도자원봉사센터 운영
 - 사업비: 575,000천원
- 시군자원봉사단 운영
 - 사업비: 42,400천원

하.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

■ 목적

- 낙후 도서 중점개발로 도서민의 생활 안정 및 정주의욕 고취
-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기여

■ 세부 사업개요

- 대상: 6개 시·군 12도서, 14개 사업
- 사업비: 60억원(균특 42, 도비 9, 시군비:9)
- 주요사업: 다목적 복지관 건립, 진입도로 정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및 고용창출사업 우선 투자
- 소규모 분산투자 지양, 3억원 이상 사업 집중투자

가. 소도읍육성사업지원

■ 목적

- 생활기반 시설확충 등으로 삶의 질 향상
- 농촌 정주시설 기반조성으로 도시와 농촌간 격차 해소

■ 세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08년 - 2012년
- 대상: 3개읍(웅천읍, 연무읍, 광천읍)
- 총사업비: 읍 552억원(국비 150, 도비 15, 시군비 326, 민자 61),

2010년 예산 191억원(국비 36, 도비 3, 군비 139, 민자 13)

- 주요사업: 웅천 돌문화 석재공원조성사업 등 테마별 인프라 구축사업

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목적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역경기의 활성화

■ 세부 사업개요

- 사업비: 7,477,300천원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방식으로 효과 극대화
-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면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임
- 도내 태안군, 공주군 등에서 실시

2.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평가기준

- 자치행정국의 사업은 행정내부 운영을 위한 사업, 즉 대상인 내부고객인 공무원인 경우인 경우가 다수이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민 소통과 갈등조정을 위한 사업에 치중되어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된 성격을 가짐.
- 이런 자치행정국 사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자치행정사업의 평가기준을 제시해 보면, 크게 목적의 명확성, 중복유사성, 시급성, 지속필요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행정내부 사업이라는 자치행정국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면, 사업평가의 기준은 재원의 충분성의 측면보다는 사업 내용 자체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행정내부 사업은 재원의 제약으로 인한 문제점 보다는 불필요한 사업으로 조직내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임.

《자치행정국 사업의 평가기준》

- ① 목적의 명확성
- ② 중복 유사성
- ③ 지속필요성
- ④ 사업예산의 적절성

■ 목적의 명확성

- 해당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의도하는 성과가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함.
- 주요 평가지표는 성과지표의 존재 여부이며, 아울러 단기적-중기적-장

기적 산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 만약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목표를 구체화하고 성과지표를 설계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중복유사성

-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특히 행정내부 운영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치행정국의 사무의 경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다수 존재하게 되면, 사업의 성과보다 조직구성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재원의 중복투자의 문제도 야기함.

■ 지속필요성

- 해당 사업이 일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검토해야 함. 즉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말함.
- 지속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중단 시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사업예산의 적절성

- 예산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이 평가되어야 함.
- 먼저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전용을 통해 가용재원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나. 주요 사업의 평가

1) 목적의 명확성

- 공무원 격려 행정동우회 지원, 복지 및 후생복지 제도 내실 운영은 공무원의 사기관리를 통해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특히 이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합한마당 행사 및 취미

클럽의 지원, 철도이용 할인, 보육료 지원, 임대주택지원, 학자금 대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후생 목지 부담금 등은 타 시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에서도 내부 고객 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임.

- 정보공개 내실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는 행정정보의 전자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 도정자료 관리 및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작업은 특히 향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는 최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면서, 갈등관리 및 공무원의 갈등조정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임. 특히 교육연수나 협의체 운영, 세미나 운영 등은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업이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설계 및 교육에 치중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설치가 필요함.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명확히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도정 모니터 운영은 주민들의 정책체감도를 평가하고, 도정의 애로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 대민 접촉점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도정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함. 단, 그 운영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업성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정 모니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함.
- 공무원 장기훈련 및 상시학습 운영 및 직원능력개발 지원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임. 또한 동 사업의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다만, 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과 체계화에 노력해야 함.
- 도의새마을교육지원, 새마을단체육성지원, 비영리민간단체육성, 사회단체육성지원은 민간기관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도내 여러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의 형성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자원봉사활성화는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는 민간의 역량을 공공문제의 해

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봉사단의 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것임.

-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 소도읍육성사업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은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원임. 대부분이 국비와 매칭펀드 및 시군의 자체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지역간 형평성의 도모 및 장기적으로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임.

2) 중복유사성

- 도의새마을과에서 수행하는 각종 단체 지원금은 유사성이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들어,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비영리민간단체육성, 사회단체육성지원, 자원봉사 지원이 그것 임.
- 도의새마을과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육성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 등도 부분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속성이 있는 사업임. 따라서 이들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전개에서 각 사업들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3) 지속필요성

- 내부 조직운영 측면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필요성이 높으며, 그 외 정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음.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에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매년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공무원 격려 행정동우회 지원, 복지 및 후생복지 제도 내실 운영, 공무원 장기훈련 및 상시학습 운영 및 직원능력개발 지원, 정보공개 내실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의 경우 내부 조직운영과 관련된 측면이 많아 매년 지속적인 예산의 배정이 필요함.
-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주민자치센터, 도정 모니터 운영, 도의새마을교육지원, 새마을단체육성지원, 비영리민간단체육성, 사회단체육성지원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 소도읍육성사업지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 사업은 정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지방정부의 사업계속 의지 및 정책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 혹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임.

4) 사업예산의 적절성

■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세입이 9,989억원, 세출이 3,134억원으로 세출예산에 비해 세입예산이 많음. 이는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국 내 세무회계과의 기능에 기인한 것임.

■ 먼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전체 충남도청 일반회계 예산(3조 3,427억원)의 9.38%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총 197억 5천 76만 7천원이 감소함. 이런 예산의 감소분은 2010년의 경우 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해 배정된 예산이 86억 4천 893만 5천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사업예산의 감소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전체적으로는 정책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59억 2,666만 8천원이 감소함.
-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도정자료관리, 상생협력갈등관리, 공무원능력개발 지원, 도의새마을교육지원,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민간인 비영리단체육성, 도서종합개발사업지원사업임.
 - 먼저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들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수요가 있는 것임. 특히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은 직원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향후 이보다 더 직원복지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려야 함.
 - 또한 도정자료 관리 역시 도정의 행정자료 구축의 선진화와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확충이 필요한 영역임.
 - 상생협력갈등관리는 최근들어 지역 내 갈등관리가 핵심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전문가의 양성 및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확충의 타당성이 높음.
 - 공무원능력개발지원 역시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 그 외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새마을 단체 지원, 비영리단체육성 역시 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도내 주요 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큼.
 - 따라서,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예산수준이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 할 수 없음. 자치행정국의 사업은 조직과 인사 및 지역주요 단체의 육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일뿐더러, 조직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예산이 감소한 사업은 공무원경력 및 행정동우회 지원, 직원자녀보육비지원,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공무원국내교육훈련, 공무원장기교육훈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 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시군자원봉사단 운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운영임.

- 한편 예산이 감소한 사업을 검토해 보면, 모두가 조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이들 사업에 대한 축소는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를 야기할 수 있음.

- 즉, 공무원경력 및 행정동우회 지원, 직원자녀보육비지원, 공무원후생복지부담금의 감소는 내부고객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감축을 의미하며,

-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공무원국내교육훈련, 공무원장기교육훈련,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의 축소는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고,

- 자원봉사보험료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 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도내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을 위해 확충이 필요한 예산이며,

- 시군자원봉사단 운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운영 역시 시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

- 전체적으로 2010년의 충청남도의 예산은 2009년에 비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1.54%, 특별회계 기준으로 3.23%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9.38%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오히려 5.93%가 감소했으며, 더구나 정책사업 부분의 예산은 359억원이나 감소한 상태임. 이는 2010년 충청남도의 예산이 조직운영과 예산기능을 수행하는 자치행정국의 기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축소시키고, 그 외 다양한 외부사업에 예산을 집중시킨 결과로 보임.

- 결론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국의 예산규모는 그 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국 예산 중 가용재원산출가능성은 현재 수준에서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자치행정국의 사업 중 중복이나 유사한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운영에 있

어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낭비요소의 제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주요 사업의 평가결과

		목적의 명확성	중복유사성	지속가능성	예산의 적절성	
					예산의 충분성	가용재원산출 가능성
공무원격려 및 행정동우회 지원		○	×	○	×	×
복지 및 후생복지 제도 내실운영	맞춤형복 지제도운 영	○	×	○	×	×
	직원자녀 보육지원 비	○	×	○	×	×
	공무원후 생복지분 담금	○	×	○	×	×
정보공개 내실화 및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도정자료 관리	○	×	○	×	×
	주요기록 물 전자화	○	×	○	×	×
상생협력갈등관리		○	×	△	×	×
주민자치센터 설치		○	×	△	×	×
도정모니터 운영		○	×	△	×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	×	○	×	×
상시학습 및 직원능력 개발	공무원 국내교육 훈련	○	×	○	×	×
	공무원능 력개발지 원	○	×	○	×	×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	○	△	×	×
새마을단체 육성지원		○	○	△	×	×
비영리민간단체육성		○	○	△	×	×
사회단체 육성지원		○	○	△	×	×
자원봉사 활성화		○	○	△	×	×
도서종합개발사업		○	△	△	×	×
소도읍육성사업		○	△	△	×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	△	×	×

3. 예산 운용 방향

가. 예산 운용 방향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 자치행정국의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가 되고, 그런 사업설계에 기반 해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반 해, 2011년 자치행정국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은 예산확충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임

■ 예산규모의 확충

- 자치행정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내부고객에 대한 조직 및 인사 운영, 및 세무회계의 관리가 주요 사업인 자치행정국의 사업의 경우,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타 실국의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가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자치행정국에서 수행하는 조직, 인사, 예산 업무야 말로 충청남도 행정을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예산운용의 효율성 확보

- 자치행정국의 사업이 그 목적이 명확하다고 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해 2011년의 예산을 위해서는 2010년에 수행된 사업에 대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검토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함.

■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

- 자치행정국의 사업을 한정된 예산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함. 특히 중복유사하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을 검토해서 사업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충남 자치행정 분야 전략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사업

3. 사업 및 예산조정안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지속적인 대민, 대공무원 소통을 통한 선진 행정지원체계 구축

-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지방자치 기반의 조성
-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지역균형개발 촉진
-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 활기찬 공직문화의 조성

나. 추진 전략

■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지방자치 기반조성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과제의 개발
-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의 활성화
- 상생협력,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과 균형개발 촉진

-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소득증대 및 도시기반 육성 사업 지속

■ 자주재원의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화 추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 활기찬 공직문화의 조성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기준의 재정립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과제의 개발

■ 사업의 필요성

- 21세기는 지방분권의 시대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과제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충청남도가 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개요

- 지방분권 과제의 개발 및 평가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권과제의 개발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권과제의 평가
 - 개발/평가된 분권과제에 대한 세미나 및 포럼 운영
- 지역분권 과제의 실험적 적용과 평가
- 기대효과
 - 충청남도의 브랜드 정체성 강화
 - 충청남도 지방자치 선진화의 기반

■ 소요예산

- 3억원(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참고하여 최소치를 추정한 것임)
 - 강원도의 경우, 이를 위해 3억5천만원(2010년 기준)을 배정하고 있음.

나. 도민과의 열린 대화마당의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대민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도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소통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정책 프로그램은 집행과정에서 갈등 발생이 줄어들어서 정책집행 비용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음.
- 도민과의 지속적인 공감대의 형성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구축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음.

■ 개요

- 16개 시·군 방문 및 사회단체 별 직능별 폭넓은 대화의 장 마련
 - 도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도민 생활 현장 체험을 통한 행정 수요 파악
 - 각종 복지시설 혹은 오지 및 도서지방과 같은 사회적·지리적 소외지역의 방문 및 대화 활성화
 - 기업인, 문화예술인, 농업인, 주요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단체와의 대화 및 도정 모니터링 결과를 청취하여 도정에 반영
 - 이통장과의 대화 및 사기진작 방안의 설계
- 온라인 도정 참여 및 의견제시 프로그램의 활성화
- 기대효과
 - 각계 각층의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참여행정 및 신뢰행정을 구현
 - 행정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기회로 삼음

■ 소요예산

- 1억원(현 예산수준을 고려한 최소화 한 비용)

다. 상생협력·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고도화

■ 사업의 필요성

- 갈등해소는 공공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음.
- 공공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집단과 수혜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면 정책의 성공여부를 떠나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 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고도화 하는 것은 이런 공공정책을 둔 갈등양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반임.

■ 개요

- 상생협력 갈등관리 플러스 충남 정책 포럼 운영의 고도화
 - － 연구조사, 교육연수, 현장지원체계의 제도화
 - －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내용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교육 분야 강화 필요
 - － 공무원을 갈등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
 - － 도내 각 지역별 포럼운영을 활성화
- 기대효과
 - － 공공정책이 야기하는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
 -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 소요예산

- 1억원(2010년 예산과 동일수준)

라. 비영리 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 사업의 필요성

- 비영리 단체 및 민간의 사회단체 지원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중복·유사성이 높아서 중복수혜 및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 정부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유능하고 건실한 사회단체의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면에서 이들 사업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의 도정에 대한 비판적이고 발전적 견해 표명 기능이 저해될 수 있음.
- 따라서, 도내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이들 단체의 원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요

- 비영리 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조정

- 각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유사성을 평가
(개별 프로그램의 필요성, 중복 및 유사성, 성과 및 효과 중심)
- 각 지원 프로그램의 조정을 통해 필요한 지원은 확대함과 동시에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효과에 의문이 있는 중복·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계
- 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각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효과의 제고

■ 소요예산

- 3천 만원(최소 용역비용 + 정책 세미나 비용)

마.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활성화

■ 사업의 필요성

- 정부만으로는 사회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음.
- 자원봉사는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 혹은 정부만으로는 성공적인 집행이 어려운 영역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임.

■ 개요

- 찾아가는 충남사랑 자원봉사의 날 운영 활성화
(도내 오지마을 및 자원봉사 수요지역 방문을 통해 무료진료, 이미용, 가전제품 수리, 마을 환경정비 등 실시)
- 자원봉사 영역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확대
- 자원봉사자의 확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207천명의 현 상황에서 이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
- 자원봉사단,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 소요예산

- 12억(2010년 수준 + 자원봉사 수요 파악 및 평가)

바.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소득증대 및 도시기반 육성 사업 지속

■ 사업의 필요성

-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 소득증대 및 도시기반의 육성은 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
- 마을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화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개요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소득증대 및 도시기반 육성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속(2008 - 2012)
(웅천읍, 광천읍, 연무읍을 대상으로 공원 건립 등)
 - 도서종합개발 사업 지속
(다목적 복지관의 건설, 진입도로의 정비 등)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속
(마을별 특성에 맞는 숙원사업을 해소)
- 기대효과
 - 낙후도서 및 낙후지역의 개발로 해당 지역의 생활 안정 및 정주의욕 고취로 도·농간, 지역 간 격차의 해소
 -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기여

■ 소요예산

- 200억(지역의 수요를 고려한다면, 2009년의 220억에는 미치지 못해도, 2010년의 17억 수준보다는 많아야 함)

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확충

■ 사업의 필요성

-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8.1%(2009년 12월기준)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0위로 취약한 실정임.
- 충청남도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필요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은 이를 위한 토대임.

■ 개요

- 체납세금 징수활동, 성실납세 법인 인센티브, 세외수입 요율 합리화, 세원 확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 체납세금 징수활동의 전개
(체납자의 파악 및 이들의 납세능력 검토, 공매대상 부동산 선별 등)
 - － 성실납세 인센티브의 제공
(성실 납세 법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및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 － 세외수입 요율의 합리화
(장기간 미조정 된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조정,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
 - － 세원 확대
(새로운 세원의 발굴을 통해 세입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
- 기대효과
 - － 도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
 -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의 조성, 조세정의의 실현

■ 소요예산

- 5천만원(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리화를 위한 연구 + 세미나 등)

아. 효율적 재산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추진

■ 사업의 필요성

- 효율적 재산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도의 재정능력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음.

■ 개요

- 도청이전에 따른 대전권 소재 재산 관리 계획 마련 외 재산관리계획 마련
 - 도청부지 등 20필지(건물 48동) 50천m², 975억원 관리
(매각가능: 17필지(건물 46동), 45천m²(도 본청, 관사, 사업소))
(보존재산: 3필지(건물 2동), 5천m², 99억원(충남학사, 농특산물 판매장))
 - 도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 취득
- 기대효과
 - 재산관리를 통한 도 재산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 소요예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리화 방안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 비용 최소화

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기준 재정립

■ 사업의 필요성

- 공정한 인사는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로 그 핵심에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상시스템의 구축이 있으며, 본 사업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조직구성원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몰입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이것은 능력과 성과를 도외시한 인사시스템의 운영은 활기찬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됨.
- 공무원 인사시스템은 연공서열에 기초한 계급제적 요소를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요

- 인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세미나 실시
 - 기존의 인사시스템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
 -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인사기준 설계
 - 인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실시
 - 타 시도 및 중앙정부의 인사시스템 개선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연구
- 기대효과
 - 개선된 인사시스템의 구축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
 -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직무수행 동기의 활성화

■ 소요예산

- 1억원(인사기준 마련 및 평가 및 세미나 비용)

차.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의 확대

■ 사업의 필요성

- 공직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이의 적절한 반영이 전제되어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임용의 활성화는 공공부문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배려를 선도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현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직에의 임용기회가 열려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에, 도지사 공약을 통해 제시된 사업이기도 함.

■ 개요

- 사회적 약자 임용 확대 방안 마련
 - 임용가능 직위 및 다양한 임용방법의 검토
 - 임용된 사회적 약자의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 타 시도의 현황에 대한 스터디

- 기대효과
 - 공직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솔선수범
 - 사회적 약자에 희망을 주는 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제고
 - 소외된 정책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제화 함

■ 소요예산

- 인사기준 재정립 방안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 비용 최소화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가. 사업 및 예산조정안

■ 자치행정국의 사업 조정안

- 자치행정국의 사업은 행정 내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축소 및 폐지될만한 사업은 없으며, 이미 밝힌 것처럼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권고함.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과제의 개발
 -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기준의 재정립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 확대

■ 자치행정국의 예산 조정안

- 자치행정국의 예산은 기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단, 기 제시한 4개의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소관부서	사업명	기존 예산액	추정 예산액	비고
자치행정국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분권과제 개발	0	3억원	신규
도의새마을과	비영리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프로그램 통합	0	3천만원	신규
총무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기준 재정립	0	1억원	신규
총무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임용의 확대	0		신규

제Ⅲ-2편 지방공무원교육원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주요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와 교육훈련 여건

1)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권한 강화에 따른 적극적 주민요구 수용

- 자율적 정책 수립과 주민의 적극적 요구 수용 필요성 증대
- 자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역량 확충 필요
- 자치단체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독창적 교육훈련 체계구축 필요

■ 정보자원의 부각과 이를 위한 인적자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증대

- 우수한 인재의 육성과 교육훈련의 성과는 조직의 성과와 직결
- 공무원교육훈련의 내용은 단순한 지식습득에서 자율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어야 함
 - －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시 되며 학습방법도 다양화되어야 함

■ 민간부문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개방요구에 능동적 대응 요구

- 국제경쟁사회에서 선진 정보와 기술습득의 필요성 증가
 - － 세계화 수준에 맞는 행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품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강화 요구
 - － 국제문화 속에서 커뮤니케이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제인으로서 자질 확보를 통한 세계경쟁질서에 적극적 대처 필요

■ 공공조직의 역할은 국가 및 사회관리를 위한 기획과 이해관계 조정기능으로 전환

- 공무원의 역할은 전문가 뿐 아니라 해당업무에 대한 책임 요구
- 공무원교육훈련은 유연한 사고와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창의력은 자율적인 학습조직문화와 상시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적이고 선택가능한 교육방법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교육훈련 여건

■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역량분석 및 경력개발제도 미흡

- 역량분석과 경력개발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함

■ 교육훈련담당기관간의 비효율적 업무체계

-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움
- 인적자원개발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
 - 일반직공무원들이 인적자원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초빙이 어려운 실정

■ 교육훈련에 대하여 단기적 비용측면에서 접근

- 교육훈련에 대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창출 기대
 -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의 특성상 장기적인 투자 필요

나. 공무원교육훈련의 패러다임 변화

■ 개별적 직무기능훈련 중심에서 조직의 핵심역량 제고 중심으로 전환

- 분절적인 개별적 직무기능훈련 중심에서 탈피
 - 조직의 비전 및 전략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보유토록 함

■ 교육기관 중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체제로 전환

- 일방적인 지식의 주입이나 전달과정에서 스스로 배우고 습득하는 자기주도적 학습과정으로 관점이 변화함

-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학습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능력개발을 유도하고 있음

■ 이론지식 중심에서 가치함양 및 행태변화를 통한 현장실천능력을 중시

- 교육을 통해 조직의 가치를 함양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마인드와 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위주에서 다양한 학습시스템으로 확대

- 교육훈련의 개념을 능력개발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 다양하게 해석함
 - 이를 위해 조직내에서 직원들의 학습프로세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는데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2. 교육운영 현황 및 계획

가. 2009년 교육운영 현황

1) 총괄

■ 2009년 교육원은 총 103개 과정에 228회 교육을 통해 20,01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대비 110%의 교육인원 목표를 달성하였음

- 집합교육은 70개 과정에 125회의 교육을 통해 총 5,37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기본교육은 1개 과정에 6회 교육을 통해 44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전문교육은 5개 역량교육에 중점을 두고 64개 과정에 109회 교육을 통해 4,55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장기교육은 1개 과정에 1회 교육을 통해 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기타교육은 4개 과정에 8회 교육을 통해 30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사이버교육은 33개 과정에 103회 교육을 통해 14,63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자체교육은 23개 과정에 83회 교육을 통해 10,74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 위탁교육은 10개 과정에 10회 교육을 통해 3,89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표 2-1〉 2009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 현황

과 정 별		계 획			실 적			비 율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총 계		98	219	18,195	103	228	20,012	110%
전 문 교 육	소 계	68	121	5,195	70	125	5,375	103%
	기본교육	1	7	420	1	7	447	106
	계	64	109	4,515	64	109	4,559	101
	핵심역량	7	8	365	7	8	296	81
	공통역량	13	22	940	13	22	1,070	114
	직무역량	35	51	2,157	35	51	2,118	98
	언어역량	5	7	213	5	7	194	91
	정보화역량	4	21	840	4	21	881	105
	장기교육	1	1	60	1	1	60	100
	기타교육	2	4	200	4	8	309	155
사 이 보 육	소 계	30	98	13,000	33	103	14,637	113%
	자체교육	20	78	10,000	23	83	10,741	107
	위탁교육	10	20	3,000	10	20	3,896	130

2) 국·도정 시책 관련 교육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 정규과정 개설 · 운영
 - － 계획 : 1개 과정 4회 180명 / 실적 : 4회 299명
- 교양과목 운영
 - － 계획 : 44개 과정 79회 3,845명 / 실적 : 42개 과정 80회 3,518명

■ 4대강 살리기 관련 교육

- 교양과목 운영
 - － 계획 : 4개 과정 5회 550명 / 4개 과정 10회 577명

■ FTA 추진 교육

- 교양과목 운영
 - － 계획 : 1개 과정 7회 420명 / 1개 과정 7회 447명

■ 부패방지교육

- 전 교양과정에 교양과목으로 운영
 - 계획 : 62개 과정 113회 4,830명 / 67개 과정 88회 3,941명

■ 의회운영과정

- 정규과정 개설 · 운영
 - 계획 : 1개 과정 1회 32명 / 실적 : 1회 32명

나. 2010년 교육운영 계획

1) 주요 운영계획

■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총 113과정 228회 17,570명을 교육할 계획임

- 집합교육은 73과정 128회 4,570명으로 5과정 7회 증가하였으며, 교육 인원은 625명이 감소하였음

	2010년도		2009년도 대비
기본교육	1과정 6회 240명	→	1회 180명(감)
전문교육	68과정 117회 4,145명	→	4과정 8회(증) 370명(감)
장기교육	1과정 1회 60명	→	변경 없음
기타교육	3과정 4회 125명	→	1과정 75명(감)

- 사이버교육은 상시학습 정착을 위해 40과정 100회 13,000명 계획
- 09 교육과정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수요가 낮고 유사·중복 과정 통·폐합, 폐지, 역량강화 및 선호과정 신설 또는 확대

- ❖ 집합교육 : ' 09. 68과정 5,195명 → ' 10. 73과정 4,570명 (625명 감)

 - 신설 : 15과정(행사성 청렴아카데미, 지적촉량실무 등)
 - 폐지 : 5과정(자기계발, 기록물관리 등)
 - 통합 : 8과정(유사·중복 19과정 → 8과정 (△11과정))
 - 확대 : 14과정(6과정 → 14과정 (증8과정))
 - 격년 : 2과정(보육실무, 축산경영 (△2과정))

⇒ 15과정 신설 / 5과정 폐지 / 8과정 통합 / 14과정 확대 / 2과정 격년(2011)

■ **신설과정은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직무능력 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신설**

－ 맹사성 청림아카데미, 지적측량실무, 가족사랑 등 15과정 / 565명 증가

■ **폐지과정은 교육수요가 낮고, 타 교육기관과 중복 교육**

－ 자기계발, 기록물관리,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등 5과정 / 447명 감소

■ **통합과정은 교육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과정 통합**

－ 전략기획가양성, 정책기획, 법무행정 등 19과정(1,170명)을 8과정 / 535명 (635명 감소)

■ **확대과정은 교육 선호도가 높은 과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엑셀 등 6과정(820명)에서 14과정 / 1,160명 (360명 증가)

■ **격년과정은 교육수요가 한정적으로 격년제로 운영**

－ 보육실무, 축산경영 등 2과정 70명 감소 (2011년도 편성)

분 야 별	2009년 계획			2010년 계획		
총 계	98과정	219회	18,195명	113과정	228회	17,570명
기 본 교 육	1과정	7회	420명	1과정	6회	240명
전 문 교 육	64과정	109회	4,515명	68과정	117회	4,145명
장 기 교 육	1과정	1회	60명	1과정	1회	60명
기 타 교 육	2과정	4회	200명	3과정	4회	125명
사이버교육	30과정	98회	13,000명	40과정	100회	13,000명

2) 중점 추진 사항

- 국도정 주요시책의 올바른 이해 및 공직가치관 확립
 - － 국가비전 달성과 경제난 극복을 뒷받침 할 인재양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도, 시·군 수요조사 결과 반영, 실무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사이버교육 다양화
 - － 사이버 교육 확대(40과정) 및 이수기준 강화 (4주이상, 평가제 도입)

-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과정 편성
 - 사회, 경제, 환경 등 공직자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청렴 교육, 정보화 교육 확대, 저탄소 녹색 성장 등 다양한 교육 실시

3) 교육운영 계획의 변화

- 2010년 새로운 신설된 과정은 15개 과정이며 기존 5개 과정은 폐지되었음
 - 유사중복으로 인하여 기존 19개 과정을 8개 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

〈표 2-2〉 2010년 신설·폐지·통합과정

신설과정명(15과정)	폐지과정명 (5과정)	통합과정명 (8과정)	
1.지적측량실무과정	1.멘토링과정	1.전략기획리더양성과정	
2.지방세외수입실무과정		2.커뮤니케이터양성과정	
3.도로현장관리과정			
4.이미지메이킹과정	2.자기계발과정		3.기업경영마인드향상과정
5.의전·행사기획과정		3.기록물관리과정	4.소송직무과정
6.응급구호과정			4.보건진료원보수교육과정
7.가족사랑과정	5.유비쿼터스과정		
8.어버이역할향상과정(남)		7.관광축제기획과정	
9.어버이역할향상과정(여)			
10.HRD과정			
11.기업사랑이야기과정			
12.백제역사문화아카데미과정			
13.음악과 생활과정			
14.친환경농업과정			
15.맹사성청렴아카데미과정			

4) 기관별 교육훈련인원 선발계획¹⁾

- 2010년 집합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인원은 총 4,570명으로 도가 549명이며 시·군이 4,021명임
 - 기본교육의 경우 신규과정교육으로 총 240명이며 도가 18명, 시·군이 222명임
 - 전문교육의 경우 총 4,145명으로 도가 411명 시·군이 3,734명임

1)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 중 집합교육 73과정 128회에 대한 선발계획 인원 임

- 장기과정의 경우 정예공무원과정으로 총 60명이며 도가 13명, 시·군이 47명임
- 기타과정은 미래설계, 도로보수, 보조금 과정으로 총 125명이며 도가 107명, 시·군이 18명임

〈표 2-3〉 2010년 교육인원 선발계획

구 분	총 계	기본 교육	전 문 교 육						장기 과정	기타 과정
		신규 과정	소계	핵심 역량	공통 역량	직무 역량	언어 역량	정보화 역량	정 예 공무원	미래설계 도로보수 보조금
계	4,570	240	4,145	135	1,265	1,345	360	1,040	60	125
도	549	18	411	18	124	128	37	104	13	107
소 계	4,021	222	3,734	117	1,141	1,217	323	936	47	18
천안	316	17	294	6	97	80	33	78	4	1
공주	317	12	299	9	98	89	25	78	4	2
보령	275	9	263	9	86	89	24	55	3	0
아산	350	21	325	12	101	108	26	78	3	1
서산	274	12	259	10	76	95	22	56	3	0
논산	319	19	294	9	92	91	24	78	4	2
계룡	149	8	136	2	40	39	10	45	2	3
금산	205	18	183	3	51	63	14	52	2	2
연기	225	8	211	7	61	74	17	52	3	3
부여	204	12	189	4	60	56	17	52	3	0
서천	226	9	215	5	66	71	21	52	2	0
청양	196	20	174	6	49	53	14	52	2	0
홍성	263	18	242	9	73	87	21	52	3	0
예산	228	12	212	8	65	70	17	52	3	1
태안	224	3	217	10	61	73	21	52	3	1
당진	250	24	221	8	65	79	17	52	3	12
시·군 평균 : 4,021명 (88.0%) / 市 평균 2,000명(43.8%), 郡 평균 2,021명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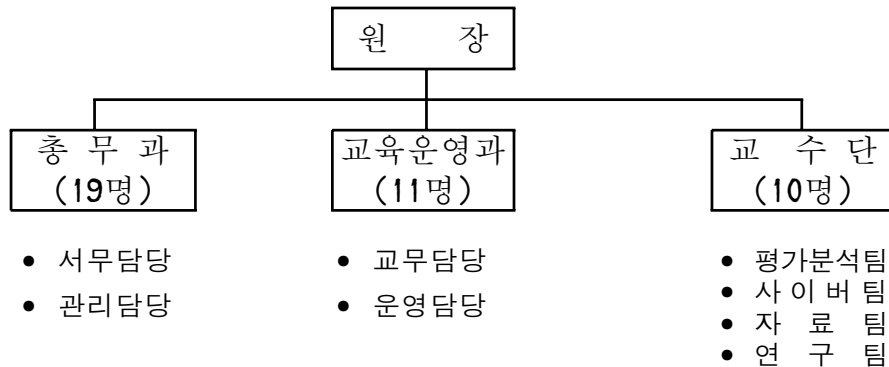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조직구성 및 예산현황

1) 조직구성

■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은 총무과, 교육운영과, 교수단 등 2과 1단 4담당 4팀으로 조직되어 40명이 근무하고 있음

- 총무과는 19명으로 서무담당과 관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음
- 교육운영과는 11명으로 교무담당과 운영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음
- 교수단은 10명으로 평가분석팀, 사이버팀, 자료팀, 연구팀으로 조직되어 있음



구분	계	일 반 직						계 약 직				별정	기능	무 기 계 약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가호	나호	다호	라호			
총계	정	40	1	3	7	6	4	2	3		1	1	12	
	현	40	1	3	8	6	4	2	1	1	1	1	12	7
		-	-	-	+1	-	-	-	△2	+1	△1	+1	-	
총무	정	19	1	1	2	2	3	1					9	
	현	19	1	1	2	2	3	1					9	7
교육 운영	정	21		2	5	4	1	1	3		1	1	3	
	현	12		1	2	2	1		1	1		1	2	
교수단	정													
	현	9		1	4	2		1					1	

2) 2010년 예산현황

■ 세입은 141,300천원이며 세출은 4,029,372천원 임

- 세입예산은
 - 시설사용료 : 1,300천원
 - 공무원 위탁교육비 : 140,000천원(정예공무원과정 위탁교육비)
- 세출예산은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총무과) : 394,856천원(9.8%)
 - 교육운영 내실화(교육운영과) : 1,049,490천원(26.0%)
 - 행정운영경비(인건비) : 2,585,026천원(64.2%)

나. 주요 기능 및 부서별 업무

1) 주요기능

- 도, 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위탁교육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

2) 부서별 업무

■ 총무과

- 원내 업무 종합계획수립 · 조정총괄
- 인사 · 복무 · 공인관리, 보안업무
- 원내 업무 종합계획수립 · 조정총괄
- 회계 · 지출업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 업무보고, 기획예산 및 의회관련 업무

- 직장방호 및 민방위대 운영
- 청사 및 교육시설관리, 차량유지관리
- 재산관리, 생활관 및 교육용품관리
- 연수생 후생관리, 세탁소 운영

■ 교육운영과

- 학적관리, 교육생 선발, 성적 통보
- 분임편성, 교육생 규율 및 원내 생활지도
-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 교육훈련 행사주관, 교육생 등록
- 공무원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운영
- 교육운영계획 수립 시행
- 교과편성 및 강사섭외, 현장학습 운영
- 원내교수 교과목 지정
- 교과편성심의회 운영 및 진행
- 교재집필 및 편찬 및 교육기자재 관리

■ 교수단

- 교육평가계획 수립 시행
- 분임토의 과제선정, 교육성과 설문분석
- 평가결과 종합확정(실습·토의·근태)
-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 교육원홈페이지관리 및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 전산교육장 운영 관리
- 교육자료 연구, 사료실 및 도서실 운영, 교육 발전 연구
- 영어강의
- 어학실 관리

제2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2010. 6. 30. 현재)

1) 교육훈련 총괄

- 2010년 6월 30일 기준 93개 과정 137회 교육을 통해 13,92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집합교육은 48개 과정에 72회 교육을 통해 2,57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 사이버교육은 45개과정에 65회 교육을 통해 11,34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음

〈표 2-4〉 2010년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2010. 6. 30. 현재)

분 야 별	계 획			실 적			비 율
계	113과정	228회	17,570명	93과정	137회	13,921명	79.2%
집합교육	73과정	128회	4,570명	48과정	72회	2,577명	56.4%
기본교육	1과정	6회	240명	1과정	4회	148명	61.7%
전문교육	68과정	117회	4,145명	44과정	64회	2,268명	54.7%
장기교육	1과정	1회	60명	1과정	1회	60명	50.0%
기타교육	3과정	4회	125명	2과정	3회	101명	80.8%
사이버교육	40과정	100회	13,000명	45과정	65회	11,344명	87.3%

2) 기본교육 (신규임용과정)

■ 기본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 및 사명감 고취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실무지식 습득 등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임

-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기수별 인원 최소화(60 → 40명)
- 호국보훈정신 고취를 위한 현충원 참배 정례화
- 극기훈련을 통한 위기극복 능력 배양(1박 2일)
-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전개(인근 동·식물원 등)

3) 전문교육

■ 전문교육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및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임

- 국내·외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및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기술·지식 습득 및 운용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 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
 - 관리자의 창의력 개발을 위한 핵심역량과정 운영
 - － 전략기획리더양성, 미래예측분석, 조직혁신역량, 커뮤니케이터양성과정 등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
 - － 의전·행사기획, 친환경농업, 지적측량실무, 토목실무과정 등
- ② 국내·외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충남의 문화와 역사의 정확한 이해와 자긍심 고취
 - － 충남바로알기, 충남문화이해, 백제역사문화아카데미과정 등
 - 외국문화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개방적인 공직자 양성
 - － 글로벌문화체험, 베트남문화이해, 다문화사회이해과정 등
- ③ 수준에 맞는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
 -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의 초급 및 중급과정 운영, 실무활용 제고
 - 초보자를 위한 기초과정, 대화가 가능한 회화과정 운영
 - 일본어 프리젠테이션 경연대회 실시
 - 현지 어학능력 배양과 문화체험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실시

4) 장기교육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 인성교육 및 자기계발을 통한 초급관리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활용 가능한 외국어 능력배양 등 실용중심의 교육을 운영함

- ① 초급관리자로서의 직무역량 강화
 - 학습효과 거양을 위해 분반 운영 : 자치행정·국제통상반

- 성공·실패사례 발표 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
 - 시·군 업무추진 과정 중 실제 경험한 사례 등 발표
 - 도내 현안사업과 연계한 연구과제 지정·운영
 - 道 및 시·군 현안사업 파악, 개인별 연구과제 지정(47과제)
 -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강화
 - 자격증 취득 위주에서 탈피하여 반복·집중적으로 교육
- ② 올바른 공직윤리 함양 및 심성강화
-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및 장애우들과 함께 현장학습 전개
 - 정서함양 및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1인 2종목 취미활동 : 음악(사물놀이 등), 체육(수영 등)
 - 주기적 체력 측정을 통한 건강관리 능력 배양(년 4회)
 - 혈압, 혈당, 체중 등 측정, 개별 통지

5) 상시학습체제 정착을 위한 사이버 교육

■ 공무원의 교육 의무 이수시간 상향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 분야별 교육과정 운영
 - 직무교육 : 예산실무, 친환경농업, 행정법실무의 이해 등
 - 자기계발 : 외국어, 자격증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등
 - 소양교육 : 재테크 및 금융지식,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자의 길 등

6)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편안한 합숙생활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노후시설 개선 및 주변환경 관리

- ① 노후시설 개선 사업 완공 : 중앙 철구조물 앵커 공사 등 5종
- ② 편안한 합숙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관 개선
 - 텔레비전 설치(32대) : 생활관 28대, 휴게실 등 4대
 - 난방시설 팬코일 교체 : 에너지 효율 극대화 및 쾌적한 난방 제공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1)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

■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공무원교육원예산은 4,029,372(천원)으로 전년대비 3.4%가 감소하였음
 - 행정운영비가 전체 예산 중 약 64.2%를 차지한 2,585,026(천원)이었으며 정책사업비가 약 35.8%인 1,444,346(천원)으로 나타났음
 -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정책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약 4.75%가 감소하여 행정운영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음
- 공무원교육원의 예산 중 인력운영비가 약 58.7%인 2,365,804(천원)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교육운영내실화를 위한 비용이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무원교육원예산의 약 84.7%를 인력운영비와 교육운영내실화 비용이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비용과 기본경비 항목은 상승하였음
 - 교육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비용은 전년대비 약 6.31% 상승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약 10.44% 상승하였음
 - 특히,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전년대비 25.4%가 감소한 394,856(천원)으로 나타났음

■ 현재 공무원교육원예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미래지향적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함

•

〈표 2-5〉 공무원교육원 예산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2008	2009	2010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4,811,258	4,172,746	4,029,372	△143,374	△3.4
정책사업비	2,062,306	1,516,435	1,444,346	△72,089	△4.75
행정운영비	2,748,952	2,656,311	2,585,026	△71,285	△2.68
일반공공행정	2,062,306	1,516,435	1,444,346	△72,089	△4.75
일반행정	2,062,306	1,516,435	1,444,346	△72,089	△4.75
공무원교육원운영	2,062,306	1,516,435	1,444,346	△72,089	△4.75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1,048,823	529,265	394,856	△134,409	△25.4
교육운영 내실화	1,013,483	987,170	1,049,490	62,320	6.31
기타	2,748,952	2,656,311	2,585,026	△71,285	△2.68
기타	2,748,952	2,656,311	2,585,026	△71,285	△2.68
행정운영경비(공무원교육원)	2,748,952	2,656,311	2,585,026	△71,285	△2.68
인력운영비	2,570,440	2,457,809	2,365,804	△92,005	△3.74
기본경비	178,512	198,502	219,222	20,720	10.44

2) 자치행정과 공무원교육훈련 예산

■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교육훈련 예산은 전년대비 약 4.02%가 감소한 2,888,064(천원) 임

- 전체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능력개발지원비의 경우 전년대비 86.9%가 증가한 430,160(천원) 임
- 그러나, 공무원 국내교육훈련비용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전년대비 14.5%가 감소하였음

〈표 2-6〉 자치행정과 소관 공무원교육훈련 예산

(단위 : 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2008	2009	2010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806,560	3,009,206	2,888,064	△121,142	△4.02
공무원 능력개발 향상	2,806,560	3,009,206	2,888,064	△121,142	△4.02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2,095,600	2,073,404	1,773,404	△300,000	△14.5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480,000	685,642	684,500	△1,142	△0.17
공무원 능력개발지원	170,720	230,160	430,160	200,000	86.9
공무원 자체교육	40,240				
아학 및 정책연수	20,000				

나. 주요 사업의 사업비 분석

1) 공무원교육원

■ 교육운영내실화 사업비의 경우 공무원교육원 전체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음

- 기본교육과 사이버과정, 전문교육, 장기과정, 기타과정 등 교육실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20,000(천원) 증가한 885,000(천원) 임
- 자산취득비의 경우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을 위하여 전년대비 20,240(천원)이 증가한 23,840(천원)임
- 기타 업무추진비의 경우 2010년 3,000(천원)이 새로이 배정되었으며 포상금의 규모도 확대되어 40,850(천원) 임

〈표 2-7〉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내실화 사업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회계)	2009	2010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987,170	1,049,490	62,320	
교육운영 내실화	987,170	1,049,490	62,320	
교육과정 운영지원	904,450	952,690	48,240	
일반운영비	865,000	885,000	20,000	
업무추진비		3,000	3,000	
포상금	35,850	40,850	5,000	
자산취득비	3,600	23,840	20,240	
교육장비 확충	82,720	96,800	14,080	

2) 자치행정과 소관

■ 공무원 국내교육훈련의 경우 위탁교육비로 전년대비 300,000(천원)이 감소된 531,404(천원) 임

－ 이는 공무원 연수교육을 위한 여비와 장단기 위탁 국외연수비 20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무원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학자금 지원금으로 전년과 비슷한 684,642(천원) 임

－ 이에는 학자금 지원 및 국제화 여비 486,5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 공무원능력개발지원의 경우 스터디그룹 강사료, 전화외국어교육, 직장교육, 직원능력개발비, 교양도서 구입,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약한 실정임

제3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평가기준

■ 사업축소 가능성

- 현 예산분석의 목적이 사업축소를 통한 신규재원의 발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무원교육원의 주요 사업 중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법·제도적 운영, 계속사업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중복유사성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부서 또는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의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임

■ 정책효과

-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과연 정책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임

■ 경쟁력

- 타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경쟁력이 낮은 사업에 대한 축소 또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준임

나. 주요사업의 평가

- 공무원교육원의 예산은 2010년 기준 4,029,372(천원)이며 이 중 경상경비라 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2,585,026(천원)으로 거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정책사업비라 할 수 있는 실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도 대부분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액임

- 공무원교육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미래지향적 도정을 이끌어갈 공무원의 역량확보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어 오히려 도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공무원교육원이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무원교육원은 제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축소 또는 폐지 보다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결과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현재 보다 사업을 줄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들을 모색하고 운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의 감축을 통하여 줄일 수 있으나 이는 도청 전체의 조직운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예산 운용 방향

■ 특성화 교육훈련 방안 모색

- 현재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합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중심의 필요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화해야 함
 - 이는 집합교육방식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교육원만의 특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행정운영경비의 절감을 통한 교육예산 투입이 필요

- 현재 행정운영경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오히려, 교육비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및 절감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비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공무원교육원의 개방을 통한 예산확충

- 향후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고정 의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민간에게 개방하여 이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도정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제4장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분야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및 역량강화

-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교육 추진
- 개방형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나. 추진 전략

■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 지역 현안문제 해결능력 배양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직급별 리더십 및 조직관리 교육으로 전환

■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5년 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 공무원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 교육훈련과정의 D/B화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교육 추진

- 공무원 교육의 blended learning 전략 도입
- 교육훈련수요의 정확한 조사
- 교육훈련과정 선택제도 도입 및 기타교육과정 개선

■ 개방형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인프라 개선

- 민·관 연계 교육네트워크 구축
- 충청권 합동교육훈련체계 구축
- 교수요원의 안정적 확보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창의적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무원 경쟁력 및 역량강화

1) 지역 현안문제 해결능력 배양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업 필요성

-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역내부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내에 행정환경이 접하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실용적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능력증진이 필요함

■ 사업 내용

- 기존의 이론 중심의 강의식 실무교육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토의 및 토론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 교육을 통해 현장의 문제와 관련된 사전교육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합교육과 현장교육 병행
- 집합교육 대상자 선발시 사이버교육의 이수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보유한 자만을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하는 등 교육이수에 대한 별도의 평가과정 실시
- 현장의 문제선정 및 교육적정인원 선정방법은 각 시·군이 분기별 문제를 검토 선정 후 충남도청과 공무원교육원이 최종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 제시
- 해당 문제해결과 관련한 전문가 초청

■ 기대효과

- 실용적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지역 현안문제 해결 능력 향상
- 공무원의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 및 전문성 제고

2) 직급별 리더십 및 조직관리 교육으로 전환

■ 사업 필요성

- 충남 공무원교육이 직무교육에 치중하고, 이론위주의 강의식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훈련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직무교육의 과정을 조정하고 실제로 해당조직에서 각자의 집급에 맞는 리더십과 조직운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함

■ 사업내용

- 현재 시행중인 직무교육의 시수와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필수과정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직무교육의 내실화 도모
- 그 이후 여유 시수를 타 교육과정과 결합 조정하여 교육시수 마련
- 직급별 리더십 구분을 위해 각 시·군의 직급대표를 선정하여 직급별 필요한 리더십 덕목 조사(조사분석 주체는 충남공무원교육원)
- 리더십 덕목 조사를 바탕으로 리더십 및 조직관리 교재 개발

■ 기대효과

- 위계적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에 리더십 교육을 통해 조직원간의 원활한 소통 기대
- 조직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부서 역량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나. 중장기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1) 5년 단위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 사업 필요성

- 충남 및 각 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하는 공무원 역량이 필요한 실정이고, 공무원교육훈련계획이 단년도 계획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이 수시간의 늘어남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기본계획이 필요함

■ 개요

- 기본 방향은 공무원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최대한 부합되도록 설정
- 신규충원, 보직·퇴직의 수요를 반영하고, 1회성 혹은 단절적인 교육훈련이 아닌 중장기적인 교육생 관리 방안 마련
- 개인의 목표 및 적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고려하여 연차별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인사관리와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
- 공무원 개인의 관심영역과 경력관리 그리고 보직이동 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필요
- 1단계(1~2차년도)
 - 기존 교육훈련과정 검토·조정 및 신규교육훈련제도 발굴
 - 교육인원산정 및 교육수요분석 등
- 2단계(3~4차년도)
 - 1단계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 3단계(5차년도)
 - 1,2단계에서 발견된 문제점 해결 및 다음 1단계를 위한 피드백 수행
 - 인사관리연계성과 분석 및 예측 등

■ 기대효과

- 단발성 교육으로 저하된 교육훈련효과 제고
- 중장기적 교육훈련계획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훈련 가능
- 체계적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연계로 인한 적재적소에 인력배분 기대

2) 공무원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

■ 사업 필요성

- 현재 충남도에서는 교육훈련 이수 후에 강사 및 교육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이루어질 뿐,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중장기적 교육훈련기본계획수립을 위해,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함

■ 사업내용

- 평가방법은 교육훈련 직후 시험을 통한 방법, 교육훈련 전후에 대한 평가, 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자체평가, 관리자들에 의한 평가 등을 검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조정 및 피드백 활용
- 공무원교육원 자체평가와 외부 의뢰평가를 병행하여 대내외적 객관성 확보

■ 기대효과

- 중장기교육훈련계획에 활용하여 보다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교육훈련환경개선 기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인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의 신뢰도 제고

3) 교육훈련과정의 D/B화 추진

■ 사업 필요성

- 기존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과정의 관리가 다소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교육훈련 사업을 유형화하고 데이터를 디지털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

- 기존의 교육훈련과정 전반에 걸친 사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체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 데이터 수집
- 교육훈련과정을 유형화하여 관리하고, 신설 교육훈련프로그램 도입시에 유사·중복 여부를 판단
- 교육훈련 사업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지속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설정
- 중장기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개선에 연계하여 활용
- 행정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활용범위 극대화
- 교육훈련과정의 피드백에 필요한 각 종 데이터(교육인원, 교육대상, 교육평가자료 등) 수록

■ 기대효과

- 각 종 교육훈련사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평가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제고
- 다른 수행사업 혹은 제도도입시에 연계활용이 가능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객관적 근거제공
-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체계적인 공무원교육훈련 관리 가능

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교육 추진

1) 공무원 교육의 blended learning 전략 추진

■ 사업 필요성

- 일반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전통적인 면대면(face to face) 교육방식의 장점과 웹기반의 사이버 교육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blended learning 학습설계가 필요함

■ 사업내용

- 맞춤형 학습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교실훈련, 실시간 자기주도적 e-learning, 최신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적절히 조합
- 웹강의실에 콘텐츠, 수업자료 등을 제공하여 필요시 활용하고 면대면강의시 일반적인 강의가 아닌 조별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질의응답과 토론 과제제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교육생의 참여를 도모
- 강의실과 웹에서 학습커뮤니티 구축으로 온라인/오프라인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운영하여 시·군간 공무원의 교류확대와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 학습의지에 반해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교육생이나 복습을 원하는 교육생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다른 내용을 파일이나 동영상으로 만들어 웹에 게시
- 교육과정 신청부터 수료까지 효율적 학사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행정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하여 피교육생에게 예정된 교육일정 공지(e-mail 등)

■ 기대효과

-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한 교육으로 시·공간적 제약을 일정 부분 해소 가능
- 교육대상이 아닌 공무원도 필요하면 학습이 가능하여 잠재적 교육대상

확대로 교육훈련 효과 제고

- 학습커뮤니티 구축으로 타 시·군간의 교류확대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유 가능

2) 교육훈련수요의 정확한 조사

■ 사업 필요성

-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수요조사는 단순히 일정시기에 설문조사 또는 각 시·군에 제출을 의뢰하는 등 단순한 수요조사(참석 여부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직무분석을 통한 검토와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도 직원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의 관리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각 시·군별, 기관별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자료 마련
- 직무분석을 통해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각 시·군 및 각 기관별 필요 교육과정 조사
- 년 2회 정기적 수요조사를 실시(조사주체는 충청남도과 충남공무원교육원)하고 조사결과를 D/B화하여 정리
- 수요조사 내용
 - 과거 만족 및 불만족한 교육훈련과정 파악
 - 자기계발 및 조직발전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파악
 - 타 기관 교육훈련사업의 벤치마킹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등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과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공무원교육원 이미지 제고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 직무분석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각 시·군의 직무여건 파악 및 직무 여건 개선에 활용가능

3) 교육훈련과정 선택제도 도입 및 기타교육과정 개선

■ 사업 필요성

- 기존의 획일화되고 일방향적인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학습의지 저하와 맞춤형 교육훈련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며, 기타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살리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훈련과정 선택제도 도입 및 기타교육과정 개선으로 교육훈련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4항(기타교육은 기본교육훈련 및 전문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에 의거한 ‘기타교육’ 활성화
 - 기존 기타교육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과정 및 행정지원능력향상 등의 비 전문적 분야에 치우쳤음
 - 따라서 정책사례연구, 세미나 및 토론회, 포럼 및 학습동아리 등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개선하고 정책 및 실무사례를 분석하여 현실적 대안을 갖춘 개선방안 제시하는 교육훈련 방향 검토
- 자발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교육생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 자세로 전환 필요

■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구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능력 향상
-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직원간 유대강화 및 인식전환 가능

라. 개방형 교육훈련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인프라 개선

1) 민·관 연계 교육네트워크 구축

■ 사업 필요성

- 충남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민간기업체 연수원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열린 교육시스템을 지향하고 충남의 교육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업내용

- 민·관차원의 협력방안으로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학점을 인정하거나 학위 과정과 연계시켜 지역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민간교육기관과도 교류하여 기업체 직원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계

■ 기대효과

-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간 이해도 제고
- 내부에서 창출하기 어려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활용

2) 충청권 합동교육훈련체계 구축

■ 사업 필요성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간 특성화 교육과정의 경우 상호간 통합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훈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인접 시·도에 개방운영할 수 있는 충청권합동교육훈련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전국적 차원의 전면적인 교류보다는 충청권(충남-충북-대전)으로 범위를 정하여 내실화 도모
- 1년 1회 1개 과정 개설, 충청권의 각 교육원에서 10명 정도를 파견하여 각자 정보교환 및 인적 네트워크 확장기회로 활용
-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과정 개설→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 향후 교육훈련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유사·중복과정을 통합하고 역할 분담을 추진

■ 기대효과

- 유사·중복을 최소화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광역권 정책에 부응하는 맥락에서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 및 정책적응에 유리
- 충청권 교육훈련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기관간 유대관계 강화

3) 교수요원의 안정적 확보

■ 사업 필요성

- 충남은 교수요원의 절대적 부족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이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육관리자도 부족한 현실임. 따라서 관련 분야별 최고의 외부강사진과 내부 전문가 등 교수진 Pool을 구축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서비스 품질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분야별 전임강사 확보 방안 마련
- 단, 재정부담 가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전문가를 겸임

교수로 위촉하는 방안 검토

- 충남공무원교육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연구원의 전문인력을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강의뿐만 아니라 공동프로젝트 및 교육원에서 필요한 과정 및 그 교재 개발 등의 지원체제 구축
- 민간기업의 임원특강과 같이 교육수요자와 관련된 분야의 고위공직자들과 단체장 등을 내부강사로 활용
- 내부교수요원 및 운영인력의 순환보직제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를 의무화

■ 기대효과

- 안정적 교육훈련요원(교수요원)확보를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서비스 품질 확보
- 전문화 다양화되어가는 교육훈련환경에 능동적 대처 가능

제Ⅳ편 충남 경제산업·투자통상 연구보고서

제Ⅳ-1편. 충남 경제산업 분야

제Ⅳ-2편. 충남 투자통상 분야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조규만 중부대학교 박사과정

[차 례]

제Ⅳ-1편 충남 경제산업 분야 연구보고서	339
제1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일반현황	341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342
2. 일반 현황	345
가. 충남 경제산업 주요 개관	345
나. 충남 경제산업 분야의 문제점 도출	346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349
가. 기구 및 정원	349
나. 충남도청 경제산업국 주요 기능	352
제2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359
1. 추진사업 현황	360
가. 경제산업국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총괄)	360
나. 주요 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361
2. 사업비 분석	368
가. 예산 현황	368
나. 산하 부서별 사업비 분석	372
다. 산하 부서별 재원 유형별 사업비 분석	375
라.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390
제3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사업 평가	391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392
가. 평가기준	392
나. 경제 산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392
다. 전략산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401
라. 기업지원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405
마. 산업입지와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407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411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411
제4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전략 과제	415
1. 비전 및 전략	416
가. 비전 설정	416
나. 추진 전략	416
2. 전략별 추진사업	417

가. 충남 사회적 경제 발전 기반 구축	417
나. 지역 고용과 소득 창출	420
다. 지역 인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423
[참조 1] 일본 中小企業振興基本 條例	426
[참조 2] 도쿄도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안)	428
[참조 3] 일본 사례 - 농상공등 제휴 관련법	431
[참조 4] 일본 사례 -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법	432
[참조 5] 충남발전연구원 전략 연구 과제 제안	433
 제Ⅳ-2편 충남 투자통상 분야 연구보고서	435
 제1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일반현황	437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438
가. 대내외적 여건 일반	438
나. 수도권 규제 완화	438
다. 충남 산업 구조의 문제점	440
2. 일반 현황	443
가. 충남의 주력산업의 특징과 현황	443
나. 충남 산업의 발전 방향	444
다. 충남 수출입 현황	445
라. 충남 해외 교류단체 현황	446
마. 충남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447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449
가. 기구 및 정원	449
나. 충남도청 투자통상실 주요 기능	452
 제2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455
1. 추진사업 현황	456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456
나. 주요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457
다. 민선4기 투자유치 실적('06.7.~'10.6.) 및 평가 (투자통상실 내부자료)	457
라. 충남 지역 기업 요구 사항 분석	463
2. 사업비 분석	465
가. 예산 현황 : 2010년 총66,480백만원 (도 전체의 1.7%)	465
나. 산하부서별 사업비 분석	466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468
라.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472

제3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사업 평가	473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474
가. 평가기준	474
나. 투자통상실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474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487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487
 제4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전략 과제	491
1. 비전 및 전략	492
가. 비전 설정	492
나. 추진 전략	492
2. 전략별 추진사업	494
가. 대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공헌 조사 및 지역공헌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494
나. 유치 기업 토착화 지원을 위한 가칭 RASS 시스템 구축	495
다.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제 운영	496
 [참조] 他 시도와 충청남도 통상지원시스템 비교 (투자통상실 내부 자료)	498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안할 연구과제	501

[표 차례]

<표 1-1> 취업자수 추이	347
<표 1-2> 취업자수 추이	361
<표 1-3> 경제산업 분야 일반회계 담당 과별 2007~2010 년 예산 추이	362
<표 1-4> 경제산업분야 분야별 투자계획	365
<표 1-5> 경제산업분야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	365
<표 1-6>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10년 예산 재원별 현황	369
<표 1-7>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09년 예산 재원별 현황	370
<표 1-8>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375
<표 1-9>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 (2009-2010년 비교)	379
<표 1-10> 경제산업국 10억 이상 사업내역(2010년 예산 기준)	390
 <표 2-1>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내용	440
<표 2-2>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민간소비지출 (2007년 당해년가격기준)	441
<표 2-3> 민선 4기 중 산업단지 개발 현황	442
<표 2-4> 북부 4개 시군 VS 기타 12시군 경제력 비교	442
<표 2-5> 연도별 투자유치실적	457

<표 2-6> 시·군 지역별 투자유치실적	458
<표 2-7> 업종별 투자유치실적	458
<표 2-8> MOU 대비 투자, 도착금액 현황	459
<표 2-9> 외국기업 고용 및 납세현황	459
<표 2-10> 이전보조금 지원기업 고용 효과	460
<표 2-11>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2010년 재원별 예산 현황	466
<표 2-12>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	468
<표 2-13>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 (2009-2010년 비교)	469
<표 2-14> 투자통상실 10억 이상 사업내역(2010년 예산 기준)	472
<표 2-15> 민선 4기 중 외자유치 실적	478
<표 2-16> 민선 4기 중 업종별 유치건수 현황	478
<표 2-17> 연도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실적	480
<표 2-18> 충남의 연도별 유치기업 수	482
<표 2-19>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지표	483
<표 2-20> 조정안 예시	497
<표 2-21> '10년 시·도별 통상지원업무 추진현황	500

[그림 차례]

<그림 1-1>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346
<그림 1-2> 도내 지역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추이	347
<그림 1-3> 전년대비 수출 감소추이	348
<그림 1-4> 경제산업 분야 일반회계 예산 연도별 변화추이	362
<그림 1-5> 경제통상 분야 담당과별 2007~2009년 예산 변화추이	363
<그림 1-6> 2010년 경제산업국 예산	363
<그림 1-7> 2010년 투자통상실 예산	363
<그림 1-8> 경제산업분야 연도별 투자계획(단위:억원)	364
<그림 1-9> 경제산업분야 분야별 투자계획	365
<그림 1-10>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10년 산업·중소기업 예산 구성비	370
<그림 1-11>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09년 산업·중소기업 예산 구성비	371
<그림 1-12> 경제산업 분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중	371
<그림 2-1> 충남과 경기도의 입지기업 결정요인 비교	462
<그림 2-2>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463
<그림 2-3>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464
<그림 2-4>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464
<그림 2-5>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2010년 재원별 예산 구성비	466

제Ⅳ-1편 충남 경제산업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강조

-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지구 전체의 기후안정성이 약해지면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
 - － 환경위기가 국제적인 정치·안보 문제로 비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세계적 과제로 대두
 - － 전 세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분야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음
-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 현재 충남은 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집중 입주해 있는 관계로 16개 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음
 - － 충남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

■ 중국 경제의 부상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
 - －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
 - 우리나라 대외 무역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
 - －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호 경제의존도도 증대하면서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 중국경제의 성장 및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경제의존도 증대는 중국과 거리적으로 근접한 충남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필요성 증대

- “government 에서 governance 로” 라는 구호로 상징되듯 관료가 중심이 된 전통적 행정 대신, 시민단체 (NGO), 민간조직 등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의 필요성이 증대
 - － 정부 혼자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문제들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민간과 시민사회의 협력 필요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좋은 가버넌스 (good governance) 와 사회적 자본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됨

예)

- ① 고용정책 수립 시 기존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 ②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심의과정 참여
- ③ 중소기업 지원계획 수립과정 참여
- ④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과정 참여 등

■ '고용 없는 성장' 지속적 심화

- 충남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은 제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49.8%(08)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음
 - 제조업이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임금상승 및 설비자동화 등으로 노동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최근 충남에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이 속속 입지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 이 충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취업계수가 전국평균 23.9명이지만, 충남은 17.9명)

■ 저출산·고령화 경향 심화

-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임

※ 충남에 주는 시사점

- 충남지역은 2005년에 이미 노령인구 비중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고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필요

■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발전 추진

- 경제의 세계화 및 지역화의 전개로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 이명박 정부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발전 및 서해안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

- 현 광역경제권 단위의 지역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노정되는 한계는 대전, 충남, 충북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공동의 사업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임. 따라서 3개 시도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됨

2. 일반 현황

가. 충남 경제산업 주요 개관

지 표 명		규 모	市道 순위	기준 시점	비 고
지역내 총생산(GRDP)		58.2조원	5	' 08. 12.	전국 1,032조원 (5.6%)
GRDP 성장률		6.3%	1	' 08. 12.	전국평균 2.4%
1인당GRDP		2,996만원	2	' 08. 12.	전국평균 2,122만원
산업 구조	농림어업	6.4%		' 08. 12.	전국 2.5%
	광업, 제조업	47.0%		' 08. 12.	전국 28.3%
	건설업	9.2%		' 08. 12.	전국 7.0%
	서비스업, 기타	37.4%		' 08. 12.	전국 62.2%
15세이상인구(A+B)		1,612천명		' 10. 6.	전국 40,572천명
·경제활동인구(A)		1,037천명		' 10. 6.	전국 25,158천명
-취업자 수		1,015천명		' 10. 6.	전국 24,280천명
-실업자 수		22천명		' 10. 6.	전국 878천명
·비경제활동인구(B)		575천명		' 10. 6.	전국 15,415천명
·경제활동참가율		64.3%		' 10. 6.	전국평균 62.0%
·실 업 률		2.1%		' 10. 6.	전국평균 3.5%
·고 용 률		63.0%		' 10. 6.	전국평균 59.8%
사 업 체	제조업체(1인 이상)	11,656업체	8	' 08. 12.	전국 320,053업체
	·대 기 업	67업체	5	' 08. 12.	전국 629업체
	·중소기업	11,589업체	8	' 08. 12.	전국 319,424업체
산업단지 지정면적		136개단지 108,118천㎡	6	' 10. 6.	전국 831개단지 1,365,986천㎡
지역특화발전 특구		16개소		' 10. 6.	전국 139개소
중소기업육성자금		1,979억원		' 10. 6.	대출잔액 9,169억원
전 통 시 장		75개소		' 10. 6.	전국 1,550개소
지역발전량		107천MW		' 10. 6.	전국 422천MW ※ 25.4% 점유
도시가스 공급률		42.5%		' 10. 6.	전국평균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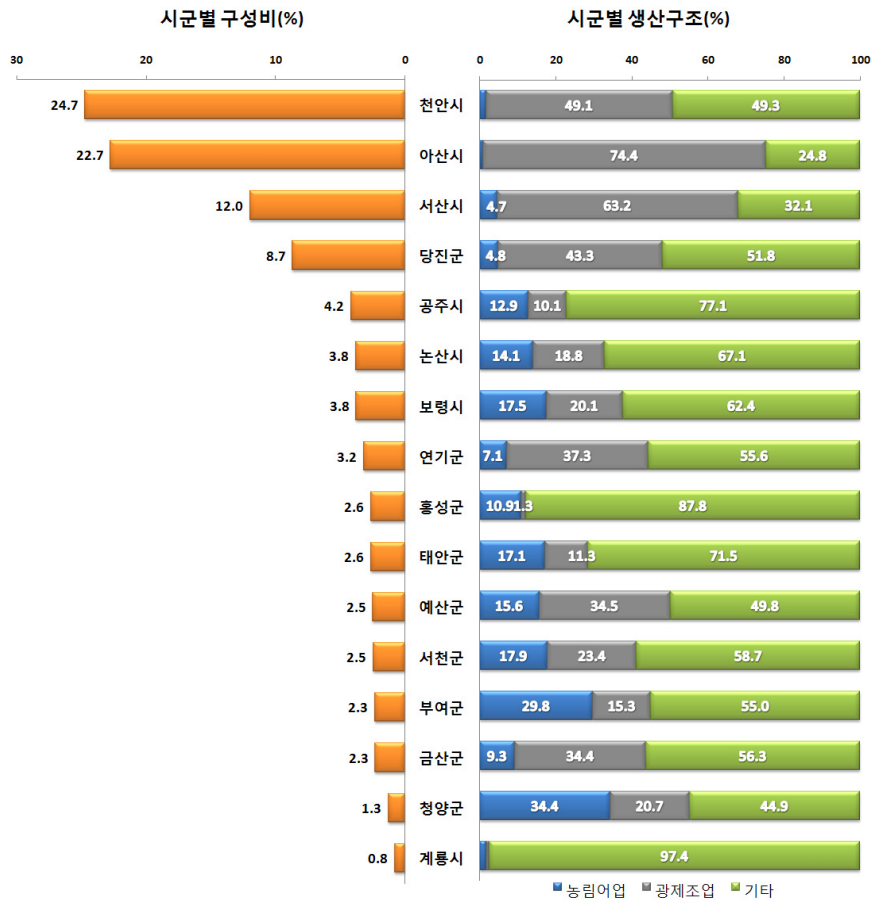
자료출처 : 충청남도 경제산업국 내부자료

나. 충남 경제산업 분야의 문제점 도출

(1) 지역간 불균형 성장심화

■ 북부권과 비북부권간의 경제불균형 심화

-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
 -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이 GRDP 중 약 68.1%를 차지
 - 나머지 12개 시군이 31.9%를 차지
 - 북부권 지역은 제조업의 중심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지역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침체 내지 정체되어 있는 실정



〈그림 1-1〉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2) 경제성장 대비 고용 창출력 미흡

■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충남 고용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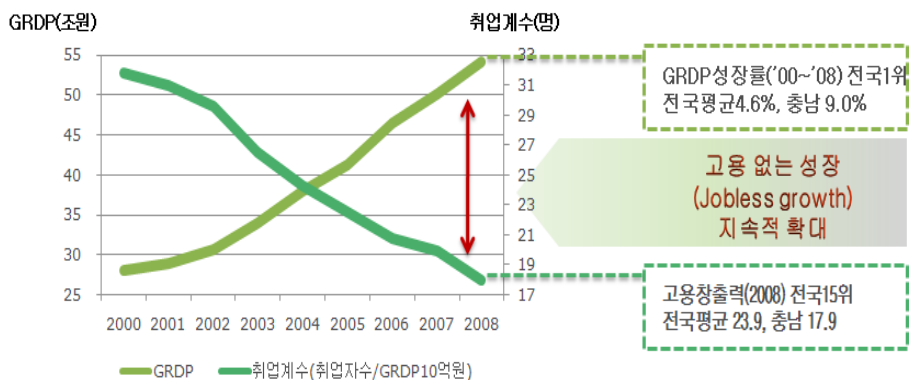
- '00~'08년 기간 중 전국의 고용증가율은 연평균 1.4%씩 증가함
 - 충남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동 기간 중 연평균 1.1%씩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침

〈표 1-1〉 취업자수 추이

구분	2000(천명)	2008(천명)	연평균증가율('00~'08)
전국(A)	21,156	23,577	1.4
충청남도(B)	891	973	1.1
(B/A)*100	4.2	4.1	-

■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

- 제조업 중심의 양적성장 확대 vs. 고용창출력 지속적 감소
 - 연평균 경제성장률('00~'08) : 충남(9.0%), 전국(4.6%)
 - 충남 GRDP 중 제조업 비중 : 34.0%('00) → 49.8%('08)
 - 취업계수(취업자수/GRDP 10억원) : 28.8명('00) → 17.9명('08)
 -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수요 지속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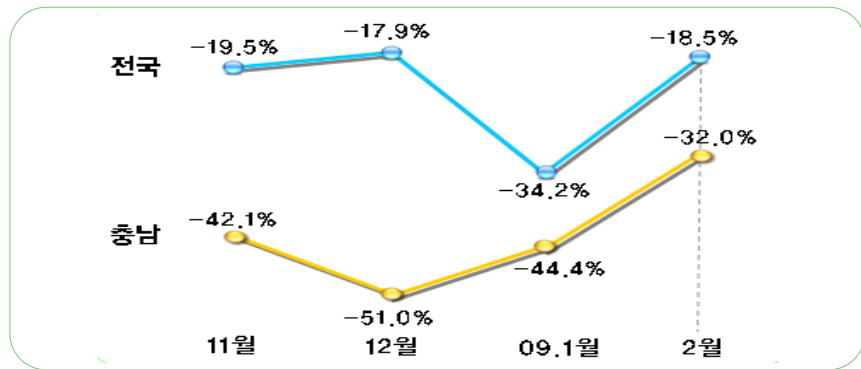


〈그림 1-2〉 도내 지역경제성장률 및 고용창출력 추이

(3) 대외 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중심 경제구조

-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
 -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
- 충남지역 수출 감소규모는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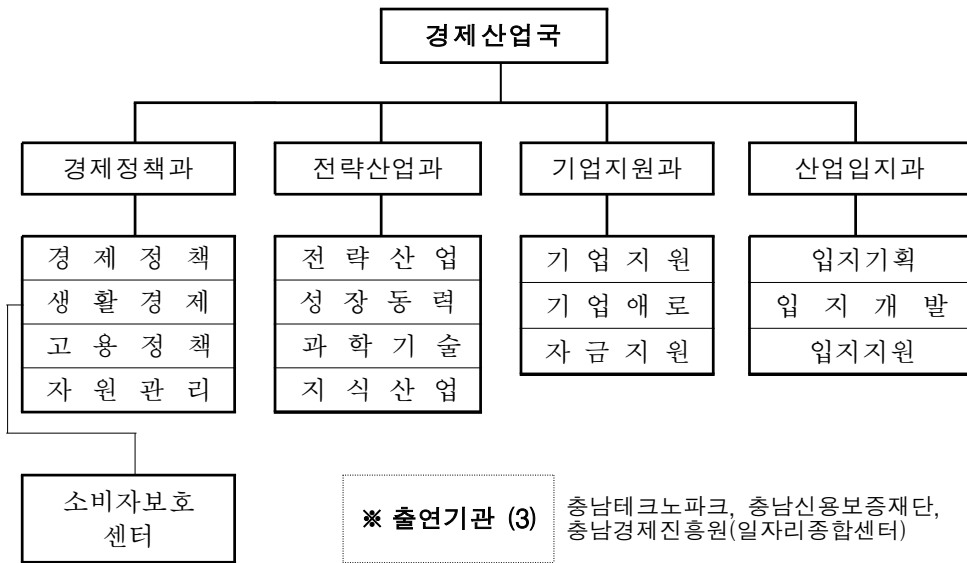
〈그림 1-3〉 전년대비 수출 감소추이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기구 및 정원

(1) 도청 경제산업국

■ 기구 : 4과 14담당, 1센터



■ 인원 : 총 69명

직종별 기관별	합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69	66	1	4	14	24	21	2	3
경제정책과	26	25	1	1	4	8	9	2	1
전략산업과	18	17		1	4	7	5		1
기업지원과	14	13		1	3	6	3		1
산업입지과	11	11		1	3	3	4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12명 제외(4급 1, 5급 3, 6급 6, 7급 2)

(2) 기관·단체 및 위원회

■ 출연기관 현황

1) 충남테크노파크(천안시 직산읍, '98.12. 설립)

- 원 장 : 장원철 ※ 이사장 - 도지사
- 자본금('09말) : 1,740억원
- 조직/정원 : 2단 1실 4센터, 1부설기관 / 113명
 -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행정지원실, 영상미디어센터, 디스플레이센터, 자동차부품센터, 인력개발센터, (부설)지역산업평가단
- 주요기능 : 기업의 정보지원 및 인프라 구축지원 기술개발, 창업지원, 인력양성

2) 충남신용보증재단(아산시 염치읍, '98.09.17. 설립)

- 이 사 장 : 김 학 수(63세, 前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 자본금('09말) : 962억원
- 대출잔액('10.5.20 현재) : 4,740억원
- 조직/정원 : 1국 3부 3지점 / 32명
 - 사무국, 경영기획부, 보증부, 보증관리부, 천안·공주·서산지점
- 주요기능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유통 지원

3) 충남경제진흥원(아산시 염치읍, '98.12.2. 설립)

- 본 부 장 : “경제산업국장 겸임” ※ 이사장 - 행정부지사
- 자본금('09말) : 26억원
- 조직/정원 : 1부 2팀 1지소 2센터 / 12명
 - 경영사업부, 경영지원팀, 기업지원팀, 남부지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일자리종합센터
-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및 경쟁력있는 소상공인 육성 등

■ 관련 기관·단체

단 체 명	회(정)원수 (명)	대표자	주 요 기 능	관할구역
대전상공회의소	1,414	송인섭	경제활성화, 정보교류	공주,보령,금산,연기, 논산,계룡,부여,서천,청양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752	김용웅	"	천안,아산,홍성,예산
서산상공회의소	80	최길학	"	서산, 태안
당진상공회의소	450	윤수일	"	당진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700	조춘자	소비자피해구제	
대한주부클럽 충남도지회	500	박광애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300	박영자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17,806	정근서	지역노사화합 도모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3,664	정원영	"	
자동차부품연구원	219	이기섭	자동차산업 기술 개발	
(재)동물자원화센터	17	김무강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충남과학기술인단체 지역연합회	69	장성근	과학기술인 학술 교류	
에너지관리공단 충청지역 에너지기후변화센터	18	전호상	에너지시책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4,313	구규욱	중소기업 애로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	1,800	이근국	중소기업협력 및 지원	
충청남도 기업인연합회	758	홍완표	기업발전 및 화합	
충청남도 여성기업인협의회	26	김중희	기업발전 및 화합	
이업종교류회 대전충남지회	343	강승구	이업종간 상생협력	
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	118	김숙현	경영활동촉진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권본부	40	최종태	산업단지 위탁 관리	
한국표준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274	이동선	품질경영지도	
한국표준협회 충남북부지역본부	380	고호진	품질경영지도	

■ 위원회·협의회

명 칭	구성 현황		위원장	주 요 기 능
	인원	회수		
도 지역경제협의회	67	2	도지사	지역경제활성화 협의
도 노사민정협의회	21	1~2	도지사	지역노사안정 및 일리창출 협의
도 기능경기위원회	12	수시	도지사	지방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등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7	수시	도지사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사항 심의
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18	수시	행정부지사	유망·선도기업 심사결정 기업인대상 심사결정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8	수시	정무부지사	공공요금심의
에너지위원회	17	2	정무부지사	에너지정책 심의
도 희망근로추진위원회	13	수시	정무부지사	희망근로사업 종합 조정
도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9	1~2	경제산업국장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 관련사항 심의
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1	2	경제산업국장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실적 평가대책 협의
충청권경제협의회	45	2	이태호 (충북상의회장)	충청권공동발전협의
도 농공단지협의회	40	수시	윤종진 (신일고무 대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자료출처 : 충청남도 경제산업국 내부자료

나. 충청남도청 경제산업국 주요 기능

(1)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 민생경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 유통산업 발전 및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 연료 수급, 부존자원 개발, 에너지 절약 등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광역경제권 개발
- 지방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 지역혁신 및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운용 등

■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애로 지원

- 국가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운용 지원
- 도시 첨단 및 디지털산업단지 지정·개발
- 중소기업 자금, 판로, 경영컨설팅 지원 등 건전 육성
-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2) 경제산업국 산하 각 과별 주요 업무

■ 경제정책과

구 분	주요 기능
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총괄 •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대책추진 • 금융지원 및 상공회의소 업무 • 시·군 지역경제 업무지원에 관한 업무 • 경제교육 및 경제포럼 운영에 관한 업무 • 경제시책 발굴 수립 및 추진 • 경제관련 특구지정 지원에 관한 업무 • 주요경제동향 및 분석관리 • 산업자원 동원 업무 • 경제자유구역청 인력·예산 등 지원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업무 추진 • 경제자유구역청관련 중앙·지방 업무협의 • 경제자유구역청관련 도의회 업무수행·지원 •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승인 업무 지원 • 경제자유구역 협의조정에 관한 업무
생활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산업발전계획 수립 및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업무 • 재래시장·상점가 육성 및 지원 •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소비자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 계량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에 관한 업무 • 계량기 제작업 및 수리업 등록에 관한 업무 • 다단계·방문·통신·전화권유판매 관련 업무

구 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체인사업자 지점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업무 • 담배수입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대부업 관련 업무 • 제조물 책임법 관련 사항 • 산업표준화 및 기업 품질경영 촉진 • 국제 품질인증마크(ISO 9000 등) 획득 지원 • 일반 공산품 품질 관리 업무 총괄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업무
고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력에 관한 기획 조정·총괄 •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지원 •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 건전 노동조합육성 관리 • 노사안정교육·홍보 및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 기능대학 설립추진 지원 • 명장 우수지도자 육성 지원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관련업무 추진 • 도내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획 조정·총괄 •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 취업알선(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 중소기업체에 대한 일자리 마련 • 외국인근로자 시책추진 • 산업기능요원 파악관리 및 운영업무 • 산업인력 해외 송출에 관한 업무 • 산업안전문화 관련 업무 • 비정규직(공공부문포함)에 대한 기획·조정 총괄 • 공공근로사업 추진 총괄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기업고용보조금 지원 • 청년인턴십 운영 • 녹색뉴딜사업 지원 •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관련 업무
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및 부존자원 개발육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유통질서 확립 • 고압·액화석유가스관련 사업허가 및 지도 감독 • 전기·가스안전관리 및 관련기관 지도 감독 • 광업 및 염관련 허가 지원 사후관리 등 • 폐광지역 대체산업지원 및 광해 방기관리 • 전기사업법(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신고 제외)에 관한 사항 • 승강기보수업 등록 및 사후관리 • 전기공사업, 전력시설물설계·감리·대행업 등록 및 사후관리 • 전기용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가스 사업관리 및 공급확대 • 집단에너지 •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발전소, 송전선로 등) • 농어촌전기공급에 관한 사항 •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 전략산업과

구 분	주요 기능
전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 소관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 산업분야 지역전략산업 총괄 • 충청권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 광역경제권신도산업 육성 •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 그밖에 전략산업 관련 업무
성장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산업 육성·추진 • 그린 수송시스템 산업화 육성 • LED 응용산업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 추진 •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연구센터 설립 지원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기반 구축 •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사업 협조 추진 •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 • 그린 빌리지 사업 발굴 및 육성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발굴 및 추진 •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3,000kw이하에 한함) • 발전시설물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공사계획 신고 및 사업개시 신고 업무 •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 신재생에너지산업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협조 추진
과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연구중심대학 육성추진 • 과학 R&D특구 지정 추진 • 지방과학기술관련 협의회 및 학회운영 • 지방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화 사업 • 지방과학 기술진흥계획 수립 조정 및 총괄 • 과학기술자문관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 과학문화도시 육성 및 첨단과학축전 운영 • 지방과학 문화시설 확충 • 나노산업 육성 및 나노랩센터 구축지원 •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자동차부품R&D집적화센터 지원 • 자동차부품산업육성추진단 운영지원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추진 • 지역대학육성(BK21) 지원 • 전문대학특성화사업 추진 • 디스플레이(전자정보)산업 육성계획·총괄 •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운영 지원 •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산업 육성 지원 • 디스플레이 국제 인증센터 설립 운영

구 분	주요 기능
지식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총괄 • 벤처기업육성 및 촉진지구사업 추진 • 창업보육사업 지원 • 산학연기술개발사업(전략산업 제외) • 산업기술 사업화·이전·거래사업 추진 • IT기술 융합 산업 • 특허, 실용신안, 상품등록 등 지식재산 육성 • 제품디자인 사업 추진 •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및 벤처테크노 추진 산업 •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추진 • 지역혁신센터(RIC) 운영지원 • 생물바이오산업 육성 • 영상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 • 영상미디어 산업화센터 운영 지원 • 영상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지원

■ 기업지원과

구 분	주요 기능
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수립 및 시책 추진 •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 기업인 대상 운영 지도 •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육성 지원 • 제조업체 실태조사 •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 감독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인 지원제도 운영 •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업무 • 면세용품 물품증명 발급 • 중소기업 판로지원 • 국내 시장개척(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지원) 및 상품 홍보 • 중소기업제품 공공·우선구매(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기업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애로에 관한 종합지원 •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 기업정보화 사업추진 •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 •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애로 지원사업 추진 • 기업지원관련 규제완화 업무 • 기업애로 현장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수립·조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및 관리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 충남 신용보증재단 운영·지원

구 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및 융자협약 • 중소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 업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사후관리 • 자금지원 위탁사무 관리·지도감독 •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관련 업무

■ 산업입지과

구 분	주요 기능
입지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 산업단지 관리권자 지정 및 관리업무 감독 • 산업단지내 기업유치 지원 •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 • 산업단지 통계 관리 • 그 밖에 산업입지 관련 사항
입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 일반산업단지(공공개발) 지정 및 개발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 디지털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 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처리 • 산업단지 지원시설 예산 총괄
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민간개발) 지정 및 개발 • 준산업단지 관련 업무 • 공장입지유도지구 관련 업무 • 농공단지 개발 및 예산지원 업무 • 산업형 기업도시 관련 업무 • 중소기업협동화 단지 조성 업무 •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업무 • 산업단지인허가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자료출처 :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경제산업국 실과소개 업무안내

■ 문제점

- 정부사업 복잡·다기화 및 분산형 지원체제로 인해 도 역시 각 실국별로 분산되어 유사사업을 추진하는 경향

- 조정·총괄기능 부재에 따른 효율적 사업연계 미흡함. 특히, 지원주체가 정부, 충남도, 유관기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사업운용이 유사·중복적이며, 정보교류가 미흡하여 지원주체별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해짐. 이로 인해 정책전달 또는 사업추진체계가 비효율적일 가능성 상존함

제2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경제산업국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 (총괄)

주요사업	주요 추진현황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 • 에너지 절약 생활화
첨단·녹색산업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육성 •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 • 산학협력사업 지원 • 지식재산 진흥사업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Green Car 산업」 육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SOS 충남넷』 구축 · 운영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 소액 서민금융 지원 •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 충남 「BIZ-콜센터」 운영
「실수요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의 제도개선 • 「기업 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 공급 •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추진
항해경제자유구역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활동

나. 주요 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1) 경제산업 분야 2007-2010년 예산 추이

(* 이하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서 각년도 내용을 바탕으로 표 및 그림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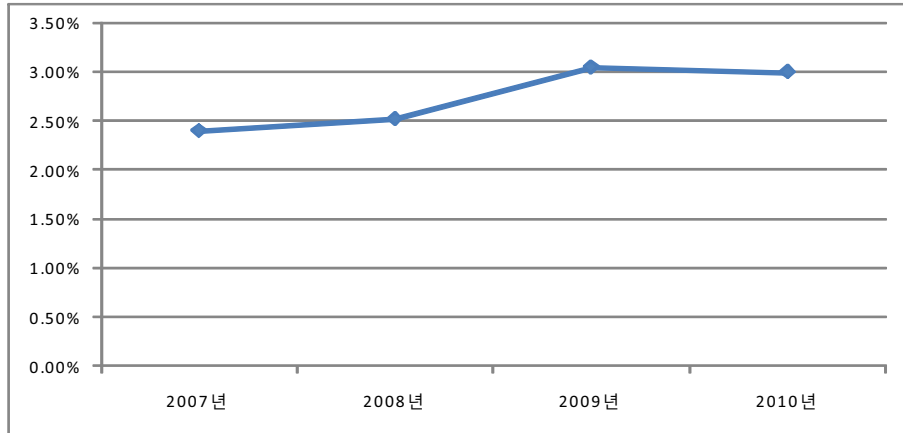
■ 경제산업 분야 예산 추이의 특징

- 충청남도 전체 예산 중에서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전체 예산에서 경제산업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
- 경제산업 분야 내부에서는 산업금융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산업 분야 내부에서는 산업금융 지원 및 무역 및 투자유치 관련 예산이 2007-2009년 사이 급격히 증가 추세이며, 산업기술 지원 예산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담당 과별로는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음

〈표 1-2〉 취업자수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충남도 전체예산		2556,200	100	2,915,300	100	3,238,000	100	3,342,700	100
산업·중소기업	소계	61,251	2.40	73,387	2.52	98,854	3.05	100,300	3.00
	산업금융 지원	21,530	0.84	36,235	1.24	54,317	1.68	53,156	1.59
	산업기술 지원	13,856	0.54	9,755	0.33	4,383	0.14	4,663	0.14
	무역 및 투자유치	3,912	0.15	10,213	0.35	20,140	0.62	16,128	0.48
	산업진흥·고도화	17,051	0.67	9,481	0.33	16,067	0.50	13,572	0.41
	에너지 및 자원개발	3,996	0.16	6,673	0.23	3,267	0.10	12,008	0.36
	산업·중소기업일반	906	0.04	1,031	0.04	678	0.02	773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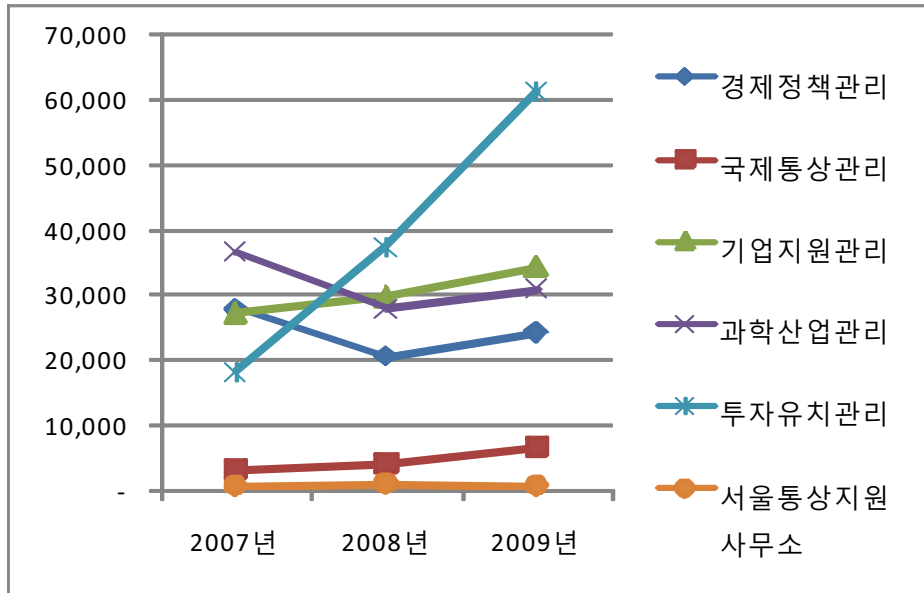


〈그림1-4〉 경제산업 분야 일반회계 예산 연도별 변화추이

〈표 1-3〉 경제산업 분야 일반회계 담당 과별 2007~2010 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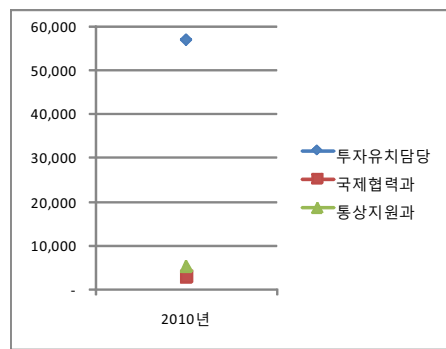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114,316		소계	121,459		소계	158,703		소계	166,993
경제 개발비	경제 정책관리	27,909	경제 통상실	경제 정책과	20,656	경제 통상실	경제 정책과	24,349	경제 산업국	경제 정책과	29,875
	국제 통상관리	3,413		국제 통상과	4,256		국제 통상과	6,782		산업 입지과	29,946
	기업지원 관리	27,292		기업 지원과	29,814		기업 지원과	34,452		기업 지원과	8,258
	과학산업 관리	36,599		과학 산업과	28,101		과학 산업과	31,085		전략 산업과	33,508
	투자유치 관리	18,251		투자 유치 담당관실	37,461		투자 유치 담당관실	61,197	투자 통상실	투자 유치담당	57,016
	서울통상 지원 사무소	1,000		서울 투자통상 지원 사무소	1,171		서울 투자통상 지원 사무소	838		국제 협력과	3,031
										통상 지원과	5,359



〈그림 1-5〉 경제통상 분야 담당과별 2007~2009년 예산 변화추이



〈그림 1-6〉 2010년 경제산업국 예산



〈그림 1-7〉 2010년 투자통상실 예산

* 2009년까지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분리되지 않았고, 2010년 두 곳으로 분리됨.

(2) 경제산업 분야 향후 중기 정책 방향

(* 이하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2013 에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 내용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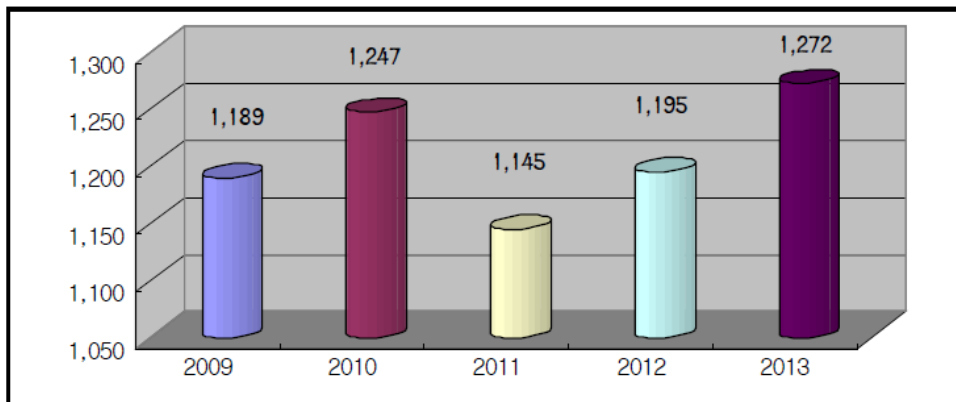
■ 정책의 방향

- 중소기업 자금의 적기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전략산업의 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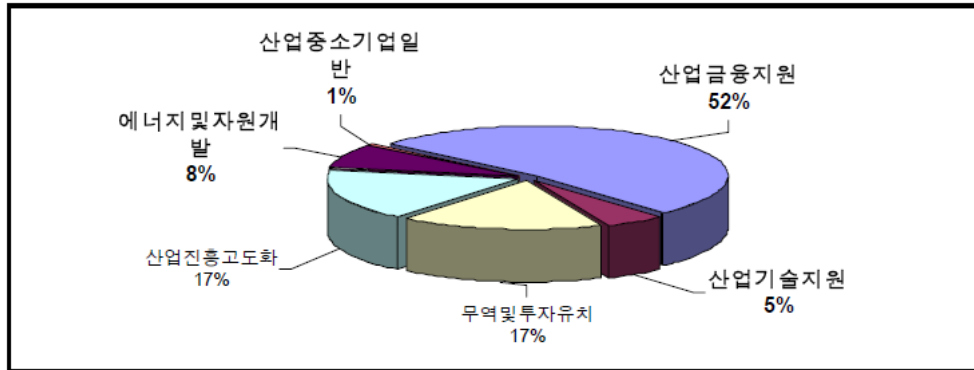
- 재래시장 현대화로 안정적 영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연료 공급

■ 주요 투자사업 예산 계획

-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 기업이전보조 2,750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217억원
 - 창업보육센터 지원 49억원
- 무역 및 투자유치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409억원
 - 외국기업 기반시설 지원 225억원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85억원
- 산업진흥 고도화
 -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745억원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26억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 169억원
- 에너지 및 자원 개발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134억원
 - 지역에너지사업 104억원



〈그림 1-8〉 경제산업분야 연도별 투자계획(단위:억원)



〈그림 1-9〉 경제산업분야 분야별 투자계획

〈표 1-4〉 경제산업분야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

부 문 별	점유율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0	6,048	1,189	1,247	1,145	1,195	1,272
산업금융 지원	52.5	3,178	611	677	589	620	681
산업기술지원	5.1	309	58	63	62	63	63
무역및투자유치	17.2	1,045	251	232	193	183	186
산업진흥고도화	16.6	1,001	166	174	221	217	223
에너지및자원개발	8.0	484	96	96	74	106	112
산업중소기업일반	0.6	31	7	5	6	6	7

〈표 1-5〉 경제산업분야 세부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후
				소계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 · 중소기업		556,650	5,828	550,822	106,842	114,699	104,188	108,822	116,271	-
산업금융지원		301,320	-	301,320	55,058	65,159	56,262	59,367	65,474	-
내설있는 기업지원		275,000	-	275,000	50,000	60,000	51,000	54,000	60,000	-
기업지원활동 적극 전개		275,000	-	275,000	50,000	60,000	51,000	54,000	60,000	-
기업이전 보조	계	275,000	-	275,000	50,000	60,000	51,000	54,000	60,000	-
광특 보조금		185,000	-	185,000	35,000	40,000	34,000	36,000	40,000	-
시도비		80,000	-	80,000	5,000	20,000	17,000	18,000	20,000	-
지방재		10,000	-	10,000	10,000	-	-	-	-	-

	중소기업 육성			26,320	-	26,320	5,058	5,159	5,262	5,367	5,474	-
	금융 및 기술 지원			26,320	-	26,320	5,058	5,159	5,262	5,367	5,474	-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계	4,621	-	4,621	888	906	924	942	961	-	-
		국고 보조금	4,621	-	4,621	888	906	924	942	961	-	-
	중소기업경영안정 자금 이자보전	계	21,699	-	21,699	4,170	4,253	4,338	4,425	4,513	-	-
		시도비	21,699	-	21,699	4,170	4,253	4,338	4,425	4,513	-	-
		민자 등	10,000	-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산업기술지원			24,099	-	24,099	4,450	4,874	4,900	4,925	4,950	-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24,099	-	24,099	4,450	4,874	4,900	4,925	4,950	-
	지역 기술 혁신			2,650	-	2,650	530	530	530	530	530	-
	지역혁신센터(RI C, 국가직접지원)	계	2,650	-	2,650	530	530	530	530	530	-	-
		시도비	2,650	-	2,650	530	530	530	530	530	-	-
		민자 등	26,593	-	26,593	5,193	5,800	5,200	5,200	5,200	-	-
	벤처기업 육성			4,900	-	4,900	900	1,000	1,000	1,000	1,000	-
	창업보육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계	4,900	-	4,900	900	1,000	1,000	1,000	1,000	-	-
		시도비	4,900	-	4,900	900	1,000	1,000	1,000	1,000	-	-
		민자 등	21,585	-	21,585	12,235	2,855	2,695	1,900	1,900	-	-
	산업진흥·고도화			97,268	-	97,268	16,105	16,894	21,486	21,069	21,714	-
	지역경제육성			97,268	-	97,268	16,105	16,894	21,486	21,069	21,714	-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80,338	-	80,338	13,375	13,894	17,986	17,369	17,714	-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계	75,455	-	75,455	12,825	12,261	16,344	16,844	17,181	-	-
		광특 보조금	59,496	-	59,496	9,925	9,301	13,000	13,500	13,770	-	-
		시도비	15,959	-	15,959	2,900	2,960	3,344	3,344	3,411	-	-
		민자 등	2,025	-	2,025	251	524	300	450	500	-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계	2,633	-	2,633	550	508	517	525	533	-	-
		국고 보조금	550	-	550	150	100	100	100	100	-	-
		시도비	2,083	-	2,083	400	408	417	425	433	-	-
		민자 등	2,935	-	2,935	580	600	600	575	580	-	-
	중소유통도매물류 센터 건립	계	2,250	-	2,250	-	1,125	1,125	-	-	-	-
		광특 보조금	1,800	-	1,800	-	900	900	-	-	-	-
		시도비	450	-	450	-	225	225	-	-	-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16,930	-	16,930	2,730	3,000	3,500	3,700	4,000	-
	황해경제자유구역		계	16,930	-	16,930	2,730	3,000	3,500	3,700	4,000	-

		청 운영 지원	시도비	16,930	-	16,930	2,730	3,000	3,500	3,700	4,000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6,909	5,828	41,081	9,138	8,048	5,744	8,851	9,300	-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육성		32,115	5,828	26,287	5,049	5,150	5,264	5,358	5,466	-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32,115	5,828	26,287	5,049	5,150	5,264	5,358	5,466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계	19,296	5,828	13,468	2,586	2,638	2,701	2,744	2,799	-
			국고 보조금	17,675	4,363	13,312	2,556	2,607	2,670	2,712	2,767	-
			시도비	1,621	1,465	156	30	31	31	32	32	-
			민자 등	2,085	348	1,737	-	382	420	463	472	-
		지역에너지사업	계	10,486	-	10,486	2,015	2,055	2,096	2,139	2,181	-
			국고 보조금	10,486	-	10,486	2,015	2,055	2,096	2,139	2,181	-
			민자 등	6,231	-	6,231	279	5,457	158	167	170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계	2,332	-	2,332	448	457	466	476	485	-
			국고 보조금	2,332	-	2,332	448	457	466	476	485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16,549	-	16,549	3,020	3,344	3,370	3,395	3,420	-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계	16,549	-	16,549	3,020	3,344	3,370	3,395	3,420	-
			시도비	7,700	-	7,700	1,300	1,600	1,600	1,600	1,600	-
			민자 등	23,100	-	23,100	3,900	4,800	4,800	4,800	4,800	-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2,500	-	2,500	500	500	500	500	500	-
			시도비	2,500	-	2,500	500	500	500	500	500	-
			민자 등	7,500	-	7,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지역연구산업육성 사업 (국가직접지원)	계	6,349	-	6,349	1,220	1,244	1,270	1,295	1,320	-
			시도비	6,349	-	6,349	1,220	1,244	1,270	1,295	1,320	-
			민자 등	25,615	-	25,615	9,515	4,907	3,731	3,731	3,731	-
		무역 및 투자유치		87,054	-	87,054	22,091	19,724	15,796	14,610	14,833	-
		경쟁력있는 외자유치		63,455	-	63,455	18,017	15,338	11,100	9,500	9,500	-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63,455	-	63,455	18,017	15,338	11,100	9,500	9,500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계	40,955	-	40,955	13,517	10,838	6,600	5,000	5,000	-
			시도비	30,955	-	30,955	3,517	10,838	6,600	5,000	5,000	-
			지방채	10,000	-	10,000	10,000	-	-	-	-	-
		외국기업 기반시설 지원	계	22,500	-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
			시도비	22,500	-	22,500	4,500	4,500	4,500	4,500	4,500	-
		수출기반 확대		23,599	-	23,599	4,074	4,386	4,696	5,110	5,333	-
		수출증대 및		11,709	-	11,709	2,084	2,236	2,346	2,460	2,583	-

		해외마케팅 강화										
		해외시장 개척	계	9,068	-	9,068	1,640	1,722	1,808	1,900	1,998	-
			광특 보조금	3,626	-	3,626	656	689	723	760	798	-
			시도비	5,442	-	5,442	984	1,033	1,085	1,140	1,200	-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계	2,641	-	2,641	444	514	538	560	585	-
			계	2,641	-	2,641	444	514	538	560	585	-
		농수산물 수출 지원		11,890	-	11,890	1,990	2,150	2,350	2,650	2,750	-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계	3,310	-	3,310	510	650	650	750	750	-
			시도비	3,310	-	3,310	510	650	650	750	750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	8,580	-	8,580	1,480	1,500	1,700	1,900	2,000	-
			시도비	8,580	-	8,580	1,480	1,500	1,700	1,900	2,000	-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육성		14,793	-	14,793	4,089	2,898	480	3,492	3,834	-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14,793	-	14,793	4,089	2,898	480	3,492	3,834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계	14,793	-	14,793	4,089	2,898	480	3,492	3,834	-
			국고 보조금	14,346	-	14,346	4,003	2,810	391	3,401	3,741	-
			시도비	447	-	447	86	88	89	91	93	-
			민자 등	1,989	-	1,989	93	409	450	493	544	-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 2010년 예산현황 : 2,803억원(道 예산의 7.1%)

■ 재원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 비	광 특	도 비	기 타
계	2,803	395	550	1,858	
일반회계	1,272	395	550	327	
기 금	1,531			1,531	중소기업육성기금

- 2010년 충청남도 경제산업 분야 충청남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비와 광특회계가 전체 예산의 약 74.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약 25.7%를 차지하고 있음

■ 분야별 현황

- 서민경제 안정 531억원 (국비 338, 광특 129, 도비 64)
- 전략산업 육성 359억원 (국비 48, 광특 133, 도비 178)
- 중소기업 지원 1,614억원 (국비 9, 도비 1,605)
- 산업단지 조성 299억원 (광특 288, 도비 11)

■ 경제산업국 산하 30억원 이상 주요사업의 재원별 예산 현황

- 4대 전략산업육성(19개사업) 239억원(광특 133, 도비 106)
- 희망근로 프로젝트 241억원(국비 221, 도비20)
- 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219억원(광특 219)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156억원(도비 156)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93억원(광특 93)
- 지역에너지사업 88억원(국비 88)
- 농공단지 조성사업 73억원(광특 68, 도비 5)
-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 49억원(국비 48, 도비 1)
- 산학협력지원(12개사업) 39억원(도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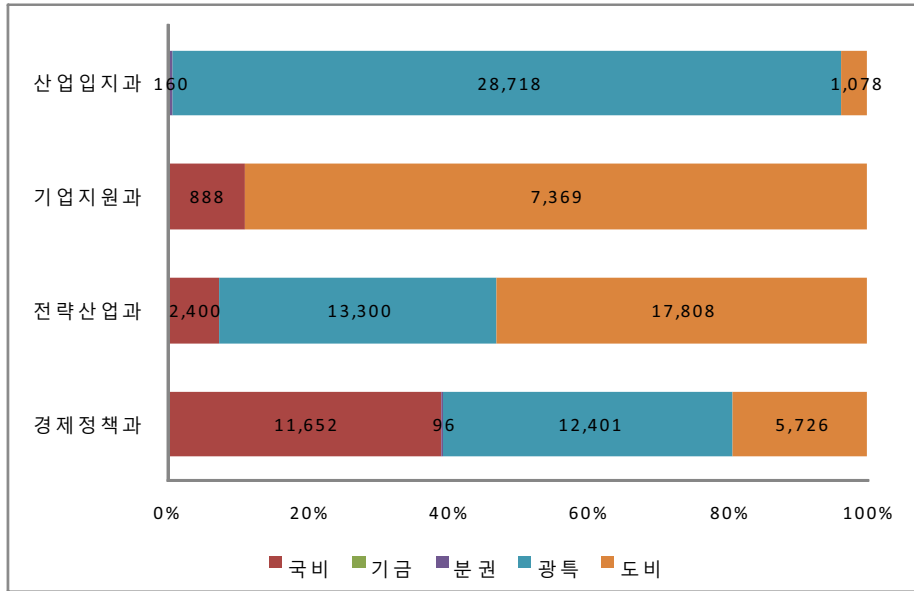
■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재원별 예산 현황

〈표 1-6〉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10년 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년					
		소계	국비	기금	분권	광특	도비
경제 산업국	경제정책과	29,875	11,652		96	12,401	5,726
	전략산업과	33,508	2,400			13,300	17,808
	기업지원과	8,258	888				7,369
	산업입지과	29,946			160	28,718	1,078

산업입지과의 경우 대부분 광특 예산이며, 기업지원과의 경우 도비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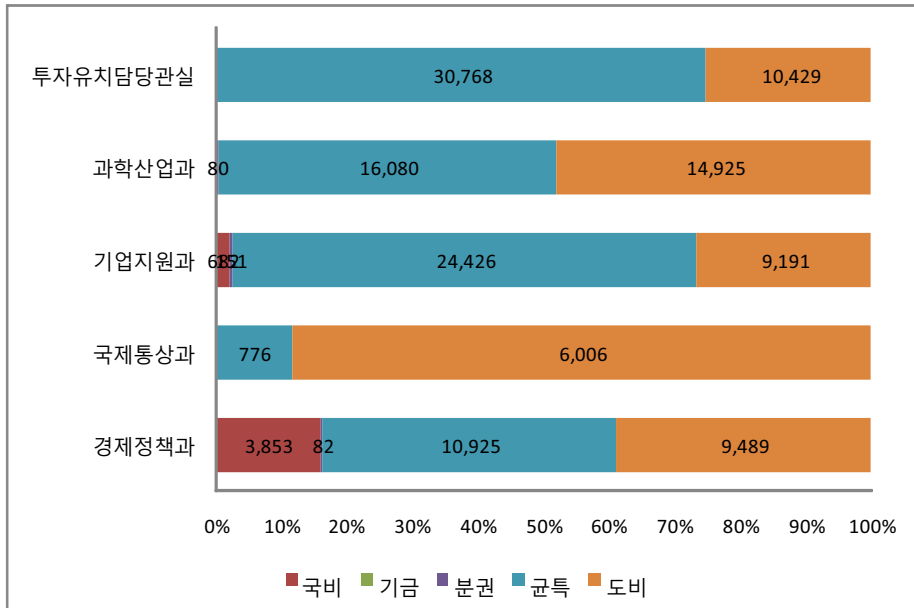
〈그림 1-10〉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10년 산업·중소기업 예산 구성비

〈표 1-7〉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09년 예산 자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년					
		소계	국비	기금	분권	광특	도비
경제 통상실	경제정책과	24,349	3,853		82	10,925	9,489
	국제통상과	6,782				776	6,006
	기업지원과	34,452	682		151	24,426	9,191
	과학산업과	31,085			80	16,080	14,925
	투자유치 담당관실	61,197				30,768	10,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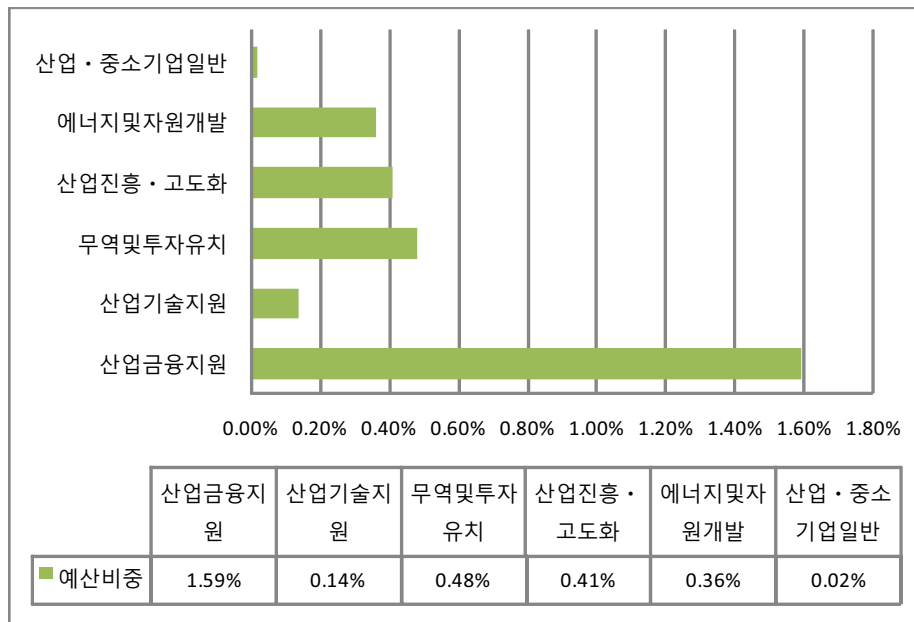
* 2009년의 경우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분리되기 이전임



〈그림 1-11〉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2009년 산업·중소기업 예산 구성비

* 2009년의 경우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이 분리되기 이전임

〈그림 1-12〉 경제산업 분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중



나. 산하 부서별 사업비 분석

■ 경제정책과 29,875,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29,875,800	21,664,213	8,211,587	
	국 11,652,800			
	광 12,401,000			
	분 96,000			
	도 5,726,000			
지역경제육성	13,572,440	16,067,240	-2,494,800	
	국 13,800			
	광 10,201,000			
	도 3,357,640			
지역경제 활성화	245,500	248,100	-2,600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10,826,940	13,289,140	-2,462,200	
	국 13,800			
	광 10,201,000			
	도 612,140			
항해경제자유 구역개발	2,500,000	2,530,000	-30,000	
고용안정	6,853,300	4,612,693	2,240,607	
	국 2,550,000			
	광 2,200,000			
	분 96,000			
	도 2,007,300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2,165,300	2,952,693	-787,393	
	국 746,000			
	분 96,000			
	도 1,323,300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4,688,000	1,660,000	3,028,000	
	국 1,804,000			
	광 2,200,000			
	도 684,000			
에너지 수급안정 및 개발육성	9,187,000	682,000	8,505,000	
	국 9,089,000			
	도 98,000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9,187,000	682,000	8,505,000	
	국 9,089,000			
	도 98,000			
행정운영경비 (경제정책과)	148,060	137,280	10,780	
중소기업 육성	115,000	165,000	-50,000	
금융 및 기술 지원	115,000	165,000	-50,000	

■ 전략산업과 ----- 33,508,9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33,508,920			
	국	2,400,000			
	광	13,300,000	33,770,060	-261,140	
	도	17,808,920			
첨단산업 육성지원		24,418,500			
	광	13,300,000	24,769,900	-351,400	
	도	11,118,500			
첨단 전략산업 기획		6,334,500			
	광	2,900,000	5,369,900	964,600	
	도	3,434,500			
자동차 산업 육성		6,134,000			
	광	3,200,000	8,030,000	-1,896,000	
	도	2,934,000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4,520,000			
	광	1,800,000	4,620,000	-100,000	
	도	2,720,000			
첨단문화 산업 육성		4,200,000			
	광	3,300,000	3,600,000	600,000	
	도	900,000			
농축산바이오 산업 육성		2,930,000			
	광	2,100,000	3,150,000	-220,000	
	도	830,00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300,000	0	300,000	(국가직접지원)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4,663,360	4,383,360	280,000	(국가직접지원)
지역기술혁신 (지역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530,000	400,000	130,000	(국가직접지원)
벤처기업 육성		1,020,000	1,200,000	-180,000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3,113,360	2,783,360	330,000	(국가직접지원)
과학문화육성 지원		1,180,000	1,580,000	-400,000	
재무활동 (전략산업과)		354,000	390,000	-36,000	
행정운영경비 (전략산업과)		72,060	61,800	10,260	
에너지 공급 안정 및 개발 육성		2,821,000			
	국	2,400,000	2,585,000	236,000	
	고	421,000			

■ 기업지원과 8,258,1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8,258,120 국 도 7,369,817	9,341,779	△1,083,659	
중소기업활성화	773,000	678,900	94,100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126,500	220,900	△94,400	
중소기업 판로지원	646,500	458,000	188,500	
중소기업 육성	6,928,303 국 도 6,040,000	8,092,379	△1,164,076	
금융 및 기술 지원	6,928,303 국 도 6,040,000	8,092,379	△1,164,076	
재무활동 (기업지원과)	500,000	500,000	0	
행정운영경비 (기업지원과)	56,817	70,500	-13,683	

■ 산업입지과 29,946,97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29,946,970 광 분 도 28,718,000 150,000 1,078,970	25,110,326	4,836,644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9,901,000 광 분 도 28,718,000 150,000 1,033,000	25,110,326	4,790,674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22,165,000 광 분 도 21,939,000 150,000 76,000	16,671,826	5,493,174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7,736,000 광 도 6,779,000 957,000	8,438,500	△702,500	
행정운영경비 (산업입지과)	45,970	0	45,970	

다. 산하 부서별 재원 유형별 사업비 분석

〈표 1-8〉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사 업 명	합계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분권	매칭
경제산업국	163,301	108,492	30,973	23,535	300	
경제정책과	39,988	23,595	5,058	11,334	0	
실물경제교육	50		50			
경기종합지수작성	50		50			
경제관련 토론 및 연찬회등	15		15			
충남경제포럼	5		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5,887	9,301	0	6,586		국비60% 시군비40%
전통시장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지원	968		400	56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35		35	-		
고객맞이 행사지원	20		10	10		도비50%, 시군비50%
물가조사 모니터원 운영	19		19	-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	1,350	900	135	315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2,500		2,500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	48		48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10	340	170			국비50%,도 비25%,시군 비25%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78	336	42			국비80%,도 비10%,시군 비10%
공공근로사업	96	96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55		55			
충남 기능동우회 지역봉사활동	10		10			
노동상담소운영	50		50			
모범근로자자녀 장학사업 재단설립	300		300			
노사민정파트너십 협력활성화	140	70	70			
근로자의날 행사	18		18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10		10			
한중일노조 우호교류	20		20			
노사정 한마당행사	80		80			
지방예선대회 및 전국대회참가	450		450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20		20			
취업박람회 개최	25		25			

사 업 명	합계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분권	매칭
사회적기업 육성	100		1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365	2200	165			국비80%,도비6%,시군비14%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1,430	1,430				국비50%,지방비5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연구	20		20			
정유-석유 화학포럼구성운영	50		50			
LED조명등(신호등)교체(7개시군)	1,448	1013		435		국비70%,시군비30%
LED 가로등 보급(4개시군)	1,562	1051		511		국비70%,시군비30%
청사LED조명등 보급(5개시군)	1,841	1286		555		국비70%,시군비30%
LED보안등(경광등)보급	1,240	868		372		국비70%,시군비30%
가로등원격제어구축	2,082	1457		625		국비70%,시군비30%
고효율 기구보급등	4,446	3110		1,336		국비70%,시군비30%
농어촌 전기공급	180	137	21.3	21		국비75%,도비12.5%,시군비12.5%
해외품질인증획득	50		50			
중소기업활성화	65		65			
전략산업과	78,986	52,397	17,422	8,867	300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1,300	900	400			국비69%,도비31%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1,460	760	700			국비52%,도비48%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1,120	-	1,120			도비 100%
충남 전략산업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사업	250	150	100			국비60%,도비40%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500	500	-			국비100%
자동차 부품 산업 기술 기반 조성	1,070	1,000	50	20		국비93%,도비5%,시군비2%
능동형 인지 제어부 R&D 능력 향상 시스템 구축	3,900	1,200	1,900	800		국비31%,도비49%,시군비20%
전사적 제조공정 모의실험 분석 시스템 구축	2,200	1,300	900			국비59%,도비41%
자동차 부품 인력 양성 사업	784	700	84			국비89%,도비11%
자동차부품 기술지원사업	693	448	245			국비65%,도비35%
CVCE 행사 지원	240		200	40		도비83%,시군비17%
디스플레이 R&D 클러스터 구축(국가직접지원)	2,100	1,850	200	50		국비88%,도비10%,시군비2%

사 업 명	합계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분권	매칭
전자정보 인력양성사업	900	800	100			국비89% 도비11%
전자정보 기술지원사업	693	448	245			국비65% 도비35%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기반 정비 사업	3,220	1,000	2,220			국비31% 도비69%
영상미디어산업 혁신인프라 시제품제작지원 강화사업	3,800	3,000	800			국비75% 도비25%
첨단문화산업 인력양성사업	400	300	100			국비75% 도비25%
첨단문화산업 기술지원사업	628	348	280			국비55% 도비45%
동물자원 벤처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400		200	200		도비50% 시군비 50%
농축산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사업	400	300	100			국비75% 도비25%
농축산 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 정비 사업	1,730	1,500	230			국비87% 도비23%
농축산바이오산업 기업마케팅지원 사업	600	300	300			국비50% 도비 50%
농축산바이오산업 기술지원사업	678	348	330			국비51% 도비49%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지원(국가직접지원)	14,930	14,630	300			국비98% 도비 2%
지역혁신센터(RIC, 국가직접지원)	700		530	170		도비76% 시군비24%
창업보육센터 지원(국가직접지원)	1,400	560	720	120		국비40% 도비51% 시군비9%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300		100	200		도비33% 시군비67%
벤처테크노 상담회 개최	250		200	50		도비80% 시군비20%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3,542	2,242	1,300			국비63% 도비37%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국가직접지원)	1,200	700	500			국비58% 도비42%
산학협력실 지원(국가직접지원)	1,180	700	250	230		국비59% 도비21% 시군비20%
산업기술기반조성 디자인 표면처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100		100			도비100%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935	1,400	200	335		국비72% 도비10% 시군비18%
두뇌 한국(BK21) 사업 지원(국가직접지원)	1,127	1,084	43			국비96% 도비4%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국가직접지원)	1,512	1,400	50	62		국비59% 도비21% 시군비20%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100		100			국비59%

사 업 명	합계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분권	매칭
국가직접지원)						도비12% 시군비29%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50		50			도비100%
감성품질디자인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100		100			도비100%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국가직접지원)	4,620	4,400	220			국비95% 도비5%
특허종합정보컨설팅 운영 지원(국가직접지원)	530	330	200			국비62% 도비38%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	130		80	50		도비61% 시군비39%
지방 테마 과학관 건립(국가직접지원)	2,600	500	1,100	1,000		국비19% 도비42% 시군비39%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차입금 이자상환)	54		54			도비100%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차입금 원금상환)	300		-		300	국비100%
그린홈 보급 (국가직접지원)	6,055	4,899	347	809		국비81% 도비6% 시군비13%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7,205	2,400	74	4,731		국비33% 도비1% 시군비66%
기업지원과	8,193	888	7,305	-	-	-
중소기업 워크숍 및 활성화	20		20			
기업인대회 및 이업종교류회	30		30			
선도 및 유망 중소기업 지정 업무추진	10		10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0		60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지원	170		170			
제24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33		33			
기업애로통합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9		9			
기업애로통합온라인시스템 커스터마이징	6		6			
기업애로해소지원	400		400			
기업애로통합온라인표준시스템도입및 서버구입	27		27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888	888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220		220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이자보전	5,820		5,820			

사 업 명	합계	총사업비(단위: 백만원)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분권	매칭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500		500			
산업입지과	36,134	31,612	1,188	3,334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433		430	1,003		도비30% 지방비7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21,939	21,939				국비100%
농공단지 조성사업	12,567	9,523	713	2,331		국비76% 도비6% 지방비18%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195	150	45			국비76% 도비24%

〈표 1-9〉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자원 유형 (2009-2010년 비교)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경제산업국	계	443,131	200,512	72,062	49,992	120,565	
	2009	230,228	95,851	41,099	30,312	62,966	
	2010	221,326	109,228	30,963	23,535	57,599	
경제정책과	계	74,462	33,762	16,017	23,873	810	
	2009	42,338	14,734	10,959	16,394	251	
	2010	40,547	23,595	5,058	11,334	559	
실물경제교육	계	50	-	50			
	2009						
	2010	50		50			
경기종합지수작성	계	50	-	50			
	2009	-					
	2010	50		50			
경제 관련 토론 및 연찬회 등	계	40	-	40			
	2009	25	-	25			
	2010	15	-	15			
충남경제포럼	계	10	-	10			
	2009	5		5			
	2010	5		5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계	49,966	22,126	5,100	22,080	660	
	2009	33,670	12,825	5,100	15,494	251	국비60%, 시군비40%
	2010	16,296	9,301		6,586	409	국비60%, 시군비40%
전통시장경영 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지원	계	2,768	-	1,300	1,468		
	2009	1,800		900	900		
	2010	968		400	56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	70	-	70	-		
	2009	35		35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10	35		35			
고객맞이 행사지원	계	20	-	10	10		
	2009	-					도비50% 시군비50%
	2010	20		10	10		도비50% 시군비50%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운영	계	38	-	38			
	2009	19		19			
	2010	19		19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건립	계	1,500	900	135	315	150	
	2009	-					국비60%, 지방비30% 자담10%
	2010	1,500	900	135	315	150	국비60%, 지방비30% 자담10%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계	5,030		5,030	-	-	
	2009	2,530		2,530			
	2010	2,500		2,500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	계	96	-	96	-	-	
	2009	48		48			
	2010	48		48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계	1,189	793	396	-		
	2009	679	453	226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2010	510	340	170			국비50%, 도비25%, 시군비25%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계	798	710	88			
	2009	420	374	46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2010	378	336	42			국비80%, 도비10%, 시군비10%
공공근로사업	계	1,260	178	1,082			
	2009	1,164	82	1,082			
	2010	96	96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계	110	-	110			
	2009	55		55			
	2010	55		55			
충남 기능동우회 지역봉사활동	계	15	-	15			
	2009	5		5			
	2010	10		10			
노동상담소운영	계	100	-	100	-		
	2009	50		50			
	2010	50		50			
모범근로자 자녀	계	300		300	-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장학사업 재단설립	2009	-		-			
	2010	300		300			
노사민정 파트너십 협력활성화	계	140	70	70	-	-	
	2009	-	-	-			
	2010	140	70	70			
근로자의 날 행사	계	36	-	36			
	2009	18		18			
	2010	18		18			
노사화합 한마음다짐대회	계	20	-	20			
	2009	10		10			
	2010	10		10			
한중일노조 우호교류	계	40	-	40	-		
	2009	20		20			
	2010	20		20			
노사정 한마당행사	계	160	-	160			
	2009	80		80			
	2010	80		80			
지방예선대회 및 전국대회참가	계	850	-	850			
	2009	400		400			
	2010	450		450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계	40	-	40			
	2009	20		20			
	2010	20		20			
취업박람회 개최	계	50		50			
	2009	25		25			
	2010	25		25			
사회적기업 육성	계	100		100			
	2009	-		-			
	2010	100		1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계	3,440	3,200	240	-		
	2009	1,075	1,000	75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2010	2,365	2,200	165			국비80%, 도비6%, 시군비14%
공공기관 인턴제운영	계	1,430	1,430	-	-		
	2009	-					국비50%, 지방비50%
	2010	1,430	1,430				국비50%, 지방비5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연구	계	40	-	40			
	2009	20		20			
	2010	20		20			
정유-석유화학	계	50	-	50	-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포럼구성운영	2009	-		-			
	2010	50		50			
LED 조명등 (신호등)교체 (7개시군)	계	1,013	1,013	-			
	2009	-	-				국비70%, 시군비30%
	2010	1,448	1,013		435		국비70%, 시군비30%
LED 가로등 보급 (4개시군)	계	1,051	1,051	-			
	2009	-					국비70%, 시군비30%
	2010	1,562	1,051		511		국비70%, 시군비30%
청사LED 조명등 보급 (5개시군)	계	1,286	1,286	-			
	2009	-					
	2010	1,841	1,286		555		
LED 보안등 (경광등)보급	계	868	868	-			
	2009	-					국비70%, 시군비30%
	2010	1,240	868		372		국비70%, 시군비30%
가로등 원격제어구축	계	-		-			
	2009	-					국비70%, 시군비30%
	2010	2,082	1,457		625		국비70%, 시군비30%
고효율 기구 보급 등	계	-		-			
	2009	-					국비70%, 시군비30%
	2010	4,446	3,110		1,336		국비70%, 시군비30%
농어촌 전기공급	계	158	137	21			
	2009	-		-			국비75%, 도비12.5%, 시군비12.5%
	2010	180	137	21	21		국비75%, 도비12.5%, 시군비12.5%
해외품질인증획득	계	150	-	150			
	2009	100		100			
	2010	50		50			
중소기업활성화	계	130		130			
	2009	65		65			
	2010	65		65			
전략산업과	계	236,456	107,323	37,428	15,150	76,555	
	2009	124,248	54,126	20,006	6,283	43,833	
	2010	112,208	53,197	17,422	8,867	32,722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계	2,600	1,800	800			
	2009	1,300	900	400			국비69%, 도비31%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10	1,300	900	400			국비69%, 도비31%
충남테크노파크 운영 및 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3,260	1,660	1,600			
	2009	1,800	900	900			국비50%, 도비50%
	2010	1,460	760	700			국비52%, 도비48%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계	7,150	-	2,130	-	5,020	
	2009	1,350	-	1,010		340	도비75%, 민자 25%
	2010	5,800	-	1,120		4,680	도비19%, 민자 81%
충남 전략산업 인력양성 협의체 운영 사업	계	500	300	200			
	2009	250	150	100			국비60%, 도비40%
	2010	250	150	100			국비60%, 도비40%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계	1,200	1,000	200			
	2009	700	500	200			국비71%, 도비29%
	2010	500	500	-			국비100%
자동차 부품 산업 기술 기반 조성	계	2,140	2,000	100	40		
	2009	1,070	1,000	50	20		국비93%, 도비5%, 시군비2%
	2010	1,070	1,000	50	20		국비93%, 도비5%, 시군비2%
능동형 인지 제어부 R&D 능력 향상 시스템 구축	계	9,876	4,100	4,100	1,600	76	
	2009	5,938	2,900	2,200	800	38	국비49%, 도비37%, 시군비13% 민자1%
	2010	3,938	1,200	1,900	800	38	국비31%, 도비48%, 시군비20% 민자1%
전사적 제조공정 모의실험 분석 시스템 구축	계	5,180	3,480	1,600	-	100	
	2009	2,920	2,180	700		40	국비56%, 도비24%
	2010	2,260	1,300	900		60	국비58%, 도비40%, 민자2%
자동차 부품 인력 양성 사업	계	1,534	1,350	184			
	2009	750	650	100			국비87%, 도비13%
	2010	784	700	84			국비89%, 도비11%
자동차 부품 인력 기술지원	계	1,386	896	490			
	2009	693	448	245			국비65%, 도비35%
	2010	693	448	245			국비65%, 도비35%
CVCE 행사 지원	계	591		280	80	231	
	2009	184		80	40	64	도비43%,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시군비22% 민자35%
	2010	407		200	40	167	도비45%, 시군비10% 민자41%
디스플레이 R&D 클러스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계	6,848	3,850	220	100	2,678	
	2009	2,336	2,000	20	50	266	국비86%, 도비1%, 시군비2%, 민자11%
	2010	4,512	1,850	200	50	2,412	국비41%, 도비4%, 시군비1%, 민자54%
전자정보 인력양성사업	계	1,900	1,500	200	-	200	
	2009	900	700	100		100	국비78%, 도비11%, 민자11%
	2010	1,000	800	100		100	국비80%, 도비10%, 민자10%
전자정보 기술지원사업	계	1,193	698	495			
	2009	500	250	250			국비50%, 도비50%
	2010	693	448	245			국비65%, 도비35%
디스플레이 광학부품 기반 정비 사업	계	8,000	3,200	4,800			
	2009	4,780	2,200	2,580			국비46%, 도비54%
	2010	3,220	1,000	2,220			국비31%, 도비69%
영상미디어산업 혁신인프라 시제품제작 지원 강화사업	계	7,500	5,700	1,800			
	2009	3,700	2,700	1,000			국비73%, 도비27%
	2010	3,800	3,000	800			국비75%, 도비25%
첨단문화산업 인력양성사업	계	600	400	200			
	2009	200	100	100			국비75%, 도비25%
	2010	400	300	100			국비75%, 도비25%
첨단문화산업 기술지원사업	계	1,106	598	480	-	28	
	2009	464	250	200		14	국비54%, 도비43%, 민자3%
	2010	642	348	280		14	국비54%, 도비44%, 민자2%
동물자원 벤처기업 공동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계	800		400	400		
	2009	400		200	200		도비50%, 시군비50%
	2010	400		200	200		도비50%, 시군비50%
농축산바이오산업 인력양성 사업	계	900	500	200	-	200	
	2009	400	200	100		100	국비50%, 도비25%,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10	500	300	100		100	민자25%, 국비60%, 도비20%, 민자20%
농축산바이오산업 기술지원 사업	계	1,128	598	530			
	2009	450	250	200			국비56%, 도비44%
	2010	678	348	330			국비51%, 도비49%
농축산바이오산업 육성 기반 정비 사업	계	4,130	3,200	930			
	2009	2,400	1,700	700			국비71%, 도비29%
	2010	1,730	1,500	230			국비50%, 도비 50%
농축산바이오산업 기업마케팅 지원 사업	계	1,700	700	700	-	300	
	2009	950	400	400		150	국비42%, 도비42%, 민자16%
	2010	750	300	300		150	국비40%, 도비40%, 민자20%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30,230	29,630	600			
	2009	15,300	15,000	300			국비98%, 도비 2%
	2010	14,930	14,630	300			국비98%, 도비 2%
지역혁신센터(RIC, 국가직접지원)	계	12,393	-	1,060	340	10,993	
	2009	5,893		530	170	5,193	도비9%, 시군비3%, 민자88%
	2010	6,500		530	170	5,800	도비8%, 시군비3%, 민자89%
창업보육센터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18,070	1,120	1,620	240	15,090	
	2009	13,815	560	900	120	12,235	국비4%, 도비7%, 시군비1%, 민자88%
	2010	4,255	560	720	120	2,855	국비13%, 도비17%, 시군비3%, 민자67%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계	600		200	400		
	2009	300		100	200		도비34%, 시군비66%
	2010	300		100	200		도비34%, 시군비66%
벤처테크노 상담회 개최	계	500		400	100		
	2009	250		200	50		도비80%, 시군비20%
	2010	250		200	50		도비80%, 시군비20%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계	9,660	4,646	2,600	-	2,414	
	2009	4,939	2,404	1,300		1,235	국비49%,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국가직접지원)							도비26%, 민자25%
	2010	4,721	2,242	1,300		1,179	국비47%, 도비28%, 민자25%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3,623	1,700	1,000	-	923	
	2009	2,000	1,000	500		500	국비50%, 도비25%, 민자25%
	2010	1,623	700	500		423	국비43%, 도비31%, 민자26%
산학협력실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17,792	1,400	1,190	780	14,422	
	2009	11,705	700	940	550	9,515	국비6%, 도비8%, 시군비5%, 민자81%
	2010	6,087	700	250	230	4,907	국비11%, 도비4%, 시군비4%, 민자81%
산업기술기반조성 디자인 표면처리 기술 개발 (국가직접지원)	계	300	-	200	-	100	
	2009	150		100		50	도비67%, 시군비33%
	2010	150		100		50	도비67%, 시군비33%
지역연고산업육성(국 가직접지원)	계	15,437	1,400	1,198	885	11,954	
	2009	11,063	-	998	550	9,515	도비9%, 시군비5%, 민자86%
	2010	4,374	1,400	200	335	2,439	국비32%, 도비5%, 시군비8%, 민자55%
두뇌한국(BK21) 사업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2,578	2,168	86	-	324	
	2009	1,289	1,084	43		162	국비84%, 도비3%, 민자13%
	2010	1,289	1,084	43		162	국비84%, 도비3%, 민자13%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 (국가직접지원)	계	6,965	2,800	100	124	3,941	
	2009	3,492	1,400	50	62	1,980	국비40%, 도비1%, 시군비1%, 민자56%
	2010	3,473	1,400	50	62	1,961	국비40%, 도비1%, 시군비1%, 민자56%
지역기술이전센터(RT TC, 국가직접지원)	계	1,760	1,000	200	-	560	
	2009	910	500	100		310	국비55%, 도비11%, 민자34%
	2010	850	500	100		250	국비59%, 도비12%,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계	100		100			민자29%
	2009	50		50			도비 100%
	2010	50		50			도비 100%
감성품질디자인 건축사업	계	440		200		240	
	2009	220		100		120	도비45%, 민자55%
	2010	220		100		120	도비45%, 민자55%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 (국가직접지원)	계	11,104	8,800	440	-	1,864	
	2009	5,421	4,400	220		801	국비81%, 도비4%, 민자15%
	2010	5,683	4,400	220		1,063	국비77%, 도비4%, 민자19%
특허종합정보컨설팅 운영 지원 (국가직접지원)	계	930	530	400			
	2009	400	200	200			국비50%, 도비50%
	2010	530	330	200			국비62%, 도비38%
충남 첨단과학축전 개최	계	480		280	100	100	
	2009	300		200	50	50	도비66%, 시군비17% 민자17%
	2010	180		80	50	50	도비44%, 시군비28% 민자28%
지방 테마 과학관 건립 (국가직접지원)	계	3,400	500	1,900	1,000		
	2009	800		800			도비100%
	2010	2,600	500	1,100	1,000		국비19%, 도비42%, 시군비39%
충남테마파크조성사업 (차입금이자상환)	계	144	-	144			
	2009	90	-	90			도비100%
	2010	54	-	54			도비100%
충남테마파크조성사업 (차입금이자상환)	계	600	380	220			
	2009	300	80	220			국비27%, 도비73%
	2010	300	300				국비100%
그린홈 보급 (국가직접지원)	계	13,732	7,386	509	1,040	4,797	
	2009	3,935	2,487	162	231	1,055	국비63%, 도비4%, 시군비6%, 민자27%
	2010	9,797	4,899	347	809	3,742	국비50%, 도비4%, 시군비8%, 민자38%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계	14,396	6,333	142	7,921		
	2009	7,191	3,933	68	3,190		국비54%, 도비1%, 시군비44%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10	7,205	2,400	74	4,731		국비33%, 도비1%, 시군비66%
기업지원과	계	17,428	1,570	15,858	-	-	
	2009	9,235	682	8,553	-	-	
	2010	8,193	888	7,305	-	-	
소계	계	1,408	-	1,408	-	-	
	2009	643	-	643	-	-	
	2010	765	-	765	-	-	
장애인기업컨설팅지원 사업	계	20	-	20	-	-	
	2009	20		20			
	2010	-					
대중소기업 MOU체결부담금	계	40	-	40	-	-	
	2009	40		40			
	2010	-					
중소기업 워크숍 및 활성화	계	55	-	55	-	-	계속
	2009	35		35			
	2010	20		20			
기업인대회 및 이업종교류회	계	60	-	60	-	-	계속
	2009	30		30			
	2010	30		30			
선도 및 유망 중소기업 지정 업무추진	계	10	-	10	-	-	10년 신규
	2009	-					
	2010	10		10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계	120	-	120	-	-	계속
	2009	60		60			
	2010	60		60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지원	계	295	-	295	-	-	계속
	2009	125		125			
	2010	170		170			
제24회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계	66	-	66	-	-	계속
	2009	33		33			
	2010	33		33			
기업애로통합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계	9	-	9	-	-	10년 신규
	2009	-					
	2010	9		9			
기업애로통합온라인시 스템 커스터마이징	계	6	-	6	-	-	10년 신규
	2009	-					
	2010	6		6			
기업애로해소지원	계	700	-	700	-	-	계속
	2009	300		300			
	2010	400		400			

	년도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업에로통합온라인표준 시스템도입및서버구입	계	27	-	27	-	-	10년 신규
	2009	-					
	2010	27		27			
소계	계	16,020	1,570	14,450	-	-	
	2009	8,592	682	7,910	-	-	
	2010	7,428	888	6,540	-	-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계	1,570	1,570	-	-	-	계속
	2009	682	682				
	2010	888	888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계	440	-	440	-	-	계속
	2009	220		220			
	2010	220		220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 이자보전	계	13,010	-	13,010	-	-	계속
	2009	7,190		7,190			
	2010	5,820		5,820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금	계	1,000	-	1,000	-	-	계속
	2009	500		500			
	2010	500		500			
산업일지과	계	114,785	57,857	2,759	10,969	43,200	
	2009	54,407	26,309	1,581	7,635	18,882	
	2010	60,378	31,548	1,178	3,334	24,318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계	38,354	38,354				계속 전액국비
	2009	16,415	16,415				
	2010	21,939	21,939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지원	계	3,610	169	140		3,301	계속
	2009	3,335	83	105		3,147	56%
	2010	275	86	35		154	29%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	71,388	19,334	2,189	9,966	39,899	계속 정액지원
	2009	34,657	9,811	1,476	7,635	15,735	
	2010	36,731	9,523	713	2,331	24,164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계	1,433		430	1,003		신규
	2009	0					
	2010	1,433		430	1,003		

라.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표 1-10〉 경제산업국 10억 이상 사업내역(2010년 예산 기준)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2010) (억단위 반올림)
경제정책과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108억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25억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22억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47억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91억
전략산업과	첨단 전략산업 기획	63억
	자동차 산업 육성	61억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45억
	첨단문화 산업 육성	42억
	농축산바이오 산업 육성	29억
	벤처기업 육성	10억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31억
	과학문화 창달	12억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28억
기업지원과	금융 및 기술 지원	70억
산업입지과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221억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77억

제3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평가기준

■ 도비 사업 위주로 평가

-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를 관별하여, 도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 없는 국비 사업은 그대로 인정하고,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도비 사업 위주로 평가

■ 시대적 요구와 민선 5기 도정 방침과의 연계성

-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 민선 5기 도정 방침에 연계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

■ 사업의 필요성

- 당면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

나. 경제 산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 경제정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

-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 개선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 일자리창출 기반 구축
- 에너지 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1)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 개선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전통시장 활성화

- 도내 전통시장 현황
 - 시 장 수 : 75개소(상설 34, 정기 41 / 공설 39, 사설 36)

- 점 포 수 : 8,613개(시장당 평균 114개) 자기점포 2,733(31.7%), 임대 5,018(58.3%), 빈점포 등 862(10%)
- 상 인 수 : 16,361명(시장당 평균 218명 / 점포당 평균 1.9명)
- 상인회 조직 : 법적단체 43개소, 임의단체 17, 미구성 15
- 2010년에서 2014년 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지원 계획」 수립
 - 56개소 6개 과제 1,645억원
 - ① 문화관광 연계(6개소) 255억원
 - ② 「1시장 1주차장」 건립(11개소) 288억원
 - ③ 간판, 진열대 등 리모델링(14개소) 126억원
 - ④ 소공연장 조성 등 문화공간 조성(15개소) 230억원
 - ⑤ 장옥 정비 등 환경정비(16개소) 646억원
 - ⑥ 상인교육 등 경영혁신사업(매년 20개소) 100억원
- 2010년 시설현대화 및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 시설현대화 : 천안 성정5단지시장 등 11개소
 - ※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진입로, 전기, 소방시설 등
 - ※ '01~'09까지 59개소 2,129억원 투입 - 주차장, 아케이드 등 설치
 - 문화관광형 시장 : 공주산성·부여시장 2개소 206억원('08~'10)
 - ※ 공주 산성시장 : 다목적 광장 조성(3.7천㎡, 113억원)
 - ※ 부여 공설시장 : 전통체험장, 상설마트 재건축(4.9천㎡, 118억원)
- 2010년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등 경영혁신사업 추진 : 20개소, 10억원
 - ※ '01~'09까지 49개소 89억원 투입 -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등 실시
- 소액대출 자금 지원 : 11개 시장 9억원(227개 점포) ※ 점포당 평균 4,000천원
- 지역 민영방송(TV)을 통한 전통시장 홍보 : 21회
-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10~11월)

■ 대·중소 유통업체간 상생발전 지원

- 2010년 유통업구조개선 자금 지원
 - 2010년 유통업 구조개선자금(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0%) 지원
 - 지원 규모 : 20업체 20억원
 - 지원계획 공고('10.3.4)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추진
 -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부지 7,315㎡, 건축 1,254㎡/ 예산군 시행
 - 부지매입 완료(7,315㎡/ '10.3 예산), 토지 용도변경·설계 중
 - '10~'11까지 30억원(광특 18, 도비 2.7, 군비 6.3, 자부담 등)
-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현재까지 5개 시군 구성·운영(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

■ 안정적인 물가관리

- 홈페이지에 물가정보 제공 : 월 3회(16개 시군, 116개 품목)
- 중점관리 품목 집중 관리(100개 품목)
- 「50%할인 행사의 날」 운영, 옥외가격표시특구 지정 추진
 - 상수도료 감면, 쓰레기봉투 지원, 인식표제작 배부 등 인센티브 제공
- 물가안정대책 워크숍(1회),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1회) 개최
- 설, 6.2지방선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 합동 지도점검 등
 - 가격표시제 위반업체 행정처분

■ 소비자 권익 증진

- 2010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6개 분야 30개 과제
-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 : 106회(신문 90회, 방송 16회)
- 불만·피해사례 접수·상담 : 421건(정보제공 281, 피해구제 140)
- 법정 계량질서 확립
 - '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수립·추진
 - ※ 시·군별로 연말까지 추진, 상거래용 접시저울 등 7종
 - 상거래용 저울류 특별단속('10.1월) : 898업소(8업소 시정)

■ 2010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총계	10,826,940	13,289,140	△2,462,200	
	국 13,800			
	광 10,201,000			
	도 612,140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9,301,000	12,825,000	△3,524,000	
	광 9,301,000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400,000	400,000	0	
전통시장 홍보 지원	45,000	35,000	10,000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29,140	29,140	0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센터 운영	국 16,800 도 13,800 3,000	0	16,000	
중소유통도매물류센 터 건립	1,035,000 국 900,000 도 135,000	0	1,035,000	

■ 사업 평가

-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임. (전체 약 108억 중 93억원)
- 그런데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광특 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남도 가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
- 충남도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 4억원, 전통시장 홍보지원 4천5백만원,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사업 약 3천만원임.
- 상인들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현대화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수용 어려움 ⇒ 시장별·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5개년 지원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
- 상인들의 고령화(평균 53세)와 경영능력 취약, 낮은 상거래 현대화 수준(카드단말기 보급률 39.6%, PC 보유점포 13.3%) 등으로 시장 활성화 한계 ⇒ 시장경영진흥원 및 지역소재 대학 등과 협조, 지속적인
- 상인교육 실시로 상인들의 마인드 변화 촉진

(2)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요(지정 고시 현황 '08.5.6. 지경부 제2008-34호)

- 위 치 : 당진·평택항 주변 충남(당진, 아산, 서산), 경기(평택, 화성)
- 면 적 : 55.05km²(충남 3개 지구 29.6, 경기 2개 지구 25.45)
 - 충남 - 송악 13.03, 인주 13.03, 지곡 3.54 / 경기 - 포승 20.14, 향남 5.31

- 개발사업시행자
 - 총괄사업시행자 : 충남도, 경기도
 - 단위사업시행자 : 관련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민간(외국)기업
- 개발기간/사업비 : '08 ~ '25 / 74,458억원(국비 475, 지방비 4,779, 민·외자 69,204)
 - 충남 - 31,079억원(국비 475, 지방비 2,105, 민·외자 28,499)
 - ※ 송악('08~'25) 14,647, 인주('08~'25) 13,395, 지곡('14~'25) 3,037
 - 경기 - 43,379억원(지방비 2,674, 민·외자 40,705)
 - ※ 포승('08~'25) 36,993, 향남('08~'25) 6,386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직 현황

- 개청 : ' 08.7.22. 당진군 당진읍 원당드림타워 빌딩
- 기구 : 1청장, 2본부장, 6과, 1관1읍브즈만17팀1지소
- 청장 : 임기 3년(연임 가능), 충남도와 경기도가 번갈아 추천권 행사, 兩道 공동 임명(現 청장은 경기도에서 추천권 행사)
- 인력 : 정원 129명(충남 64, 경기 65) / 현원 124명(충남 62, 경기 62)
 - ※ 충남과 경기도가 직위, 직급, 직렬을 분배하고 3년마다 교체
- 2010년 예산 : 59억 4천 6백만원(兩道가 각 50% 부담)

■ 2010년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0년도예산
세외수입	5,946,000
순세계잉여금	946,000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000
- 경기도	2,500,000
- 충청남도	2,500,000

■ 2010년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10년도 세출예산	구 분	'10년도 세출예산
계	5,946,000		
인건비	218,801	직무수행경비	73,800
보수	108,507	직책급여업무수행경비	52,200
기계약근로자보수	45,056	직급보조비	9,000
간제근로자등보수	65,238	특정업무경비	12,600
일반운영비	2,763,630	연구개발비	1,210,000
사무관리비	1,844,950	연구용역비	1,200,000
공공운영비	591,880	전산개발비	10,000
행사운영비	326,800	일반보상금	597,200
여비	606,144	민간인국외여비	549,000
국내여비	235,944	외빈초청여비	40,000
국외업무여비	242,200	기타보상금	8,200
국제화여비	128,000	연금부담금 등	2,485
업무추진비	326,540	배상금 등	1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9,800	시설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740	자산취득비	67,4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000	도서구입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00	예비비	70,000

■ 사업 평가

- 황해자유구역청 예산은 충남도와 경기도가 반반 씩 부담. 사업비가 아니라 대부분 인건비, 조직유지비 등 관리비가 대부분 차지
- 현재 황해자유구역의 추진이 지체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매우 불투명한데다가, 일부 구역의 해제나 축소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토지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의 감축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황해자유구역청 파견 인원 감축을 통한 인건비 및 조직유지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3) 고용 촉진 및 노사 안정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충청남도 고용현황 진단

- (고용여건 개선)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회복세 전환과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정책에 힘입어 고용여건 개선

		<u>'08. 8월</u>	<u>'09. 12월</u>	<u>'10. 2월</u>	<u>'10. 6월</u>
· 취업자(천명)	:	995	912	896	1,015
· 고용률(%)	:	63.5	57.0	55.8	63.0
· 실업률(%)	:	2.1	2.9	4.3	2.1

- (고용의 질 개선)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는 감소하고 안정적 임금을 받는 상용근로자는 증가
- 임시직, 일용직(천명) : '09. 6월) 233 → ' 10. 6월) 218(6.4% ↓)
- 상용근로자(천명) : '09. 6월) 350 → ' 10. 6월) 394(12.6% ↑)
- (경제성장과 고용의 부조화) GRDP 성장률 8년 연속 1위 등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첨단지식산업화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로 선진국형 고용 없는 경제성장

		<u>'00년</u>	<u>'07년</u>	
·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충남	30.8	21.3	(30.8% ↓)
	전국	36.6	30.1	(17.7% ↓)

- (구인·구직 미스매치 상존) 지역대학 졸업자의 상당수가 수도권기업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관계로 청년실업자는 감소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 호소

□ 친서민·생산적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슬레이트 지붕개량, 다문화가족 지원 등 10대 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행정보조(전산, 민원), 국토공원화 등 공공적 사업 추진

■ 2010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총계	2,165,300 국 746,000 분 96,000 도 1,323,30	2,952,693	△787,393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48,000	48,893	△893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	888,300 국 676,000 도 212,300	1,101,600	△213,300	
공공근로사업	96,000 분 96,000	1,164,200	△1,068,200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683,000 국 70,000 도 613,000	238,000	445,000	
기능경기대회 지원	450,000	400,000	50,000	

■ 사업 평가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과 민간부문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지역고용총량 확대 도모가 필요
-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제도 도입(관련규칙 제정) 및 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 지역·자립형공동체사업 등과 연계 사회적기업 발굴 강화가 필요

(4)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까지 일괄지원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운영 : 5개소(道, 천안·아산·서산·당진)
 - － 시·군 취업정보센터 전담인력 배치 : 12개 시·군
 - － 읍·동 주민자치센터 취업지원 최일선 창구화 : 66개소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 －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 소재 기업이 적정수
준의 신규투자 후 신규고용을 창출할 시 지원하는 제도로 국비(80%)+
도비+시·군(20%)

- 공공기관 행정인턴쉽 운영
 - 외국어·정보화 교육, 재직자 직업훈련 알선 등 취업 경쟁력 강화 지원

■ 2010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총계	국 광 도	4,688,000 1,804,000 2,200,000 684,000	1,660,000	3,028,000	
외국인근로자 지원		20,000	20,000	0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25,000	25,000	0	
맞춤형 기능인력양성		100,000	540,000	△440,00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광 도	2,365,000 2,200,000 165,000	1,075,000	1,290,000	
공공기관인턴제 운영	국 도	2,178,000 1,804,000 374,000	0	2,178,000	

■ 사업 평가

- 공공기관 행정인턴쉽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주 40시간 → 30시간)과 급여 감소로 대학생 참여 기피 및 중도포기 다수 발생

(5) 에너지 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공공 및 민간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99~'10)
 - 사업량 : 1,271개소(태양광열 272, 그린홈 992, 기타 7)
 - 사업비 : 55,765백만원(국비 31,792, 지방비 16,459, 자담 7,514)
 - ※ '10년 671개소 22,364백만원(국비 11,179, 지방비 5,979, 자담 5,206)
- 신재생에너지 보급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09.12, 예경연)
 - '10~'15(6년간)까지 6,334억원 투입, 보급비중 확대(0.2%→1.0%)
 - ※ 국가 보급목표 : ('08) 2.4% → ('15) 4.3%
 - '15년 전국대비 3.4% 달성 목표(원유 2,932천 배럴 수입 대체효과)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국 도	9,187,000 9,089,000 98,000	682,000	8,505,000	
에너지 홍보 및 교육	국	90,000 90,000	70,000	20,000	
에너지수급 기반 조성	국 도	152,000 77,000 75,000	212,000	△60,000	
지역에너지사업	국	8,785,000 8,785,000	400,000	8,385,000	
농어촌전기공급지원	국 도	160,000 137,000 23,000	0	160,000	

■ 사업 평가

- 충청남도는 에너지 다소비산업(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구조로 단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에 한계
- 충청남도 재정여건상 도 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 재원조달에 어려움

다. 전략산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 전략산업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

- 지방전략산업 육성 사업
 - 첨단 전략산업 기획
 - 자동차 산업 육성
 -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 첨단문화 산업 육성
 - 농축산 바이오 산업 육성
- 벤처기업 육성 사업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 과학 문화 창달
-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1) 지방 전략산업 육성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전략산업 현황

- 4대 전략산업 : 전자정보,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 추진기간 및 사업비
 - 1단계('02 ~ ' 07)사업비: 1,012억원 (국비 698, 지방비 166, 기타 148)
 - 2단계('08 ~ ' 12)사업비: 1,625억원 (국비 1,001, 지방비 400, 기타 224)
 - ※ ' 08 ~ ' 10 사업비 집행액: 1,111억원 (국비 680, 지방비 288, 기타 143)
- 사업추진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및 산하 센터, 충남동물자원센터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1단계 : 전략산업별 H/W 위주의 거점기반 구축
 - 4대 지역특화센터 건립(' 05 ~ ' 07) : 영상미디어센터(' 05),
 - 디스플레이센터(' 06), 동물자원센터(' 06), 자동차부품센터(' 07)
 - 공용장비 구축 310종, 창업보육 122업체, 인력양성 838명
- 2단계 : 특화센터와의 연계, R&D 등 S/W사업 중점 지원
 - 기술지도 2,515건, 인력양성 3,051명, 창업보육 30업체, 장비구축 108종
 - ⇒ 기업지원 육성 394업체, 매출액 4,520억원, 고용 1,526명(' 09년)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지방전략산업 육성사업 총계	광 24,418,500 도 13,300,000 11,118,500	24,769,900	-351,400	
첨단전략산업 기획	광 6,334,500 도 2,900,000 3,434,500	5,369,900	964,600	
자동차 산업육성	광 6,134,000 도 3,200,000 2,934,000	8,030,000	-1,896,000	
디스플레이 산업육성	광 4,520,000 도 1,800,000 2,720,000	4,620,000	-100,000	
첨단문화산업 육성	광 4,200,000 도 3,300,000 900,000	3,600,000	600,000	
농축산바이오 산업육성	광 2,930,000 도 2,100,000 830,000	3,150,000	-220,000	

■ 참조 : 충남 테크노파크 2011년 수입예산 총괄 내역서

(단위 : 천원)

예산액	산출기초					
	[국비]	[도비]	[시군비]	[대학]	[기타]	[자체]
57,839,094	18,265,502	16,850,511	2,004,000	195,000	4,403,575	16,120,506

■ 지방전략산업 육성 사업 평가

-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 전략산업이 정해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로 먼저 국비가 결정되고 일정율의 도비가 의무적으로 매칭되므로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곤란
- 몇 개의 산업을 정하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 지경부에서 국비보조가 내려오므로 지역실정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광역 선도산업과 중복성 문제가 있으나 충남 독자적으로 조정이 곤란
- 2011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수립중이며, 2011년도 광특지원 지방비 부담액이 다음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어, 2011년도 예산도 충남도 독자적으로 수정하기 곤란
 - － 전략산업의 총예산(국비+지방비) 276.3억원 ⇒ 269.798억원(△6.51억원)
 - － 전략산업의 국비 201.5억원 ⇒ 191.43억원(△10.07억원)
 - － 전략산업의 지방비 74.8억원(현금 기준) ⇒ 78.368억원(3.57억원 증액)
- 다만 실시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성과지표에 의한 정기적인 확인평가로 지원성과 극대화, 평가환류 종합관리시스템 가동,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술개발사업화 및 상품화를 통한 道內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 (충청남도 산업경제국 내부자료)

① 단순예산집행	·산술적인 인력양성, 장비구축, R&D 개발 등 확보된 사업비 집행에 치중
② 장기분석미흡	·사업비 집행실적 중심의 성과측정으로 장기지역산업 유발효과 등 전체적 성과측정 미흡
③ 피드백 미흡	·단위사업별 사업목적에 대한 성과분석 미흡으로 우선순위 선택 등 피드백 미흡

(2)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경부 사업과 중기청 사업으로 나뉨
- 지경부사업 ; 지역혁신센터운영, 지역연고산업육성 등 5개사업 248억원
 - － 지역혁신센터 운영(6개센터 63억원) : 대학 특성화분야의 구축장비 활용, 연구개발 등 지원
 - － 지역연고산업 육성(중부대, 청운대, 건양대, 선문대, 청양대학 76억원) : 금산 인삼약초, 보령 머드, 서천 한산모시 등 특화산업 육성
 - －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호서대, 신성대, 아자대 57억원)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산업기술 개발 촉진
 - － 지역산업·대학 특성화 공학프로그램 운영지원(7개대학 35억원)
 - － 디자인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한서대 17억원)
- 중기청사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창업보육사업 등 2개사업 87억원
 -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78개과제 66억원)
 - － 창업보육(BI)사업(21개센터 21억원) : 예비·신규사업자 입주 공간 제공, 기술경영 등 지원

■ 2010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3,113,360	2,783,360	330,000	(국가직접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1,300,000	1,300,000	0	(국가직접지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500,000	250,000	250,000	(국가직접지원)
산학협력실 지원	250,000	150,000	100,000	(국가직접지원)
산업기술기반조성 디자인표면처리 기술개발	100,000	100,000	0	(국가직접지원)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00,000	740,000	△540,000	(국가직접지원)
두뇌사업지원	43,360	43,360	0	(국가직접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50,000	30,000	20,000	(국가직접지원)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원	100,000	0	100,000	(국가직접지원)
중소·벤처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50,000	50,000	0	(국가직접지원)
감성품질디자인 구축사업	100,000	0	100,000	(국가직접지원)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	220,000	0	220,000	(국가직접지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지원	200,000	100,000	100,000	(국가직접지원)

■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사업 평가

- 국가 직접 추진 사업으로 충남이 자율적인 예산 조정이 실제 불가능
- 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내용적으로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인력·자금·경영·정보를 연계한 종합지원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라. 기업지원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 기업지원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

-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지원 사업

(1)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중소기업 자금지원
 - － 중소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자금지원 재원 : 육성기금 1,491억원, 일반회계 58억원
- 2010년 지원목표 : 5,100억원(4,320업체)

계	창업자금	경쟁력강화	경영안정	혁신형자금	기업회생	소상공인
5,100	800	800	2,100	600	100	700

- 1993 ~ 2009년까지(17년간) 지원 실적 : 4조 2,052억원

- 육성기금 1,491억원 중 652억원을 통합기금으로 운용하여 실질적인 운용액은 839억원(기금관리은행과 융자협약 애로)
 - ※ '10.6.30기준 대출잔액 5,812억원, 기금운용액의 7배 규모
- 정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16년까지) 및 정기에금 예치금리 하락으로 발생이자 수익 감소 등 기금잠식 예상 ⇨ 國費 지원 건의 및 연차적인 道費 출연(5년간 100억원) 필요
-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긴급자금 및 道 정책자금 등
 - 보증지원 확대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 2010년 보증목표: 보증규모 2,300억원(8,500건)/ 보증재원 1,069억원
 - 보증대상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 보증한도 : 8억원 이내(보증수수료 : 연 0.5~2% 이내)
- 고객중심의 신용보증제도 개선(은행간 전자보증시스템 운영 등)
 - 신용보증실적 : '98~'09년까지(11년간) 보증 실적 : 1조 2,404억원
 - 지역희망금융사업 등 저신용사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
 - 소상공인 지원자금(정부 및 우리 道), 나들가게 육성자금,
- 유통업구조 개선자금 특례보증 등 시행
 - 2010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화보증 시행
 -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보증시행
- 신용보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이버 보증시스템」 운영
- 각종 특례보증 등 신청건수 급증에 따른 처리 지연 대응
 - 계약직 7명 충원, 처리기간 단축(10일 → 7일)

■ 2010년 예산(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금융 및 기술 지원 총계	6,928,303			
국	888,303	8,092,379	△1,164,076	
도	6,040,000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888,303	682,379	205,924	
국	888,303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220,000	220,000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5,820,000	7,170,000	△1,350,000	

■ 사업 평가

-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의 경우 앞으로 고객 Needs에 맞는 보증상품 지속 개발하고 정부의 신규기업 지원시책에 능동적 대응, 보증재원 확충을 통한 수혜기업 확대, 보증재원 확충 필요 : 10년) 1,069억원 → ' 15년) 1,500억원
- 현재 충남도청 내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여러 부서로 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기능의 재편제가 필요.
 - 도의 종합적 중소기업 지원 담당 부서가 없음
 - 전략산업과는 충남의 4대 전략산업만 지원 담당
 - 통상지원과는 충남 중소기업의 통상업무만 지원 담당
 - 기업지원과는 경영 및 자금 지원만 담당
 - 따라서 중소 제조업과 중소 서비스업 모두를 포괄하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충남도청 전체의 종합적 중소기업 지원 조직이 필요함

마. 산업입지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 산업입지과 10억 이상 주요 사업

-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1)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충청남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 78~'10.현재까지, 총 134개 단지 106,973천m²(3,236만평) 지정
 - 국가산단 : 5개 단지 26,411천m²
완료 3개소 10,850천m² / 조성 중 2개소 15,561천m²
 - 일반산단 : 41개 단지 58,289천m²
완료 16개소 14,532천m² / 조성 중 25개소 43,757천m²
 - 농공단지 : 86개 단지 13,241천m²
완료 71개소 10,944천m² / 조성 중 15개소 2,297천m²
 - 기타단지 : 2개 단지 9,032천m²(완료)
 - 총 전국 831개 단지 1,365,986천m²의 7.8% 해당 (전국 6위)
- 2010년 충청남도 일반산업 단지 신규 지정 계획
 - 일반산단 : 6개 단지 9,700천m²
대상단지 : 천안 수신, 공주 가산, 공주 신평, 아산 신창, 예산 예당, 합덕 순성테크노
 - 투자의향서 접수 : 8개 단지 9,018천m²
대상단지 : 연기 명학, 서산 KCC, 예산 몽곡, 서산 도시형, 연기 신방, 아산 둔포, 아산 음봉, 합덕2
 - 산업시설용지 분양 : 35개 단지 16,671천m²
신규분양(16개 단지) : 분양대상 9,476천m²
 既분양중(19개 단지) : 미분양 7,195천m²(분양완료 5,000천m²)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총계	22,165,000 광 분 21,939,000 도 150,000 76,000	16,671,826	5,493,174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21,939,000 광 21,939,000	16,415,000	5,524,000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 지원	195,000 분 150,000 도 45,000	256,826	△61,826	
산업단지 조성지원	31,000	0	31,000	

■ 사업 평가

- 경기 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수요 및 분양률 감소
 - 07년까지 분양실적(97.5%) : 50,986천㎡/49,705천㎡, '08~'10.3월까지
분양실적(41%) : 12,199천㎡/5,000천㎡
- 대부분 수요예측 없이 건설업자·특별법인 주도로 산업단지 개발
 - 도내 134개 단지 중 건설업자·특수법인 개발 → 50개 단지(37%)
 - 한화 대덕테크노밸리 복합산단 성공 → 他 건설사 등 분양대책 없이 참여
 - 아산 공세지구 → 투자의향서, 부적격(갯벌 매립)지 통보
- 2015년까지 『산업단지 공급계획』 추세 분석결과, 물량감소 전망
 - '11~'15년까지 2,000만㎡소요(I/O투입 산출모형,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 따라서 투자의향서 신청부터 산업단지 조성까지 엄격한 통제 및 유도가 필요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입지 지정 제한 필요
 - ※ 권역별 물량조정, 미분양률 30% 이상 지역 제한제도 등 활용

(2)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충청남도 농공단지 조성 현황
 - 총 86개 단지(조성완료 71, 조성중 12, 실시계획 수립중 3)
 - 조성완료 71개 단지 중 – 10년이상 6, 15년이상 21, 20년이상 25
 - 가동상황 – 781개 업체(96.4%) ※ 분양 94.6%, 미분양 5.4%
- 2010년 충청남도 농공단지 신규 지정 계획
 - 농공단지: 2개 단지 300천㎡(부여 은산2, 청양 운곡)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 농공단지 국·도비 지원 : 7개단지 73억원(광특 68, 도비 5)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7,736,000 광 6,779,000 도 957,000	8,438,500	△702,500	
농공단지조성사업	7,292,000	8,424,500	△1,132,500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14,000	14,000	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430,000	0	430,000	

■ 사업 평가

-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재정확보, 고용 등 지역발전 견인 그러나, 조성하는데 중점, 사후관리는 소홀(관리자: 시장·군수)
- 농공단지의 사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市郡 관심 부족
 - － (중양) '11년 광특예산 투입, (市郡)개선비 미부담 전망(사업 후순위 책정)
- 11년부터 오·폐수 처리기준 강화, 배출기준 충족 한계
 - － 오·폐수처리시설 개선 → 「국가+원인자」 부담 원칙, 분담금 적립 애로
 - － 서천 중천 시물레이션(LP) 결과 평균 7백만원 → 24백만원 경비소요 분석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수급, 경영 등 해결할 문제 산적
- 농공단지 재생사업에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차원의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운영('10~'13년까지 3단계 실시) 계획 준비중
 - － 1단계('09) : 기초체력 회복(실태조사, 간담회, 63억원 투입)
 - － 2단계('10~'11) : 노후시설 경영지원(노후시설 210억원, 오·폐수시설 208억원)
 - － 3단계('13) : 「농공단지 재생프로그램」 정착 단계 - 평가 및 환류
- 지방차원의 특별지원조례 제정 - 「농공단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준비 중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 경제정책과

- 국비 및 광특회계 사업의 경우 국가 직접 추진 사업으로 충남이 자율적인 예산 조정이 실제 불가능
-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임. (전체 약 108억 중 93억원)
- 그런데 전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액 광특 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남도 가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
-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 예산은 도비 예산 총액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으나, 낭비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현행 유지
- 대신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에너지 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사업 역시 대부분 국비 사업으로 충남의 자율적 예산 편성 권한이 제약됨.

사업명	예산액 (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10,826,940	10,826,940		현행 유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2,500,000	2,250,000	-250,000	10% 축소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2,165,300	2,165,300		현행 유지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4,688,000	4,688,000		현행 유지
에너지개발 및 수급안정 확립	9,187,000	9,187,000		현행 유지

■ 전략산업과

- 국비 및 광특회계 사업의 경우 국가 직접 추진 사업으로 충남이 자율적인 예산 조정이 실제 불가능
-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예산액 배정으로 충남의

예산 자율성을 높이기 어려움

- 중앙정부가确定的 2011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내용을 그대로 인정
- 4대 전략산업 관련 예산 축소액은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의 예산액임.
- 전략산업 진흥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이 줄어들었으므로, 충남 예산도 같은 비율로 축소 가능
- 단 농축산바이오 산업을 위한 예산만 증액 인정
- 과학문화 창달 예산은 전시성 행사 축소 유도
- 에너지 개발 관련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증액 필요성 있으나, 전시성 예산 삭제로 총액은 현행 유지

사업명	예산액 (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첨단 전략산업 기획	6,338,700	4,497,990	-1,840,710	축소
자동차 산업 육성	6,134,000	5,021,000	-1,113,000	축소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4,520,000	1,805,000	-2,715,000	축소
첨단문화 산업 육성	4,200,000	1,220,999	-2,980,000	축소
농축산바이오 산업 육성	2,930,000	5,870,000	2,940,000	증액
벤처기업 육성	1,020,000	1,020,000	1,020,000	현행 유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3,113,360	4,833,000	1,719,640	증액 (국고지원 증액)
과학문화 창달	1,180,000	1,000,000	-180,000	축소 (전시성행 사 축소)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2,821,000	2,821,000	2,821,000	현행 유지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은 민선 5기 공약과 연계하여 증액 필요성 있으나, 전시성 예산 예산 삭제로 총액은 현행 유지
-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이자 보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예산 10% 절감
-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임

사업명	예산액 (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776,000	776,000		현행 유지
중소기업 금융 및 기술 지원	7,043,303		-704,330	축소
중소기업 육성 이차 보전금 전출	500,000	500,000		현행 유지

■ 산업입지과

-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대부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지원 사업으로 광특회계 사업이므로 예산 변동 불가능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역시 대부분 광특회계 사업이므로 예산 변동 불가능

사업명	예산액 (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지원	22,168,000	22,168,000		현행 유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7,736,000	7,736,000		현행 유지

제4장 충남 경제산업 분야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따뜻한 충남 경제 육성

- 양적 성장을 넘어선 질적 성장 추구
- 외생적 발전을 넘어선 내생적 발전 추구
- 사람 중심 충남 경제 추구
- 호혜의 경제, 지역 상생 및 순환 경제 추구
- 기존산업(철강, 정유화학 등)의 녹색화

나. 추진 전략

■ 충남 사회적 경제 발전 기반 구축

-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주민 주도 협동조합 육성
- 지역통화 (LETS) 활성화

■ 지역 고용 및 소득 창출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 지역 연고 산업 육성
- 강소기업 육성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 지역을 이끄는 혁신 지도자 육성
- 주민 역량 강화

■ 충청 자립 광역 경제권 구축

- 충청 광역 경제권 육성을 위한 광역경제권 협력 모델 정립
- 충청권 3개 시도 협력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공동 대응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충남 사회적 경제 발전 기반 구축

(1)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에 기초해서 국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공공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혹은 공동체 기반 경제) 육성이 지역 경제 정책의 새로운 조류로 각광 받고 있음.
 -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통화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등임
-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를 위한 준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준비 없이 곧바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보다 먼저 지원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음
 - 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인건비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차후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충남도청 및 각종 공공기관, 민간시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민관 위원회” 를 구성
 -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이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30 여명의 관련 공공 기관과 민간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
- 이 위원회 산하에 가칭 “충남 사회적 기업 지원단”, “충남 지역협동조합 지원단”, “충남 지역통화 추진단” 등 각 분야별 실무사업단을 공공-민간 합동 조직으로 설치 운영
 -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이끌어내기 위해 공공 부문이 주도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민간 부문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
 - 농협, 축협, 생협 등 지역에 뿌리내린 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 육성 및 신규 설립 지원
 - 지역화폐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 사업 실시

- 포럼 아이디어 공모, 심포지움 등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 사업
- 2014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가칭 “충남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 조성”
- 사회적 경제 지원의 법적 근거로 가칭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제정”
- 재원조달 방안 : 도비와 민간자본으로 조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및 추진체계 구축 (도비 기준)	2억 (연구용역비 및 위원회 운영비)	35억 (기금조성시작)	35억	40억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 초 연구 용역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상반기 조례 제정, 하반기 위원회 및 산하 실무단 구성
 - 2011년부터 기금 조성 시작
 - 2012년부터 지역화폐 시범사업 추진
 - 2014년 목표로 100억 기금 조성 완료

■ 기대효과

-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결속 가능
- 호혜적, 포용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현재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실업극복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목적의 다양한 사회적 기업 정책 추진이 제약되며,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 부족
 - 인증을 받아야만 정부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서 사업 내용이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의 요구보다 정부 인증 기준에 맞추어지게 됨. 또한 사업의 정부 의존성을 높여서 재정자립성을 저해

- 인건비 지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지원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정부 지원이 끊길 경우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될 우려
- 사회적 기업 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 자문
- 중앙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필요
 -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란 중앙정부의 까다로운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는 상이한 인증 기준 (예:지역사회 공헌도 등) 과 지원 방식을 추구하는 것임.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다양한 사회적 경제 육성 사업 중에 가장 핵심 선도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우선 추진
-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
-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 설립 및 원스톱 사회적 기업 운영 지원
 - 센터의 설립 목적은 유망 사회적 기업 발굴 및 다양한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임
 - 지원 예시: 경영 지원, 기술 지원, 시설비 지원, 경영자문료 지원,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 센터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우선 도 단위에서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시군 단위로 센터 설치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도비와 시군비로 추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도비)	10억	30억	40억	50억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 2011년에는 도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를 설치, 2014년까지 각 시군 단위로 센터 설치

■ 기대효과

- 원래의 사회적 기업의 취지에 맞는 지역 사회 및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

나. 지역 고용과 소득 창출

(1) SSM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진입하면서 영세 유통업이 몰락하고 서민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짐.
-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고용이 315명 늘어나는 대신 그것의 3.2배인 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 (중소기업청)
-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경제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제도가 있음
 - 독일 : 대형마트 입점시 인근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의 10% 이상이 타격을 받을 경우 입점 백지화, 일요일, 공휴일 폐점, 평일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만 영업 허가
 - 프랑스 : 300m² 중대형 마트 입점시 허가절차 필요, 일요일 폐점, 평일, 토요일 밤 10시까지만 영업 허가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규제 관련 법률(유통법, 상생법)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충남도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침 마련
-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지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
 -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을 통해 입점 가능 면적 축소
 -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대규모 판매시설 입점 규제

-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 사업 기간 :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조례 제정
- 재원조달 방안 : 특별한 소요예산 필요 없음
- 사업 추진 일정 : 공감대 형성 후 가능한 빨리 추진

■ 기대효과

- 영세유통업 보호와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의지 표현 및 관련
- 지원 정책 근거 마련
-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지 제한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

(2) 지역 자원순환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지역의 내발적 발전 잠재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 내부에 있는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도내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벤치마킹 사례 : 일본의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법(약칭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법)’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지역의 농림수산물, 기술, 전통문화 등 충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도에서 제출받은 후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창업 및 금융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도에서 우선적으로 마련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도에서 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서 사업 공모 후 각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중 우수 기업 선정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전액 도비 추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 자원순환형 중소기업 육성 사업	10억	20억	30억	30억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자원 순환을 통한 역내 순환형 지역경제 확립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기여

(3) 지역연고산업 육성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오랫동안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 연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현재 충남의 경우 한산 모시, 유구 자카드 섬유 등 일부 지역연고산업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기서 지원받지 못한 다수의 지역연고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은 공공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
-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지역연고사업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함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연고사업은 제외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역연고사업 지원에 초점
- 지원 방법 및 지원수단은 현행 국비 지원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되, 주민과 일선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지역연고사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 관련 대학, 컨설팅 기업,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제품 개발 관련 아이템 아이디어 지원, 기술 지원

- 마케팅 지원 : 브랜드 개발 지원, 포장 및 디자인 지원
- 1시군당 1지역연고산업 발굴을 원칙으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선정
- 사업 기간 : 2011년 사업 기획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 본격 시작
- 재원조달 방안
 - 도비와 시군비 매칭, 1시군 1연고사업 지원
 - 개별 사업당 매년 3억원씩 3년간 지원하되, 매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판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 연고 산업 육성(도비 기준)	기획	30억	30억	30억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 사업 기획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사업 본격 시작

■ 기대효과

- 지역 연고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

다. 지역 인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1) 충남 지역 혁신 지도자 육성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앞으로 지역 발전을 좌우하는 요소는 역량 있는 지역 혁신 지도자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음. 지역 발전을 선도할 역량 있는 지역혁신 지도자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양성하여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코자 함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충남의 지역공동체 및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미래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이를 위한 전담추진기구로서 가칭 ‘충남 혁신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여기서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벤치마킹 사례 :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강원도), 지역재단 교육프로그램

-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예시
 - 사회적 기업가 육성
 - 농어촌혁신리더 육성 과정
 - 청년지도자 양성 과정
 - 청년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 중소도시 상공업자 리더양성 과정
- 농촌지역 인재는 농림수산물 담당, 도시지역 인재는 경제산업국 담당으로 역할 분담
- 충청남도 지역 인력개발 육성 계획 수립
 - 연차별 교육대상과 인원, 교육방법과 내용, 사후지원 프로그램, 인센티브와 교육 인증 시스템, 추진체계 등 중장기 혁신 인력양성 계획
 -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과 연계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충남도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역혁신 인재의 양성 프로그램 운영	4천만원	1억	1억 5천	2억
충남 혁신인재양성 아카데미 설립 및 충남 지역 혁신리더 양성 위원회 운영	2억	3억	3억	4억
충청남도 지역 인력개발 육성 계획 수립	5천만원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추진

■ 기대효과

- 충남의 내생적 발전의 기틀이 되는 혁신 지도자 다수 양성

(2) 주민주도 지역 소득 증대 공모 사업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원 개발을 위해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주도로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고,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적극 지원

- 이를 통해 주민들의 내부 역량 강화 및 주도적 참여 의식 고양
- 벤치마킹 사례 :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 현재 유사 사업을 시행 중인 강원도는 연간 70여억원, 진안군은 연간 30여억원의 예산 할애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1단계 사업으로 지역주민, 유관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거나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기획비와 활동비를 보조(각 그룹당 1,000~2,000만원, 약 20개 사업 공모)
- 2단계로 이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와 소규모 파일럿 사업에 대해 수년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각 사업당 3년간 3~5억원, 약 20개 사업 공모)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계속 추진
- 2011년부터 2년간은 1단계 사업 추진,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
- 추진 조직 : 농촌지역 사업은 농림수산국 담당, 도시지역 사업은 경제산업국 담당으로 역할 분담
- 재원조달 방안 :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되, 충청남도 균특회계 사업과 연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민 주도 지역 소득 증대 공모 사업	4억	5억	60억	80억

- 사업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로 수요자 지향적 지역 개발 사업 추진

[참조 1] 일본 中小企業振興基本 條例

-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이 지역경제의 주역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규정한 조례
 - 동경도 스미타 구, 오오사카부의 하찌오 시 등 일본 전역에서 제정/ 유럽의 중소기업 현장에 기초
 - 특히 2001년에 제정된 오오사카의 하찌오 시의 중소기업 지역경제진흥조례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의 고도화와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노력’도 규정하고 있음.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대기업의 책무도 명기함. 그 후 한 대기업의 공장폐쇄문제가 일어나자 시장이 이 조례에 기초하여 조업계속과 공장 폐쇄의 재고를 요청할 수 있었음.
 -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해 기업, 지자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산업진흥회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지역활성화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있음(岡田知弘, 2005).
- 이 조례에 의해 각 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음 - 그 예가 공공기관의 수발주 시 수의계약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치 시행/ 또 각종 지원 재정상 금융상 지원 시책을 실시

■ 중소기업 진흥조례의 구조

구 분	내 용
전문	•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조례의 필요성
목적(제1조)	• 기본이념에 따른 중소기업의 진흥 • 현의 경제의 발전과 현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
정의(제2조)	• 중소기업자 산학관민의 제휴 지역 만들기
중소기업 진흥의 기본이념(제3조)	• 중소기업의 진흥은,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응한 경영의 향상 및 개선을 향한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 중소기업의 진흥은, 중소기업의 경영의 향상 및 개선과 지역 만들기에 지역의 활성화가 상승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관계자의 책무·역할등(제4~10조)	• 현의 책무 • 중소기업자등의 노력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관한 단체 등의 역할 • 대기업자의 역할 • 대학의 역할 • 현민의 이해와 협력 • 시읍면의 협력
기본방침의 책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향/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 수속: 중소기업등의 의견 청취 공표, 현민의 의견 청취 → 고려해 책정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기본적 방향 (제12~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등에의 의욕적인 노력의 촉진 • 제후의 촉진 • 경영 기반의 강화의 촉진 •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의 지원 • 지역 만들기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
시책 실시상의 배려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서 해당 시책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 수주 기회의 확보(제19조) • 조사 및 연구(제20조) • 재정상의 조치(제21조)

■ 이 조례를 통한 각종 중소기업의 지원 내용

- 경영 혁신의 촉진
 - 중노년자들의 창업이나 경영 혁신 승인 기업에의 현 제도 용자와 관련되는 이자보급
 - 창업이나 경영 혁신, IT등의 전문가의 기업에의 파견
- 창업 및 재생 지원 : 인큐베이션 시설(후나바시시)의 설치 · 전문가의 배치
- 사업 승계의 원활화
- 중소기업의 해외 전개 지원
 - 해외 특허 출원에 필요로 하는 비용(출원 비용, 번리사 비용, 번역료 등)의 조성
 - 국제 매칭
-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와 제휴한 중소기업의 활성화
 - 대형점과 지역 상업의 공생 · 지역 공헌등의 가이드 라인의 책정
- 경제발전과 밸런스를 잡은 규제, 규제완화의 대전

- 지역 자원 브랜드화와 관련되는 발굴·개발·프로모션등의 지원
- 기술력의 향상, 기업 체류의 촉진
- 중소기업의 IT(정보 통신 기술) 리 활용의 촉진
- 자금 조달의 원활화 : 보증인이나 담보에 의하지 않는 융자의 창설
- 관공수시책의 추진
- 상담·지원 기관, 기능의 충실
- 인재 확보·인재육성: 청년 캐리어 센터에서의 청년 취업 지원

[참조 2] 도쿄도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안)

http://www.pref.chiba.lg.jp/syozoku/f_keisei/chougi/genki/kouhyou/housin-keikaku.html

■ 제안 이유

- 도쿄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경영 규모는 10명 미만이 78%, 4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57%를 차지해 경영 기반도 취약합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을 둘러싸는 상황은, 엔고 불황과 거기에 계속되는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의 불황의 영향을 시작해 생산 거점의 해외 유출, 대형점이나 체인점의 무질서한 진출등의 영향을 받아 이것에 작년이래의 원유·물가 상승이 뒤쫓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도쿄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전에 없고 심각하고, 나라나 자치체의 지원이 절실, 긴급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의 자치체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련되는 조례는, 현 단계에서 11 부현, 도내 자치체에서는 18구에서 제정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은, 나라와 이시하라 동경도의 행정의 대기업 우선의 정책의 아래에서, 도쿄도의 중소기업 진흥의 자세를 확립해, 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조례를 정신 규정에 끝내지 않기 위해(때문에), 기본계획이나 분야별·업종별 계획의 책정, 공업·상업 집적의 활성화 등 중소기업 진흥을 진행시키는데, 최저한의 기본 시책을 포함시켰습니다.
- 이번 의회에 제출해, 각 의원의 찬동을 얻고, 제정에 이르게 한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례 내용

구 분		내 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는, 정치·경제·문화가 집중하는 수도인 것과 동시에, 만들기, 지역 상업, 각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종 다양한 산업이 집적하는 도시로서 발전해 왔다. • 그 성장과 발전의 상당수는, 선인들의 끊임 없는 노력에 의해서 구축할 수 있던 것이며, 그 중심에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있던 것을 잊을 수 없다. • 그런데, 근년, 사회경제 활동의 국제화나 도시 활동의 활발화 등에 의해, 지역 산업이나 경제의 변화가 현저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고 있다. • 도내의 중소기업은, 도교에 있어서의 활력의 원천인 것과 동시에, 도민 생활에 불가결한 존재이며, 그 진흥은 동경도의 행정의 중요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도교도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그 기본이념, 기본 시책 그 외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도교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책무등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례에서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데 따른다. 1.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기본법(쇼와 38년 법률 제 154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자이며,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기업자법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소규모 기업자이며,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교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서, 다수의 취업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도교의 사회·경제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어, 그 활동은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도민 생활의 안정 향상, 게다가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인 것에 한아 봐, 그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조 (도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는, 전조에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해, 및 실시하는 책무를 가진다. 2. 도는, 지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에 있어서는, 구 시읍면,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단체, 산업에 관련되는 단체, 지역 주민등과의 제휴, 협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5조 (중소기업자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는, 제3조에 정하는 기본이념에 한아 봐, 지역사회와 제휴하고, 그 기업활동을 실시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도민의 이해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은, 지역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진흥이, 지역사회의 안정과 도민 생활의 안정 향상에 기여하는 것에 한아 봐, 도내에서 생산되어 또는 제공되는 물품등 및 산업에 관련되는 활동에 대하고 이해가 깊어져 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소규모 기업자에게의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는, 소규모 기업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에 있어서는, 경영 자원의 확보가 특히 곤란한 소규모 기업자의 사정을 근거로 해 소규모 기업자의 경영의 발전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 세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 진흥 기본계획의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때문에), 안·장기의 중소기업 진흥 기본계획을 책정해야 한다. 2. 지사는, 전항의 중소기업 진흥 기본계획을 정하는에 있어서는, 미리 도교도 중소기업 진흥 대책 심의회 조례(쇼와 31년 도교도 조례 제3십삼호)에 규정하는 도교도 중소기업 진흥 대책 심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구 분		내 용
제2장 기본적 시책	제9조 (분야·업종별 진흥 계획의 책정)	• 도는, 전조의 중소기업 진흥 기본계획에 근거해, 분야별 및 업종별의 진흥 계획을 책정해, 이것에 근거하는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도쿄도 중소기업 백서)	• 도는, 도내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도쿄도 중소기업 백서로서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재정상의 조치)	• 도는, 본장으로 내거는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2조 (구 시읍면의 지원)	• 도는, 구 시읍면이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진흥책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협력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공업의 집적의 활성화)	• 도는,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일체가 되고 있는 공업 집적지역에 대해서,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전통·지방특색산업의 육성)	• 도는, 도쿄에 있어서의 전통 산업이나 지방특색산업을 지정해, 그 보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상업의 집적의 활성화)	• 도는, 중소기업인 소매상 업자 또는 서비스업자에 의한 상가 그 외의 상업의 집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가등이 실시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고객 그 외 지역 주민의 편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거래의 적정화)	• 도는, 중소기업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 (자금의 공급의 원활화)	• 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의 공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탁 원자를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신용 보완 사업의 확충, 민간 금융 기관의 협력의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중소기업에의 공계약의 확보)	• 도는,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물품, 역무, 공사등에 대한 수요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에 있어서의 물품, 역무, 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의 증대 그 외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9조 (조사 연구등에 관한 체제 정비)	• 도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경영 지원, 기술개발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듯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이 조례는, 해설이 21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안 이유) • 동경도의 행정의 중요 과제인 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도의 책무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타 참조 ; 쿠마도토: <http://www.pref.kumamoto.jp/soshiki/56/chusyokigyoshien.html>

条例本文 [PDFファイル/10KB]

パンフレット (表) [PDFファイル/626KB]

パンフレット (裏) [PDFファイル/437KB]

熊本県中小企業振興基本条例に基づく取組について [PDFファイル/224KB]

平成22年度熊本県中小企業支援計画 [PDFファイル/216KB]

[참조 3] 일본 사례 - 농상공등 제휴 관련법

- 2008년 (헤세이 20년) 5월 16일에, 농상공등 제휴 관련 2법 「중소기업자와 농림 어업자와의 제휴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농상공등 제휴 촉진법)」 마련

■ 농상공등 제휴 촉진법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기간산업인 중소기업과 농림 어업이 제휴를 취하면서, 각각의 경영 자원을 유효 활용해 실시하는 신상품의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는 「중소기업자와 농림 어업자와의 제휴에 의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동법이 2008년 (헤세이 20년 7월 21일) 에 시행
 - 지역에 있는 식품産業 `農林水産業等の 連携를 통하여 新商品開発 및 販路拡大
 - 地産地消의 새로운 모델의 구축
 - 産学官連携에 의한 実用技術의 開発 등에 대하여 저리 융자, 신용보증 등을 실시
- 관련 사례
 - ① 규격외나 저이용, 미이용품의 유효 활용
 - 규격외의 완숙감을 가공한 음료●젤리의 개발(와카야마현); 농업자와 식품업자가 제휴
 - 간벌재를 이용한 신공법에 따르는 기획 주택의 설계●판매(토쿠시마현); 농업자와 건설업자가 제휴
 - ② 생산 이력의 명확화나 감소 농약 재배등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
 - 감 농약 재배미 등에 의한 고부가 가치형 개호 식품의 개발(히로시마현)
 - ③ 새로운 작목이나 품종의 특징을 살린 수요 확대
 - 냉동에 적절한 저 아밀로스 미를 사용한 냉동 밀기 스시의 개발(아오모리현)
 - ④ 신규 용도 개척에 의한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 브랜드 향상
 - 특산 매화를 활용한 고급 매화 주스의 개발(오이타현)
 - ⑤ IT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이나 판매의 실현

- 고품질 냉동 보존 기술의 활용에 의한, 종래는 폐기되고 있던 「진」의 상품화 및 판매(훗카이도)
- 광센서로 지방질을 측정해 선별된 돼지고기의 판매(도쿄도)
- ⑥ 관광과의 제휴에 의한 판로의 확대
 - 현지산주미를 사용한 토산술의 개발, 관광객에게의 판매 개척(사이타마현)
- ⑦ 해외에의 수출에 의한 판로의 확대
 - 해외를 타겟으로 한 칼라 링 라이스의 개발●판매(니가타현)
- ⑧ 농림 어업 단체에 의한 노력
 - 농협에 의한 국산 농산물 100%를 고집한 라면의 개발(쿠마모토현)

자료: http://www.maff.go.jp/j/soushoku/sanki/nosyoko/pdf/zirei_panfu.pdf

[참조 4] 일본 사례 -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법

- ‘중소기업에 의한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사업활동의 촉진법(약칭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법)’ 제정
-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기술, 전통문화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활용 기업화 프로그램의 추진, 중소 소매업 진흥을 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부품 소재관련 중소기업의 진흥, 그 외에 소규모 영세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재생·재창업 추진,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금융수법·주체의 활용 등을 수행

■ 주요 내용

-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개발·제공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도도부현 지사가 기본 구상을 작성하여 지역 자원을 지정하고 사업 계획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에게 신용보험의 별도 기준화, 과세의 특례(기계·장치의 특별상각)등의 지원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

[참조 5] 충남발전연구원 전략 연구 과제 제안

■ 자립형 충청 광역 경제권 수립 방안

-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충청권의 자립형 광역경제권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
- 당진항 개발 및 황해자유구역 활성화를 충청 광역경제권 사업과 연계
- 지방정부의 자주적인 광역경제권 실현
 - － 현재 정부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방주도로 전환
 - －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광역경제권이 대표권을 가지도록 의사결정기구 구성과 권한과 책임있는 사무조직 마련
 - － 지방자치단체,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중앙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규정한 자주적 시스템 확립

■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 현재 담보상태에 있고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연구

-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화된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 연구

■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충남 북부 지역 종합 발전 구상

- 현재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 구상 마련
- 대산항 육성방안과 연계

■ 향후 충청남도 지방 분권의 과제

- 중앙정부에 요구할 지방 분권 목록 제안
- 충남도에서 시군에 이양할 분권 목록 제안
- 주민 참여를 촉진할수 있는 방안 제안

■ 충남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개선 방안

- 시설/하드웨어 중심에서 사람/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관료중심 하향식 구조에서 주민중심 상향식 구조로 개선 방안 제안

■ 세종시 및 도청신도시 향후 발전 방안 및 충남 발전과의 연계 방안

- 충남의 주요 발전 거점인 세종시 및 도청 신도시의 향후 바람직한 추진 방안 모색
- 세종시와 도청신도시를 충남 발전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방안 모색

■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인적 역량 강화 방안: 교육 훈련 및 실천학습 프로젝트 중심으로

-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인적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유럽연합 농촌정책 및 Leader 사업 사례
- 지역재단 사례 / 강원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례

■ 해외 혁신자치체 사례 연구

- 민선 5기 충남도정이 벤치마킹할 일본, 유럽 등지의 혁신자치체 소개
- 향후 충남도와 자매결연, 혹은 지사 해외방문과 연계

제Ⅳ-2편 충남 투자통상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제1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일반

- 세계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중이나 유럽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 상존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정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세계적인 투자동향 및 국내기업들의 투자설비 수요침체
- 또한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라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그리고 농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변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 시점에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新3高 현상 발생, 대응책 마련에 부심
- 특히, 최근 수출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운용에 부담
- 충남의 경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로 최대의 무역흑자 등 수출목표 달성 전망은 밝지만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로 중소기업 수출기반 취약

나. 수도권 규제 완화

■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분권 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부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 시도 등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기조에 대해 비판과 부정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지속적 완화 움직임

■ 이명박 정부도 수도권 기업이전 정책은 지속하나 수도권 규제 완화로 효과 희석

-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시 기존의 세제·금융 지원이외에 기업에 직접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 － 이전보조금 : 상시고용 30인이상 토지매입비 50/100,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 10인 초과 1인당 60만원 이하 12개월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 10인 초과 1인당 60만원 이하 6개월
- 투자보조금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85.7억원까지 가능
- 이전기업에 세제감면확대(5년간 100%+2년간 50%)→(7년간 100%+3년간 50%)

■ 기업이전 보조금이 지식경제부 개정고시(' 10.1.4.시행)로 지자체별 지원한도액(15%) 설정으로 국비지원액 감소 (※09년 350억원 확보)

- 일개 도당 이전보조금 상한제(15%)시행으로 충남도에 불리하게 작용
- ' 10년 지식경제부 관련 전체 예산(826억원)의 15% ⇨ 최대 124억원 규모

■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말 수도권 규제 '08末 대폭완화(거의 제한없이 신설 가능)

구 분	'08.末개정 이전	'09.1 개정 시행 이후
산업단지내	• 기존공장 3천㎡이내 증설	• 규모 제한 없이 신·증설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 성장관리권역(공업지역) : 14개 업종 100% 증설 • 과밀억제권역(공업지역) : 1천㎡이내 증설	• 모든 첨단업종 96개에 대해 규모 제한 없이 증설 허용 • 기존 공장면적의 200% 증설

■ 수도권 규제완화는 충남지역의 기업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수도권 기업의 충남 내 이전이 증가한데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2000~2005년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기업 중 총 844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이 중 14%에 해당하는 126개 기업이 충남으로 이전함
 - 이는 강원지역(314개소)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그동안 충남의 산업 발전 및 기업유치에는 수도권 규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충남의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충남지역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역대 정부별 2000~2010. 6월까지 충청남도 기업유치 실적

- 국민의 정부에서 IMF극복시기인 2002~2003년도에 다소 높았고 참여정부 초기는 다소 낮다가 기업이전보조금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7년 1,004개로 절정을 이룸
-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8년부터 감소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상한제(15%) 등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음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7,086	394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334

〈표 2-1〉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내용

구분	규제완화 前		규제완화 後
과밀억제 권역	산업단지	신증설 원칙금지	전 업종·규모 허용
	공업지역	첨단업종 신증설(1천m2이내) 기존공장 내 10개 업종증설	첨단업종 200% 이내 증설 기존공장의 부지내 전업종 증설
	기타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첨단업종 100% 이내 증설
성장억제 권역	산업단지	신증설 원칙금지	전 업종·규모 허용
	공업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모든 첨단업종 규모제한 폐지 과밀·자연→성장내 공업지역이전
	기타지역	신증설 원칙금지	96개 첨단업종 200%이내 증설
자연보전 권역	도시지역 개발사업	6만m2이내	도시지역 10만m2이상 비도시지역 10~50만m2
	관광지조성	6만m2이내	상한폐지
	대형건축물	15천~25천m2 이내	입지허용
	폐수비발생 공장신증설	1천m2이하	규모폐지

다. 충남 산업 구조의 문제점

■ 충남은 제조공장이 많아서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수준은 높지만, 1인당 민간소비 지출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함

- 이는 충남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외부 지역, 주로 수도권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된다는 의미임

〈표 2-2〉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및 민간소비지출 (2007년 당해년가격기준)

구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천원]	상대수준*	1인당 민간 소비지출[천원]	상대수준*	추계인구 (천명)
서 울	23,591	116.3	14,315	130.6	10,026
부 산	14,944	73.7	10,377	94.7	3,525
대 구	13,060	64.4	9,810	89.5	2,470
인 천	18,286	90.1	10,206	93.1	2,613
광 주	14,727	72.6	10,048	91.7	1,445
대 전	14,923	73.6	10,802	98.6	1,487
울 산	44,507	219.4	11,244	102.6	1,080
경 기	17,543	86.5	11,326	103.4	11,039
강 원	17,674	87.1	9,067	82.7	1,470
충 북	20,224	99.7	8,702	79.4	1,483
충 남	28,482	140.4	9,176	83.7	1,936
전 북	16,144	79.6	8,505	77.6	1,771
전 남	26,027	128.3	8,021	73.2	1,807
경 북	24,280	119.7	8,698	79.4	2,635
경 남	22,131	109.1	9,779	89.2	3,125
제 주	16,043	79.1	9,561	87.3	545
전 국	20,287	100.0	10,958	100.0	48,456

* 1인당 지역내총생산(민간소비지출) 상대수준

= 시도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민간소비지출) / 전국의 1인당 총생산(민간소비지출) * 100

■ 그동안 산업입지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였는데, 대신 기존 단지의 질적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 농공단지의 경우 조성완료 71개 단지 중 10년 이상 6개단지, 15년 이상 21개단지, 20년 이상 25개단지는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미흡
- 최근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수요 및 분양률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
 - '07년까지 분양실적은 97.5%였으나, '08~'10.3 기간 중에는 41%로 감소
- '08년 이후 지정물량이 본격 공급되는 2011년 이후 미분양 예상
 - 따라서 향후 시군 산업입지 공급·분양물량과 연동하여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2-3〉 민선 4기 중 산업단지 개발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계획)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단지수	면적
계	8	9,792	4	3,363	9	8,967	13	10,956	8	14,452
일반산업단지	6	9,523	2	3,188	4	8,197	6	9,835	6	14,077
농공단지	2	269	2	175	5	770	7	1,121	2	375

■ 충남도 내 기업유치 성과 차이로 인해 도내 시군간 불균형 발전

- 북부 4개 지역에 편중된 기업유치 성과로 인해 도내 지역주민 간 소득·복지 격차의 원인이 됨

※ 북부 4개 시군 VS 기타12시군 경제력 비교

〈표 2-4〉 북부 4개 시군 VS 기타 12시군 경제력 비교

구분		북부4개시군(A)	기타12시군(B)	A : B	비고
기업수		3,771	2,821	1.3 : 1	2009기준
재정자립도(평균)		39.8%	22.8%	1.7 : 1	2009기준
GRDP(평균)	전체	9.35조원	1.48조원	6.3 : 1	2007기준
	1인당	40,195천원	18,405천원	2.2 : 1	2007기준
인구(천명)		1,119	956	1.2 : 1	2009기준
종합사회복지관(개)		9	8	1.1 : 1	2009기준

주) 비중은 저개발 12시군(B)을 1로 했을 때 북부 4개시군(A)의 비중을 나타냄

2.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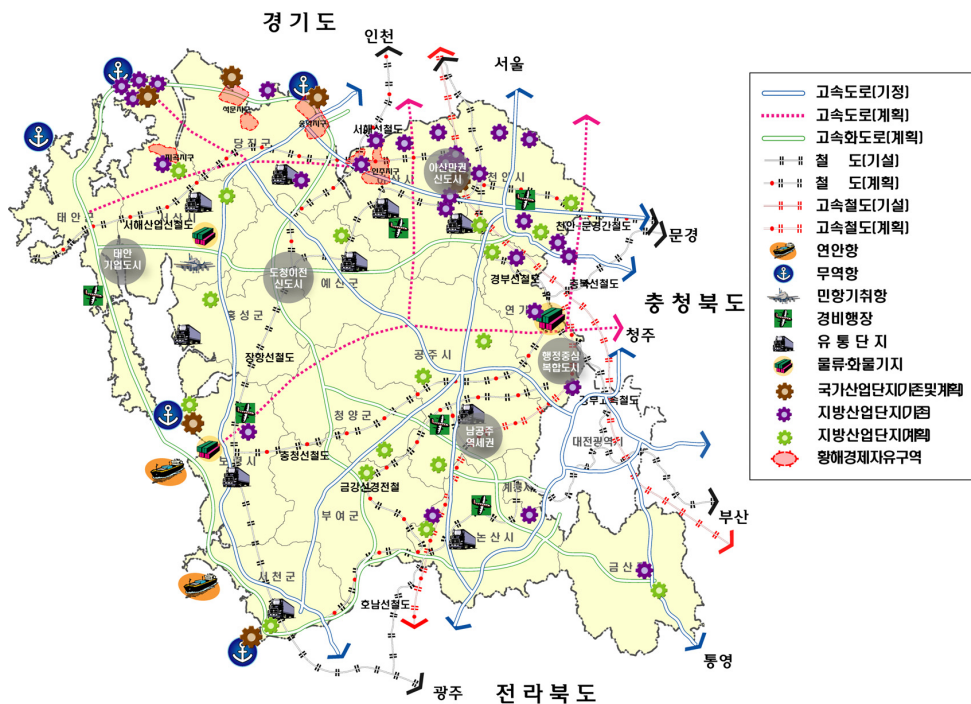
가. 충남의 주력산업의 특징과 현황

■ 충남은 수도권과 바다 인접, 우수한 인프라로 입지환경 우수

- 전자, 자동차, 철강, 유화 등 기간산업이 서북부지역 중심입지

지역별	주요 입지 기업
천 안	• 삼성전자(LCD 5.6세대), 삼성SDI(PDP,2차 전지) 및 관련 국내외 기업
아 산	• 삼성전자(반도체), S-LCD,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코닝, 현대차, 만도 등
서 산	• 삼성·현대 석유화학,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석유비축 기지 등
당 진	•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환영철강 및 철강 가공기업 등

■ 최근 서해안, 대전~당진, 공주~서천고속도로 등 물류환경 개선으로 보령, 공주, 예산, 홍성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추세



다. 충남 수출입 현황 (최근 3년)

■ 수출·입 실적

(단위:억\$, 전년동기대비 %, 관세청 통관기준)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흑자규모)			
	금액	전국순위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전국순위		
		1위	2위	충남					1위	2위	충남
2010(1~4月)	161	경기	울산	4위	56.8	77	37.4	85	충남	경북	1위
2009	394	울산	경기	4위	△8.2	191	△35.3	203	경남	경북	3위
2008	429	울산	경기	5위	△10.2	295	10.8	134	경북	경남	3위
2007	478	경기	울산	3위	22.7	267	19.3	211	경북	경남	3위

■ 중소기업 수출현황

(단위:억\$, 전년동기대비 %)

연도별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비 고
		증감율(%)	전국 순위			
			1위	2위	충남	
2010(1~4月)	28	66.0	경북	충남	2위	
2009	62	12.7	충남	제주	1위	
2008	55	19.6	강원	울산	8위	
2007	46	-20.1	경남	울산	8위	

■ 농수산물 수출현황

(전년동기대비 행정통계)

구 분	수출액 (억\$)	증감율 (%)	품목별 수출액(억\$)			
			가공식품	인삼류	과실류	기 타
2010(1~4月)	1.2	15.3	0.4	0.3	0.1	0.4
2009	4.1	14	1.7	0.9	0.3	1.2
2008	3.6	20	1.4	0.8	0.3	1.1
2007	3.0	87	1.1	0.7	0.3	0.9

■ 현재 충남의 교역비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국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라. 충남 해외 교류단체 현황

구분	교류중인 해외 자치 단체	자매(우호) 결연일자	비고
합계	20개 단체		
자매 (6)	1. 일본국 구마모토현	83. 1. 22	
	2. 중화인민공화국 허베이성	94. 10. 19	
	3. 러시아연방 아무르주	95. 6. 15	
	4. 오스트레일리아연방 남호주주	99. 10. 12	
	5. 아르헨티나공화국 미시오네스주	01. 5. 28	
	6. 폴란드공화국 비엘코폴스카주	02. 4. 26	
우호 (14)	1.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95. 10. 31	
	2. 아메리카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7. 3. 20	
	3. 베네수엘라공화국 볼리바르주	97. 3. 25	
	4. 독일연방공화국 바이에른주	99. 5. 11	
	5. 러시아연방 레닌그라드주	00. 12. 13	
	6. 중화인민공화국 옌벤조선족자치주	02. 4. 16	
	7.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룡안성	05. 6. 9	
	8.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05. 9. 26	
	9.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05. 9. 27	
	10. 일본국 나라현	08. 6. 3	
	11. 캄보디아왕국 시엠립주	08. 6. 17	
	12.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08. 9. 5	
	13. 중화인민공화국 상하이시	08. 11. 3	
	14. 브라질국 상파울루주	09. 4. 6	

☞ 자매결연이란

공식적인 자매결연 체결서가 교환되어 국가간 국교 수립과 마찬가지로 양 도시간의 교류협력이 양 도시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임.

☞ 우호협력관계는

자매결연의 前단계,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교류협력의향서”를 통해 공식적 관계가 시작됨.

마. 충남 외국인 투자지역 현황

■ 단 지 형

(단위 : 천㎡, (천평))

구 분	단 지 수	전 체	분 양	임 대	공공용지
합 계	2	674	23	630	21
천 안	1	510	23	469	18
인 주	1	164	-	161	3

■ 개 별 형

구 분	지정일	위 치	면적(㎡)	가동중	건설중	입주 방식
7개 지역			1,291,658	5	2	
천안영상 문화복합단지	'99.11. 02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	493,345		1	매입
코리아오토 글라스(주)	'00.12. 30	연기군 전의면 전의지방산업단지내	190,472	1		"
S-LCD(주)	'04.5.3 1	아산시 탕정읍 명암리 탕정지방산업단지내	123,438	1		"
라파즈석고보드 시스템(주)	'06.12. 26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아산국가산업단지내	17,815	1		"
대산MMA(주)	'07.4.3 0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2,987	1		"
DI그룹 (타가즈코리아(주))	'08.7.3 0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관창일반산업단지내	387,772		1	임대
프렉스에어 코리아(주)	'08.7.3 0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지방산업단지내	15,829	1		매입

■ 외국인 투자지역이 주로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서북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과 충남도의 전략적 유치업종과 실제 유치된 업종과의 괴리가 나타남

구분	충남 		정부 및 유관기관
지원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통상실 - 투자유치 위원회 - 외국인 투자기업 협의회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위원회 - 지식경제부 - KOTRA - Invest KOREA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업 애로 전담제 (추진중) - 투자설명회 및 간담회 - PM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안내, 홍보 - 민원 처리 및 대행 - 물류관련 지원 등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인센티브	조세감면, 현금지원, 공공보조금 지급		조세감면, 현금지원, 공공보조금 지급
지원근거	도 조례		외국인 투자 촉진법

특징 및 문제점

- 지자체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시행
- 실질적 지원서비스가 아닌 유치활동 (투자지구 조성) 중점
- 관련법에 근거한 인센티브 중심의 지원
- After Care를 위한 예산부족



개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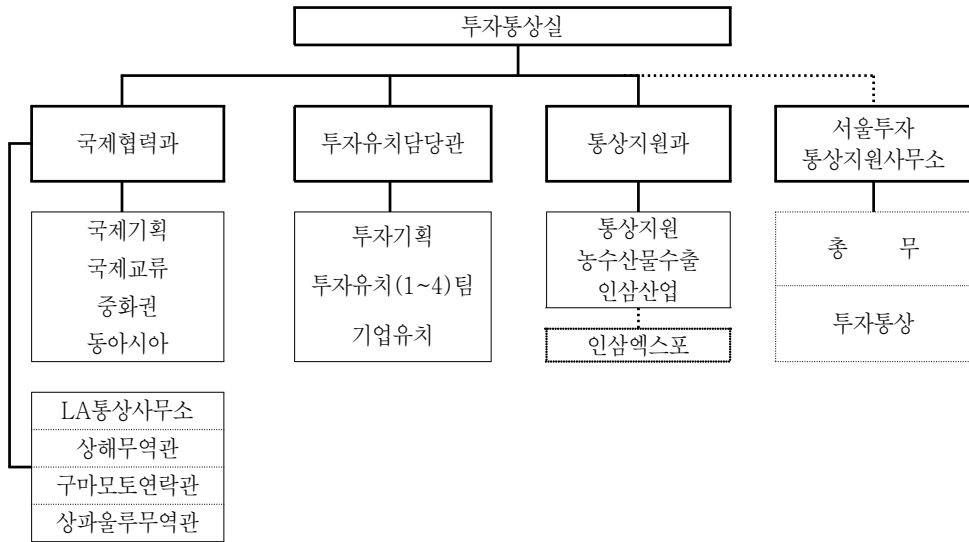
- 차별화된 맞춤형, 밀착형 지원 전환 요
- 지속적인 After Care 지원 요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기구 및 정원

(1) 도청 투자통상실

■ 기구 : 3과(10담당·4팀), 1 사업소, 4 해외사무소



■ 정원 : 78명

직종별 기관별	합 계	정 원 현 황						기능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78	70(13)	1	4(1)	17(3)	25(2)	17(5)	6(2)
국제협력과	28	25(6)	1	1	7(3)	10	6(3)	-
투자유치담당관	19	18(3)	-	1(1)	4	7(1)	4(1)	2
통상지원과	23	22(3)	-	1	5	6	6(1)	4(2)
서울사무소	8	5(1)	-	1	1	2(1)	1	-

※ 해외과건 : LA무역관 5급 1, 상해무역관 5급(계약 가) 1, 6급 1, 구마모토연락관 6급 1, 상파울루무역관 6급 1

(2) 기관·단체 및 위원회

소 속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비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4,313	구규옥	해외마케팅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1,519	한기호	무역 증진 수출 확대 지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	—	박경만	수출기업 수출보험	
aT 대전충남지사	—	김중오	농수산물 수출지원	
금산인삼협동조합	4,075	박천정	인삼생산자 협의체	금산
백제인삼협동조합	1,013	신동석	인삼생산자 협의체	대전, 보령 공주, 부여 서천, 청양 연기, 논산 (8개 시·군)
서산인삼협동조합	1,278	김낙영	인삼생산자 협의체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6개 시·군)
kotra(Invest Korea)	—	조환익	중소기업 수출지원 (외국기업 투자유치)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부지역본부 천안공장설립지원센터	—	김명호	공장(창업) 설립 지원	

■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 위원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위 축 일	비 고
계		11명		
위 원 장	도 지 사		-	당연직
부위원장	행정부지사	이 인 화	-	당연직
위 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	강 철 민	' 08. 11. 15	위촉직
	인베스트 코리아 법률전문위원	James RHEE	' 08. 11. 15.	"
	KOTRA 아카데미	김 승 철	' 08. 11. 15.	"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변호사	정 규 상	' 08. 11. 15. (최초00.11.13)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설 원 식	' 08. 11. 15.	"
	박정옥세무회계사무소	박 정 옥	' 08. 11. 15. (최초00.11.13)	"
	남서울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 애 영	' 08. 11. 15. (최초 ' 00.11.13)	"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박 중 찬	' 08. 11. 15. (최초 ' 00.11.13)	"
	투자통상실장	이 재 관	' 09. 1. 1.	임명직
간 사	투자유치담당관	이 승 곤	' 07. 7. 10	당연직

나. 충남도청 투자통상실 주요 기능

(1) 투자통상실 주요 업무

■ 지방차원의 국제 교류 및 협력

- 해외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 협력 총괄
- 도정의 국제화를 위한 공무 국외연수
-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활동 지원
- 해외사무소 운영, 관리

■ 외자기업유치로 미래성장 동력 창출

- 투자유치 종합기획 및 조정
-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관리
- 국내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관련 사항

■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 통상진흥 시책 수립 시행
-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업 육성 및 지원
- 농수산물 수출 지원 및 인삼산업 발전

■ 중앙기관과의 업무협력 지원

-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 구축
- 도민단체·출향인사 협조 및 지원과 도정홍보

❖ 투자유치와 수출 진흥을 통한 고용창출 및 도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부서

❖ 해외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로 도정과 도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

(2) 투자통상실 산하 각 과별 주요 업무

구 분		주요 기능
국제협력과	국제기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통상실, 국제협력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총괄 • 공무국외여행 심사·관리 및 해외파견공무원의 선발·관리 • 도정의 국제화시책 개발 및 해외사무소 운영관리 총괄
	국제교류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국제교류총괄(동아시아, 중화권 제외) •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교류 및 행정시책 의견 교환회 총괄 • 민간·해외단체와의 교류활동 지원
	중화권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권과의 장기협력발전방안 수립시행 및 국제교류 총괄 • 중화권과의 행정시책 의견 교환회 추진 • 중화권내 교민단체, 도 및 시·군의 교류업무 지원
	동아시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아세안과의 장기협력발전방안 수립시행 및 국제교류 총괄 • 일본+아세안과의 행정시책 의견 교환회 추진 • 일본+아세안내 교민단체, 도 및 시·군의 교류업무 지원
투자유치 담당과	투자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 투자유치 주요 지시사항 처리 • 투자유치 제도개선(조례, 규칙 등) • 투자유치 실적관리, 시책구상 • 투자실 회계 및 예산, 일반사무 업무 • 천안 영상문화단지 업무 추진 • 투자유치 각종위원회 관리 •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 관리 • 책임경영제 및 평가관련 업무 • 유치실적 관리(코트라 실적 등) •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 총괄
	투자유치(5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디스플레이분야 유치 및 외자유치 총괄 • 투자유치 설명회, 간담회, 박람회(미주) • 외투단지 지정·관리 및 외투보조금 관리 • 투자유치 협의체 운영 및 외투기업의 날 행사 • 기타 타팀 제외 외자유치관련 업무 추진 • 물류, 관광, 서비스분야 유치 및 애로 처리 • 정주환경지원 및 외투기업 실태조사 • 투자설명회, 박람회, 간담회 추진(아세아) • 석유화학, 신재생분야 투자유치 및 애로처리 • 투자설명회, 박람회, 간담회 추진(중동, 기타) • 투자유치 PM 및 인센티브, 홈페이지 관리 • 자동차, 철강, 기타 투자유치 및 애로 처리 • 투자설명회 및 박람회, 간담회(유럽) • 반도체분야 및 진행중인 프로젝트 투자유치 • 반도체분야 애로사항 처리
	기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유치 및 공장설립 총괄 • 기업유치 홍보(보도) 및 보조금 지원 관리

구 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투자 박람회, 설명회, 간담회 운영 • 기타 수도권규제 완화 등 기업유치관련 업무
통상지원과	통상지원 담당	수출지원 종합계획 조정&총괄 해외시장 개척 활동지원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 수출기업 육성 수출정보&통계 수집 관리 충청남도 무역의 날 행사 FTA총괄(세부추진 각 실과) 해외사무소 통상업무 관리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관리 시&군 통상업무 지원
	농수산물수출 담당	농수산물 수출종합계획 수립 운영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수출농가(업체)관리 및 정보 제공 농수산물 수출정보 통계 수집 및 관리 농수산물 수출지원단 운영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인삼산업 담당	충남인삼산업 세계화 업무 총괄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사업 금산인삼 명품화 지원사업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지원 충남인삼 해외 마케팅 사업 인삼수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고려인삼 효능연구사업 충남인삼 홍보사업 GAP, GMP, 철재해가림 등 인삼생산 지원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인삼산업인 교육 사업

자료출처 :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투자통상실 성과소개 업무안내

■ 현재, 충남 투자통상실 업무 중 투자유치업무는 다른 실과업무와 상당부분 유사 내지 중복적 경향. 따라서 실국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함

■ 즉,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국간 조정기능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제2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2. 사업비 분석

1.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미래와 상생」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해외교류 활성화
- 최대 수출시장 중국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백제문화를 매개로 한 일본 전 지역 교류 확대
- 아시안 지역과의 교류 다변화 및 활성화
- 2010년 하반기 우호교류협력 체결계획
- 중국, 광둥성(廣東省) 통상·교육,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농업·경제
- 랴오닝성(遼寧省) 통상,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관광·농업

■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내실화

- 해외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 중국자본 유치활동 강화
-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전략타깃기업 선정 국내기업 적극 유치

■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위한 통상지원

- 해외시장개척 마케팅 추진
-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육성
-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및 홍보
- 맞춤형 Total Marketing 추진
-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 지원
- 농수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충남 人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서울사무소 운영

- 중앙·지방의 협조체제 유지 및 도정홍보 지원
- 도내 수출기업의 「서울지사」 역할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 타가즈코리아 투자유치

■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개최 지원

나. 주요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 투자통상실의 경우 2009년에 경제통상실이 투자통상실과 경제산업국으로 분리된 관계로, 주요 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은 경제산업국의 연차별 추진 현황 참조

다. 민선4기 투자유치 실적('06.7.~' 10.6.) 및 평가 (투자통상실 내부자료)

(1) 총 괄

- 민선4기 동안 외국투자기업과의 MOU체결은 총 39개 기업 53억75백만 \$이며 이중 51.7%인 27.79억불이 실제 투자됨
- 국내기업은 총 3,317개 기업이 유치되어 42조 9,363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진행 중

〈표 2-5〉 연도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 개/백만 \$)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외국기업	39/5,375	7/1,372	5/299	9/1,921	13/1,590	5/193
국내기업	3,317	307	1,004	855	817	334

〈표 2-6〉 시·군 지역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 개)

구분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외국기업	39	12		2	13	3										1	8
국내기업	3,317	715	126	114	537	169	196	21	182	98	40	50	28	79	196	27	739

〈표 2-7〉 업종별 투자유치실적

(단위 : 개)

구분	계	LCD 반도체	자동차	그린 에너지	철강	관광 물류	식품	석유 화학	의약품	기타
외국기업	39	19	5	5	2	2	2	1	1	2

구분	계	기계 장비	식 품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비금속 광 물	섬유	의약품	반도체	기타
국내기업	3,317	697	441	430	362	175	102	51	31	16	1,012

(2) 투자유치 실태 분석

■ 외국기업 유치 (MOU체결 후 투자 이행상황)

- 유치금액 대비 신고·도착액 현황
 - － 외국인투자기업과 투자협약 한 총 39건, 53억 75백만\$ 중 투자신고는 27.73억\$(51.6%), 도착은 27억79백만\$(51.7%)임
 - － MOU체결 이후 도착은 기업여건에 따라 시차가 있어 통상 2~3년 소요되거나 포기,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
(예 : 코아필름(여건변화), 발레오 공조, DI(법적분쟁) 등)
 - － 39건에 대한 추진 단계별 현황을 보면
추진완료 : 20건 / 26억 52백만\$(투자액 도착, 영업중)
공 사 중 : 8건 / 98.3백만\$(투자액 도착)
추진 중 : 11건 / 28.5백만\$(투자액 도착)

〈표 2-8〉 MOU 대비 투자, 도착금액 현황

(단위 : 건, 백만\$)

구 분	계	2006.7~	2007	2008	2009	2010
MOU금액	39/5,375	7/1,371	5/299	9/1,921	13/1,591	5/193
신고금액	28/2,773	6/1,103	5/273	6/1,066	9/271	2/60
도착금액	26/2,779	6/1,112	5/273	5/1,154	9/240	1/0.5

-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생산효과
 - － 외자유치에 따른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
 - － 간접효과로는 생산유발,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등
 - ※ 경제적 파급효과 : 충남발전연구원(2009.8) 연구결과 참고
 - － 외국기업 유치, 총 39개 기업 중
 - 직접고용인원 : 15개 기업 7,500명
 - 매출실적 : 12개사, 15조 8,507억원
 - 납세실적 : 11개사, 국세(1,115억원), 지방세(121억원)

〈표 2-9〉 외국기업 고용 및 납세현황

업 체 명	체결일	고용인원(명)	'09. 매출액 (억원)	세금납부(백만원)		비 고
				국세	지방세	
계	15개	7,500	158,507	111,518	12,186	
SONY(S-LCD)	'06.07.18	5,477	99,000	10,100	127	아 산
Rechem(ENF)	'06.08.03	41	172	972	97	아 산
WFC	'06.08.16	32	99	－	45	아 산
LaFarge	'06.09.07	65	522	－	61	당 진
ASM	'06.09.07	76	80	57	6	충남TP
MRC	'06.10.19	80	2,189	857	13	서 산
OOC	'07.03.22	95	5,752	46,264	3,269	당 진
BOC	'07.03.28	11	7	－	37	아 산
MTG	'07.03.28	90	520	468	44	아 산
Rohm & Haas	'07.09.28	480	2,800	－	－	천 안
Air Liquide	'07.11.13	16	－	－	－	당 진
PraxAir	'08.03.26	23	54	－	－	아 산
MPT	'09.01.23	28	－	－	87	아 산
Infineon	'09.08.24	60	－	－	－	천 안
Total	'09.09.29	926	47,312	52,800	8,400	서 산

※ MOU이후 정상영업중인 기업 대상으로, 고용인원은 '10.6월 기준,
매출액은 '09년말 기준, 납세현황은 MOU 이후 현재까지 납부액 기준임

■ 국내기업유치

- 기업유치 현황 및 효과

－ 민선4기 총 3,317개 기업 유치 및 31만 6,262명 고용계획

구 분	단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치업체 수	개	3,317	307	1,004	855	817	334
고용계획인원	명	316,262	45,361	196,580	46,220	20,294	7,807
투자계획금액	억원	429,363	60,001	193,010	147,132	21,589	7,631

※ 고용인원 및 투자액은 기업이 공장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표 2-10〉 이전보조금 지원기업 고용효과

구 분	계	투자금액 1천억원 대비 고용효과
업체 수	85업체	이전기업 1천억원 투자 : 상시고용 600명 (투자액 7,163억원 / 고용 4,568명)
고용인원	4,568명	
투자금액	7,163억원	

- 시군별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GRDP관계 분석
 - － ‘ 06년 하반기~’ 09년말 까지 시군별 기업유치는 당진(1위:688개), 천안(2위:649개), 아산(3위:467개)順
 - － ‘ 09년말 시군별 인구규모는 천안(1위 : 541천명), 아산(2위:256천명), 당진(4위 :139천명)
 - － ‘ 07년 시군별 GRDP 규모는 천안(1위:13.6조원), 아산(2위:12.5조원), 당진(4위 :8.7조원)
- ⇒ 이들 3개 시군의 기업유치실적과 인구증가, GRDP 규모 등 3개 유형 간접지표를 분석한 결과 正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3) 투자유치 성과와 과제

■ 투자유치 성과

- 외형적 성과 : 전통 농업道에서 산업중심道로 탈바꿈
 - － GRDP 성장률 전국1위, 1인당 GRDP 전국2위, 무역수지 흑자 전국 3위, 세계 Display Mecca로서의 자리매김
 - － 국가 기간산업인 전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가 고르게 입지하여 지속적 성장과 시너지 효과 기대
- 행정내부 평가 : 외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잘하는 道
 - － 2008년도 “투자유치 전국1위(대통령상 수상), 2009년도 기업유치 전국 1위, 대한민국 최고기록 공무원 선정 등

- 외자 1억\$ 유치시 실질 국내 총생산 약 5천억원 증가¹⁾
- 고도기술 이전 및 기술 확산, 수입대체효과
 - 외투기업의 57%가 기술도입, 이중 75%가 모기업에서 도입²⁾
-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기업 수익성장성 : 국내 기업의 1.9배³⁾
 - 유형자산증가율 및 노동생산성 : 국내기업의 2배⁴⁾
 - ⇒ 생산유발효과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및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
- 외자유치(51억\$)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09.8. 충남발전연구원)

구 분	충남도	전 국	비 고
생산유발효과	9조 1,546억원	17조 5,612억원	환율 \$1=W1,250
부가가치효과	3조 5,546억원	6조 3,349억원	
고용유발효과	51,112명	95,079명	

■ 투자유치 성과의 주요 요인

- 지리적 여건
 - 대규모 물류수송이 가능한 바다와 면해 있고 23백만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둔
 -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하여 중국진출의 교두보 역할
- 저렴한 지가와 우수한 인프라시설
 - 수도권에 비해 1/2수준에 불과한 토지와 고속도로, 철도, 국도의 확·포장으로 수송능력과 시간이 비약적으로 개선됨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果實
 -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규제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혜택이 충남이 가장 큰 영향을 줌
- 행정의 노력
 -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도 및 시군의 행정적 노력이 빚어낸 결과로 정의 가능

1) 배상근, '외국인 직접투자 거시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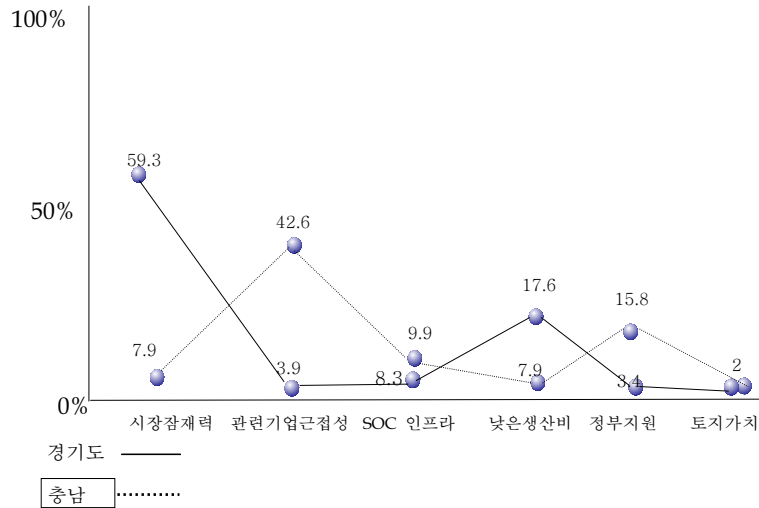
2) 2007 kotra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매뉴얼

3) 2007 경영성과 분석, 무역투자연구원 & 한국갤럽

4) 2008 외투기업 경영성과 분석, 지식경제부

※ 충남으로의 입지결정요인을 보면 관련기업과의 근접성이 42%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정부지원으로 15.8%를 차지

- 반면, 경기도는 시장요인이 크고 정부지원은 낮아 우리도가 정부 지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 충남과 경기도의 입지기업 결정요인 비교¹⁾

■ 향후 투자유치의 과제

- 급성장 추구에 따른 地域內 불균형과 양극화
 - 서북부 4개 시군과 그 외 12지역의 뚜렷한 경제력 격차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및 1인당 GRDP 격차 확대
-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만 있는 기형적 산업구조
 - 금융, 서비스 산업의 불모지대로 기업생산의 부가가치가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지역성장의 한계점 노출
- 정주기반의 열악으로 인한 인구유입 및 인문적 성장 한계
 - 외국인의 정주여건인 외국인학교, 병원, 레저시설 등 열악
 - 대도시의 편의성을 지향하는 한국인 성향으로 거주공간을 수도권에 뭉으로 인한 人間 토착화의 한계 노출

⇒ 즉, 내실을 다지고 투자유치의 내용을 변화시켜 균등한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이전기업의 매출액 증가 추이

- '04년 기업지방이전 정책이후 지방이전기업의 매출액(생산성) 평균이 전체 제조업 매출액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제조업 평균	12.32%	5.90%	5.85%	7.75%	18.05%
지방이전기업	8.48	7.75	22.02	16.69	13.38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별 각 연도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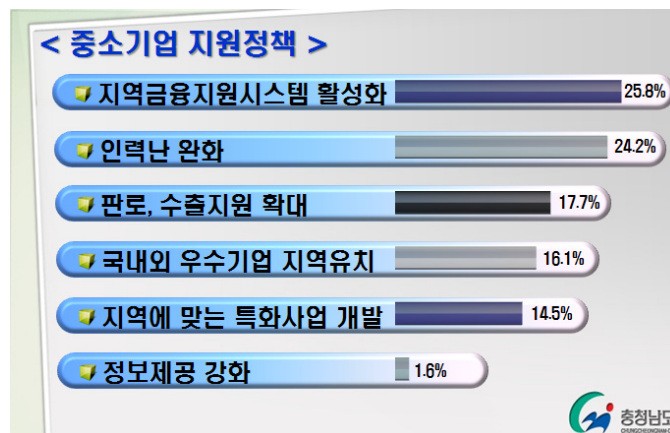
- 이전기업과 공공부문 투자의 인건비 유발효과 비교
 - 지방이전기업의 인건비 유발액이 공공부문의 투자에 의한 인건비 유발액보다 1.4배 정도 높게 나타남

분야	보조금지금액(백만원)	인건비 유발액(백만원)
교육 및 보건	30,122	12,588
사회 및 기타서비스	30,1224	12,193
지방이전 기업의 인건비 증가액	30,122	18,018

자료: 지식경제부 공청회 발표(2009.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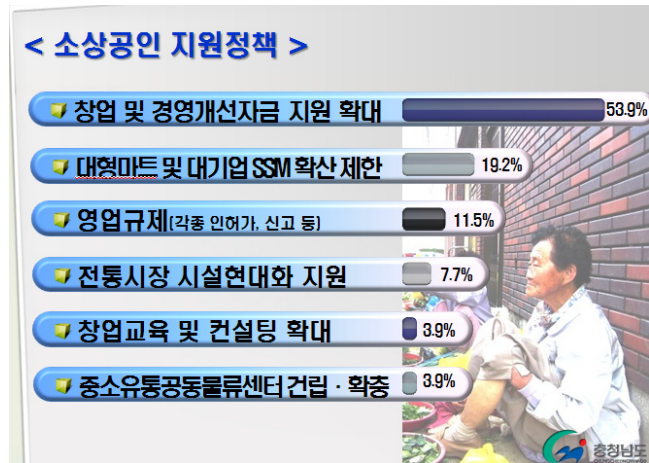
라. 충남 지역 기업 요구 사항 분석

■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6.16~6.23), 충남지역

〈그림 2-2〉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6.16~6.23), 충남지역

<그림 2-3>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6.16~6.23), 충남지역

<그림 2-4>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역상공인의 바램

2.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 2010년 총 66,480백만원 (도 전체의 1.7%)

■ 분야별 현황

• 주요 보조사업

－ 기업이전보조금	45,143백만원 (광40,000, 도5,143)
－ 외국기업 유치분양가 차액보조	718백만원 (광718)
－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보조	75백만원 (광50, 도25)
－ 해외 마케팅 지원	2,824백만원 (광1,000, 도 1,824)

• 주요 자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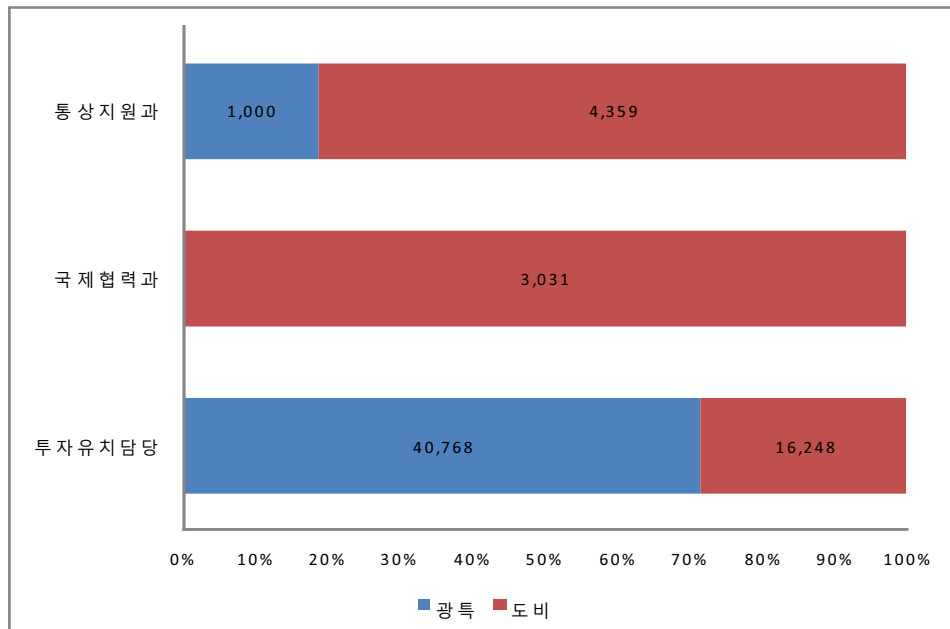
－ 공무원 국외여비	900백만원
－ 해외사무소(4개) 운영경비	1,272백만원
－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9,138백만원
－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530백만원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23백만원
－ 인삼산업 육성	839백만원

■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재원별 예산 현황

- 광특회계 사업인 기업이전 보조금을 관리하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예산이 전체 투자통상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제협력과의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임

〈표 2-11〉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2010년 재원별 예산 현황

구분		2010년					
		소계	국비	기금	분권	광특	도비
투 자 통 상 실	투자유치담당	57,016				40,768	16,248
	국제협력과	3,031					3,031
	통상지원과	5,359				1,000	4,359



〈그림 2-5〉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2010년 재원별 예산 구성비

나. 산하 부서별 사업비 분석

■ 국제협력과 3,031,25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3,031,250	2,477,821	553,429	
국제화기반 확립	2,913,740	2,367,010	546,730	
행정운영경비	117,510	110,811	6,699	

■ 투자유치담당관실 57,016,78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57,016,787 광 40,768,000 도 16,248,787	61,197,976	△4,181,189	
경쟁력있는 외자유치	10,834,200 광 768,000 도 10,066,200	15,313,146	△4,478,946	
재무활동 (투자유치담당관실)	490,000	245,000	245,000	
내실있는 기업지원 (대부분 수도권 기업이전보조금임)	45,612,857 광 40,000,000 도 5,612,857	45,560,000	52,857	
행정운영경비	79,730	79,830	△100	

■ 통상지원과 5,359,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총 계	5,359,600 광 1,000,000 도 4,359,600	6,616,763	△1,257,163	
수출기반 확대	4,467,000 광 1,000,000 도 3,467,000	4,290,300	176,700	
행정운영경비 (통상지원과)	53,400	24,463	28,937	
인삼산업 육성	839,200	2,302,000	△1,462,80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의 경우 FTA 기금 사업임

FTA 기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사업개요 : 정부의 한-미 FTA 대책사업

☐ 사업목적 : 인삼생산자단체의 조직화·규모화 된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체계 일원화를 통해 표준화·규격화를 촉진하여 인삼
의 전 근대적인 유통체계를 개선

☐ 사업대상 : 금산인삼협동조합, 백제인삼협동조합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표 2-12〉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 (2010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사업명 (세부사업별)	합계	일 반 회 계						매칭 비율 (국:도:시군 :기타)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투자통상실	93,252,197	-	41,768,000	-	22,952,397	24,863,800	3,668,000	
국제협력과	2,913,740				2,913,74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309,800				309,800			
공무원 해외교류	900,000				900,000			
국제네트워크 구축	217,900				217,900			
상해무역관 활동지원	549,160				549,160			
구마모토사무소 활동지원	123,730				123,730			
미국사무소 활동지원	305,710				305,710			
상파울루무역관 활동지원	293,200				293,200			
해외지방정부와 상호교류 협력	39,240				39,240			
국제민간교류 확대	175,000				175,000			
투자유치 담당관실	77,960,057	-	40,768,000	-	15,679,057	21,513,000	-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 지원	100,000		50,000		25,000	25,000		(5:2.5:2.5)
외국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718,000		718,000					(5:2.5:2.5)
외국기업 임대차액 보조	150,000				150,0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18,276,000				9,138,000	9,138,000		(75:12.5:12.5)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육성	215,000				215,000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378,200				378,200			
외국기업 시설보조 지원	160,000				160,000			
기업이전 보조	57,142,857		40,000,000		5,142,857	12,000,000		(70:9:21)
공장설립관리망정 보방운영비 지원	20,000				20,000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300,000				300,000			
제조업창업투자보 조금지원	500,000				150,000	350,000		(90:3:7)
통상지원과			1,000,000	-	4,359,600	3,350,800	3,668,000	

사업명 (세부사업별)	합계	일 반 회 계						매칭 비율 (국:도:시군 :기타)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수출기업 육성	400,000		160,000		240,000			40:60
해외시장 개척	2,100,000		840,000		1,260,000			40:60
통상관련 행사 지원	44,000				44,0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280,000				280,000			
농수산물 수출 확대	30,000				30,000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지원	50,000				50,000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530,000				530,000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23,000				723,000	1,687,000		30:70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310,000				310,000	590,000	600,000	30:30:40
인력운영비	3,000				3,000			
기본경비	50,400				50,400			
인삼산업기반구축 지원	839,200				839,200	1,073,800	3,068,000	15:35:50

〈표 2-13〉 투자통상실 산하 부서별 사업별 재원 유형 (2009-2010년 비교)

사업명 (세부사업별)	년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매칭비율 (국:도:시 군:기타)
			계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투자통상실	계	4,934	200,045,542		73,612,000	840,000	60,470,030	58,330,512	6,793,000	
	2009	2,469	106,846,745		31,844,000	840,000	37,571,033	33,466,712	3,125,000	
	2010	2,465	93,198,797		41,768,000	-	22,898,997	24,863,800	3,668,000	
국제협력과	계		5,280,750				5,280,750			
	2009		2,367,010				2,367,010			
	2010		2,913,740				2,913,74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계		435,600				435,600			
	2009		125,800				125,800			
	2010		309,800				309,800			
공무원 해외교류	계		1,800,000				1,800,000			
	2009		900,000				900,000			
	2010		900,000				900,000			
국제네트워 크 구축	계		436,400				436,400			
	2009		218,500				218,500			
	2010		217,900				217,900			
상해무역관	계		1,125,000				1,125,000			

사업명 (세부사업별)	년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매칭비율 (국:도:시 군:기타)
			계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활동지원 (도급경비)	2009		575,840				575,840			
	2010		549,160				549,160			
구마모토사 무소	계		195,850				195,850			
활동지원 (도급경비)	2009		72,120				72,120			
	2010		123,730				123,730			
미국사무소	계		614,460				614,460			
활동지원 (도급경비)	2009		308,750				308,750			
	2010		305,710				305,710			
상파울루무 역관	계		293,200				293,200			
활동지원 (도급경비)	2009		-				-			
	2010		293,200				293,200			
해외지방정 부화	계		75,240				75,240			
상호교류협 력	2009		36,000				36,000			
	2010		39,240				39,240			
국제민간교 류확대	계		305,000				305,000			
	2009		130,000				130,000			
	2010		175,000				175,000			
투자유치담 당관실	계	173	167,575,203	0	71,536,000	0	45,784,203	50,255,000	0	
	2009	85	89,615,146	0	30,768,000	0	30,105,146	28,742,000	0	
	2010	88	77,960,057	0	40,768,000	0	15,679,057	21,513,000	0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지원	계	0	200,000	0	100,000	0	50,000	50,000	0	
	2009		100,000		50,000		25,000	25,000		(5:2.5:2.5)
	2010		100,000		50,000		25,000	25,000		(5:2.5:2.5)
외국기업 분양가 차액보조	계	0	1,436,000	0	1,436,000	0	0	0	0	
	2009		718,000		718,000					(5:2.5:2.5)
	2010		718,000		718,000					(5:2.5:2.5)
외국기업 임대차액 보조	계	2	308,400	0	0	0	308,400	0	0	
	2009	1	158,400				158,400			
	2010	1	150,000				150,0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계	6	45,310,000	0	0	0	22,655,000	22,655,000	0	
	2009	2	27,034,000				13,517,000	13,517,000		(75:12.5:12.5)
	2010	4	18,276,000				9,138,000	9,138,000		(75:12.5:12.5)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육성	계	0	625,000	0	0	0	625,000	0	0	
	2009		410,000				410,000			
	2010		215,000				215,000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계	0	803,000	0	0	0	803,000	0	0	
	2009		424,800				424,800			
	2010		378,200				378,200			

사업명 (세부사업별)	년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매칭비율 (국:도:시 군:기타)
			계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외국기업 시설보조 지원	계	3	169,946	0	0	0	169,946	0	0	
	2009	1	9,946				9,946			
	2010	2	160,000				160,000			
기업이전 보조	계	60	117,142,857	0	70,000,000	0	20,142,857	27,000,000	0	* 낙 후 지 역 의 경 우 는 국 비 90%, 시 도 비 10%
	2009	30	60,000,000		30,000,000		15,000,000	15,000,000		(70:15:15)
	2010	30	57,142,857		40,000,000		5,142,857	12,000,000		(70:9:21)
공장설립관 리망정보망 운영비 지원	계	2	40,000	0	0	0	40,000	0	0	
	2009	1	20,000				20,000			
	2010	1	20,000				20,000			
기업투자여 건 집중 홍보	계	0	640,000	0	0	0	640,000	0	0	
	2009		340,000				340,000			
	2010		300,000				300,000			
제조업창업 투자보조금 지원	계	100	900,000	0	0	0	350,000	550,000	0	
	2009	50	400,000				200,000	200,000		(90:5:5)
	2010	50	500,000				150,000	350,000		(90:3:7)
통상지원과	계	4,761	27,189,589	-	2,076,000	840,000	9,405,077	8,075,512	6,793,000	
	2009	2,384	14,864,589	-	1,076,000	840,000	5,098,877	4,724,712	3,125,000	
	2010	2,377	12,325,000	-	1,000,000	-	4,306,200	3,350,800	3,668,000	
수출기업 육성	계	280	700,000	-	280,000	-	420,000	-	-	
	2009	120	300,000		120,000		180,000			40:60
	2010	160	400,000		160,000		240,000			40:60
해외시장개 척	계	1,213	3,740,000	-	1,496,000	-	2,244,000	-	-	
	2009	532	1,640,000		656,000		984,000			40:60
	2010	681	2,100,000		840,000		1,260,000			40:60
통상관련 행사지원	계	8	100,000	-	-	-	100,000	-	-	
	2009	4	56,000				56,000			
	2010	4	44,000				44,0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계	1,012	694,000	-	-	-	694,000	-	-	
	2009	523	414,000				414,000			
	2010	489	280,000				280,000			
농수산물 수출 확대	계	34	93,000	-	-	-	93,000	-	-	
	2009	1	63,000				63,000			
	2010	33	30,000				30,000			
고품질농식 품해외인증 획득지원	계	51	102,500	-	-	-	102,500	-	-	
	2009	26	52,500				52,500			
	2010	25	50,000				50,000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계	25	960,000	-	-	-	960,000	-	-	
	2009	10	430,000				430,000			
	2010	15	530,000				530,000			

사업명 (세부사업별)	년도	사업량 (개소)	총사업비							매칭비율 (국:도:시 군:기타)
			계	국비	광특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계	661	7,234,589	-	-	-	2,170,377	5,064,212	-	
	2009	411	4,824,589				1,447,377	3,377,212		30:70
	2010	250	2,410,000				723,000	1,687,000		30:70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계	40	3,000,000	-	-	-	620,000	1,180,000	1,200,000	
	2009	20	1,500,000				310,000	590,000	600,000	30:30:40
	2010	20	1,500,000				310,000	590,000	600,000	30:30:40
인삼산업기 반구축지원	계	1,437	10,565,500	-	300,000	840,000	2,001,200	1,831,300	5,593,000	
	2009	737	5,584,500		300,000	840,000	1,162,000	757,500	2,525,000	20:30:50
	2010	700	4,981,000				839,200	1,073,800	3,068,000	15:35:50

라.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 사업 내역

〈표 2-14〉 투자통상실 10억 이상 사업내역(2010년 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2010) (억단위 반올림)
국제협력과	국제화역량 강화	27 억
투자유치담당관실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08 억
	기업지원활동 적극 전개	456 억
통상지원과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28 억
	농수산물 수출 지원	16 억

제3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평가기준

■ 도비 사업 위주로 평가

-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를 관별하여, 도에서 예산을 통제할 수 없는 국비 사업은 그대로 인정하고, 도에서 통제할 수 있는 도비 사업 위주로 평가

■ 시대적 요구와 민선 5기 도정 방침과의 연계성

- 당면한 시대적 요구와 민선 5기 도정 방침에 연계된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

■ 사업의 필요성

- 당면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성 경비와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감

나. 투자통상실 10억 이상 주요 사업의 평가

(1) 국제협력과 - 국제화역량강화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83년 일본 구마모토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2개국 20개 자치 단체와 교류중(자매결연 6, 우호협약 14)
- 중국, 일본 등 동북아권을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류가 미진한 상황
 - ※ 공통 관심소재 부족, 행정·문화차이, 접근성 등이 부진의 주요인
- 내용면에서도 투자·통상·산업 기술 등 경제교류보다 행정, 청소년, 체육 등 인적분야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

■ 해외사무소 운영

- 설치현황 : 미국 LA 등 4개 사무소(1분소)
 - LA·상해(쓰촨분소)·상파울루 등 3개소(통상), 구마모토연락사무소(행정)

- 운영 : 바이어발굴에서 대금회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 '10년 수출지원 목표 : 5천만\$(LA 22, 상해 25 상파울루 3)

■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 선진지 견학 등 해외 연수보다는 업무수행 출장 확대
 - 국제 교류 출장시 관련부서 담당자 동행, 효율성 제고

■ 『국제전문직위제』 도입 운영

- 일정 자격 및 언어 수준의 우수공무원을 선발·전문 분야 배치
 - 교육, 외자유치, 국제교류, 관광 등 37개 직위 지정(13명 배치)

■ 해외인적 네트워크 구축

- 7대륙 세계한인회와 MOU체결, K2H 연수실시 등
 - 『知 忠南』 우호인사 육성, 교류 협력네트워크 형성

■ 서울사무소 운영

- 중앙부처 『고향사랑모니터』 구성·운영(34부처 85명)
- 道 ↔ 부처간 정보교류, 도정홍보, 업무관련 자료전파 등
- 충청향우회 중앙회 등 출향인사와 협조체제 유지(재경 87개 단체)
- 對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 대상으로 한 국비확보 활동 등

■ 2010년 예산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국제화역량 강화	2,699,500	2,201,010	498,490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 활동	309,800	125,800	184,000	
공무원 해외 교류	900,000	900,000	0	
국제 네트워크 구축	217,900	218,500	△600	
상해 무역관 활동 지원(도급경비)	549,160	575,840	△26,680	
구마모토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123,730	72,120	51,610	
미국사무소 활동 지원(도급경비)	305,710	308,750	△3,040	
상파울루 무역관 활동지원(도급경비)	293,200	0	293,200	

■ 사업 평가

- 지방정부 차원의 국제교류는 긴 안목으로 보아야 함
- 공무원의 직접 교류 중심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충남도 국제교류 예산은 도 전체공무원 해외출장과 도지사 등 해외출장 경비가 대부분임
- 공무원 출장교류 수준의 국제교류를 민간 교류 분야로 확대하여 도민들의 국제화에 기여하는 시스템 구축 및 예산 활용 필요
- 공무원들의 낭비적, 외유적 해외 교류 지양
- 기존 교류단체별 교류소재 특화 추진 필요
 - － 그간의 교류내용, 지역의 특성 등을 분석 후 통상, 문화, 환경, 경제 등 분야별 특화 → 균형적 교류 추진
- ※ 교류에 미온적인 지자체는 단순 우호지역으로 별도 관리
- 통상·자원 확보 등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신흥국가와의 교류를 확대하되 반대급부 차원의 호혜적 교류 병행 필요
 - － 몽고, 잠비아 등 저개발 국가와 銅, 석탄, 철광석 등 자원 확보 차원의 교류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새마을 교육 등 후원

(2) 투자유치담관실 외자유치활동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민선 4기 충남은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와 외자유치를 주요전략으로 채택
 - － 기업 및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통상국 내 투자유치담당관실을 현재의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로 조직개편
- 외국기업 유치활동 전개
 - － 2010년 유치목표 : 15억\$ (5월말 현재 2억\$ 유치)
 - － 민선 5기('10 ~ '14) 유치목표 : 50억\$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추진

① 아산 테크노밸리

-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운흥리, 석곡리, 염작리 일원
- 총면적/외국인단지 : 2,372천㎡(720천평) / 69천㎡(21천평)
- 시행자/사업비 : (주)아산테크노밸리 / 151억원(국 113, 지 38)
- 유치 업종: 비금속광물, 조립금속, 컴퓨터사무용기기 등

②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대지정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차암·성성동 일원
- 총면적/외국인단지 : 2,354천㎡(712천평) / 338천㎡(102천평)
- 시행자/사업비 : 천안 제3사이언스컴플렉스(주) / 1,536억원
- 유 치 업종: 첨단업종(전기·전자, 기계 등)
- 부품소재 전용공단 지정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新재생에너지 부
품산업 집적화 유도
- 현재, E社(12천평), D社(15천평), U社(10천평), P社(13천평) 등 4개사
입주유치 확정

• 차별화된 외자 유치활동 전개

- 오픈 티켓(Open Ticket)제 운영 : 공무국의 여행허가에 2주 정도 소
요됨에 따라 시급을 다투는 외자유치 업무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외자유
치 부서의 국외 출장시 「先허가」, 「後신고」제 시행
- 외자유치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행정지원
- 외투자지역에 대한 도로,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우선지원
※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지원토록 道조례 개정('06. 9)
- 투자 설명회의 전략적 추진 : 그동안 특정장소에 다수 바이어 및 기업인
을 초청, 대규모로 개최하는 「집합 설명회」 방식에서 사전에 잠재 투자자
를 발굴하여 설명하는 「타깃형 설명회」로 전환
- 對중국 투자유치활동 강화 :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외환 보유고
2조\$(세계1위)로 한국 최대 투자 대상이면서 투자유치 대상국으로 부상
하고 있으므로 투자 분야별 잠재 투자자 발굴 및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0,834,200 광 768,000 도 10,066,200	15,313,146	△4,478,946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 지원	광 도	75,000 50,000 25,000	75,000	0	
외국기업 분양가 차액 보조	광	718,000 718,000	718,000	0	
외국기업 임대차액 보조		150,000	158,400	△8,40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9,138,000	13,517,000	△4,379,000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215,000	410,000	△195,000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378,200	424,800	△46,600	
외국기업 시설보조 지원		160,000	9,946	150,054	

■ 민선 4기 외자유치 실적과 문제점

- 민선 4기 중 외자유치 MOU 체결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9건, 5,375백만\$임
 - 이중 실제 투자는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25건, 2,779백만\$임

〈표 2-15〉 민선 4기 중 외자유치 실적

(단위 : 백만\$)

구분	합계		2006.7~12		2007		2008		2009		201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MOU금액(A)	39	5,375	7	1,371	5	299	9	1,921	13	1,591	5	193
신고금액(B)	28	2,743	6	1,103	5	273	6	1,066	9	271	2	30
도착금액(C)	25	2,779	6	1,112	5	273	5	1,154	9	240	-	-
C/A*100	64.1	51.7	85.7	81.1	100.0	91.3	55.5	60.1	69.2	15.1	0	0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표 2-16〉 민선 4기 중 업종별 유치건수 현황

합계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석유 화학	기계 장비	서비스	비금속 광물	식품	의약품	기타
39	4	6	4	2	2	3	1	2	1	14

자료: 충남도 내부자료

- 민선 4기 중 외자유치실적은 그 이전(민선 1~3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괄
목할 만한 것임

- 특히, 2007년에는 MOU를 체결한 5건을 모두 실제투자자로 유도하는 성과
- 민선 4기중 MOU 체결금액의 51.7%만이 실제투자자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미투자됨
- 전자정보, 자동차, 농축산바이오, 첨단문화 등 4대 전략산업 중심의 외투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전체 39건 중 14건(35.9%)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 아울러 외국인 투자가 주로 천안, 아산지역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등 입지여건상 여타 시군으로 분산시키지 못함

■ 사업 평가

- 민선 4기 외자유치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
- 충남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외자기업 유치 및 유치 기업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3) 투자유치담광관실 기업지원활동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국내 우량기업 유치활동 다각화
 - 2010년 유치목표 : 500개 기업
 - 민선 5기('10~'14) 유치목표 : 2,000개 기업
- 기업유치 및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제 운영
 - 道, 시·군합동 기업유치 T/F팀(17개팀, 35명) 운영
 -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 전수조사 (1만개社) 후 투자 설명회, 「멘투맨」식 기업방문 등 노력
 -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애로전담제 운영하여 분기별 기업 방문 애로사항 청취, 지원 등 철저한 사후 관리
- 기업 CEO 등 전문가를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
 - 외투기업 CEO(6명)와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진(8명) 등을 투자유치 홍보대사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
 - 기업 투자정보 지원 및 자문, 충남의 투자환경 홍보 및 투자 유치 공동 노력, 기업애로 지원 등 역할
- 직급 불문 PM(Project Manager)제 운영
 - 주요 투자유치 Project에 대해 담당자를 PM으로 지정(8명)하여 자료제공

및 고충상담, 공장설립 관련 행정절차 등 지원

- 『지역투자 박람회』 준비 만전
 - 지식경제부 주관 / '10.9.14.~9.18.(5일간) / 대구 EXCO 에 16개 시도, 전경련 등 참여, 투자지원 정책 소개 및 전시·상담
 - 차별화된 전시·상담 및 콘텐츠 선정, 투자유치홍보 극대화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사업 현황

- 지원배경 및 기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 ※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 - 59호('04. 5. 25)
 - 수도권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한 실적 및 상시고용 규모 3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할 때 입지보조금(토지매입비의 50%) 및 투자보조금(건축, 설비 등) 일부지원(지역별, 산업별 차등 지원)
 - MOU 체결 → 사전심사(시·군) → 외투위원회 심의 결정(道) → 지원
- 그동안 지원실적

〈표 2-17〉 연도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실적

연도별	지원기업 (개)	보조금 지원 현황(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03	151,376	72,116	32,737	34,216
2005	18	13,406	6,703	3,064	3,639
2006	13	13,984	6,996	3,494	3,494
2007	16	17,316	8,663	4,326	4,327
2008	14	23,425	14,754	4,334	4,337
2009	24	51,559	35,000	8,278	8,281
2010	18	31,686	12,307	9,241	10,138

※ '09년 우리도 국비 확보액 : 350억원(정부예산의 40.2%)

- 연도별 수도권 이전기업
 - 05년) 73 → 06년) 114 → 07년) 378개 → 08년) 292개 → 09년) 282개 기업

■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사업에 제기되는 문제점들

- 09년 유치기업 및 국비 소요액 : 87개업체 1,800억원
 - '10년도 지급대상 ⇨ 31개 기업, 국비 640억원
 - '11년도 지급대상 ⇨ 56개 기업, 국비 1,160억원

- 지식경제부 개정고시('10.1.4.시행)로 지자체별 지원한도액 설정
 - '10년 지경부 예산(826억원)의 15% ⇨ 최대 124억원 규모
- 지방비 추가 확보(53억원→237억원)에도 불구하고 10년도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한계
 - 부족액 : 소요 640억 - (국비 124억+지방비 237억) = 279억원
 - '10년 지급 대상기업 지원액(640억원) 대비 확보액(361억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로 심각한 기업민원이 우려되고 향후 수도권 기업 유치에 막대한 차질 예상
- 따라서 금년도 대상기업 지원을 위해 국비 200억원 추가확보 노력 필요
 - 추가지원 불가시 '11년에 500억원 이상 국비확보 노력
- 지침 개정前 유치기업에 대해 '11년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경과규정 마련
- '11년 기업이전보조금 국비예산을 2천~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지원한도(15%)를 폐지토록 노력
 - 지경부에서 '11년도 국비예산 2,000억원 확보 노력 중
 - 위 사항에 대해서 지경부 주관 「위기관리대책회의(4. 28)」 및 서면으로 수차례 중앙에 건의 → 긍정 검토중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기업지원활동 적극 전개	45,612,857	45,560,000	52,857	
	광 40,000,000			
	도 5,612,857			
기업이전 보조	45,142,857	45,000,000	142,857	
	광 40,000,000			
	도 5,142,857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지원	20,000	20,000	0	
기업투자여건 집중 홍보	300,000	340,000	△40,000	
제조업창업투자보조금지원	150,000	200,000	△50,000	

■ 민선 4기 기업유치 실적과 문제점

〈표 2-18〉 충남의 연도별 유치기업 수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민선 4기			
						2006	2007	2008	2009
유치기업	632	860	665	482	548	495	1,004	855	817
수도권 이전기업	4	6	19	22	73	114	378	292	282

- 민선 4기 중 유치기업은 연평균 약 18.2%씩 증가함
 - 이 중 수도권 이전기업은 동 기간 중 연평균 약 35.2%씩 증가함
- 민선 4기에 유치된 대부분의 기업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도내 북부권에 입지함에 따라 나머지 시군과의 경제력 경계는 더욱 심화됨
- 또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기업유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감소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사업 평가

- 민선 4기 기업유치 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
- 충남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기업 유치 및 유치 기업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애로 증대에 적극 대처 필요

(4) 통상지원과 수출 증대 및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충청남도는 최근 10년사이 전통적 농업道에서 IT,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첨단 산업중심의 경제道로 변모
 - 제조업체수 : '00년) 2,893개 → '08년) 11,656개(증 8,763개)
 - 무역수지 : '00년) 70억\$ → '09년) 203억\$(↑2.9배)
 - 09년) 수출 : 394억\$(수입 99억\$) — 전국의 10.8% 점유
- 수출비중이 대기업에 편중, 중소기업 수출은 전국 하위 수준
 - 충청남도 수출 : 중소기업 17.4%(전국 33.3%), 대기업 82.6%
 - 도내 수출업체 대부분 영세소기업으로 자력 수출 한계
 - 09년 수출업체 765개중 500만\$ 이상 수출기업은 147개(19.2%)에 불과, 454개 기업(59.4%)이 100만\$ 미만 수출

〈표 2-19〉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는 지표

(단위:백만\$,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구 분			‘08.1~7월	‘09.1~7월	‘10.1~7월
수출액 (증감율)	충남	총수출	25,717 (△0.9)	20,033 (△22.1)	30,049 (50.0)
		중소기업 수 출	3,337 (28.2)	3,108 (△6.9)	5,094 (63.8)
	전국	총수출	254,898 (22.6)	196,690 (△22.8)	262,294 (33.4)
		중소기업 수 출	78,178 (22.7)	63,392 (△18.9)	86,757 (36.9)
수출비중	충남 평균		13.0	15.5	16.9
	전국 평균		30.7	32.2	33.1
수출증가율 전국순위			2위	1위	1위

- 충남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전국 평균 보다 매우 낮음
-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발굴 → 건실한 중견수출기업으로 육성
 - 맞춤형 토털마케팅,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확대 추진
 - FTA대비, 수출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및 해외인증 지원
 - 해외 우수바이어 및 기업발굴 → 각종 정보 DB구축
 - 수출 線 연결에서 수출성사까지 단계별 맞춤형 통상지원
 - 14년 무역규모 1,000억\$(수출 600, 수입 400)시대 개막 준비

■ 중소 제조업체 수출지원 사업

- 10년 수출목표 : 420억\$(4월말 현재 161억\$ 수출)
 - 중소기업 수출목표 : 60억\$(4월말 현재 28억\$ 수출)
 - 10년 농수산물 수출목표 : 4.5억\$(4월말 현재 1.2억\$ 수출)
 - 2014년 수출목표 : 600억\$ ※중소기업 100억\$
- 해외시장 개척 전략
 - 해외시장 개척 대상국별 우수 바이어 및 기업 발굴
 - 맞춤형 시장조사, 바이어 찾아 주기, 통번역 지원 등
 - 09년 30업체, 133건 유망(잠재) 바이어 발굴로 직접 수출 연결
 - 해외 마케팅 지원시 대상국가별 유망상품, 구매력 등 사전 조사후 여건에 맞는 우수업체 선정·참여

- kotra, 중진공, 해외지자체 등의 협조를 통해 발굴한 우수 바이어와 도 내 수출기업체 연계 → 계약 성사율 제고
-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지원
 - 10년 지원계획 : 33회 179업체 / 사업비 830백만원
 - 무역사절단 운영 : 13회 91업체
 - 해외유명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21회 88업체
 - 『2010 충남 우수상품전 전시·상담회』 개최
-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 추진
 - 맞춤형 TOTAL마케팅 지원 : 19업체, 250백만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2회(70업체), 100백만원
 - 수출보험료 지원 : 130업체 200백만원
 - 신규 수출기업 발굴 육성 : 31업체 150백만원
 - 중소기업 해외지사(支社)화 사업 : 65업체 150백만원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광 2,824,000 도 1,000,000 1,824,000	2,410,000	414,000	
수출기업 육성	광 400,000 도 160,000 240,000	300,000	100,000	
해외시장 개척	광 2,100,000 도 840,000 1,260,000	1,640,000	460,000	
통상관련 행사 지원	44,000	56,000	△12,000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280,000	414,000	△134,000	

■ 사업평가

- 향후 충남도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비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함.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한국과 같이 내수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에 한계가 있는 구조 속에서는 수출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함
- 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강

화가 필요

- 도내 중소기업 중 연간 수출액이 일정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기회 제공 필요
- 중소기업 지원도 일회성 행사 지원에 그치지 말고, 행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요망됨.
- 상당한 도 예산이 투입되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서 낭비성 사업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전시성 행사 예산은 가능한 절감

(5) 통상지원과 농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 현황 및 예산, 평가

■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상해 「충청남도 농수산물식품 전시판매관」 설치
 - － 중국 상해 동방천지 쇼핑센터內에 상설관 설치·운영(50㎡)
 - － 인삼류, 가공식품, 수산물, 임산물 등 48품목 전시판매
 - －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 선정 → 입점, 위탁운영/10.5.15. 개소
- 고려 人蔘의 국제 경쟁력 확보
 - － 人蔘수출 공동브랜드 「Gins Q」 상표 등록 ('11년까지/6개류)
 - － 한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 출원
 - － 국제인삼약초연구소 건립('08~'13/168억원)
 - － 산·학·연 네트워크구축 등을 통해 품질의 규격화·과학화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 추진상황
 - － 기간/장소 : 2011.9.2~10.3(32일간)/ 금산읍 신대리 일원
 - － 주최/주관 : 충청남도, 금산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 － 사업비(안) : 135억원(국비 30, 도비 52.5, 군비 52.5)
 - － 내 용 : 학술, 교역, 전시, 이벤트, 체험 행사 등
 - － 관람객 수 : 230만명(예상)
 - － 경제효과 : 1조 5,640억원(직접 5,300억, 유발 1조 340억)
 - － 인삼엑스포 타당성 연구용역('10.2)

- 국제행사 승인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10.4~5)
- 인삼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10.2~7)
- 향후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10. 7월까지) : 부지조성, 시설, 조경, 전시연출, 프로그램 구성 등
 -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 조직위원회 이사 등 35명 내외, 사무처 직원 45명 내외
 - 실시설계 및 실행계획, 대행사 선정, 해외유치 등('10.9~'11.2)

■ 2010년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예산	2009년 예산	증감비교	비고
농수산물 수출 지원	1,643,000	1,880,300	△237,300	
농수산물 수출 확대	30,000	63,000	△33,000	
고품질 농식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50,000	52,500	△2,500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	530,000	430,000	100,000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23,000	1,024,800	△301,800	
수출용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지원	310,000	310,000	0	

■ 사업평가

- 농수산물 수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 증진 필요
- 낭비성 전시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금산 이외에도 서산 등 인삼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으므로, 금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인삼 산업을 지원해야 함.
- 충청남도 전체의 인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수출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 진작책이 필요함.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가.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조정

■ 국제협력과

-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은 대체로 공무원 해외 출장 및 해외 시찰 관련 예산임.
- 불요불급한 공무원 해외 출장 및 해외 시찰 관련 예산 30% 삭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국제협력과	국제화역량 강화	2,699,500	1,88,9650	-809, 850	30% 축소

■ 투자유치담당관실

-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임.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 대폭 삭감 가능 (50% 삭감)
-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사업에 속하는 또 다른 예산은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 육성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가능 (50% 삭감)
-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사업에 속하는 외국기업 고용 및 훈련보조금 예산은 광특 회계가 2/3을 차지하므로 현행 유지
- 기업지원활동 적극 전개 사업의 대부분 예산은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을 위한 사업자금임.
-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의 경우 국고 매칭 비율이 70% 이고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부담.
- 지식경제부의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일개 도당 이전보조금 상한제 (15%)시행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므로, 충남도의 경우도 이와 비례하여 예산 삭감
- 2010년 지식경제부 관련 전체 예산(826억원)의 15% 인 최대 124억원 규모로 충청남도에 대한 중앙정부 광특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음

- 2011년 기업이전보조금 국비예산 확대 및 지자체별 지원한도(15%) 폐지 노력 필요
- 충청남도 09년 유치기업 및 국비 소요액 : 87개업체 1,800억원
 - '10년도 지급대상 ⇨ 31개 기업, 국비 640억원
 - '11년도 지급대상 ⇨ 56개 기업, 국비 1,160억원
- '10년~'11년 신청예산액 : 70개업체 1,939억원(국 1,468 도비 471)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투자유치 담당관실	외자유치활동 적극 전개	10,834,200	5,417,100	-5,417,100	50% 삭감
	기업지원활동 적극 전개	45,612,857 (대부분 광특회계)	31,928,999	-13,683,856	30% 삭감

■ 통상지원과

- 수출 증대 및 해외 마케팅 강화 사업에 속하는 주요 사업은 수출기업 육성 지원금 및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 등임
- 이 중 약 35 % 정도가 광특회계 예산이고, 나머지를 도에서 부담
- 도 예산 중 행사 지원비등 불요불급한 예산 축소로 약 5% 정도 절감 가능함
- 농수산물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2010년 예산 수준 유지
- 인삼산업 육성 예산은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해 2011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임
-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위한 예산 30억을 광특회계에서 확보 추진
- 도의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지원은 가능한 최소화하여 국비 수준과 동등한 액수인 30억으로 책정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2010)	조정예산액 (요구액)	증감	비고
통상지원과	수출 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	2,824,000	2,682,800	-141,200	5% 절감
	농수산물 수출 지원	1,643,000	1,643,000		현행 유지
	인삼산업 육성	6,839,200 (광특) 3,000,000)	839,200	+6,000,000	증액

제4장 충남 투자통상 분야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 현재 경제산업국과 투자통상실로 나누어져 있는 조직에 대한 재편 방안과 투자통상 분야 전략 과제 내용 연계 필요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 내실 있는 기업 유치 및 유치 기업 토착화 지원

- 양적 위주 기업 유치에서 충남에 도움이 되는 질적 기업유치
- 유치기업 토착화 지원

나. 추진 전략

■ 권역별 특화 및 앵커기업의 유치

- 낙후지역 발전을 선도할 권역별 앵커기업 전략적 유치
- 1권역: 청양 예산, 홍성권역 ⇨ 기계, 식품바이오 분야
- 2권역: 논산(계룡), 금산, 서천권역 ⇨ 국방산업, 농산물 가공 등
- 3권역: 보령, 부여,태안(안면도)권역 ⇨ 관광·레저 분야
- 4권역: 공주, 연기(행정도시)권역 ⇨ 바이오시밀러, 첨단과학 등
- 5권역: 천안, 아산 권역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 6권역: 서산, 당진 권역 ⇨ 철강, 자동차, 그린에너지, 물류 분야

권역별	앵커기업 역할이 가능한 대기업	대상(예정)단지
1권역	롯데그룹(연구소 등),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도청신도시
2권역	한화, 위아, 대우정밀, KAI, 넥스원퓨처, 삼성탈레스 등 풀무원, 동원 F&B 등	국방산업단지
3권역	연기금 펀드 or 중국자본, 롯데 관광개발 등	안면도, 보령머드랜드
4권역	웅진그룹, 삼성 헬스케어 분야, 등	탄천, 행정도시외곽
5권역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 LED 조명사업 등	탕정, 천안인근단지
6권역	LG화학, 그린카 관련 산업, 철강관련 전후방산업	합덕, 합덕·순성T/P

■ 지역소득으로 이어지는 기업유치

- 이전으로 인한 실질적 인구유입 + 지역주민고용 지원

- 서북부권 입지기업 종업원의 실질적 지역이주,
- 유치기업이 지역민을 고용하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대안 마련
- 낙후지역에 기업입지 유도를 위한 이전보조금 신축적 운영

■ 현지여성, 장애인 인력채용시 인센티브 우선지원

- 사회적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기회 마련
- 지역경제 발전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적 우량기업 선별 유치 지원
 - 사업(투자)계획서 평가 시 고용규모 및 고용의 질 우선순위 적용
-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등의 고용실적에 따라 유치기업의 인센티브 우선지원 결정
 - 지방이전인센티브 중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우선 지원

■ 대기업 및 유치 중소기업 지역공헌도 증진

■ 작지만 강한 수출기업 육성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대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공헌 조사 및 지역공헌 우수기업 인증 제도 도입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충남도에 입지한 대기업 및 충남도가 특별 지원을 통해 유치한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도를 높임과 동시에 충남도내 상생발전 및 고용 창출을 촉진시킴.
- * 벤치마킹 사례 :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및 유치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자금 지원을 받았던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역공헌 실적을 매년 조사 공표하고, 지역 공헌 우수기업의 경우 인증을 시행하고 포상하도록 함.
- 공표 내용 :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 지역 출신 인력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 등) 고용 실적, 지역 자원 구매 실적, 기타 지역 사회 공헌 실적
-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 (은행 등 금융업, 유통기업 등)도 포함
- 각 기업들의 사회공헌 지표를 지역화하여 지역 사회공헌 지표로 유도
-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지만, 공표 내용 공개와 우수 기업 시상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공표 유도
- 처음에는 전면 실시보다는 최근 5년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시범실시 후 결과 분석에 따라 확대 추진
- 유치기업을 최우선, 그 다음 대기업, 이후 중소기업으로 공표 대상 확대
- 장기적으로 가칭 ‘대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공헌 조례’ 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사업 기간 : 2011년 사업 시행을 준비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추진
- 사업 추진방법 : 대중소기업 상생발전협력 사업 및 기업유치활동과 연계

- 재원조달 방안 : 지역 공헌 실적 공표 및 지역공헌도가 높은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등 소액의 예산만 소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기업 및 유치기업 지역공헌 조사 및 지역공헌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1억	1억	1억	1억

■ 기대효과

- 충남도내 대기업의 역할 강화 및 각 경제 주체들간의 상호협력 및 외부기업 토착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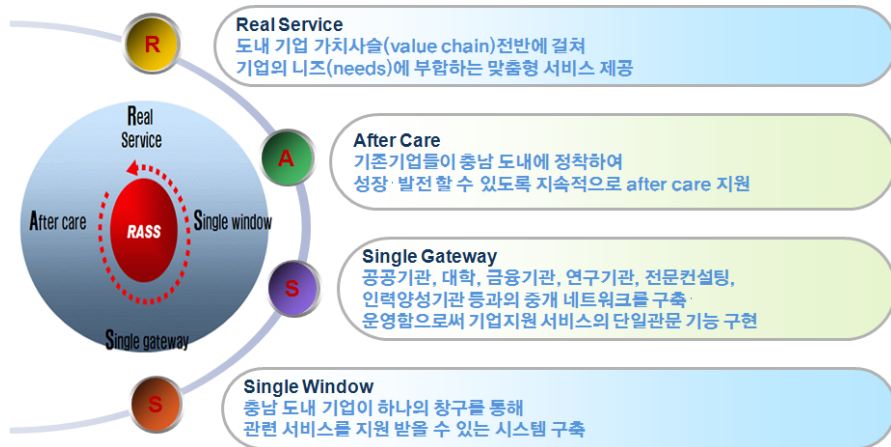
나. 유치 기업 토착화 지원을 위한 가칭 RASS 시스템 구축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도내 유치된 기존기업들의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토착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향후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이 요망됨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Real service 공급 : 창업, 기술, 홍보·마케팅, 법률·회계, 특허 등 지원분야별 전문가 확보 및 맞춤형 상담기능을 확충하는 등 관련 서비스 공급기반 구축
- After care 지원 : 투자유치에서 정착까지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애프터 케어(after care) 프로그램 구비
- Single gateway 구축 : 기업지원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간 상호연계를 위한 지원 상담과 중개기능을 담당할 원스톱 솔루션 플랫폼 구축
- Single window 구축 : 비즈니스 링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 사업 기간 : 201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광역회계특별회계 가능성 검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치 기업 토착화 지원을 위한 가칭 RASS 시스템 구축	1억	1억	1억	1억

■ 기대효과

- 기업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존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

다. 기업이전보조금 차등지원제 운영

■ 사업 필요성 및 사업 취지

- 현재는 수도권이전기업 유치시 입지지역 불문 입지보조금 지급
 - － 대부분 기업들이 수도권과 인접한 북부 4개 시군⁵⁾ 선택
 - － 이로 인해 기업선호지역에 보조금도 더 주는 결과로 불균형 심화

5) 천안, 아산, 서산, 당진

■ 사업 개요 및 추진 절차

- 낙후지역에 보조금을 가중지원토록 조례 개정안 마련
 - － 낙후지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개발 활용

〈표 2-20〉 조정안 예시

구분	보조금 지급비율		기대효과
	수도권 이전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성장촉진지역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신청액의 50%	신청액의 30%	낙후지역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 전략산업 (자동차부품, IT, 바이오, 영상문화)	신청액의 40%이하	신청액의 30%이하	도 전략산업 등 경쟁력 우위 업종 유치
북부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원타당성 검토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액 결정		꼭 필요한 기업을 제외하고 비지원원칙

[참조] 他 시도와 충청남도 통상지원시스템 비교 [투자통상실 내부 자료]

(1) 조직 및 인력

- 각 시·도의 통상지원업무는 국제통상과·국제협력과·기업지원과 등에서 4~6명의 인력으로 추진
 - 통상지원+국제교류 : 경기·울산 등 ⇨ 7개 지자체
 - 통상지원+기업지원 : 서울·인천 등 ⇨ 6개 지자체
 - 통상지원+경제정책+기업지원(고용) ⇨ 제주·전남

우리 도 특 징

- '09년 7월부터 「통상지원과」 전담조직 운영
 - 제조업 수출지원, 농수산물 수출지원, 인삼산업 육성
- 농수산물수출·인삼산업육성 인원(8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 통상지원인력은 5명에 불과하지만,
- 수출업무의 통합운영 및 전문계약직 채용(3명)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음.

(2) 예산

- 시·도 통상지원예산 총액 : 548억원 / 평균 34억원
 - 최다 : 경남 144억원 ⇨ 최소 : 강원 7.5억원
 - 타 시·도 : 경기(89억원), 경북(50), 충북(30), 대구(44)

우리 도 특 징

- 우리 도 통상지원 예산 : 28억원(도비 18억원, 전국 7위)
- 경기·경북 등 경쟁시도의 통상지원 예산규모 및 예산비율이 우리보다 2~3배 높은 편

※ 제조업 수출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비교함

(3)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

■ 시·도의 '10년 주요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제조업체 기준)

- 지원규모 : 평균 67회·391업체(3,424백만원)

- 최대규모 : 경기 213회·803업체(8,900백만원)
- 타 시·도 : 경남(80회, 521업체), 경북(82회, 621업체), 충북(73회, 583업체)

우리 道
특 징

- 평균 41회, 521업체 지원(2,824백만원)
- 시도와 비교 : 지원업체수 5위, 지원예산 7위

■ 주요 시도별 해외시장개척사업 현황('10년)

(평균 지원업체[391업체] 이상 시도, 백만원)

수출 순위	주요 해외시장 개척사업								통상 지원 시책 (건)	사업비
	계		해외무역 사 절 단		해외전시 박 랑 회		기타 국내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회수	지원 업체	회수	지원 업체	회수	지원 업체	회수	지원 업체		
총 계	1,076	6,255	132	1,324	888	2,978	56	1,953	251	54,777
평 균	67	391	8	83	56	186	4	122	16	3,424
경 기	213	803	8	86	199	487	6	230	16	8,900
경 남	80	489	8	125	64	199	8	165	19	14,355
충 남	41	521	13	91	21	143	7	287	15	2,824
경 북	82	621	16	128	64	293	2	200	26	5,030
부 산	51	585	16	174	27	271	8	140	11	1,350
충 북	73	583	10	90	55	213	8	280	33	3,068
대 구	52	455	15	120	37	335	-	-	11	4,375

〈표 2-21〉 '10년 시·도별 통상지원업무 추진현황

수출 순위 (10. 6월)	시·도	추진부서		인원		통상시책 추진('10. 계획)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해외무역 사절단		해외전시 박람회		기타 국내박람회, 수출상담회, 우수상품전 등					
		부서명	담당업무	課 단위	제조업 통상 지원									회수	업체	회수	
총계				371	69	1,076	6,255	132	1,324	888	2,978	56	1,953	54,777	40,396	14,381	
평균				23	4.3	67	391	8	83	56	186	4	122	3,424	2,525	899	
1	경기	경제투자실 (교류통상과)	교류 +통상	26	6	213	803	8	86	199	487	6	230	8,900	8,510	390	
2	울산	경제통상실 (국제협력과)	교류 +통상	15	3	101	242	8	80	91	116	2	46	2,407	1,653	754	
3	경남	남해안경제실 (국제통상과)	교류 +통상	32	6	80	489	8	125	64	199	8	165	14,355	12,935	1,420	
4	충남	투자통상실 (통상지원과)	통상	23	5	41	521	13	91	21	143	7	287	2,824	1,824	1,000	
5	서울	경쟁력강화본부 (산업정책팀)	기업지원 +통상	12	3	22	314	8	130	14	184	-	-	2,702	2,702	-	
6	경북	투자통상국 (국제통상과)	교류 +통상	32	5	82	621	16	128	64	293	2	200	5,030	3,700	1,330	
7	전남	경제과학국 (경제통상과)	경제+ 기업지원 +통상	38	5	36	350	7	70	26	80	3	200	3,172	1,000	2,172	
8	인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통상	19	4	9	28	3	30	80	218	6	280	1,928	500	1,428	
9	부산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통상	10	3	51	585	16	174	27	271	8	140	1,350	850	500	
10	광주	도시마케팅본부 (국제협력과)	교류 +통상	14	4	33	166	4	46	25	55	4	65	904	380	524	
11	전북	투자유치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통상	18	3	123	210	1	10	122	200	-	-	1,112	612	500	
12	충북	경제산업국 (국제통상과)	교류 +통상	18	5	73	583	10	90	55	213	8	280	3,068	1,455	1,613	
13	대구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교류 +통상	21	5	52	455	15	120	37	335	-	-	4,375	2,625	1,750	
14	대전	경제과학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통상	23	5	47	173	5	44	41	89	1	40	1,000	600	400	
15	강원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 +통상	13	3	15	130	6	60	8	50	1	20	750	450	300	
16	제주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경제 +통상	57	4	18	85	4	40	14	45	-	-	900	600	300	

※ 타 시·도와 비교하기 위해 제조업 수출지원 위주로 작성함.

충남발전연구원에 제안할 연구과제

(1) 화력발전소세 도입

- 수도권 대기오염 방지대책 일환으로 충남은 전력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충남지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전국평균의 4.6배(전국 1위)에 달하며, 전체 CO2 배출량의 80%는 도내 화력발전 4개소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한 신 세원 발굴이 요망됨
- 향후 지역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이행시기 도래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으로 화력발전세를 활용하되,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보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세원 발굴의 당위적 논리 개발 선행
 - － 화력발전세 논리개발
 - － 타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를 위한 연합 T/F 구성
- 기대효과 :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녹색성장정책으로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및 재원확보 가능
- ※ 화력발전소세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 관내에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입지 금지 추진

(2) 충남 기업 유치 정책의 평가와 개선 과제

- 충남 민선 4기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기업 유치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한계를 평가하고, 민선 5기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제시
- 특히 기업유치 성과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를 제안

제 V 편 충남 교육 분야 연구보고서

제1장. 일반 현황

제2장.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제3장. 사업 평가

제4장. 전략 과제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수

김미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진철 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차 례]

제1장 충남 교육 분야 일반현황	509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510
가.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510
나. 전문대학과 대학 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511
다. 평생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512
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위한 여건과 전망	515
2. 일반 현황	516
가. 충청남도 유초중등 교육의 일반현황	516
나. 충청남도 전문대학교 대학 교육의 일반현황	527
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의 일반현황	539
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협력의 현황	545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546
가. 충청남도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546
나. 충청남도 교육청의 주요 기능	548
다. 충청남도의 교육관련 기구와 정원	548
라. 충청남도의 교육관련 기구의 기능	548
 제2장 교육 분야의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549
1. 충청남도 추진사업 현황	550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550
나. 주요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551
2. 충청남도 교육관련 사업비 분석(2009/2010)	552
가. 예산 현황	552
나. 소관부서별 사업비 분석	555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556
라. 주요사업의 사업비 분석	556
마. 평생교육관련 재정 분석	565
3. 충청남도 교육청의 사업비 분석	573
가. 예산 현황	573
나. 소관부서별 사업비 분석	574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577
라.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이전금: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의 분석	579
 제3장 충남 교육 분야의 사업 평가	585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586
가. 평가 기준	586
나. 주요 사업의 평가	587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590

가. 전략사업을 위주로 투자가용재원 산출.....	590
제4장 충남 교육 분야 전략 과제	593
1. 비전 및 전략	594
가. 비전 설정	594
나. 추진 전략	595
2. 전략별 추진사업	599
가.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실시	599
나. 도민 평생교육 기회확대	605
다. 행복충남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611
라. 충남산학협력체제 확대	630
마. 교육 거버넌스 체계구축	633
바. 충남희망교육재단	634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636
가. 사업 및 예산 조정안.....	636
나. 조정안 설명	641
다. 과제	641

[표 차례]

<표 1> 학교 및 교원 1인당 학생 현황	517
<표 2> 분교장 및 복식학급 현황	518
<표 3> 소외계층 학생 현황	519
<표 4> 유치원 취원 현황	520
<표 5> 지역규모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 추이	520
<표 6>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빈도 및 비율(2005)	521
<표 7> 중졸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2008)	522
<표 8> 아버지 직업지위에 따른 비인지적 성취	523
<표 9>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성취	523
<표 10> 시·도교육청별 수학·영어 성취수준(%)	524
<표 11>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학교경험 수준이 1-표준편차 높은 학생들의 성취도	525
<표 12> 가정배경에 따른 학교 경험변인의 영향력 차이	525
<표 13> 2009년도 시도교육청별 광역 자치단체 대응투자 현황	526
<표 14> 충남지역 전문대학, 산업대학 통계	527
<표 15> 충남지역 일반대학, 교육대학 통계	528
<표 16> 충남지역 대학원 통계	528
<표 17> 충남지역 졸업, 취업, 미취업 현황 통계	529
<표 18> 전문대학	530
<표 19> 4년제 대학	530

<표 20>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531
<표 21>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532
<표 22>	532
<표 23>	534
<표 24>	535
<표 25>	537
<표 26> 충남 평생학습 참여율	539
<표 27> 충청남도청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I/F 업무 분장	541
<표 28> 지역별 평생교육 관련 조직 현황	542
<표 29>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 현황	543
<표 30> 공공도서관 현황	544
<표 3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544
<표 32> 사회복지관 현황	545
<표 33> 농업기술센터 현황	545
<표 34>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직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548
<표 35>	550
<표 36>	551
<표 37> 충청남도 2010년 예산	552
<표 38> 교육협력담당 관리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553
<표 39> 교육협력담당 이전비	554
<표 40> 법정부담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554
<표 41> 농업관련 부서의 교육관련 사업비(농가 도우미 지원은 제외)	555
<표 42> 충청남도 2010년 교육 부문 예산	556
<표 43> 2010년 학교급식관련 예산	562
<표 44> 시군별학교급식비-지원현황	563
<표 45>	564
<표 46> 충청남도청의 평생교육 예산 지원 현황	565
<표 47> 충청남도청의 평생·직업교육 예산 현황	566
<표 48> 충청남도청 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566
<표 49> 충남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	569
<표 50> 시·군별'평생·직업교육'예산	570
<표 51> 지자체별 대상·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 현황	571
<표 52>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원별 세입 결산 현황	573
<표 53> 충청남도 교육청의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575
<표 54> 충청남도 교육청의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576
<표 55> 충청남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 현황	577
<표 56> 충청남도 교육청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	578
<표 57> 충청남도 교육청의 비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	579
<표 58> 충청남도 교육청의 민간재원 유치 현황(학교 회계 제외)	579
<표 59> 2010 전출금 예산안 규모	580

<표 60> 전출금 세부 사업별 편성(안)	581
<표 61>	587
<표 62>	589
<표 63> 교육협력담당 관리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590
<표 64> 교육협력담당 산하 및 여타 기관 이전비용	591
<표 65> 법정부담금의 내역	591
<표 66> 농업관련 부서의 교육관련 사업비(농가 도우미 지원은 제외)	592
<표 67>	594
<표 68>	595
<표 69> 학급별 학생 수 및 무상급식 소요 예산	600
<표 70> 사업 범위(안)	601
<표 71> 연도별 무상급식 소요 예산	601
<표 72>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주체별 분담 안	603
<표 73>	606
<표 74>	606
<표 75>	608
<표 76>	609
<표 77>	610
<표 78>	610
<표 79>	618
<표 80> 기존 학교단위 추가재정지원 사업과 행복학교 사업 추진 절차 비교	618
<표 81>	620
<표 82>	628
<표 83>	628
<표 84>	629
<표 85>	629
<표 86>	632
<표 87>	632
<표 88>	635
<표 89> 2010년 교육경비 예산현황	636
<표 90> 2011년 교육경비 예산현황	637
<표 91> 본 연구추정예산과 도 예산안 비교조정	640

[그림 차례]

<그림 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도	514
<그림 2> 충남교육청 권역별 기능 거점 지역교육청 운영도	516
<그림 3> 충남 평생교육 추진 체제	540
<그림 4> 충청남도 교육청 조직도	547

제1장 충남 교육 분야 일반현황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2. 일반 현황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1. 대내외적 여건 및 전망

가.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도와 교육청과의 관계

유치원, 초등,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은 교육자치의 영역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사채용과 배치 등 학교용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중요 교육 사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도 교육감의 결정사항이다 다만 교육비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와 도 교육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현재 충남의 경우 도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복하고 능력 있는 미래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도의 입장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간의 입장을 조화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의 교육부문에 대한 영향

도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혹은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교육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의 여러 가지 정책은 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문계고 취업률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기준 마련,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사업(초빙형 공모제를 중심), 기숙형 고교 지정 사업 자율형 공립고 사업(서산시 대산고, 계룡시 용남고),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충남 18개 학교지정, 3년간 교당 2억, 종합 15억, 시설비 지원 7.5억, 프로그램 4.5억), 교육과정 개정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도에서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정규교육의 담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와 방학캠프들은 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력 인구 감소와 도시화

저출산 경향의 심화로 인해 학력층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도시화 현상으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은 충청도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학력인구의 변화와 이동 추이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장기 프로그램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충청도의 경우 고등학교가 비

평준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나. 전문대학과 대학 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

수도권의 대기업 본사 집중,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지방과 수도권(특히 서울)과의 문화적 격차, 서울중심 대학의 서열화, 지방대학 졸업생의 가중된 취업난,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의 부족 등으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지방대학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능우수학생들의 대부분(수능상위 4% 학생들의 68.8%)이 서울 소재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다. 지방 대학으로 진학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의예과 학생들과 지방에 소재하나 전국적 경쟁력을 지닌 카이스트 대학, 또는 안정된 직장이 가능한 교육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평균수능성적은 점차 격차가 나고 있다.

■ 대학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미충원율

우수한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와 특정 선호현상과 집중현상이 대학진학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과 중첩되고 있어 지방대학이 대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충원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생수의 감소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과 미충원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시 지방대학 졸업생의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을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4년제 대학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2년제 전문대학의 위기가 급격하게 닥칠 가능성이 높다. 충남의 경우 지금까지 수도권의 고등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나 대전의 학생들이 대전에서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하고 있는 경향도 있어 충남의 선호학과(의학관련 학과나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에 매우 높은 미충원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대학의 구조조정

정부는 장기적인 미충원율 확대에 대비해서 대학구조조정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경영부실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대학학교를 선정하고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권유하는 한편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교육지표가 나쁜 대학을 30곳을 골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발표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다. 충남의 대학들은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편이나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없으며 충남의 전

문대학들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대학의 품질

대학의 품질은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의 품질로 평가될 수 있다 교원 1인당 학생수나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볼 때 매우 낮은 품질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 대학 역시 대학의 품질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과는 영세하고 교수 1인당 학생수는 높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의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높은 비용과 낮은 혜택이라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 교육 인플레이션에 의한 상대적 교육욕구의 강화 등으로 대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 평생교육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 (1)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문제 대두와 이에 대한 지역적 해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 증대 급속한 고령화,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사회도래 및 생산성 증대 요구, 도·농간의 격차와 농촌해체 및 도시 비대화, 교실붕괴·교육이민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위기 등 사회변동 차원의 총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로서 교육문제가 단순히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의 공동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2) 90세 사회 및 사라진 평생직장의 개념

의학기술 및 과학기술 발달로 앞으로는 65세 이상은 물론 9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장수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 지역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자기만이 가진 능력이 있어야만 사회에 적응하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음.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평생교육적 차원과 충남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 (3)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정책 변화

2007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중앙 차원의 독립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2008년 2월)과 시·도지사 소속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그리고 지역 평생학습관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평생교육 정책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는 평생교육조례 제정, 교육국 설치 등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 (가) 시·도 차원의 변화 :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

- 시·도지사는 교육감과 합의하여 연도별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는 ① 평생교육진흥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④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즉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해야 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역할은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획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상호 연계 체제 구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이다.

- (나) 시·군·구 차원의 변화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 평생학습관 설치 등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증진을 위해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고령사회, 다문화사회, 높은 교육 수준, 지역 격차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평생교육 정책 필요

충남은 현재 고령화율 전국 4위(15.4%), 외국인 증가율 14.5%(2005년 대비 89.8%), 전체 교육인구 중 대졸 학력자 23.5%, 도시지역(천안시, 아산시 등)과 농촌지역(홍성군, 예산군, 연기군 등) 간 경제적 격차 등 지역/계층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계층 간 격차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균형과 통합의 기반으로써 평생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5)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건설, 도청 이전(내포신도시) 등 충남의 빠른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평생교육 필요

충남은 현재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빠른 발전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연기군에 건설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던 도청이 2012년에 예산군과 홍성군으로 이전을 확정·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 태안군 등의 북동부 지역에 인구집중과 경제적 발전이 거듭되던 것이 이제는 도청 이전 지역인 중부와 그 주변 지역도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충남 지역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 시점에서 평생교육 전담기관을 재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진단 후 결과를 토대로 새롭게 평생교육 추진 체제를 강화하여 도민 누구나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충남 도민의 평생교육 요구 증가에 대응한 견고한 평생교육 추진 체제 구축

앞으로 충남도는 도민들을 늘어나는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도는 물론 도교육청, 시·군들도 연계·협력하여 생활권역에서 도민들이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견고한 평생교육 추진 체제 구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평생교육 전담기관들을 중심으로 충남평생교육진흥원(가칭)과 지역 평생학습관 간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1〉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추진체계도

자료 : 평생교육진흥원(2008).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평생학습 추진체제 개편 연구」. p35

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위한 여건과 전망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 내용은 일반자치의 학교용지부담금 및 지방세의 일부 전환 등에 따른 법정전입금 등 강제적 재정지원과 일반자치의 영역에서 학교나 교육청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도 교육청과 협력을 위해 도 교육청의 실무자를 파견받았고 또 '道 교육정책 실무위원회' 두어 운영하여 온 경험이 있다. 교육위원회가 도 의회에 통합된 상태이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긴밀하게 뒤과 동시에 내용에 있어서는 갈등의 소지 역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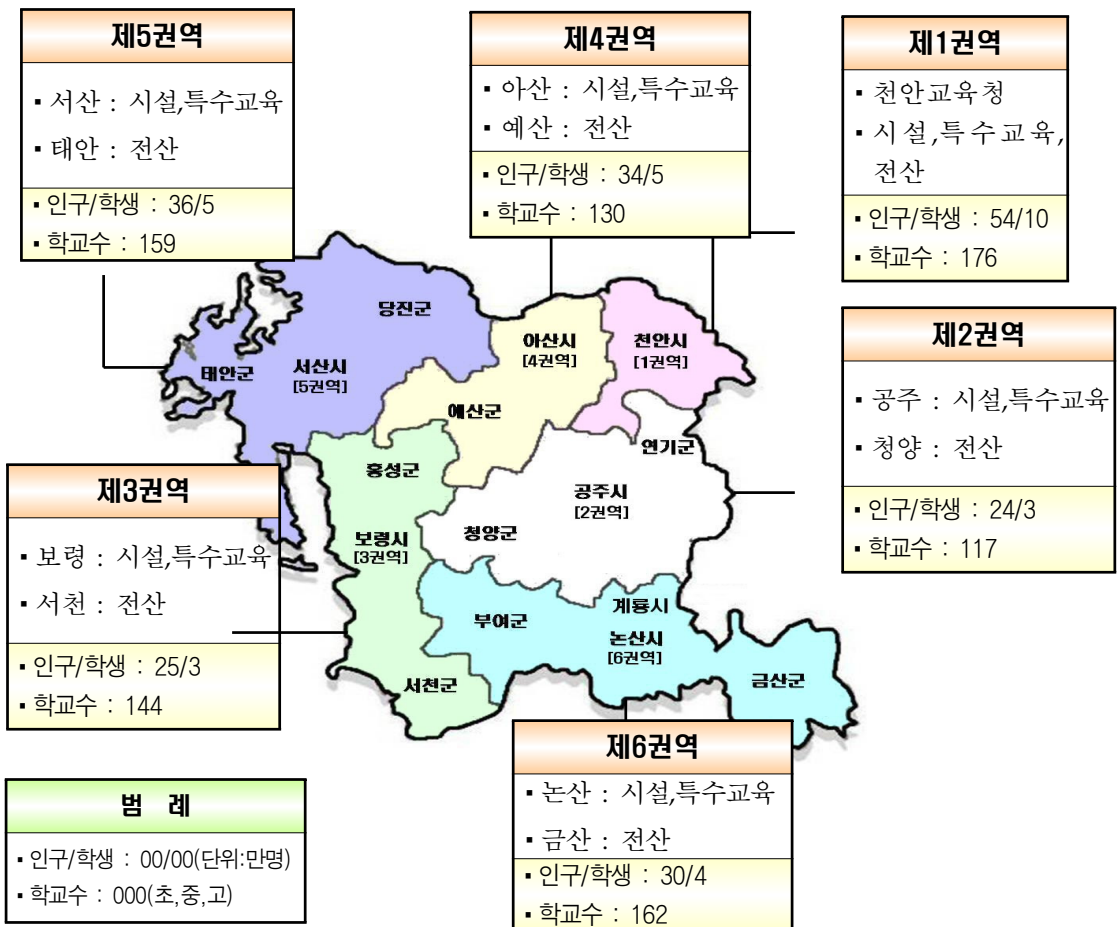
2. 일반 현황

가. 충청남도 유초중등 교육의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충남도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전체 학생 수는 2010년 현재 315,978명이다. 이 중 유치원에는 22,597명, 초등학교에는 137,767명, 중학교에는 78,360명, 고등학교에는 76,263명, 특수학교에는 99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역별로는 <그림 2>에 보듯이 6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림 2〉 충남교육청 권역별 기능 거점 지역교육청 운영도



• 학급별 학생 및 교원의 분포

각 학급별 학생 및 교원의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충남도의 학생들 중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62,743명으로 전체 315,978명의 학생 중 83.2%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 교원 역시 공립학교 재직 중인 선생님은 15,932명으로 전체 19,312명의 선생님 중 83.4%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 및 선생님은 공립학교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간제 교사 수는 935명으로 정규직 교원 수와 기간제 교사 수를 합한 20,047명의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학교 및 교원 1인당 학생 현황

(명)

학교 급별	계 열 별	설 립 별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A)	정규직 교원		기 간 제 교 사	일반직		휴직자 수		교원 1인당 학생수 (A/B)
						정원 (B)	현원		정원	현원	교원	일반 직	
유	단 설	공립	11	69	1,303	119	111	8	11	11	0		10.9
		사립	130	613	14,050	885	885	0	0	0	0		15.9
		공립	389	483	7,244	565	538	25	0	0	10		12.8
	병 설	사립	0	0	0	0	0	0	0	0	0		0.0
		공립	400	552	8,547	684	649	33	11	11	10		12.5
		사립	130	613	14,050	885	885	0	0	0	0		15.9
초		공립	445	5,777	137,580	8,033	8,005	259	510	487	37 0		17.1
		사립	1	6	187	9	9	1	2	2	0		20.8
		계	446	5,783	137,767	8,042	8,014	260	512	489	37 0		17.1
중		공립	147	2,047	63,814	3,643	3,643	247	217	207	62		17.5
		사립	44	461	14,546	863	791	78	141	149	0		16.9
		계	191	2,508	78,360	4,506	4,434	325	358	356	62		17.4
고	일 반 계	공립	54	1,006	39,515	2,434	2,434	126	126	122	69		16.2
		사립	28	541	17,625	1,218	1,159	68	139	141	0	1	14.5
		계	82	1,547	57,140	3,652	3,593	194	265	263	69		15.6
	전 문 계	공립	26	683	12,484	1,009	1,009	64	62	59	16		12.4
		사립	8	210	6,639	290	284	13	42	45	0		22.9
		계	34	893	19,123	1,299	1,293	77	104	104	16		14.7
	계	공립	80	1,689	51,999	3,443	3,443	190	188	181	85		15.1

		사립	36	751	24,264	1,508	1,443	81	181	186	0	1	16.1
		계	116	2,440	76,263	4,951	4,886	271	369	367	85	1	15.4
특		공립	4	131	803	192	192	46	8	8	13		4.2
		사립	2	31	188	52	52	0	10	10	0		3.6
		계	6	162	991	244	244	46	18	18	13		4.1
계		공립	1,076	10,196	262,743	15,995	15,932	775	934	894	540		16.4
		사립	213	1,862	53,235	3,317	3,180	160	334	347	0	1	16.0
		계	1,289	12,058	315,978	19,312	19,112	935	1,268	1,241	540		16.4

• 복식학급 현황

다음 <표 2>는 충남도의 복식학급 현황을 보여준다. 충남도에는 초등학교 중 본교 32개 그리고 분교 16개 학교에서 2복식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표 2> 분교장 및 복식학급 현황

(교, %)

구분		전체 학교수 (A)	복식학급 현황					
			2복식		3복식		계	
			학교수(B)	비율 (B/A)	학교수(C)	비율 (C/A)	학교수 (D=B+C)	비율 (D/A)
본교	초	429	32	7.4	0	0	32	7.4
	중	189	0	0	0	0	0	0
	고	116	0	0	0	0	0	0
분교장	초	17	16	94.1	0	0	16	94.1
	중	2	0	0	0	0	0	0
	고	0	0	0	0	0	0	0
계		753	48	6.3	0	0	48	6.3

• 취약계층 학생수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의 평균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들이 가정환경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인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다. <표 3>에는 충남도의 소외계층 학생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6,398명으로 전체의 5.2%, 차상위층 수는 20,34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어촌 학생 수는 61,855명(19.6%), 한부모가정 학생 수는 4,789명(1.5%), 조손가정 학생 수는 1,200명(1.2%)이며, 소수의 다문화가정(188명)이나 새터민가정(18명) 학생들도 존재한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소외계층 학생 현황

(명, %)

구분	유	초	중	고	특수	합계
전체 학생수	22,597	137,767	78,360	76,263	991	315,978
기초생활수급자	388 (1.7)	5,985 (4.3)	5,399 (6.9)	4,456 (5.8)	170 (17.2)	16,398 (5.2)
차상위층	1,476 (6.5)	5,628 (4.1)	6,964 (8.9)	6,248 (8.2)	26 (2.6)	20,342 (6.4)
농산어촌	5,115 (22.6)	31,631 (23.0)	13,213 (16.9)	11,215 (14.7)	681 (68.7)	61,855 (19.6)
한부모가정	90 (0.4)	1,795 (1.3)	1,340 (1.7)	1,528 (2.0)	36 (3.6)	4,789 (1.5)
다문화가정	28 (0.1)	136 (0.1)	19 (0.0)	4 (0.0)	1 (0.1)	188 (0.0)
조손가정	18 (0.1)	558 (0.4)	365 (0.5)	257 (0.3)	2 (0.2)	1,200 (0.4)
새터민가정	1 (0.0)	10 (0.0)	6 (0.0)	1 (0.0)	0 (0.0)	18 (0.0)
교육복지시설 수용학생	7 (0.0)	194 (0.1)	159 (0.2)	95 (0.1)	35 (3.5)	490 (0.2)

• 취원율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충남도에서도 맞벌이가구의 증가나 자녀에 대한 조기교육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 4>에서는 아동 연령별로 유치원 취원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보면 만 5세 아동의 경우 전체 대상 인원 20,020명 중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10,351명으로 취원율은 51.7%를 나타내고 있다.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보면 취원율이 각각 25.4%와 26.3%로 거의 유사한 숫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연령이 낮은 만 3세나 만 4세 아동을 보면 취원률 자체는 낮아지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취원률이 보다 높아

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내 학부모들의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 수요는 높지만, 공립 유치원에서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4〉 유치원 취원 현황

(명, %)

구분		연령별				비 고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취원 대상인원(A)		19,393	18,487	20,020	57,900	
취원아수	공립(B)	1,142	2,323	5,082	8,547	
	사립(C)	3,772	5,009	5,269	14,050	
	계(D)	4,914	7,332	10,351	22,597	
취 원 율	공립(B/A)	5.9	12.6	25.4	14.8	
	사립(C/A)	19.5	27.1	26.3	24.3	
	계(D/A)	25.3	39.7	51.7	39.0	

■ 교육격차

• 지역별 격차

2007년까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초6, 중3, 고 1학생의 3-5%를 표집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교과별,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균점수와 4단계 성취수준(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미달)으로 분석한 것을 학교와 개별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다 2008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대상은 해당학년의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고, 지역별 구분도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수준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점점 그 비중을 늘리면서 학교현장은 학업성취도평가 대비 수업 및 보충수업이 강화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전국과 충남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참고할 가치는 있다

〈표 5〉 지역규모별 학업성취도 평균점수 추이

(단위 : 점)

교과	지역	초6				중3				고1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2003	2004	2005	2006

국어	대도시	-	159.8 (8.5)	159.6 (8.2)	160.6 (8.2)	-	260.2 (8.5)	260.6 (8.1)	259.4 (8.4)	-	360.1 (8.3)	362.6 (8.2)	362.1 (8.8)
	중소	-	160.5 (8.4)	159.3 (8.2)	160.6 (8.1)	-	260.4 (8.6)	260.9 (7.8)	259.4 (8.2)	-	360.8 (8.6)	362.1 (7.8)	362.4 (9.1)
	읍면	-	158.8 (8.7)	158.2 (8.4)	158.7 (8.8)	-	257.7 (8.0)	258.9 (7.8)	257.8 (8.1)	-	356.9 (8.0)	358.8 (8.2)	359.3 (8.0)
수학	대도시	161.6 (8.4)	162.3 (7.7)	162.5 (7.5)	163.1 (7.9)	260.7 (8.6)	261.5 (8.6)	263.0 (8.5)	262.1 (9.0)	360.8 (9.0)	359.8 (9.1)	361.4 (8.4)	360.4 (8.9)
	중소	160.5 (8.0)	162.2 (7.6)	161.6 (7.3)	162.5 (7.6)	260.4 (8.5)	261.7 (8.8)	262.6 (8.6)	261.6 (8.8)	362.5 (8.9)	360.0 (8.8)	360.8 (8.3)	360.6 (9.1)
	읍면	158.1 (8.3)	160.3 (7.7)	160.3 (7.0)	160.6 (7.5)	257.6 (7.5)	259.3 (7.9)	260.6 (7.8)	259.3 (8.0)	356.4 (7.1)	355.6 (7.3)	358.1 (8.7)	357.2 (7.6)
영어	대도시	161.3 (8.5)	164.3 (10.2)	166.9 (10.2)	165.8 (9.9)	261.1 (8.8)	261.9 (8.7)	261.7 (9.2)	262.0 (10.1)	360.9 (8.8)	361.5 (9.1)	362.6 (8.8)	361.6 (9.0)
	중소	160.6 (8.1)	163.8 (10.2)	165.3 (10.3)	165.8 (9.8)	260.4 (8.5)	261.7 (8.7)	261.3 (9.0)	261.1 (9.4)	361.4 (8.1)	361.1 (8.5)	361.6 (8.5)	361.6 (9.4)
	읍면	156.5 (8.0)	160.1 (10.1)	162.6 (10.3)	161.7 (10.3)	257.2 (7.3)	258.7 (7.6)	259.0 (7.8)	258.3 (8.2)	355.3 (6.3)	356.7 (7.4)	358.7 (8.9)	358.1 (7.4)

주: 괄호안은 표준편차

출처: 한만길 외 (2008:59)

위의 표를 보면, 읍면지역의 학생은 전과목에서 도시지역의 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낮다. 특히 수학과 영어에서 읍면지역 학생과 도시지역 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학교급과 관계없이 읍면지역이 가장 높다.

〈표 6〉 지역규모별 기초학력 미달 빈도 및 비율(2005)

교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합계	대도시	중소도 시	읍면지 역	합계	대도시	중소도 시	읍면지 역	합계
국어	142 (4.1)	119 (3.5)	55 (5.0)	316 (4.0)	169 (5.6)	159 (6.3)	57 (8.4)	385 (6.2)	447 (5.6)	384 (6.1)	223 (10.7)	1054 (6.4)
사회	56 (1.6)	41 (1.2)	25 (2.3)	122 (1.5)	143 (4.7)	116 (4.6)	42 (6.2)	301 (4.8)	888 (11.1)	628 (10.0)	392 (18.7)	1908 (11.6)

수학	70 (2.0)	62 (1.8)	33 (3.0)	165 (2.1)	234 (7.7)	224 (8.9)	83 (12.2)	541 (8.7)	665 (8.3)	530 (8.4)	333 (16.0)	1528 (9.3)
과학	227 (6.5)	214 (6.3)	70 (6.3)	511 (6.4)	252 (8.3)	215 (8.5)	61 (9.0)	528 (8.5)	1473 (18.4)	1133 (18.1)	633 (30.2)	3239 (19.8)
영어	69 (2.0)	65 (1.9)	47 (4.3)	181 (2.3)	93 (3.1)	90 (3.6)	37 (5.5)	220 (3.5)	345 (4.3)	301 (4.8)	174 (8.3)	820 (5.0)

주: 1) 이양락 외(2005 : 62)에서 재구성함

주: 2) ① () : 각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에 따른 백분율

② 전체 학생수 : 초6 7,999명(1% 표집), 중3 6,298명(1% 표집), 고1 16,434명(3% 표집)

③ 기초학력 미달은 평가대상 학년급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20% 이하로 이해한 수준을 말함

출처: 한만길 외(2008: 60)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거의 100%에 이르나, 도시지역의 학생들은 도서벽지에 비해 일반계 고교 진학이 높고 면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전문계고 진학률은 도시지역보다 높다

〈표 7〉 중졸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2008)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상황					
		합계 (진학률)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특목고	기타학교 일반계	기타학교 전문계
대도시	316,170	315,174	237,211	64,943	10,033	1,311	1,676
		(99.68)	(75.03)	(20.54)	(3.17)	(0.41)	(0.53)
중소도시	280,993	279,988	207,584	60,940	9,004	884	1,576
		(99.64)	(73.88)	(21.69)	(3.20)	(0.31)	(0.56)
읍지역	51,312	51,155	35,952	13,543	1,213	198	249
		(99.69)	(70.07)	(26.39)	(2.36)	(0.39)	(0.49)
면지역	34,262	34,091	23,033	10,116	705	60	177
		(99.50)	(67.23)	(29.53)	(2.06)	(0.18)	(0.52)
도서벽지	7,701	7,684	5,283	2,209	141	15	36
		(99.78)	(68.60)	(28.68)	(1.83)	(0.19)	(0.47)
합계	690,438	688,092	509,063	151,751	21,096	2,468	3,714
		(99.66)	(73.73)	(21.98)	(3.06)	(0.36)	(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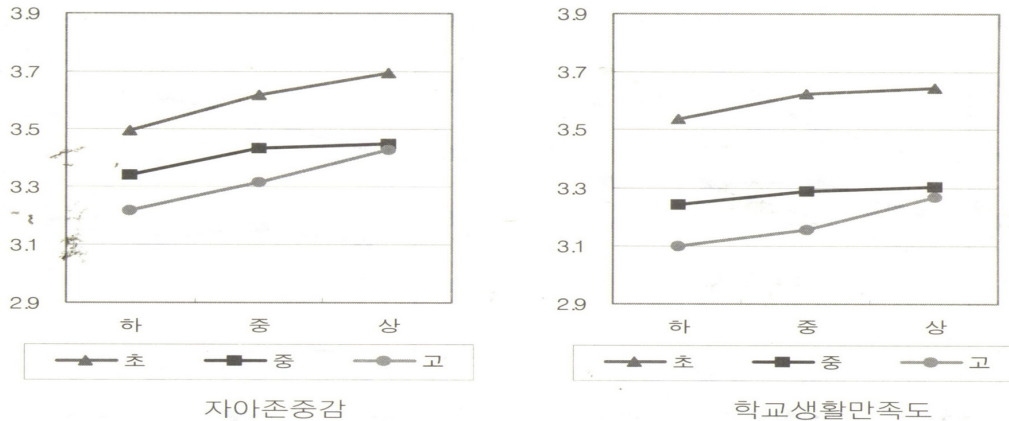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http://std.kedi.re.kr>

출처: 한만길 외(2008:61)

•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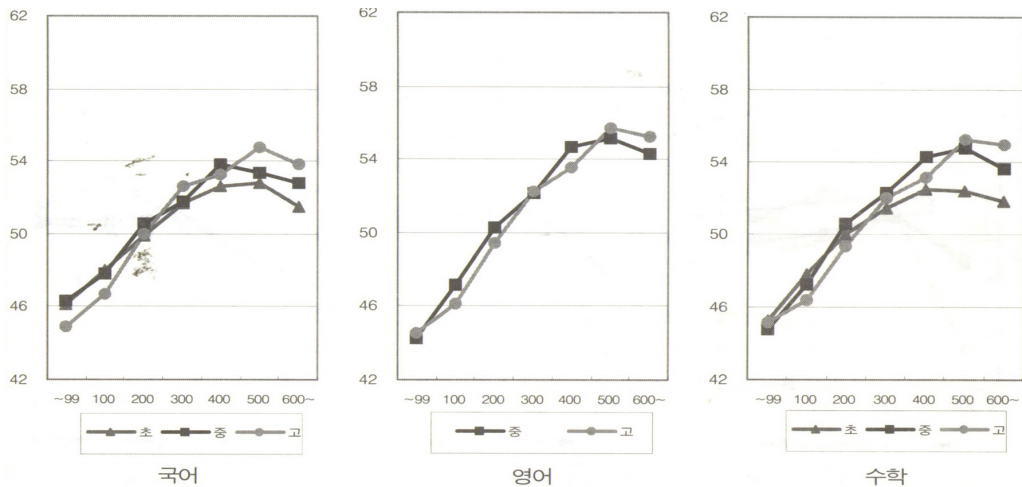
소득 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 올라가면, 상위계층 학생들의 수준은 크게 올라가고, 하위계층 학생의 수준은 크게 하락하여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교과성적 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성취 즉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표 참고).

〈표 8〉 아버지 직업지위에 따른 비인지적 성취



출처: 류방란 외 (2006:95)

〈표 9〉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교과 학습성취



출처: 류방란 외 (2006: 93)

• 충남지역의 학업성취도

충남지역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업성취도가 높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중등학교수준에서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표 참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수준에서 볼 때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단계가 고등학교였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성취도가 높은 지역과 비교해서 고등학교 급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교육 격차 해소에 좀 더 주력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표 10〉 시도교육청별 수학·영어 성취수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초6	수학	보통이상	89.4	91.8	86.6	85.1	88.6	90.1	88.7	85.1	90.5	91.1	87.2	83.2	83.5	86.9	89.1	89.1
		가점미달	1.2	0.7	1.1	1.5	1.0	0.9	1.1	1.6	0.9	0.9	1.2	2.0	1.8	1.4	1.0	0.9
	영어	보통이상	87.7	88.0	83.8	81.3	85.5	87.6	86.8	82.2	86.4	88.1	82.3	78.5	81.2	83.4	84.6	85.2
		가점미달	1.5	1.1	1.7	2.0	1.9	1.3	1.6	2.4	1.1	1.0	1.6	2.8	2.0	1.9	1.4	1.4
중3	수학	보통이상	56.3	58.4	62.2	56.8	60.8	59.3	59.0	53.6	57.8	57.5	52.2	55.6	47.9	59.8	54.7	63.9
		가점미달	12.5	9.9	7.8	8.8	9.5	8.7	9.0	11.9	9.1	8.5	10.8	14.0	14.8	8.3	10.1	10.1
	영어	보통이상	71.4	72.1	76.3	71.8	75.8	74.6	75.8	69.7	72.8	73.0	67.3	67.3	63.0	73.0	70.3	75.0
		가점미달	5.4	4.7	3.9	4.1	4.5	4.0	3.9	5.2	3.8	3.8	5.2	6.9	7.6	4.3	4.7	4.7
고(일)	수학	보통이상	60.3	72.6	69.7	65.7	74.1	68.2	64.9	59.1	66.3	68.2	62.8	67.6	62.7	68.6	62.0	76.5
		가점미달	8.3	3.1	3.5	4.5	2.9	4.6	4.3	7.7	5.2	4.7	6.3	5.0	6.3	4.6	6.0	3.3
	영어	보통이상	65.4	71.0	70.4	65.5	77.2	71.2	65.5	61.6	67.4	69.2	61.7	67.8	62.2	66.6	62.7	77.5
		가점미달	5.1	2.2	2.2	2.1	1.4	1.8	3.1	5.0	2.9	3.0	3.1	4.0	4.0	2.3	3.8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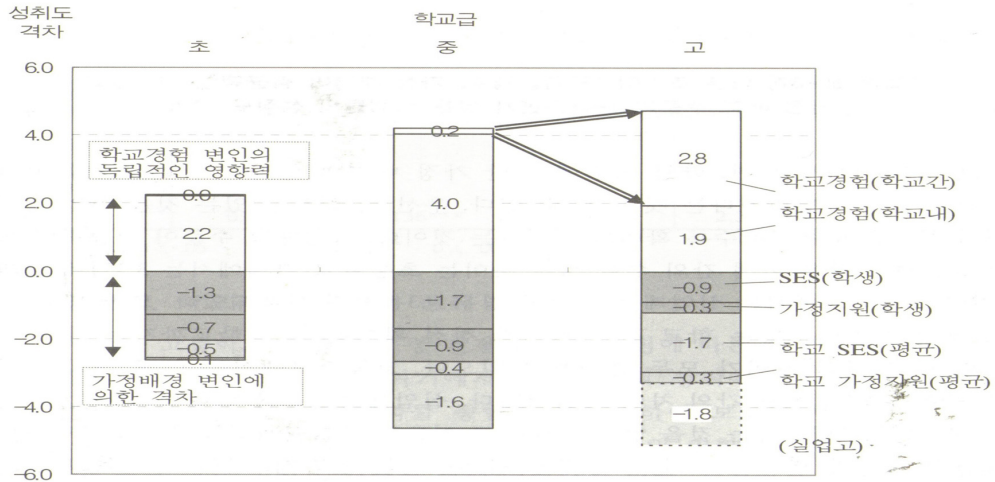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격차 해소 관련 연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할 점은 좋은 학교를 통한 긍정적인 학교 경험이다. 하위층에게 긍정적인 학교교육이

갖는 효과가 다른 계층에 비해 더 크다 (표 11,12참고). 이는 교육격차가 학교교육에 의해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 경험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 개발 또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학교 경험의 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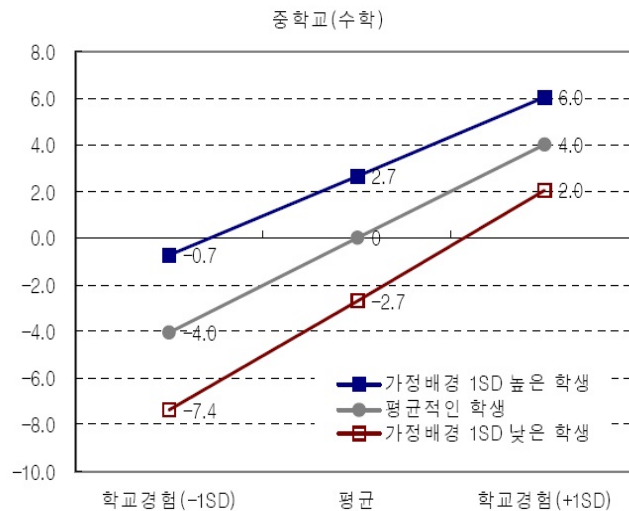
〈표 11〉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학교경험 수준이 1-표준편차 높은 학생들의 성취도



* 〈표 III-12〉의 수학 성적 분석 결과를 1-표준편차 단위로 재구성한 것임(p.135).

출처: 류방란 외(2006:136)

〈표 12〉 가정배경에 따른 학교 경험변인의 영향력 차이



출처: 류방란 외(2006: 138)

•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좋은 학교 운영은 교육복지 정책과 연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열관 외(2008)에 의하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대상 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관심,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능력과 같은 변인에 미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상당히 감소시켰다. 따라서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에 의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열악한 가정배경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교육격차해소에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충남도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보면 지자체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표13 참고). 따라서 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 민정 5기의 도정의 ‘행복학교’ 공약은 이와 관련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13〉 2009년도 시도교육청별 광역 자치단체 대응투자 현황

(단위: 천원, %)

시도	사업비 총계	광역자치단체	비율
서울	22,201,819	0	0.0
부산	9,060,000	450,000	5.0
대구	8,094,415	0	0.0
인천	6,171,855	600,000	9.7
광주	3,960,400	0	0.0
대전	7,271,792	2,255,000	31.0
울산	2,576,333	74,000	2.9
시평균	8,476,659	482,714	5.7
경기	16,005,370	6,478,000	40.5
강원	3,363,063	103,952	3.1
충북	3,135,529	100,000	3.2
충남	2,902,000	0	0.0
전북	5,246,000	0	0.0
전남	2,551,330	0	0.0
경북	3,224,225	0	0.0
경남	3,950,069	0	0.0
제주	2,563,134	200,000	7.8
도평균	4,771,191	764,661	16.0
전체 평균	6,392,333	641,310	10.0
전체 합계	102,277,334	10,260,952	10.0

출처: 김정 원(2009: 157)

나. 충청남도 전문대학교 대학 교육의 일반현황

• 충남의 대학의 일반적인 상황을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에는 9개 전문대학과 2개의 산업대학이 존재하고 재학생수가 약 5만 5천명에 이른다. 산업대학은 17% 이상인 학생수, 입학자수, 교원수의 비율로 볼 때 충남의 인구비율 4.05%(2007년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규모이나 두 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전문대학의 학생수는 전국의 인구비율과 유사하다.

〈표 14〉 충남지역 전문대학, 산업대학 통계

		2008년	전국 점유율(%)	2009년	전국 점유율(%)
학교 수(개)	전문대학	9	6.12	7	4.79
	산업대학	2	15.38	2	16.66
학생 수(명)	전문대학	30,658	3.97	31,028	4.07
	산업대학	23,968	14.80	24,667	17.20
입학자(명)	전문대학	10,158	4.11	9,511	3.98
	산업대학	4,554	20.35	4,558	23.49
교원 수(명)	전문대학	504	4.16	504	4.04
	산업대학	339	15.86	358	17.57

• 충남의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반대학이 13개, 교육대학이 1개로 재학생수가 약 18 만명에 이르고 있다. 학생수, 입학정원, 교원수의 비율도 대체로 10%에 접근하여 인구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학생수를 보유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대학원수와 대학원 학생수는 인구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고등교육은 4년제 대학이 인구비율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편이다. 이는 인구수에 비교하여 대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접한 수도권의 대학생수를 고려할 때 충남의 수도권의 고등교육수요의 대체 공급지역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남의 대학생 인구는 20만을 넘어서 충남 전체 인구의 10%에 근접하고 대학이 충남의 소비 수요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이 천안과 아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은 대학생 청년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표 15〉 충남지역 일반대학, 교육대학 통계

		2008년	전국 점유율(%)	2009년	전국 점유율(%)
학교 수(개)	일반대학	13	7.47	13	7.34
	교육대학	1	10	1	10
학생 수(명)	일반대학	174,586	8.98	177,515	8.94
	교육대학	2,261	9.37	2,173	9.49
입학 정원(명)	일반대학	32,468	9.46	32,620	9.38
	교육대학	530	9.7	534	10.2
교원 수(명)	일반대학	4,043	7.44	4,272	7.38
	교육대학	83	10.22	84	10.43

〈표 16〉 충남지역 대학원 통계

	2008년	전국 점유율(%)	2009년	전국 점유율(%)
대학원수(개)	63	5.97	67	6
학생 수(명)	12464	4.13	13272	4.33
입학자(명)	4536	4	4903	4.08
교원 수(명)	·	·	·	·

• 충남의 대학 졸업자는 매년 3만명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충남 지역의 민간부문에서 연간 창출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충남도가 공공영역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가 3,900개 인 것을 고려하면 3만명 이상의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어렵다. 따라서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대체로 전공과 상관이 낮거나 또는 학력 수준보다 낮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실업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통계연보의 취업률과 실업률의 비율은 다음과 같으나 그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실상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경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또 상당수의 대졸자들은 대전이나 수도권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하다고 다시 대전이나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후에 충남도의 대졸자 일자리 창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 충남지역 졸업, 취업, 미취업 현황 통계

		졸업자 수(명)	전국 점유율 (%)	취업자 수(명)	전국 점유율 (%)	미취업자 수(명)	전국 점유율 (%)
전문 대학	2008년	7446	3.58	6070	3.62	623	2.36
	2009년	7737	3.87	6070	3.73	557	2.34
대학	2008년	24458	8.65	16356	9.57	5516	7.44
	2009년	24479	8.77	16468	9.72	5384	7.13
대학원	2008년	799	2.21	605	2.87	82	1.7
	2009년	997	2.62	728	2.87	113	1.98

•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 중 2004년 8월과 2005년 2월에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를 502, 764 명중 5%에 해당하는 26,544명에 대한 조사를 활용한 분석이다. 여기에 충남지역 전문대학 졸업생은 340명이고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교 졸업생은 1,043명으로 지역의 졸업생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이들 졸업생은 2006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였고 2007년에는 현재 졸업 후 2년째인 2차 추적조사, 2008년에는 졸업 후 3년째인 3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즉 졸업 후 3년 이후의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래 <표18>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상태는 졸업 후 전국과 비교할 때 취업비율이 인문계열, 교육계열과 예체능계열에서 떨어지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타 계열에서는 전국평균과 유사하다. 이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수준의 일자리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풀이된다.

〈표 18〉 전문대학

08년	전공계열	취업자(%)	실업자(%)	반(半)실업자(%)	비경황(%)	총합(명)
전국	인문계열	57.8	5.7	1.0	35.6	419
	사회계열	70.1	3.2	0.3	26.4	2,400
	교육계열	72.4	0.5	0.7	26.4	424
	공학계열	72.1	3.8	0.3	23.9	3,574
	자연계열	68.4	3.7	0.3	27.6	753
	의약계열	73.1	1.9	0.1	24.9	932
	예체능계열	65.5	3.7	0.4	30.4	1,479
	총합(명)	6,970	338	0	2,638	9,981
충남지역	인문계열	52.5	0.05	0.0	42.5	40
	사회계열	70.2	3.6	0.0	26.1	111
	교육계열	65.3	3.8	0.0	30.7	26
	공학계열	73.8	4.7	0.0	21.4	84
	자연계열	66.6	5.5	0.0	27.7	36
	의약계열	77.7	0.00	0.0	22.2	9
	예체능계열	58.8	0.0	0.0	41.1	34
	총합(명)	229	13	0	98	340

• 아래 <표19>에서 나타나듯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계열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고 인문계열에서 다소 낮으나 전반적으로 전국 취업률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경우도 있다. 이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역 특수성에 따른 취업률 문제가 소수의 계열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19〉 4년제 대학

08년	전공계열	취업자(%)	실업자(%)	반(半)실업자(%)	비경황(%)	총합(명)
전국	인문계열	66.5	2.2	0.7	30.7	2,134
	사회계열	73.1	2.4	0.4	24.1	4,146
	교육계열	79.0	0.9	0.1	20.0	1,533
	공학계열	76.8	1.9	0.3	20.9	4,577
	자연계열	69.0	2.0	0.3	28.7	2,238
	의약계열	73.5	0.5	0.3	25.7	645
	예체능계열	66.7	1.9	0.3	31.1	1,290
	총합(명)	12,057	320	0	4,128	16,563

충남지역	인문계열	63.58	3.97	0.00	32.45	151
	사회계열	72.98	2.42	0.81	23.79	248
	교육계열	79.59	0.00	1.02	19.39	98
	공학계열	78.47	2.92	0.36	18.25	274
	자연계열	71.43	0.89	0.00	27.68	112
	의약계열	60.98	4.88	0.00	34.15	41
	예체능계열	72.27	1.68	0.00	26.05	119
	총합(명)	761	25	4	253	1,043

• 다음은 일자리의 특성이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4대 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모두 수여하는 가를 검토하였다. 3년의 경험을 모두 보고하였는데 주로 2008년도의 경우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 교육계열에서 4대 보험 일자리의 비율이 전국적 수준보다 낮았다. 이로써 이 세 계열은 취업활동 자체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도 낮은 것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국이나 지역이나 4대보험이 이루어지는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50% 대부분이 머물고 높아도 60% 수준이라는 점이라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 그 자체에 한계가 많다.

〈표 20〉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전문대학		06년		07년		08년	
		有(%)	총합(명)	有(%)	총합(명)	有(%)	총합(명)
전국	인문계열	51.79	419	48.69	419	45.1	419
	사회계열	62.50	2,400	57.83	2,400	57.2	2,400
	교육계열	58.96	424	54.48	424	52.4	424
	공학계열	67.68	3,574	63.21	3,574	62.2	3,574
	자연계열	61.62	753	56.71	753	55.8	753
	의약계열	73.18	932	67.70	932	66.6	932
	예체능계열	39.76	1,479	41.65	1,479	39.4	1,479
	총합(명)	6,120	9,981	5,756	9,981	5,631	9,981
충남지역	인문계열	57.50	40	45.00	40	37.5	40
	사회계열	51.35	111	53.15	111	59.4	111
	교육계열	46.15	26	23.08	26	46.1	26
	공학계열	72.62	84	64.29	84	63.0	84
	자연계열	58.33	36	47.22	36	47.2	36
	의약계열	77.78	9	66.67	9	66.6	9
	예체능계열	29.41	34	23.53	34	20.5	34
	총합(명)	191	340	168	340	176	340

• 4대 보험이 되는 4년제 대학 일자리는 58% 정도이고 충남지역의 4대 보험 일자리는 54%로 다소 낮았다. 특히 인문계열, 교육계열, 의약계열에서 더 낮았다. 현재의 자료로서는 원인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지만 경로분석이 더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4대 보험이 되는 일자리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교육계열과 의약계열과 같이 실용적 학문의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1〉 4대 보험 보장 일자리 보유 여부

4년제 대학		06년		07년		08년	
		有(%)	총합(명)	有(%)	총합(명)	有(%)	총합(명)
전국	인문계열	45.13	2,134	43.67	2,134	44.3	2,134
	사회계열	61.67	4,146	59.79	4,146	61.1	4,146
	교육계열	47.68	1,533	46.18	1,533	57.7	1,533
	공학계열	64.98	4,577	68.45	4,577	69.2	4,577
	자연계열	45.98	2,238	50.22	2,238	54.4	2,238
	의약계열	62.17	645	59.07	645	59.4	645
	예체능계열	38.76	1,290	36.20	1,290	37.4	1,290
	총합(명)	9,155	16,563	9,224	16,563	9,613	16,563
충남지역	인문계열	39.07	151	40.40	151	33.77	151
	사회계열	60.08	248	61.69	248	60.48	248
	교육계열	51.02	98	47.96	98	41.84	98
	공학계열	68.98	274	73.36	274	68.25	274
	자연계열	42.86	112	50.89	112	55.36	112
	의약계열	58.54	41	53.66	41	46.34	41
	예체능계열	40.34	119	36.97	119	43.70	119
	총합(명)	567	1,043	585	1,043	562	1,043

• 다음은 졸업자들의 취업, 4대보험 일자리, 임금의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다음 <표22> 분석에 활용한 자료의 3년 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표 22〉

	전국	충남 지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변량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전문 대학>	<4년제 대학>
평균 임금 06	163.05 (102.78)	186.51 (88.71)	162.11 (80.85)	169.73 (69.23)
평균 임금 07	186.78 (272.23)	215.49 (253.17)	174.04 (85.51)	190.78 (85.16)
평균 임금 08	191.10 (104.91)	225.07 (103.84)	189.85 (94.81)	201.97 (109.3)4
민간 회사 근무 06	78.59 (0.49)	62.13 (0.37)	76.83 (0.48)	62.73 (0.38)
공공 영역 근무 06	19.86 (0.39)	35.00 (0.47)	21.73 (0.41)	34.67 (0.47)
기타 영역 근무 06	1.55 (0.12)	2.87 (0.16)	1.44 (0.11)	2.60 (0.15)
민간 회사 근무 07	80.97 (0.53)	63.18 (0.40)	80.01 (0.50)	65.62 (0.41)
공공 영역 근무 07	18.19 (0.38)	35.06 (0.47)	18.72 (0.39)	32.86 (0.47)
기타 영역 근무 07	0.84 (0.09)	1.76 (0.13)	1.27 (0.11)	1.52 (0.12)
민간 회사 근무 08	79.94 (0.53)	63.66 (0.43)	79.56 (0.50)	55.68 (0.43)
공공 영역 근무 08	19.36 (0.39)	35.17 (0.47)	19.11 (0.39)	33.51 (0.47)
기타 영역 근무 08	0.70 (0.08)	1.17 (0.10)	1.33 (0.11)	10.81 (0.10)
300인 회사 근무 06	17.94 (0.38)	27.73 (0.44)	18.47 (0.38)	17.75 (0.38)
300인 회사 근무 07	31.09 (0.46)	44.55 (0.49)	31.68 (0.46)	34.62 (0.47)
300인 회사 근무 08	31.46 (0.46)	45.28 (0.49)	33.18 (0.47)	34.86 (0.47)
수도권 근무 06	42.31 (0.49)	45.45 (0.49)	42.64 (0.49)	50.91 (0.50)
수도권 근무 07	37.18 (0.48)	13.81 (0.49)	34.70 (0.47)	50.14 (0.50)
수도권 근무 08	35.00 (0.47)	43.20 (0.49)	34.11 (0.47)	48.70 (0.50)
전공 일치 여부 06	67.07 (0.46)	77.81 (0.41)	56.15 (0.49)	79.05 (0.40)
전공 일치 여부 07	65.44 (0.47)	76.42 (0.42)	58.02 (0.49)	76.23 (0.42)
전공 일치 여부 08	67.97 (0.46)	78.11 (0.41)	60.69 (0.48)	77.13 (0.42)
전공 도움 여부 06	58.90	70.95	52.13	69.72

	(0.49)	(0.45)	(0.50)	(0.45)
전공 도움 여부 07	48.43 (0.49)	57.73 (0.49)	40.98 (0.49)	57.30 (0.49)
전공 도움 여부 08	45.22 (0.49)	55.71 (0.49)	41.92 (0.49)	56.50 (0.49)

• 충남지역의 대졸자들은 서울 경기, 충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오고 대전 학생들이 충남에 오는 비율은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일자리도 서울, 충남, 경기에서 대부분 일자리를 잡았고 대전에서 일자리를 얻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표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충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충남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65%에 이르렀다. 따라서 충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중요한 정책대상이 될 수 있다.

〈표 23〉

지역 code	지역	고등학교 지역 학생수 (%)	일자리 지역 학생수 (%)
11	서울	358 26.25	327 31.08
21	부산	14 1.03	3 0.29
22	대구	12 0.88	2 0.19
23	인천	47 3.45	30 2.85
24	광주	5 0.37	1 0.10
25	대전	83 6.09	68 6.46
26	울산	2 0.15	2 0.19
41	경기	370 27.13	284 27.00
42	강원	17 1.25	6 0.57
43	충북	28 2.05	18 1.71
44	충남	335 24.56	288 27.38
45	전북	24 1.76	6 0.57

46	전남	19 1.39	3 0.29
47	경북	26 1.91	10 0.68
48	경남	21 1.54	4 0.38
49	제주	2 0.15	
50	기타	1 0.07	
total		1,364	1,052

• 다음은 취업과 4대 보험 일자리,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일자리를 잡는 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probit 모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이 취업과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취업의 경우 취업시험을 준비하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 이외에 다른 유의미한 결정요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4대 보험 결정에 있어서는 계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전문대인 경우만) 유의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수 또한 4대 보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남지역 고등학교 출신자들의 4대 보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았다. 기타 많은 스펙쌓기 노력들은 취업과 일자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 잔존할 확률은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더 높고 또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졸자의 경우에도 매우 높았다. 계열에서는 교육계열 졸업자들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대학원이나 대학에 재학 중 취업을 한 경우에도 주로 충남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다소 높았다.

다시 말해 취업과 취업의 질은 전공에 의해 결정된다고 평가된다

〈표 24〉

변량	08년 취업과 4대보험		08년 4년제 대학 4년제 4대 보험 일자리	충남지역 일자리	충남지역 일자리
	취업	4대 보험 일자리			
여성	-0.05** (2.05)	-0.09*** (3.07)	-0.10*** (2.78)	-0.03 (1.31)	-0.03 (1.35)
전문대학					

4년제 대학	0.07** (2.39)	0.03 (0.86)		-0.05** (2.21)	
교육대학	0.23*** (4.47)	0.06 (0.68)		0.03 (0.51)	
인문계열					
사회계열	0.01 (0.39)	0.24*** (5.39)	0.24*** (4.73)	0.09** (2.19)	0.06 (1.52)
교육계열	-0.00 (0.08)	0.10 (1.28)	0.06 (0.61)	0.13* (1.94)	0.17* (1.96)
공학계열	0.02 (0.69)	0.27*** (5.76)	0.28*** (5.31)	0.08** (2.03)	0.05 (1.32)
자연계열	-0.03 (0.68)	0.17*** (3.24)	0.20*** (3.28)	0.00 (0.05)	0.02 (0.51)
의약계열	-0.01 (0.28)	0.16** (2.10)	0.14 (1.61)	0.04 (0.65)	0.05 (0.85)
예체능 계열	0.00 (0.04)	0.03 (0.57)	0.09 (1.48)	-0.00 (0.11)	-0.02 (0.65)
취업 준비 기간	0.00 (1.06)	0.00 (1.15)	0.00 (0.76)	-0.00 (0.76)	-0.00 (0.83)
취업 사교육 지출 (100만원)	-0.00 (0.36)	-0.00 (0.64)	-0.00 (0.52)	-0.00 (0.53)	-0.00 (0.29)
시험 준비	-0.08*** (2.82)	-0.02 (0.64)	-0.01 (0.30)	-0.01 (0.50)	0.00 (0.03)
해외 연수비 (100만원)	0.00 (0.42)	0.00 (0.47)	0.00 (0.40)	-0.00 (1.44)	-0.00 (1.01)
아르바이트	-0.02 (0.97)	-0.03 (0.96)	0.02 (0.51)	-0.05** (2.18)	-0.03 (1.20)
복수전공	0.01 (0.44)	-0.05 (1.33)	-0.06 (1.53)	0.00 (0.23)	-0.00 (0.17)
자격증 수	0.00 (0.75)	0.01 (1.68)*	0.01 (1.43)	0.00 (1.05)	0.00 (0.90)
대학 재학					
대학원 재학	-0.15*** (4.54)	-0.07* (1.92)	-0.10** (2.33)	0.06** (2.27)	0.07* (2.39)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1 (0.25)	0.01 (0.18)	0.00 (0.04)	0.06 (0.95)	0.08 (1.19)

성적 상위권	-0.00 (0.14)	0.06 (0.82)	0.03 (0.35)	0.02 (0.40)	0.05 (0.80)
성적 최상위권	-0.03 (0.44)	0.03 (0.39)	0.03 (0.33)	0.02 (0.31)	0.10 (1.15)
등록금 학생 부담	-0.06** (2.54)	0.03 (0.99)	0.03 (0.88)	-0.06** (2.46)	-0.03 (1.25)
지방고등학교 출신	0.02 (1.15)	-0.06** (2.12)	-0.06* (1.78)	0.25*** (10.57)	0.18*** (7.23)
아버지의 교육	-0.00 (0.09)	0.00 (0.85)	0.00 (1.18)	-0.00** (2.52)	-0.00 (1.51)
아버지의 교육 missing	0.08 (0.82)	0.14 (1.08)	0.14 (0.94)	-0.14** (2.08)	
간측치	1375	1375	968	1375	956
LR	75.84	108.58	86.77	283.61	105.49

주: 괄호 안은 t statistics.

• 다음은 충남의 지역 졸업자들의 임금(소득) 결정요인을 seeming unrelated model(SUR 모형)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성별, 근속년수, 대학 종류, 전공계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전문대학을 자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 고등학교 출신들의 임금(소득)수준이 현격하게 높았다. 계열은 사회, 교육 및 공학계열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들은 양질의 대학에서 실용적 전공을 선택하고 초기에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 그 효과를 가져준다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표 25〉

변량	4년제 대학, 교육 대학		전문대학	
	06년	08년	06년	08년
여성	-0.26*** (6.87)	-0.21*** (6.81)	-0.21*** (2.92)	-0.20*** (3.18)
근속년수	0.05*** (3.79)	0.02* (1.89)	0.05*** (3.34)	0.01 (1.07)
근속년수 ²	-0.00** (2.49)	-0.00 (0.68)	-0.00 (1.08)	0.00 (0.91)
근속년수 missing	0.02 (0.30)	dropped	0.25 (1.80)*	dropped
잠재경력	0.02 (0.32)	0.14** (2.38)	0.36 (0.95)	0.09 (0.29)

인문계열				
사회계열	0.12** (2.33)	0.11** (2.36)		
교육계열	0.20* (1.91)	0.13 (1.54)		
공학계열	0.23*** (4.07)	0.20*** (4.31)		
자연계열	0.08 (1.19)	0.14** (2.34)		
의약계열	0.35*** (3.54)	0.32*** (3.91)		
예체능 계열	0.10 (1.53)	0.13** (2.26)		
취업준비기간	0.00 (0.86)	0.02*** (6.39)	0.02 (1.62)	0.00 (0.06)
취업 사교육 지출(100만원)	0.01 (0.84)	-0.01 (0.88)	-0.08* (1.86)	0.02 (0.73)
시험 준비	0.08** (2.04)	0.04 (1.25)	0.04 (0.43)	0.14 (1.60)
해외 연수	0.15* (1.80)	0.05 (0.90)	-0.07 (0.29)	0.08 (0.34)
해외 연수비(100만원)	0.00 (0.50)	0.00 (0.74)	0.02 (1.16)	0.00 (0.27)
아르바이트	-0.07* (1.77)	-0.12*** (3.77)	-0.09 (1.12)	-0.01 (0.18)
복수전공	-0.05 (1.39)	0.01 (0.48)	-0.02 (0.16)	0.09 (0.72)
자격증 수	-0.01 (0.90)	-0.01 (1.63)	0.01 (0.61)	-0.02 (1.30)
주 노동시간	0.00*** (4.67)	0.00*** (2.66)	0.00*** (3.75)	0.00*** (3.45)
자영업	0.33*** (4.60)	-0.09 (1.54)	0.51*** (3.85)	0.35*** (3.56)
대학 재학	-0.28*** (6.07)	-0.06 (0.80)	-0.40*** (3.68)	0.44* (1.74)
성적 하위권				
성적 중위권	0.05 (0.55)	0.09 (1.18)	0.05 (0.22)	0.05 (0.28)
성적 상위권	0.07 (0.80)	0.07 (0.89)	0.09 (0.37)	0.13 (0.63)
성적 최상위권	0.12 (1.11)	0.10 (1.08)	0.10 (0.43)	0.10 (0.48)
등록금 학생 부담	-0.04	-0.09***	-0.11	-0.06

	(1.15)	(2.89)	(1.40)	(0.87)
지방 고등학교 출신	-0.01 (0.44)	-0.00 (0.07)	0.18** (2.07)	0.13* (1.80)
교육대학교	0.31** (2.44)	0.17 (1.57)		
특수 목적대	0.30*** (2.90)	0.18** (2.05)		
기타대학	-0.03 (0.41)	0.03 (0.48)		
수도권 회사 근무	0.04 (1.28)	0.01 (0.58)	0.03 (0.35)	-0.03 (0.42)
상수	4.66*** (26.67)	4.51*** (18.30)	3.90*** (5.75)	4.37*** (3.60)
관측치	403	403	124	124
LR	292.05	238.45	163.36	132.46

주: 괄호 안은 t statistics.

다. 충청남도 평생교육의 일반현황

■ (1) 평생학습 참여율 및 형태

통계청의 조사(2004)에 따르면 충남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형태는 직장 연수가 전체의 4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충남 평생학습 참여율

(단위: %, 일)

구분	평생학습 참여자 비율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TV, 라디오 강좌청취		기타	
		비율	일수	비율	일수	비율	일수	비율	일수	비율	일수	비율	일수
충남	21.6	48.6	11.4	11.1	72.7	21.7	19.8	17.2	5	19.5	31.8	1	12.3

자료 : 통계청(2004). kosis db. 「평생학습」.

■ (2) 평생교육 추진 체제

충남의 평생학습 추진 체제는 크게 충청남도청과 시·군청으로 이어지는 라인과 충
 남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라인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는 2007년 전부 개
 정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림 3〉 충남 평생교육 추진 체제

• (가) 충청남도청 평생교육 전담 조직

충청남도청은 기획관리실 교육협력법무담당관 평생교육T/F팀에서 평
 생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평생교육 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지정·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도청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재
 평생교육 담당관을 파견 중에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 업무는 대부분
 도청 내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T/F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담
 당 직원은 3명이다.

〈표 27〉 충청남도청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 평생교육T/F 업무 분장

구 분	업 무
평생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 도교육청 간의 교육협력 지원 업무 ·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추진 ·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평생학습도시 지정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평생학습 축제에 관한 업무 ·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업무
학교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 운영 지원 · 충남학생 기숙사 운영 지원 및 대한민국 인재상 추진 · 교육특구, 학교신설 등 지역교육 현안사항 · 초·중·고 교육지원 업무 추진

자료 : 충청남도청(2010). <http://chungnam.net> 재구성

• (나) 충남 시·군청 평생교육 전담 조직

충남의 각 시·군은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교육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와 서산시는 “과 수준이며, 나머지 시·군은 “계”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룡시와 논산시는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평생교육 전담 인력은 서산시가 가장 많은 9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외의 시·군들은 대부분 2~3명 정도의 전담인력을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8> 지역별 평생교육 관련 조직 현황

구 분	조 직	수준	평생학습도시	인력	센터설치	비고
천안시	평생학습과 평생학습팀	과	○	5	×	
아산시	주민자치과 평생학습팀	계	○	2	○	
공주시	복지사업과 평생교육담당	계	×	2	×	
서산시	평생학습도서관과	과	○	9	○	
보령시	총무과 평생학습담당	계	×	1	×	
계룡시	없음	-	×	-	×	
논산시	없음	-	×	-	×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평생교육팀	계	×	2	×	
예산군	복지과 평생교육담당	계	×	3	×	
홍성군	주민복지과 평생학습담당	계	×	2	×	
태안군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계	○	3	×	
청양군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계	×	2	×	
부여군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계	○	3	×	
서천군	총무과 평생교육담당	계	○	3	×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평생학습담당	계	○	2	×	
연기군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	계	×	3	×	

주 : 아산시 평생학습센터는 '10. 9월 개관

• (다) 충남교육청 평생교육 전담 조직

충남교육청의 평생교육 전담 조직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평생교육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축제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 학생수련활동, 학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에 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원, 교습소 및 공공도서관 담당 등이다.

• (라)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충청남도평생교육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어 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종전에 충청남도평생교육원,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백석문화대학 평생교육원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7년부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단독으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 (마) 지역 평생학습관

2008년 현재 16개 시·군에 20개의 평생학습관이 설치·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충남서부평생학습관,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평생교육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이며 다른 곳은 도서관을 평

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9〉 충남 지역 평생학습관 현황

(단위 : 개소)

지 역 별	평생학습관 명칭	지 정 기 관
충 남	충청남도평생교육원	
천안시	성환지역평생학습관	성환도서관
	천안지역평생학습관	충남학생회관
공주시	공주지역평생학습관	공주도서관
	유구지역평생학습관	서산해미도서관
보령시	보령지역평생학습관	보령도서관
	웅천지역평생학습관	웅천도서관
아산시	아산지역평생학습관	아산도서관
서산시	서산지역평생학습관	충남서부(서산)평생학습관
	해미지역평생학습관	서산해미도서관
논산시	논산지역평생학습관	충남남부(논산)평생학습관
계룡시	-	-
금산군	금산지역평생학습관	금산도서관
연기군	연기지역평생학습관	연기도서관
부여군	부여지역평생학습관	부여도서관
서천군	서천지역평생학습관	서천도서관
청양군	청양지역평생학습관	청양도서관
홍성군	홍성지역평생학습관	홍성도서관
예산군	예산지역평생학습관	예산도서관
태안군	태안지역평생학습관	태안도서관
당진군	당진지역평생학습관	당진도서관
16개 시·군	20개 평생학습관	

자료 : 양병찬 외(2008). “충남 평생교육 전담기관의 역할강화를 위한 사업·프로그램 개발 연구”. 충남 평생교육정보센터

• (바) 기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기타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로는 먼저 공공도서관이 있다 공공도서관은 우선 교육청 소속이 성환도서관, 공주도서관 등 19개의 도서관이 있으며,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이 15개가 있다. 그리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총 18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총 23개가 있다. 이외에도 농업기술센터가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1개씩 총 15개소가 있다.

〈표 30〉 공공도서관 현황

지역별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지역별	교육청 소속	지자체 소속
천안시	천안성환도서관 충남학생회관 정보관	천안중앙도서관 천안성거도서관	당진군	당진도서관	당진합덕도서관 송악도서관
공주시	공주도서관 공주유구도서관	공주웅진도서관	금산군	금산도서관	-
			연기군	연기도서관	-
보령시	보령도서관 보령웅천도서관	보령주산도서관	부여군	부여도서관	-
			서천군	서천도서관	서천장항도서관
아산시	아산도서관	아산배방도서관 아산 송곡도서관	청양군	청양도서관	-
서산시	서부 평생학습관 정보관 서산해미도서관	-	홍성군	홍성도서관	홍성광천도서관
			예산군	예산도서관	-
논산시	남부 평생학습관 문헌정보부	논산강경도서관 논산연무도서관	태안군	태안도서관	태안안면도서관
계룡시	-	-	계	19	15

자료 : 양병찬 외(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 충남교육청.

〈표 31〉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지역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지역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천안시	천안외국어대 평생교육원	금산군	-
	천안대 평생교육원	연기군	홍익대 평생교육원 고려대 평생교육원
	남서울산업대 사회개발교육원		
	나사렛대 평생교육원	부여군	-
	상명대 평생교육원		
	단국대 평생교육원		
	선문대 평생교육원		
	호서대 평생교육원		
공주시	공주대 평생교육원	서천군	-
보령시	대천대 평생교육원	청양군	-
아산시	순천향대 평생교육원	홍성군	-
	선문대 평생교육원	예산군	공주대 산업대학 평생교육원
서산시	한서대 평생교육원	태안군	-
논산시	건양대 평생교육원	당진군	신성대 평생교육원
계룡시	-	계	18

자료 : 양병찬 외(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 충남교육청.

〈표 32〉 사회복지관 현황

지역별	사회복지관	지역별	사회복지관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아우내온빛복지관 쌍용사회복지관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연기군	경로여성복지회관
공주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주기독교사회복지관 금강사회복지관	부여군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	서천군	장항여성복지회관
아산시	아산시사회복지관 온주종합복지관 탕정사회복지관	청양군	-
서산시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석림사회복지관	홍성군	홍성군사회복지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논산시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 예산군가정복지회관
계룡시	-	태안군	-
금산군	금산군가정복지회관	당진군	-
계		23	

자료 : 양병찬 외(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 충남교육청.

〈표 33〉 농업기술센터 현황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천안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연기군	연기군 농업기술센터
공주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여군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보령시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서천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아산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서산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홍성군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논산시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예산군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계룡시	-	태안군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금산군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당진군	당진군 농업기술센터
계		15	

자료 : 양병찬 외(2004).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 충남교육청.

라.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협력의 현황

충청남도과 충청남도 교육청은 2007년 1월 9일에 체결한 교육협력협약서 제3조 4호에 의해 도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아래 도 교육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9개 분야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였다. 도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현안문제와 양 자치기관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교육청 관계국장, 도의원 등이 참여하고 행정부지사가 위

원장을 맡아왔다. 道에서 미 진출된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 등 도와 교육청의 관계문제와 도에서 제시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실무위원회는 도에서 6명, 도 교육청 9명, 충남발전연구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였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9개 교육협력사업분야에 실무를 논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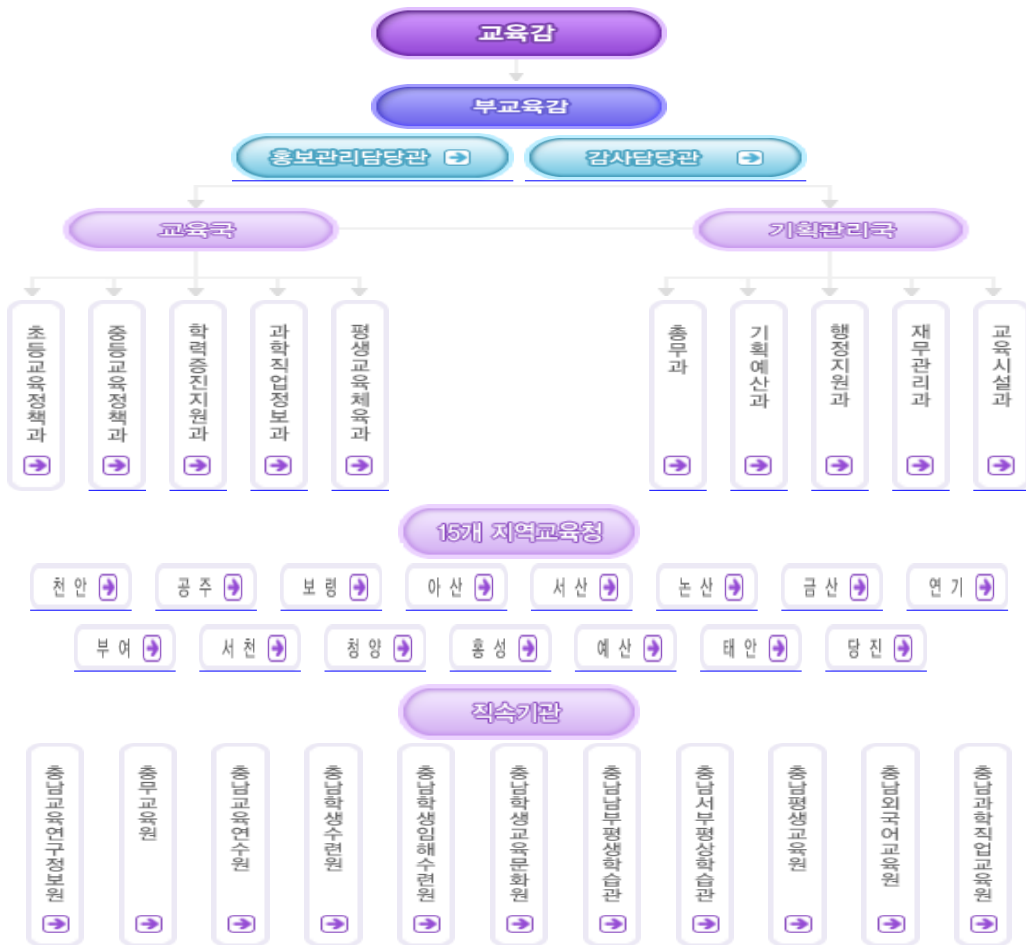
3. 조직구성 및 주요 기능

가. 충청남도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 충청남도 교육청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교육감 아래 부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전체 업무는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이라는 두 개의 국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구성은 다음 <그림 4>의 교육청 조직도에 도표화되어 있다. 교육국 산하에는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 학력증진지원과, 과학직업정보과, 평생교육체육과가 있으며 기획관리국 산하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가 있다.

- 충청남도 교육청 산하에는 15개의 지역 교육청이 있다.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그리고 산하 직속기관으로는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충무교육원, 충남교육연수원, 충남학생수련원,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충남서부평생학습관, 충남평생교육원, 충남외국어교육원, 충남과학직업교육원이 있다.

〈그림 4〉 충청남도 교육청 조직도



- 다음 <표34>에 정리되어 있듯이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직원의 정원은 1,346명이고, 현원은 1,347명이다. 소속별 현원을 보면 본청 소속이 309명, 직속기관 소속이 274명, 그리고 지역교육청 소속이 764명이다. 직급별로는 정무직이 1명, 교원 26명, 교육전문직 266명, 일반직 709명, 그리고 기능직 3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원 기준)

〈표 34〉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직원의 정원 및 현원 현황

(명)

구 분		계	정무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본 청	정원	304	1		74	189	40
	현원	309	1		74	189	45
직속기관	정원	275			47	126	102
	현원	274			47	120	107
지역교육청	정원	767		26	145	417	179
	현원	764		26	145	400	193
계	정원	1,346	1	26	266	732	321
	현원	1,347	1	26	266	709	345

나. 충청남도 교육청의 주요 기능

충청남도 교육청의 주요 기능은 도의 교육을 관할하고 교수학습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학교의 운영을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동시에 도민대상 다양한 교육문화예술헌생교육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의 교육관련 기구와 정원

충청남도의 교육관련 기구와 정원은 교육협력법무담당관아래 교육협력담당을 두고 실무를 수행하는 정도로 매우 충청남도 도청이 의욕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매우 큰 한계가 많다.

라. 충청남도의 교육관련 기구의 기능

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예산 관련 일을 관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집행은 대부분이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학교를 통해 수행되기 때문에.

제2장 교육 분야의 추진사업 현황 및 사업비 분석

1. 충청남도 추진사업 현황

2. 충청남도 교육관련 사업비 분석(2009/2010)

3. 충청남도 교육청의 사업비 분석

교육분야의 추진사업의 현황과 사업비 분석은 충청남도의 예산을 중심으로 한다

1. 충청남도 추진사업 현황

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충청남도의 교육 분야의 사업은 다음 <표3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충청남도 교육청 주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사업, 지역 명문고 지원, 방과후 중국어학교 지원, 중국어 캠프 지원, 전문계고등학교의 해외인턴십 지원, 학습장애 등 특별 관리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대안학교(충무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예산, 평생교육관련 사업, 청양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지원사업이 있다.

〈표 35〉

충청남도 교육활동지원비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지역 명문고등학교 지원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	
	중국어 캠프 운영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 교사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대안학교(충무학교)운영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무상급식 및 우수지역 농산물 사용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지원금	법정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	
평생교육관련사업	평생교육 시스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고등교육지원	청양대학 지원	
	산학협력 R&D 지원사업	
	도비유학생 지원사업	
기타	충청남도 장학회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나. 주요사업의 연차별 추진 현황

〈표 36〉

년도	항목	2007	2008	2009	2010
충청남도 교육활동지원 비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	○	○	○
	지역 명문고등학교 지원	○	○	○	○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	○	○		
	중국어 캠프 운영	○	○		
	원어민 교사		○	○	○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인적자원 개발센터: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	○
	대안학교(충무학교)운영 지원	○	○	○	○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무상급식 및 우수지역 농산물 사용	○	○	○	○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지원금	법정교육재정교부금	○	○	○	○
	지방교육세	○	○	○	○
	학교용지부담금	○	○	○	○
평생교육관련 사업	평생교육 시스템				
	평생교육 프로그램	○	○	○	○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	○
고등교육지원	청양대학 지원	○	○	○	○
	산학협력 R&D 지원사업	○	○	○	○
기타	충청남도 장학회	○	○	○	○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 영지원	○	○	○	○

2. 충청남도 교육관련 사업비 분석(2009/2010)

가. 예산 현황

• 충청남도의 2010년 예산에서 세입은 자체 수입이 9,366억원이고 (28.0%), 의존 수입이 2조 4,061억원이다. (72.0%) 자세한 내역을 정리한 <표 20>을 보면 자체 수입은 지방세 7,850억원과 세외수입 1,5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651억원과 국고보조금 1조 8,4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출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459억원 (7.4%), 공공질서안전 1,735억원 (5.2%), 교육 2,086억원 (6.2%), 문화 및 관광 1,534억원 (4.6%), 환경보호 3,285억원 (9.8%), 사회복지 7,602억원 (22.7%), 보건 642억원 (1.9%), 농림해양수산 6,322억원 (18.9%), 산업중소기업 1,003억원 (3.0%), 수송 및 교통 1,523억원 (4.6%), 국토지역개발 2,243억원 (6.7%), 과학기술 256억원 (0.8%), 예비비 331억원 (1.0%), 기타 2,403억원으로 (7.2%) 구성되어 있다.

〈표 37〉 충청남도 2010년 예산

세입			세출	
자체수입	9,366억원(28.0%)		일반공공행정	2,459억원(7.4%)
	지방세	7,850억원(23.5%)	공공질서안전	1,735억원(5.2%)
	세외수입	1,516억원(4.5%)	교육	2,086억원(6.2%)
의존수입	24,061억원(72.0%)		문화 및 관광	1,534억원(4.6%)
	지방교부세	5,651억원(16.9%)	환경보호	3,285억원(9.8%)
	국고보조금	1조8,410억원(55.1%)	사회복지	7,602억원(22.7%)
	지방채		보건	642억원(1.9%)
			농림해양수산	6,322억원(18.9%)
			산업중소기업	1,003억원(3.0%)
			수송 및 교통	1,523억원(4.6%)
			국토지역개발	2,243억원(6.7%)

		과학기술	256억원(0.8%)
		예비비	331억원(1.0%)
		기타	2,403억원(7.2%)

• 충청남도의 교육 관련 구체적인 사업비 예산현황(2009년과 2010년)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표 38〉 교육협력담당 관리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2009년	2010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48,000	4,348,000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8,550,000,000원*30%	2,565,000	2,565,000
○지역명문고 육성		
1,600,000,000원*2개교*25%	800,000	800,000
○방과후 중국어학교운영	128,000	128,000
○중국어캠프 운영		
40,000,000원*2회*50%	40,000	40,000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50,000,000원*21개교*30%	315,000	315,000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지원	500,000	500,000
	4,348,000	4,348,000

〈표 39〉 교육협력담당 이전비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산액	
	2009년	2010년
청양대학 육성 지원	5,000,000	5,000,000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	1,070,000	1,070,00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670,000	670,000
○전문계고 해외 인턴쉽	400,000	400,000
전도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160,000	160,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지원		
20,000,000원*16개시군*50%		
충청남도 장학회 운영 지원	580,000	580,000
○충청남도 장학회 출연금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지원	800,000	800,000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합계	8,150,000	8,150,000

〈표 40〉 법정부담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2009년	2010년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531,000	196,531,000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531,000	196,531,000
○교육재정교부금	21,031,000	21,031,000
○지방교육세	175,000,000	175,000,000
○대안교육센터 운영비	500,000	500,000
학교용지부담금- 건축도시과	33,000,000	6,000,000
	국	5,967,695
	도	27,032,305
합계	196,531,000	196,531,000

〈표 41〉 농업관련 부서의 교육관련 사업비(농가 도우미 지원은 제외)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			
	2009년		2010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844,180		7,696,208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4,510,000		5,562,028
○ 농가도우미 지원		103,950		103,950
35,000원*550명*45일*12%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230,230		2,230,230
850,000원*13,119명*2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1,487		71,487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71,487		71,487
	분	14,653	분	18,176
	도	56,834	도	53,311
합계(* 농가도우미 제외)		6,811,717		7,520,541

나. 소관부서별 사업비 분석

• 2010년 충청남도 예산 중 교육 부문 예산은 2,08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6.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보면 <표 42>에서 보듯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009억원이라는 대부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고등교육 부문에 50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26억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 교육 관련 예산은 2009년에 비해 2010년 예산액이 감소하였다. 교육 부문 전 예산은 2,174억원에서 2,086억원으로 4.06%만큼 감소하였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3.62%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이 34.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부문만 1.93%만큼 소폭 증가하였다.

〈표 42〉 충청남도 2010년 교육 부문 예산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교육	208,551,500	6.24 %	217,370,705	6.71 %	- 8,819,205	- 4.06 %
유아및초중등교육	200,904,000	6.01 %	208,442,000	6.44 %	- 7,538,000	- 3.62 %
고등교육	5,037,500	0.15 %	4,942,000	0.15 %	95,500	1.93 %
평생·직업교육	2,610,000	0.08 %	3,986,705	0.12 %	- 1,376,705	- 34.53 %

• 도의 소관부서별로 보았을 경우 충청남도의 주요 사업비는 기획관리실의 교육협력법무담당관에서 운영하였고 법정전입금의 경우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에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 및 농촌 관련 교육비는 농R&D와 관련된 산학협력 자금(본 보고서 연구진은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사업 명목으로 대학과 협력하여 이를 분석할 수 없었다.)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 도의 교육관련 사업의 재원은 대부분이 일반세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급식비 지원의 경우 도가 30%를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 있다. 특별히 재원유형별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라. 주요사업의 사업비 분석

■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원어민이 직접 강의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처음으로 실시된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프로그램은, 2008년 100개교에서 2009년에는 도내 171 전 읍면으로 전면시행이 이루어졌고, 수혜인원 및 시수도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2008년에는 269개교(중심100, 순회169) 52,415명의 학생이 (이용률 36.2%)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던 반면, 2009년에는 294개교(중심171, 순회123) 63,500명의 학생이 (이용률 43.9%)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학생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학생들에게 국제화마인드를 조기에 함양시킬 수 있었다는 점 (학생들이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외국문화에 큰 관심 표명하게 되었다는 점, 3년간 원어민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뚜렷이 향상되었다는 점 (관심도향상 82.5%, 실력향상 73.3%)), 학부모 또한 학교영어공교육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 (학원을 끊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및 시수를 확대함으로써 영어노출기회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문답식 생활영어 교육과 외국인과의 현장체험 교육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우수원어민 교사 확보 및 관리대책이 보다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우수원어민 강사와의 재계약 추진, 직무연수, 미국 IU대학 협력 추진 등),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전체는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교육청의 예산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안학교 충무학교

-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2010. 4월 전국에서 최초로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인 충무학교를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다.

충무학교는 충남 아산에 소재하며 현재 정원은 40명이다. 주로 중·고 중도탈락생 및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해서 진단과 상담을 실시한 후, 대안교육과 기숙 생활을 병행하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기존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관과 기숙

사동을 신축하고 있다. 소요예산은 90억원인데(국30, 도30, 교육청30), 2011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1기 교육생 38명이 입교해 있는데(중학교 남학생), 이들은 5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대상지는 학교장이 추천하며, 읍면동 사회복지부서에서 실태를 파악한 후 추천한다. 이들에 대해 대안교육전문 교사가 가정환경 등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현재 교육장소는 충무교육원 교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4인 1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 책임 교원 합숙 실시) 교육내용은 해외배낭여행, 미술, 음악, 요리 등 특별활동 위주로 진행되며, 교사진은 18명이다. (대안교육전문가 10명, 사명감 있는 교사 6명 등) 2010년도 운영 예산지원액은 10억원이다. (도 5, 교육청5)

위기 학생의 적응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연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정책이다. 현재로서는 교육이 처음 실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올해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교육 내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추진

• 충청남도에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전문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는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 그리고 해외취업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외국어 구사능력 및 기술력을 두루 갖춘 글로벌 기능인을 육성하며, 전문계고에 우수한 중학생이 입학하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기능인력의 수요가 많은 호주, 캐나다 등 국가를 타겟으로 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부족직업군과 연계하여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해외 인턴십을 위해 사전 영어수업을 강화하고, 전문계고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여 '해외 인턴십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 선발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면접, 내신 성적을 통하여 선발하며, 어학 및 기술연수와(해당국가 전문대학 등) 기업인턴십을(응용과정) 병행하고 있다. 개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료, 입학금, 홈스테이 등을 지원하며, 연수기간 중 연락체계 구축을 비롯 학생관리는 컨설팅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5개교, 118명을 대상으로 사전 해외 인턴십 반을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용접 2, 배관 2, 전기 2, 제과·제빵 2, 자동차정비 2) 이들의 연수를 위해 호주 TAFE(기술전문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08. 9. 1 부터 11. 21 까지 12주간)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1억 1,500만원(도비)이며, 인턴십 종료 후 현지근무 3명, 현지 학업 2명이었으며, 5명이 귀국하였다.

2009년의 경우 전체 전문계고(공업, 농업, 수산, 상업고)로 대상 및 인원을 확대하였고, 대상 국가도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19개교(공 15, 농 3, 수 1) 447명에 대해 해외 인턴십반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15개교 11개 분야 40명을 선발하였다. (공고 24, 농고 11, 수고 1, 상고 4)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7억 2,000만원(도비)이었고, 추진 결과 인턴십 종료 후 현지근무 11명, 학업 2명, 귀국 27명이었다. 2010년도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도 4, 도교육청 4)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업은 소외된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해외취업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이 정도의 예산 투입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실제 외국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기타

• 그 외 주요 교육 사업으로는 중국어 교육 사업과 지역 명문고 육성 사업이 있다.

우선 2008년부터 시작된 중국어캠프 및 방과후 중국어학교 사업은, 21세기 환 황해권 시대를 맞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국 교역증대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중국어 인재 양성 및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국어 캠프는 총 5회('08-1, '09-2, '10-2) 8기(회당 2기)가 운영되었는데,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공주대학

교 산업과학대학(예산캠퍼스)에서 실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기준, 총 40시간이 운영(기당 4박5일)되었는데, 어학 4시간(중국어 강의 2, 회화 2), Activity Program 2시간(중국예술, 중국음식, 영상여행 등), 야간 2시간(중국어 장기자랑, 골든벨 등) 등이다. 사업비는 2010년의 경우 1억 3천만원이었다. (도비 4천, 군비 2천, 교육청 7천만원)

방과 후 중국어 학교는 2개 학교를(예산중앙초등학교, 예산중학교)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원어민과 한국인 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주당 수업시수는 각 21~22시간이 기준(벨트형 포함)이다. 사업비로 2010년의 경우 1억 2,800만원의 도비가 지출되었다.

이들 중국어 교육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이 제도의 확대 혹은 축소 방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지역 명문고' 육성 사업이 있다. 이는 도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3년간 추진되어 오고 있다. 2007년 지역 명문고 육성 기본계획 수립되어, 도내 6개 시(계룡시 제외) 6개교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시별 1개교) 2008년-2010년 매년 2개교, 총 96억원이 지원(개교당 16억원)되었다. 재원분담은 도 25%, 해당 시 25%, 교육청 50%로서, 2010년 현재 도는 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명문고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천안중앙고, 천안여자고, 북자여자고, 논산여자고, 썬밸여자고, 용남고 6개교이다.

도의 입장에서는 교육 사업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어떠한 방식으로 집행되어 어떠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충남장학회 및 충남학사 운영

- 충남장학회는 도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충청남도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장학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향토인 재육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0년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가 설립등기를 마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2010년 현재 기금은 85억원이며, 이를 기초로 11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 7억 4천만원, 기금적립 1억 5천만원) 장학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 장학생지급 (대학생 17명, 17,000천원), 영

재육성장학생 지급 (511명, 286,400천원), 전문계고 기능인력양성장학생 지급 (67명, 29,900천원), 도비유학장학생 장학금지급 (3명, 51,144천원)

충남장학회는 자립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자립을 위한 기금확대 실적 미흡한 상황이다. 민간기업 및 단체의 기금출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학생기숙사는 1999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2000년 개원하였다. 2000 - 2005년간은 충청남도장학회에서 수탁 운영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만불선원과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남학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520㎡, 건물면적 5,544㎡(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숙소는 111실(2인 1실) 온돌, 침대(1인용) 222개이며, 그 외에 체력단련실, 식당, 컴퓨터실, 다목적실이 있다. 직원은 상근인력 5명(조리원 4, 사무보조 1)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입사생은 222명이다. 기숙사생의 1인당 월부담금은 13만원, 최초 입사비로 6만원을 지불한다.

충남학사의 운영 내역 및 사생들의 만족도, 그리고 기숙사의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급식지원사업

•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보조는 교육청과 더불어 시도 지자체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여 왔다. 다음 <표 43>에서 보듯이 2010년 학교급식관련 예산은 총 890억원인데, 이 중 197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였다. 도의 부담액은 59억원이었다.

〈표 43〉 2010년 학교급식관련 예산

구 분	수혜대상	2010년 지원액(억원)				비고
		소계	도	시군	교육청	
합 계		890	59	138	693	
① 학교급식식품비 (유·초·중·고, 특수)	1,264개교 317,921명	211	56	130	25	
② 무상 급식	저소득층 무상급식 (초·중·고)	32,141명	196	3	8	185
	농산어촌 초·중·고, 병설 유 치원 무상급식	359개교 82,857명	214			214
	다자녀, 특수학교 무상 급식	2,429명	10			10
⑤ 시설비(138), 인건비(121)	초·중·고교	259			259	

※ 기관별 부담률 도 6.6%, 시군 15.5%, 교육청 77.9%

• 현재 지자체의 보조는 주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이 항목의 예산은 총 211억원인데, 도가 56억원을 시군이 130억원을 그리고 교육청 25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국내산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이다. 1인당 연간평균 지원액은 66,320원(단가1,605원×180일×22%)이다. 이 외에 저소득층학생 무상급식에 도에서 3억원, 시군에서 8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도의 계획은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그리고 2012-2014년 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면지역 중학교, 읍지역 중학교, 그리고 동지역 중학교 학생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시급성 차원에서 본다면 초등학교 동 지역 학생들보다는 중학교 읍면 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단지 무상급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4〉 시군별학교급식비-지원현황

시군별	학생수	년 간 재 정 소 요	재 원 부 담		
			계	도비(30%)	시군비(70%)
합 계	324,902	15,406,711	15,406,711	4,622,013	10,784,698
천안시	106,799	5,063,262	5,063,262	1,518,979	3,544,283
공주시	20,721	998,225	998,225	299,467	698,758
보령시	15,745	744,654	744,654	223,396	521,258
아산시	34,143	1,588,415	1,588,415	476,524	1,111,891
서산시	26,966	1,269,022	1,269,022	380,707	888,315
논산시	20,340	983,853	983,853	295,156	688,697
계룡시	9,062	423,942	423,942	127,183	296,759
금산군	6,535	308,740	308,740	92,622	216,118
연기군	10,563	496,537	496,537	148,961	347,576
부여군	10,153	482,484	482,484	144,745	337,739
서천군	7,576	363,193	363,193	108,958	254,235
청양군	3,658	171,934	171,934	51,580	120,354
홍성군	13,358	643,079	643,079	192,924	450,155
예산군	12,437	596,761	596,761	179,028	417,733
태안군	7,934	377,873	377,873	113,362	264,511
당진군	18,912	894,737	894,737	268,421	626,316

■ 청양대학 지원

• 도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은 도립 청양대학 지원 50 여 억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양대학의 운영과 성과가 도의 예산지원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양대학은 95년 8월에 설립계획을 확정 한 후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6년 11월 전문대학 설치조례를 제정하였고 97년 7월 내무부로부터 직제와 정원 승인을 동년 11월 27일에는 교육부로부터 10개 학과 400명 정원의 도립대학 설치인가를 받아 98년 3월 19일 개교와

함께 입학식을 가졌으며, 2006년 자치행정경찰계열 신설로 2계열 8개학과 560명 정원으로 조정하였고, 2000 ~ 2010년까지 11회에 걸쳐 졸업생 4,849명을 배출하였다. 군입대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의 취업률은 90%를 상회하여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고 2009년까지 공직 진출자 360(113명의 공채 포함) 배출하기도 한다. 소규모 대학으로서 산학협력 등에 치중함으로써 다른 전문대학과 달리 높은 취업성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12나 존재하고 학과규모가 전반적으로 매우 작고(전임교수 2.4명이 한 학과운영), 교수 1인당 학생 수도 많아 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이사회 구성도 대부분이 공무원과 자영업자로서 고등교육 전문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청양대학의 운영구조, 성과, 교육여건, 신입생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양대학은 도의 지원비와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신입생의 경우 1인당 166-195만원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5〉

주요 항목	내용
입학정원	2010년 3월 기준 593명 입학
재학생수	1100명 수준 (입학생과 졸업생 기준 고려 산출)
졸업생수	2010년 490명 졸업
학과수	12학과
교수수	전임 29명, 겸임 25명
교수1인당 학생수	전임기준 38명, 전체기준: 20여명
학과당 교수수	전임기준: 2.4명, 전체 기준, 4.5명
취업성과	취업대상자 중 90% 수준
이사회 구성	11명으로 자영업자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감사 2인

• 기타 고등교육관련 산학협력 지원은 법무교육협력 담당관 영역 이외에서 다루어져 예산 결산서에 확인되고 있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대학협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자금 지원을 배분하는 것이 충남도청의 역할이라고 관련자들은 말하고 있다.

마. 평생교육관련 재정 분석

■(가) 평생교육 관련 예산 현황: 총 예산의 약 0.08%, '09년 대비 65.5% 감소

-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도청의 전체 예산 중 0.08%에 불과하고, 2009년도와 비교해 볼 때 65.5%가 감소한 26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생·직업교육 예산 역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예산이 합쳐진 것으로 실질적인 평생교육 예산은 평생 직업교육 전체 예산 중 6.1%에 불과하다.

- 평생교육 직접 예산 또한 2009년 대비 50%가 감소한 1억 6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이에 대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46〉 충남도청의 평생교육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율 (%)
		구성비		구성비	
총계	3,342,700,000	100.00	3,238,000,000	100.00	
일반공공행정	245,949,429	7.36	274,047,265	8.46	
공공질서 및 안전	173522639	5.19	122,814,693	3.79	
유아 및 초중등교육	200,904,000	6.01	208,442,000	6.44	
고등교육	5,037,500	0.15	4,942,000	0.15	
평생·직업교육	2,610,000	0.08	3,986,705	0.12	△65.5
문화 및 관광	153,479,989	4.59	153,721,078	4.75	
환경보호	328,453,167	9.83	308,614,248	9.53	
사회복지	760,129,218	22.74	720,304,275	22.25	
보건	64,168,730	1.92	55,276,776	1.71	
농림해양 수산	632,191,963	18.90	609,013,243	18.81	
산업·중소기업	100,300,960	3.00	98,354,075	3.05	
수송 및 교통	152,310,182	4.56	168,578,741	5.21	
국토 및 지역개발	224,273,956	6.71	230,342,590	7.11	
과학기술	25,952,500	0.78	26,739,900	0.83	
예비비 및 기타	273,415,767	8.18	252,322,411	7.79	

자료 : 충남도청(2010). <http://www.chungnam.net>, 세출총괄표 재구성.

〈표 47〉 충남도청의 평생·직업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2010년 예산액		2009년 예산액		증감율 (%)
	국고	도비	국고	도비	
총계	2,610,000		3,986,705		△65.5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400,000	270,000	1,200,300	300,000	△55.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200,000,000원*16개 시군*50%)		160,000		320,000	△50.0
충청남도 장학회		580,000		410,000	41.5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지원		800,000		816,705	△2.0
전문계고 해외 인턴쉽		400,000		260,000	53.8
계	400,000	2,210,000	1,200,300	2,106,705	

자료 : 충남도청(2010) <http://www.chungnam.net>, 세출예산서 재구성.

■(나) 도청 내 평생교육 관련 예산 : 총 11,468,687천원, 평생·직업교육 예산의 약 4.4배

- 충남도청 내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협력담당관실 이외 부서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총 11,468,687천원으로 평생·직업교육 예산에 비해 약 4.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서별로 다양한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예산의 중복성 및 효율적 사업 운영에 어려움 발생이 예상된다

- 교육협력담당관실 외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는 9개 부서로 평생교육 유관사업 관련 예산은 약 114억 원 정도이다. 사업 유형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예산이 평생교육 관련 예산 중 약 74.1%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시민교육 예산이 40.1%로 가장 많으며, 직업교육이 34.0%이다. 반면 문화 및 여가취미 교육은 전체 예산 중 약 25.9%에 불과하였다.

- 평생교육 관련 총 사업의 대상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민이 34.5%, 소외계층이 21.1%, 여성 및 노인계층 2.9%, 아동·청소년 계층이 13.7%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여성 및 노인계층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대가 요청된다

〈표 48〉 충남도청 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유형 대상	시민교육	직업교육	여가취미	문화교육
일반	사회적 기업육성 100,000	실물경제 교육 50,000	대학생과함께하 는결혼출산교육 8,000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20,000
	도의새마을위 탁 교육 241,000	지역실업자 직 업훈련 국340,000 도170,000	-	첨단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국300,000 도100,000
	지역공동체 활성화추진 사업 국245,000 도61,000	전문인력 교육훈련 국300,000 도100,000	-	문화관광해설 사양성 및 활용사업 국437,500 도142,500
	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15,250 도15,250	인력양성공동 기획사업 국200,000 도100,000	-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사업 국150,000 도150,000

	지원				
	시군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국243,760	도민정보화교육 144,000	-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국120,000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국200,000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30,000	-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지원 국45,500 도19,500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	57,500	-	-	-
소계	1,178,760	1,434,000	8,000	1,485,000	
아동·청소년	-	-	-	어린이인성학습원운영	250,000
	-	-	-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646,690
	-	-	-	청소년비정규학교운영	18,000
	-	-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국120,000 도120,000
	청소년동아리운영	39,000	-	-	-
	-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76,200
	충효예교실운영	124,640	-	-	-
소계	163,640			1,230,890	
대상	유형	시민교육	직업교육	여가취미	문화교육
여성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국540 도540	-	-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4,320
	충남여성자치대학운영	10,000	-	-	-
	여성장애인가교육사업	국40,000 도10,000	-	-	여성도의교실 운영 44,000
소계	61,000			48,320	
노인	노인지도자양성	16,500	-	-	-
	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 보급	165,000	-	-	-
	실버환경감시단 교육	5,000	-	-	-
소계	186,500				
소의 계층	어린이성폭력예방성인형극	20,000	-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90,000	다문화가족쌍방향언어문화교육 35,000
	다문화가족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	24,000	-	-	소의계층 방과후문화예술교육사업 국100,000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국1,517,985 도325,282	-	-	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운영 국10,000
	-	-	-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국35,840 도2,560	-
소계	1,887,167		128,200	145,000	
농민	-	농아민 지역실업자 교육 국336,000 도42,000	-	-	-
	농작업 안전리더양성프로그램운영	30,000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국55,000 도55,000	-	-
	4-H농촌지	국16,000	농축산바이오 400,000	-	-

	도자양성교육	도16,000	산업 인력양성		
	농업전문인력양성	국700,00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80,000	-
	-		농업인정보화교육	국52,700 도15,810	-
	-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국660,000 도440,000	-
	-		어업인정보화교육	국24,700	-
소계		1,050,000		2,461,210	-
총계		4,340,567		3,895,210	136,200
					1,802,210

자료 : 충남도청(2010). <http://www.chungnam.net>, 부서별 세출예산서 재구성.

■ (다) 시·군 특성화 사업 지원 :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지양 ⇒ 인프라 구축 지원

- 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42개 프로그램에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2010년에는 작년 대비 57.9%가 감소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예산의 확대·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 하지만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프로그램 운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군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업도 도비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을 지원할 때 프로그램 지원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하여 도에서 총괄·조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표 49〉 충남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

시군	도비 보조 프로그램 선정 내역			시군	도비 보조 프로그램 선정 내역		
	보조 총액 (천원)	세 부 내 역			보조 총액 (천원)	세 부 내 역	
		프로그램 명	보조 금액			프로그램 명	보조 금액
총계	[42개 프로그램]: 총 380,000						
천안시	20,000	■ 성인문해교육	5,000	당진군 논산시 부여군 홍성군	20,000	■ 실버 홈 해피바이러스	10,000
		■ 어르신 정보화교육	5,000			■ 주민과 함께하는 당진군 평생학습축제	10,000
		■ 지역협력망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초)	1,000			■ 소외계층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10,000
		■ 기획문화탐방 운영	2,000			■ 평생학습진흥 및 사회통합 네트워크 강화	10,000
		■ 이주여성 강좌(독서, 한글)	3,000			■ 찾아가는 읍면 마을 성인문해교육	10,000
		■ 농촌지역 영어강좌 특화운영(초)	2,000			■ 백제역사문화연구회	10,000
		■ 다문화가정 독서문화 프로그램	2,000				
공주시	20,000	■ 5도2촌에서 함께하는 가족사랑 다지기 문화체험	10,000	서천군	20,000	■ 내고장 홍성사랑 가족 역사 체험	10,000
		■ 자녀교육 및 주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0,000			■ 평생학습축제	10,000
보령시	10,000	■ 평생학습 인터넷 홈페이지	10,000	금산군	20,000	■ 찾아가는 서천 문해 교실	10,000
아산시	20,000	■ 찾아가는 문해교실프로그램	10,000			■ 서래야대학 “평생학습 전문리더”과정	10,000
		■ Happy Asan _u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10,000				
서산시	40,000	■ 으뜸 농산어촌체험마을 가꾸기	8,000	태안군	30,000	■ 찾아가는 문해교실	10,000
		■ 나이아 가라(60세 이상)	3,000			■ 손 끝으로 느끼는 행복	10,000
		■ 천수만 철새 해설가 양성과정	3,000			■ 정겨운 나의 고장 태안 문화유적 탐방과 장애인 행복 충전 프로그램	10,000
		■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3,000	예산군	20,000	■ 예산군 “문해교육 강사” 과정	7,000
		■ 가족과 함께 주말 도서관 나들이	3,000			■ 동화와 춤으로 잇는 희망나눔	6,000
		■ 충남 평생학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20,000			■ 장애인 내고장 문화유적 탐사 및 웰빙스쿨	7,000
연기군	20,000	■ 문해교육사 양성/찾아가는 한글문해교실	5,000	청양군	80,000	■ 찾아가는 초동불 성인문해교육	10,000
		■ 간병사, 산모도우미 양성과정	5,000			■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4건)	7,000
		■ 평생학습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0,000			■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3,000
						■ 성인문해교육	60,000

자료 : 충남도청(2009). 교육협력업무담당 내부 자료. 재구성.

■ (라) 지자체 평생교육 사업

- 특히 도내 지자체들의 평생교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시(1.25%)와 예산군(1.41%)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 미만인 실정이며 그 규모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0〉 시·군별 ‘평생·직업교육’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평생·직업교육					
	2010년 예산액	구성비(%)	2009년 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천안시	1,293,328	0.18	997,009	0.16	296,319	29.72
아산시	1,211,829	0.22	1,863,675	0.39	△651,846	△34.98
서산시	6,075,324	1.25	8,283,253	1.82	△2,207,929	△26.66
공주시	1,521,840	0.39	1,107,840	0.25	414,000	37.37
보령시	49,000	0.01	49,000	0.01	0	0
계룡시	34,000	0.04	0	0	34,000	100
논산시	60	0.02	125	0.04	△65	△52.00
당진군	254,641	0.05	319,227	0.06	△64,568	△20.23
예산군	3,886,710	1.41	5,186,592	2.01	△1,299,882	△25.06
홍성군	330,761	0.10	209,333	0.07	121,428	58.0
태안군	2,121,420	0.83	2,070,067	0.80	51,353	2.48
청양군	148,600	0.07	42,320	0.02	106,280	251.13
부여군	309,118	0.09	255,118	0.07	54,000	21.17
서천군	2,319,742	0.90	2,808,392	1.05	△488,650	△17.40
금산군	3,343,824	1.46	3,397,117	1.56	△53,293	△1.57
연기군	134,400	0.05	0	0	134,400	100.0

주 : 논산시와 금산군은 ‘평생·직업교육’ 이라는 별도 예산 항목이 없음.

자료 : 시·군별 2010 세출 예산서 재구성.

- 시·군 지자체 평생교육 관련 사업 총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관련 사업 총예산 중 63.4%가 문화 및 여가취미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유형별 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교육이 52.8%로 가장 많으며, 시민교육 27.8%, 여가취미 교육 10.6%, 직업교육 8.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 내 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시민교육 및 직업교육에 81%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각 시·군 지자체는 문화교육과 시민교육에 8.6%가 집중되어 있는 점은 충남도청과 기초지자체가 추구하는 평생교육 사업 방향의 정책적 차이를 보여준다.

- 시·군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총 사업의 대상별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37.3%, 일반계층이 31.8%, 소외계층이 18.5%, 노인계층이 6.4%, 여성 계층이 6.0%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 및 노인계층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자료 : 충남 도내 시·군별 2010년 세출예산서 재구성.

〈표 51〉 지자체별 대상·유형에 따른 평생교육 관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지역	유형	대상	일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소외계층	계
천안시	직업교육	5,600	-	-	-	65,000	70,600	
	시민교육	136,150	-	605,000	-	453,020	1,194,170	
	여가취미	43,000	-	-	207,534	-	250,534	
	교육문화	-	284,940	-	-	-	284,940	
	소계	184,750	283,940	605,000	207,534	538,020	1,819,244	
아산시	직업교육	168,534	-	-	7,000	67,700	243,234	
	시민교육	102,307	-	174,520	-	44,000	320,827	
	여가취미	382,440	-	-	67,000	-	449,440	
	교육문화	266,790	2,153,204	-	-	-	2,419,994	
	소계	1,033,461	2,153,204	174,520	74,000	111,700	3,546,885	
서산시	직업교육	91,840	-	-	-	-	91,840	
	시민교육	282,220	-	-	130,540	-	412,760	
	여가취미	-	-	-	-	-	-	
	교육문화	170,680	60,000	-	-	402,000	632,680	
	소계	544,740	60,000	0	130,540	402,000	1,137,280	
공주시	직업교육	227,944	-	-	-	-	227,944	
	시민교육	78,600	-	84,893	-	183,790	347,283	
	여가취미	53,000	-	-	77,900	-	130,900	
	교육문화	56,900	213,228	-	24,120	53,000	347,248	
	소계	416,444	213,228	84,893	97,900	236,790	1,049,255	
보령시	직업교육	87,192	-	1,050	-	-	88,242	
	시민교육	42,758	-	1,800	37,510	94,700	176,768	
	여가취미	-	-	-	-	-	0	
	교육문화	-	185,343	-	-	117,300	302,643	
	소계	185,750	185,343	2,850	37,510	212,000	623,453	
계룡시	직업교육	7,500	-	-	-	-	7,500	
	시민교육	32,470	-	1,800	-	18,240	52,510	
	여가취미	28,000	-	-	-	10,000	38,000	
	교육문화	55,320	22,500	-	5,000	21,560	104,380	
	소계	123,290	22,000	1,800	5,000	49,800	201,890	
논산시	직업교육	13,000	-	-	-	304,857	317,857	
	시민교육	47,141	22,922	-	-	-	70,063	
	여가취미	-	-	-	46,500	-	46,500	
	교육문화	311,264	869,940	18,000	5,000	406,240	1,610,444	
	소계	371,405	892,862	18,000	51,500	711,097	2,044,864	
청양군	직업교육	43,600	-	486	2,840	-	46,926	
	시민교육	344,500	-	270	-	111,300	456,070	
	여가취미	22,100	-	-	-	-	22,100	
	교육문화	67,000	416,000	-	-	29,300	512,300	
	소계	427,200	416,000	756	2,840	140,600	987,396	
부여군	직업교육	209,100	-	-	-	-	209,100	
	시민교육	150,904	789,850	1,800	40,000	108,300	1,090,854	
	여가취미	15,500	-	10,400	-	39,400	65,300	
	교육문화	209,000	44,473	10,000	-	77,960	341,433	
	소계	780,334	834,323	22,200	40,000	225,660	1,902,517	
서천군	직업교육	125,589	-	34,740	-	-	160,329	
	시민교육	241,839	909,000	1,800	116,505	167,500	1,436,644	
	여가취미	1,996	-	156,525	205,897	-	364,418	
	교육문화	28,620	109,346	-	-	10,500	148,466	
	소계	398,044	1,018,346	193,065	322,402	178,000	2,109,857	
금산군	직업교육	148,930	-	58,300	-	-	207,230	

지역	대상 유형	대상					
		일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소외계층	계
	시민교육	242,833	—	42,814	—	118,430	404,077
	여가취미	21,912	150,000	—	—	52,330	224,242
	교육문화	234,696	105,627	48,000	62,500	327,531	778,354
	소계	648,371	255,627	149,114	62,500	498,291	1,613,903
연기군	직업교육	214,350	—	3,000	—	—	217,350
	시민교육	136,956	95,000	37,874	32,000	75,810	377,640
	여가취미	88,200	—	—	—	—	88,200
	교육문화	76,000	631,700	—	—	8,000	715,700
	소계	520,506	726,700	37,874	32,000	83,810	1,400,890
당진군	직업교육	69,907	—	486	—	46,970	117,363
	시민교육	78,079	22,922	16,516	—	—	101,017,516
	여가취미	77,780	—	—	311,290	—	389,070
	교육문화	62,780	260,286	90,000	25,000	240,970	679,036
	소계	310,146	295,052	90,503	336,290	287,940	1,319,931
예산군	직업교육	30,972	—	486	3,370	—	34,828
	시민교육	80,525	19,102	6,607	—	—	106,234
	여가취미	99,700	—	—	48,700	—	148,400
	교육문화	1,037,450	124,800	1,800	5,000	247,050	1,416,100
	소계	1,440,244	163,004	15,986	109,140	247,050	1,975,424
태안군	직업교육	—	—	15,373	—	26,061	41,434
	시민교육	—	—	—	—	—	0
	여가취미	22,100	—	—	24,900	—	47,000
	교육문화	124,276	775,000	1,800	5,000	204,530	1,110,606
	소계	176,376	775,000	17,174	29,900	230,591	1,229,041
홍성군	직업교육	17,000	—	10,000	3,430	—	30,430
	시민교육	43,705	18,338	5,103	—	—	67,146
	여가취미	246,000	—	—	34,300	—	280,300
	교육문화	323,527	632,500	—	—	281,410	1,237,437
	소계	630,232	650,838	15,103	37,730	281,410	1,615,313
시·군 지자체 총계	직업교육	1,461,058	—	123,921	16,640	510,588	2,112,207
	시민교육	2,040,987	1,877,134	980,797	356,555	1,375,090	6,630,563
	여가취미	1,101,728	150,000	166,925	1,024,021	101,730	2,544,404
	교육문화	3,024,303	6,888,587	169,600	131,620	2,427,351	12,641,461
	계	7,628,076	8,915,721	1,441,243	1,528,836	4,414,759	23,928,635

3. 충청남도 교육청의 사업비 분석

가. 예산 현황

- 충청남도 교육청의 세입은 크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기관 등)부담 등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다음 <표 10>에 정리되어 있는 2009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교육청의 한 해 총 세입액은 2조 6,080억원인데,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은 1조 8,205억원(69.8%),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2,946억원(11.3%),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607억원(13.8%), 지방교육채 1,253억원(4.8%), 주민(기관 등)부담 등 기타 수입 70억원(0.3%)로 구성되어 있다.

〈표 52〉 충청남도 교육청의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백만원, %)

재원별	'09년		'08년		증감	
	결산액(A)	구성비	결산액(B)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합 계	2,607,989	100	2,370,274	100	237,715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1,820,462	69.8	1,848,121	78.0	-27,659	-1.5
지방교육세정교부금	1,800,972	69.1	1,847,628	77.9	-46,656	-2.5
국고보조금	19,490	0.7	493	0	18,997	3,853.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94,560	11.3	240,671	10.2	53,889	22.4
지방교육세전입금	190,022	7.3	170,484	7.2	19,538	11.5
담배소비세전입금	0	0	0	0	0	0
시도세전입금	21,642	0.8	20,413	0.9	1,229	6.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5,816	1.0	6,036	0.3	19,780	327.7
비법정이전수입	57,080	2.2	43,738	1.8	13,342	30.5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60,697	13.8	269,589	11.4	91,108	33.8
교수-학습활동수입	35,262	1.4	33,461	1.4	1,801	5.4
행정활동수입	2,226	0.1	1,534	0.1	692	45.1
자산수입	21,372	0.8	15,253	0.6	6,119	40.1
이자수입	14,277	0.5	16,443	0.7	-2,166	-13.2
잡수입 등	1,919	0.1	811	0	1,108	136.6
기타	285,641	11.0	202,087	8.5	83,554	41.3
지방교육채	125,273	4.8	8,160	0.3	117,113	1,435.2
교부금 부담	125,273	4.8	8,160	0.3	117,113	1,435.2
자체 부담	0	0	0	0	0	0
주민(기관 등)부담 등 기타	6,997	0.3	3,733	0.2%	3,264	87.4

- 2009년 세입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46억원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1,900억원, 시도세 전입금 216억원,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58억원, 비법정이전수입 57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비법정전입금이 2008년 437억원에서 2009년 571억원으로 31%가 증가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나. 소관부서별 사업비 분석

- 다음 <표 53>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세출 결산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3,125억원인데, 이 중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2조 2,151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95.8%) 이 부문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평생, 직업교육 부문에 93억원 (0.4%), 교육일반 부문에 880억원(3.8%)이 사용되었다.

-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사용된 2조 2,151억원의 예산을 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에 1조 1,871억원 (51.3%),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204억원 (9.5%), 교육격차해소에 881억원 (3.8%),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469억원 (2.0%), 학교재정지원관리에 3,588억원 (15.5%),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에 3,138억원이 (13.6%) 사용되었다. 앞의 <표 3> 소외계층 학생 현황에서 살펴 보았듯이 충남도 내에 다수의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격차해소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식과 관련된 예산 역시 전체 예산의 2.0%에 그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물론 이 두 항목의 예산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높은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현상으로 판단된다.

- 충청남도 교육청의 세출 결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 내용이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2009년의 총 세출 결산액 2조 3,125억원은 인건비로는 1조 3,648억원 (59.0%), 물건비로 769억원 (3.3%), 이전지출 143억원 (0.6%), 자산취득 3,736억원 (16.2%), 상환지출 325억원 (1.4%), 학교지원 4,504억원이 (19.5%) 사용되었다.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3〉 충청남도 교육청의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구 분		'09년		'08년		증감	
부문	정책사업	결산액(A)	구성비	결산액(B)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합 계		2,312,466	100	2,084,633	100	227,833	10.9
유아및초중등교육		2,215,107	95.8	1,989,552	95.4	225,555	11.3
	인적자원운용	1,187,131	51.3	1,178,646	56.5	8,485	0.7
	교수-학습활동지원	220,443	9.5	169,723	8.1	50,720	29.9
	교육격차해소	88,142	3.8	64,095	3.1	24,047	37.5
	보 건/ 급식/ 체육활동	46,868	2.0	37,664	1.8	9,204	24.4
	학교재정지원관리	358,764	15.5	307,928	14.8	50,836	16.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13,759	13.6	231,496	11.1	82,263	35.5
평 생·직업교육		9,336	0.4	6,778	0.3	2,558	37.7
	평 생교육	5,921	0.3	5,543	0.3	378	6.8
	직업교육	3,415	0.1	1,235	0.1	2,180	176.5
교육일반		88,023	3.8	88,303	4.2	-280	-0.3
	교육행정일반	30,256	1.3	41,493	2.0	-11,237	-27.1
	기관운영관리	21,708	0.9	19,937	1.0	1,771	8.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6,059	1.6	26,873	1.3	9,186	34.2
	예비비및기타	0	0	0	0	0	0

〈표 54〉 충청남도 교육청의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백만원, %)

성질별		'09년		'08년		증감	
		결산액(A)	구성비	결산액(B)	구성비	금액 (C=A-B)	비율 (C/B)
합 계		2,312,466	100	2,084,633	100	227,833	10.9
인건비		1,364,804	59.0	1,342,266	64.4	22,538	1.7
	교원	832,390	36.0	832,295	39.9	95	0.0
	행정직	155,581	6.7	153,832	7.4	1,749	1.1
	기타직	66,055	2.9	56,783	2.7	9,272	16.3
	복지후생지원	153,340	6.6	144,700	6.9	8,640	6.0
	사립학교교직원	157,438	6.8	154,656	7.4	2,782	1.8
물건비		76,869	3.3	56,116	2.7	20,753	37.0
이전지출		14,300	0.6	17,149	0.8	-2,849	-16.6
자산취득		373,570	16.2	277,560	13.3	96,010	34.6
	토지매입비	26,411	1.1	16,652	0.8	9,759	58.6
	시설비	335,811	14.5	247,538	11.9	88,273	35.7
	자산취득비	10,657	0.5	12,953	0.6	-2,296	-17.7
	기타자산취득비	691	0.0	417	0.0	274	65.7
상환지출		32,507	1.4	25,150	1.2	7,357	29.3
	지방교육채	11,200	0.5	13,560	0.7	-2,360	-17.4
	민자사업지급금	21,307	0.9	11,590	0.6	9,717	83.8
학교지원		450,416	19.5	366,392	17.6	84,024	22.9
	공립학교	395,242	17.1	318,837	15.3	76,405	24.0
	사립학교	50,657	2.2	33,541	1.6	17,116	51.0
	기타	4,517	0.2	14,014	0.7	-9,497	-67.8
예비비및기타		0	0	0	0	0	0

다. 재원유형별 사업비 분석

• 여기서는 시와 도 지자체로부터 이전받는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의 추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우선 법정 전입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시·도 보통세의 일정비율, 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다. 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을 정리한 <표 13>을 보면 2009년 현재 시도세의 세입 결산액은 216억원이며, 지방교육세의 세입결산액은 1,9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은 2,117억원이다. 주목할 점은 분기별로 전입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1사분기의 경우 전입액은 75억원에 불과한 반면 4사분기에는 전입액이 1,578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55> 충청남도 교육청의 시도 법정이전수입 전입 비율 현황

(백만원, %)

재원 별	회계연도	세 입 결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시· 도세	'09년(A)	21,642	1,274 (5.9)	3,039 (14.0)	4,313 (19.9)	3,119 (14.4)	7,432 (34.3)	14,210 (65.7)	21,642 (100.0)
	'08년(B)	20,413	3,605 (17.7)	4,091 (20.0)	7,696 (37.7)	5,708 (28.0)	13,404 (65.7)	7,009 (34.3)	20,413 (100.0)
	증감(A-B)	1,229	-2,331 (-11.8)	-1,052 (-6.0)	-3,383 (-17.8)	-2,589 (-13.6)	-5,972 (-31.3)	7,201 (31.3)	1,221 (0.0)
지 방 교 육 세	'09년(A)	190,022	6,246 (3.3)	24,211 (12.7)	30,457 (16.0)	15,928 (8.4)	46,385 (24.4)	143,637 (75.6)	190,022 (100.0)
	'08년(B)	170,484	20,527 (12.0)	22,969 (13.5)	43,496 (25.5)	58,099 (34.1)	101,595 (59.6)	68,889 (40.4)	170,484 (100.0)
	증감(A-B)	19,538	-14,281 (-8.8)	1,242 (-0.7)	-13,039 (-9.5)	-42,171 (-25.7)	-55,210 (-35.2)	74,748 (35.2)	19,538 (0.0)
계	'09년(A)	211,664	7,520 (3.6)	27,250 (12.9)	34,770 (16.4)	19,047 (9.0)	53,817 (25.4)	157,847 (74.6)	211,664 (100.0)
	'08년(B)	190,897	24,132 (12.6)	27,060 (14.2)	51,192 (26.8)	63,807 (33.4)	114,999 (60.2)	75,898 (39.8)	190,897 (100.0)
	증감(A-B)	20,767	-16,612 (-9.1)	190 (-1.3)	-16,430 (-10.4)	-44,760 (-24.4)	-61,182 (-34.8)	81,949 (34.8)	20,767 (0.0)

•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도세·지방교육세의 일부(전부)를 교특회계로 전출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전출시기, 규모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자금사정에 따라 전출 규모 및 시기가 결정·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는 이 전입금을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받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다음 <표56>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의 전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2009년 현재 학교용지 매입비 총액은 303억원이었으며, 이 중 시도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52억원이었다. 2009년의 경우에는 실제 이 용도의 전입금이 258억원에 달해, 이 해로만 본다면 초과 전입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은 시도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여러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6> 충청남도 교육청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전입 현황

(백만원, %)

회계연도	학교용지매입비 규모			일반자치단체 부담액		
	학교수	면적(m ²)	매입비 총액	시·도가 부담 해야할 금액(A)	시·도 실제 전입액(B)	전입금 비율(B/A)
'01~'06 년	17	229,592	89,329	44,663	11,553	25.9
'07년	4	57,398	32,092	16,046	2,910	18.1
'08년	5	64,960	31,529	15,764	6,036	38.3
'09년	4	48,521	30,309	15,155	25,816	170.4
계	30	400,471	183,259	91,628	46,315	50.6

• 다음으로서는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 <표 42>는 충청남도 교육청의 비법정이전수입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시도 지자체로 부터의 비법정이전수입 총액은 571억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 2조 6,078억원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571억원의 이전수입 중 도가 지출한 금액은 34억원으로 비교적 소규모이며, 나머지 537억원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부담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지자체로부터 교육 관련 이전수입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협력책임관'을 운영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지자체로 하여금 교육경비보조 조례를 제정하거나 (태안군의 농어촌 기숙형학교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 혹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정하도록 (보령과 서산시 등) 노력하고 있다.

• 이 외에 교육청에서는 민간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표 43>에서 보듯이 그 실적은 2009년 현재 64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표 57〉 충청남도 교육청의 비법정이전수입 전입 현황

(백만원, %)

구분	'09년			'08년			비율 [(B/A)/(D/C)]
	세입 결산액(A)	비법정이전 수입(B)	비율 (B/A)	세입 결산액(C)	비법정이전 수입(D)	비율 (D/C)	
광역	2,607,989	3,415	0.1	2,370,274	98	0.0	3,174.5
기초		53,665	2.1		43,640	1.8	111.7
계	2,607,989	57,080	2.2	2,370,274	43,738	1.9	118.6

〈표 58〉 충청남도 교육청의 민간재원 유치 현황(학교 회계 제외)

(백만원, %)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A)	민간이전수입 (B)	수능평가분담금 (C)	민간재원 유치액 (D=B-C)	비율 (D/A)
'09년	2,607,989	6,997	598	6,399	0.2
'08년	2,370,274	3,305	508	2,797	0.1

라.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이전금: 지방교육세, 도세의 3.6%, 학교용지 부담금의 분석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 동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충남도와 교육청은 전출금 예산 편성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 재원은 도세보통세(3.6%)와 지방교육세(전액)인데, 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10년 전출금 예산안 규모는 다음 <표 31>에 정리되어 있듯이 총 1,966억원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9억원, 지방교육세 1,701억원, 학교용 지부담금 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59>를 보면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494억원인데, 도 법정 전출금은 1,966억원으로 교육청 총예산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도 전출금 1,966억원을 단위 사업별로 분류하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888억원, 학비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495억원, 보건관리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182억원, 학생수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49억원,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등 「평생교육」 28억원, 직업진로 교육 등 「직업교육」 24억원 등이다.

• 도 전출금 1,966억원 중 도와 교육청간 「교육 협력사업」 반영상황을 분석해 보면 1,503억원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등 「외국어교육」 114억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등 「전문계고 교육」 54억원, 특기적성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 257억원, 시지역명문고 육성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495억원, 급식 시설 현대화 등 「급식관리」 182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 349억원, 평생활성화 지원 등 「평생교육」 28억원, 직업진로 교육 등 「직업교육」 24억원 등이 사용되었다. 전체 전출금 1,966억원의 76.4%인 1,503억원을 도와 교육청간 협력사업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9〉 2010 전출금 예산안 규모

구 분	합 계 (천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세보통세 3.6%)	지방교육세 (전액)	학교용지 부담금
합 계	196,635,245	20,889,000	170,120,000	5,626,245
당해연도분 (과년도분)	196,635,245 (5,626,245)	20,889,000	170,120,000	5,626,245 (5,626,245)

주: 위 현황(학교용지부담금 제외)은 2010년 도 세입예산 확정 이전 도 세정 부서 추계액에 따라 작성된 것이며, 도세입예산이 확정되면 법정전출금 규모 변경될 수 있음

〈표 60〉 전출금 세부 사업별 편성(안)

사 업 명	총 예산액 (천원)	道 전출금 (협의대상)	자체예산
합 계	2,049,375,859	196,635,245	1,852,740,614
인적자원 운영	1,245,193,515		1,245,193,515
정규직 인건비	1,174,470,085		1,174,470,085
비정규직 인건비	36,261,398		36,261,398
교원역량 강화	6,556,615		6,556,615
지방공무원역량강화	1,552,140		1,552,140
교원 인사관리	2,643,462		2,643,46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11,790		111,790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23,521,250		23,521,250
교직원단체 관리	76,775		76,775
교수-학습활동 지원	135,476,773	88,761,521	46,715,252
교육과정개발 운영	1,270,632		1,270,632
학력신장	11,646,444	10,783,745	862,699
수업지원 장학활동	241,504		241,504
연구 시범학교 운영	789,170		789,170
교과교육연구회운영 활성화	636,850		636,850
유아교육 진흥	14,789,131	9,610,454	5,178,677
특수교육 진흥	8,424,767	4,206,383	4,218,384
영재교육 활성화	3,848,600	2,881,600	967,000
독서교육 활성화	1,818,763	1,453,720	365,043
외국어 교육	15,113,465	11,407,775	3,705,690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3,333,510	3,333,510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871,611		871,611
전문 계고 교육	5,413,662	5,413,662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5,350,620	3,375,366	1,975,254

ICT활용 교육	185,690		185,690
체육교육 내실화	12,493,926	10,624,926	1,869,000
특별활동 지원	33,756,756	25,670,380	8,086,376
수련 및 봉사활동	482,435		482,435
학생 생활지도	2,323,992		2,323,992
대안교육 운영지원	1,430,000		1,430,000
학생상담 활동 지원	119,800		119,800
대학진로 교육	164,600		164,600
학력평가	2,047,819		2,047,819
학교 평가관리			
학생 선발배정	984,320		984,320
교원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74,520		374,520
교과서 무상지원	7,418,221		7,418,221
검정고시 관리	145,965		145,965
교육격차 해소	82,577,587	49,486,394	33,091,193
학비지원	25,159,960		25,159,960
학력격차 해소	2,228,000	1,430,000	798,000
급식지원	47,685,924	40,702,691	6,983,233
정보화 지원	2,703,743	2,703,743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2,607,960	2,607,960	
교육복지투자 지원	2,192,000	2,042,000	150,000
보건/급식/체육활동	24,857,490	18,219,880	6,637,610
보건관리	2,870,810		2,870,810
급식관리	18,219,880	18,219,880	
각종 체육대회 활동	3,766,800		3,766,800

재무 관리	1,666,600		1,666,600
사학기관지도육성	37,760		37,76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321,570		321,570
시설사업 관리	111,000		111,000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06,400		106,40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6,000,000		6,000,000
기관운영 관리	12,510,886		12,510,886
기관운영비	11,752,386		11,752,386
교육행정 기관시설	758,500		758,50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1,085,000		31,085,000
지방교육채상환	5,162,000		5,162,000
민간투자사업상환	25,923,000		25,923,000
예비비및기타	7,369,247		7,369,247
예비비및기타	7,369,247		7,369,247

학교 재정지원 관리	357,187,980		357,187,980
학교 운영비 지원	185,382,808		185,382,808
사학재정 지원	171,805,172		171,805,17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07,718,488	34,887,212	72,831,276
학생 수용시설	35,311,060	5,626,245	29,684,815
학교 일반시설	22,000,000		22,000,000
교육환경개선 시설	50,407,428	29,260,967	21,146,461
평생교육	3,698,384	2,844,868	853,516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906,016	286,200	619,816
평생학습 자원체제구축운영	1,932,603	1,698,903	233,700
독서문화 진흥	859,765	859,765	
직업교육	2,435,370	2,435,370	

	직업진로 교육	2,435,370	2,435,370	
교육행정 일반		39,265,139		39,265,139
	교육정책기획관리	299,500		299,500
	교육정책홍보	599,114		599,114
	감사관리	229,391		229,391
	기관평가	1,020,000		1,020,000
	교육행정혁신	402,715		402,715
	법무관리	450,000		450,000
	의정활동지원	495,996		495,996
	선거관리	10,928,444		10,928,444
	교육행정정보화	15,291,077		15,291,077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765,000		765,000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89,680		89,680
	비상대비계획및보완	205,992		205,992
	예결산관리	244,900		244,900

제3장 충남 교육 분야의 사업 평가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1. 주요사업의 평가기준 및 평가

가. 평가 기준

• 교육분야 주요 사업의 평가기준은 ①교육의 합목적성에 따른 효과성 ②형평성-투자효과의 파급 효과 ③ 지역 산업과 사회에 대한 기여 ④ 집행진척도 ⑤ 외부평가의 결과 등 사업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도의 교육분야 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민의 교육수요 수렴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교육개혁의 요구를 수렴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 교육지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육문제과도한 교육열과 경쟁, 높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것, 즉 민주주의를 실천할 양식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시장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차후세대를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①교육의 합목적성에 따른 효과성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교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형평성-투자효과의 파급 효과는 재정지원의 효과가 얼마나 다수의 교육에서 불리한 학생들에게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또 교육적으로 열악한 상태와 조건에 있는 학생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③ 지역 산업과 사회에 대한 기여는 이러한 지원이 지역의 사회와 산업에 대한 투자매력과 경쟁력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함이다. ④ 집행 진척도는 사업이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지원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이는 이 사업의 계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⑤ 외부평가의 결과는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평가가 있는지와 또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61〉

평가지준	평가요소
①교육의 합목적성에 따른 효과성	사교육비 경감, 학교교육 효과 제고
②형평성-투자효과와 파급 교육 취약층 파급 효과	형평성, 교육취약계층 지원, 투자효과와 대상범위
③ 지역 산업과 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의 기업 등에 대한 기여, 지역 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여
④ 집행 진척도	재정 및 사업의 진척 수준
⑤ 외부평가의 결과	객관적이고 엄밀한 외부평가의 존재/평가 결과

나. 주요 사업의 평가

• 앞선 사업 분석에서 이미 사업의 내역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여
기서는 위의 사업평가기준을 적용한 결과만을 보고한다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무상급식 및 우수 지역 농산물 사용 등 농업관련 예산 청
양대학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 명문고
지원은 위 기준으로 볼 때 성과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전문계고등학
교 해외 인턴십은 상당히 중립적이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체계적인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은 초등학교의 영어수업이 있고 원어민 영
어 접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의 합목적성이 높은 반면 이것이 정규
수업지원이 아닌 방과후수업의 지원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교육의 충실도
를 높이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도시 학생들이 원어민 수업을 하고
있는 시점에 농어촌 학생들의 원어민 접근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교육 취
약계층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인다고 평가된다 또
혜택을 받는 수혜자고 넓은 편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자녀 교육을 기피하
는 현상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영어조기교육의 한계 또한 지적받는 현실에서 학교교육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점차 교육청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방과후 중국어학교와 캠프 운영은 중국어가 정식 외국어로 채택되지 않
은 시점에서 국어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학부모 등의 수요만을 고려하

여 이를 시행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특별히 기여하는 바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은 한국의 기능공의 숙련기술이 세계 최상이라는 점, 또 매우 단기간이라는 점, 영어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교육적을 타당한 것인지 의문시 된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지만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고도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 있다고 판단된다. 특정지역과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파급효과(이 집중적 혜택을 위한 학생과 학교간 경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가 다소 활기를 띠는 점)이 있다. 이는 점차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안학교 운영 지원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데 장기적인 치료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인데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단기적으로는 집단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이 유보된다. 교육의 합목적성에 의문이 들며, 형평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매우 소수에게 국한된 정책지원이므로 운영비의 계속적 지원은 그 효과를 살펴보면서 장기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 명문고등학교 지원은 ‘명문’이라는 이름 자체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 우선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소외감을 불러 올 수 있으며 특수목적 학교들과 달리 뚜렷한 교육적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2010년 이후 사업예산은 확보되지 않았다.

무상급식 및 우수지역 농산물 사용지원은 교육적 목적에 합당할 뿐 아니라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지역에 기여하는 바 또한 크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의무)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청양대학 지원은 고등교육기관이 매우 많은 충남지역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공립의 전문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행정요원과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영세한 학과들이 주를 이루어 다수의 학과로 역량이 분산되어 있어 충실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또 이사회의

구성 또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고등교육분야의 대부분의 지원이 청양대학에 집중됨으로써 도의 고등교육과 지역의 산업연계 작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제기 된다

충남장학회의 운영가운데 충남소재 고등학교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도비 유학을 실시되어 현재 6명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선발기준에 취약계층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없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62〉

		교육의 합목적성	형평성	지역 기여	집행진척 도	외부평가
충청남도 교육활동지원비	농어촌 방과후영어학교 운영	△	○	○	○	○
	지역 명문고등학교 지원	△	×	△	△	×
	방과후 중국어학교 운영	△	△	?	○	×
	중국어 캠프 운영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	△	×	○	×
	대안학교(충무 학교)운영지원	?	△	○	○	×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농업관련	무상급식 및 우수지역 농산물 사용	△	○	○	○	×
	농어민 학자금	△	○	○	○	×
평생교육관련사업	평생교육 시스템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	○	△	△	×
고등교육지원	청양대학 지원	△	○	○	○	?
	산학협력 인력 양성 및 R&D 지원사업	?	?	?	?	?
기타	충청남도 장학회 도비 유학생	×	×	△	○	×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지원	△	△	?	○	×

주: ○ 평가영역에 긍정적, ×는 부정적, △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 ?는 판단자료 미흡

2. 투자가용재원 산출 및 예산 운용 방향

가. 전략사업을 위주로 투자가용재원 산출

•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부담금(도세 3.6%, 학교용지부담금), 이전시키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면 도의 교육관련 전체 예산은 2010년 기준 약 19,299,000천원으로 약 193 억원 수준이다. 청양대학 50억원을 제외한 143억원 수준의 사업비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고 또 민정5기 도정의 교육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사업비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투자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프로그램 중 일부는 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던지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1-2년 후에야 전체를 투자가용재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민정5기 도정의 교육분야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가용재원으로 이를 모두 담보할 수 없다.

〈표 63〉 교육협력담당 관리 주요 프로그램 사업비

부서 · 정책 · 단위(회계) ·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조정안	증감	비고 (축소, 폐지)
2010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348,000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 8,550,000,000원*30% (20% 수준으로 감축)	2,565,000		감축	축소
○지역명문고 육성 1,600,000,000원*2개교*25%	800,000	0		폐지
○방과후 중국어학교운영	128,000	0		폐지
○중국어캠프 운영 40,000,000원*2회*50%	40,000	0		폐지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원어민 교사 배치 50,000,000원*21개교 *30% (20% 낮춤)	315,000		감축	도 사업 축소 장기 유보※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조성지원	500,000	0		폐지 (사업종료)
	4,348,000			

※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어 확장 시행되고 있어 차후의 평가를 보고 판단을 유보한다.

〈표 64〉교육협력담당 산하 및 여타 기관 이전비용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조정안	증감	비고 (축소, 폐지)	사유
			2010년				
	청양대학 육성 지원		5,000,000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지원		1,070,000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670,000			폐지 인턴 쉽	
	○전문계고 해외 인턴쉽		400,000				
	전도민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160,000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20,000,000원*16개시군*50%						
	충청남도 장학회 운영 지원		580,000			축소 도비 유학	
	○충청남도 장학회 출연금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 지원		800,000				
	○충청남도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합계		8,150,000				

〈표 65〉법정부담금의 내역

	부서·정책·단위(회계)·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조정안	증감	비고 (축소, 폐지)	사유
			2010년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531,000				
	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96,531,000				
	○교육재정교부금		21,031,000				
	○지방교육세		175,000,000				
	○대안교육센터 운영비		500,000				
	학교용 지부담금- 건축도시과		6,000,000				
	합계		196,531,000				

〈표 66〉 농업관련 부서의 교육관련 사업비(농가 도우미 지원은 제외)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조정 안	증감	비고 (축소, 폐지)	사유
			2010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96,208				
○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5,562,028		증액	확대	무상 급식
○ 농가도우미 지원			103,950				
35,000원*550명*45일*12%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230,230		유지	유지	
850,000원*13,119명*2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1,487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71,487				
		분	18,176				
		도	53,311				
합계(* 농가도우미 제외)			7,520,541				

제4장 충남 교육 분야 전략 과제

1. 비전 및 전략

2. 전략별 추진 사업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1. 비전 및 전략

가. 비전 설정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민정5기의 교육 분야 비전은 학교교육의 내실화,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 평생 및 시민 교육체제의 구축이다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질 제고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들과 함께 공교육을 지원하고 협력과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행복을 되돌려 주는데 기여하고 방대하나 아직 부실한 대학교육과 연구의 품질을 제고에 기여하여 대학이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의 터가 되고 창의적인 산업발전과 문화 발전의 기지가 되도록 한다 동시에 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생애동안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하여 참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책임을 고양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유초중등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시민과 함께 함으로써 교육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고등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고등교육을 확보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 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민주 의식과 도정 참여를 제고하며 문화/경제/삶의 질을 고양하는 것이다. 아래의 전략들은 시민사회(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학교와 대학)과 함께 하면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동시에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유초중등 교육 지원 확대
-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의 협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활동 지원 활성화
- 평생교육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직업/민주시민 교육의 확대

〈표 67〉

비전	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유초중등 교육 확대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의 협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 활동 활성화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직업/민주시민 교육의 확대
전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무상급식 · 행복학교지원 · 행복학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양대학 혁신지원 · 산학협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 민주시민 교육
공통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거버넌스 체제구축 · 충남희망교육재단 		

이 추진전략과 사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8〉

분야	전략과제	추진사업	제도 과제	예산 과제
교육	1.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① 기본계획 수립		○
		②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2.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①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	○
		② 도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시		○
		③ 시민교육 센터 및 체제 구축		○
	3. “행복 충남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① ‘행복학교’ 육성 지원		○
		②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	○
		③ ‘무지개 캠프’ 운영		○
	4. 충남 산학협력 체제 확대	① 산학협력 기반 조성	○	
		② 문제해결 산학협력		○
		③ 청양대학 평가 및 혁신	○	
	5.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① ‘충남교육발전협의회’ 구성	○	○
		②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
	6.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①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	○
		② ‘서울지역 충남학사’ 설치		○

나. 추진 전략

■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 의무교육 대상자(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

1.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① 기본계획 수립
	②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 2.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한 공적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절실

도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책무: 교육감 → 도지사 (2007년 전면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거)

도민 평생교육 사업의 정책화 시급: 추진체제·사업 등 구체적 성과 미약

- 도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인생60→인생90시대로 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 생애적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계층 간·세대 간 학력 격차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과의 격차 심화로 지역과 구 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평생교육 확대 시급

- 시민교육 센터 건립: 어릴 때부터 주민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 체제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시민사회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지역별 거점 센터 건립

2. 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①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
	② 도민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시
	③ 민주시민교육 센터 설립

■ 3. “행복 충남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 학생들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과제와 동시에 공교육의 정상화 활성화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과제임 행복한 충남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전략임
- 행복학교 육성지원 경쟁위주 교육 극복,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형 공교육 학교’, ‘교육복지 구현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를 지향하는 공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고자 함.

-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기존 교과지식 중심 방과후학교지원사업의 한계 극복 정서발달·문화체험·지역배우기 등 초·중등 학생 대상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 위기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무지개 캠프 학교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학습 기회 제공 학생의 자기 재능 개발 등 학습과 생활의 새로운 계기를 부여하여 미래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

- 학습준비물 지원: 국민 기본권이자 국가 책무인 초등 의무교육을 위해 초등 학부모의 일상적인 교육부담의 하나인 학습준비물을 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수준높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3. “행복 충남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① ‘행복학교’ 육성 지원
	②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③ ‘무지개 캠프’ 운영

■ 충남 산학협력 체제 확대

- 충남지역 산학협력 체제 확대는 충남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도권 진학 지역출신 대졸자들의 열악한 취업률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대학의 품질을 높이고 동시에 산학협력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산학협력 기반 조성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인적자원센터를 지역의 산학협력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구로 만들어 견실한 교육기관과 견실한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임.
- 문제해결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독자성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있음/한편에서는 한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한편에서는 대졸자의 일자리 난을 해소함/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연계
- 청양대학 평가와 혁신은 소규모 학과 체제로 있는 청양대학의 이사회 등 운영체제와 대학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것임.

4. 충남 산학협력 체제 확대	① 산학협력 기반 조성
	② 문제해결 산학협력
	③ 청양대학 평가 및 혁신

■ 5.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위한 준 상시적 기구가 필요함
- ‘충남교육발전협력위원회’ 구성: 도지사의 교육분야 공약사항 추진 협의 및 심의,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심의,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 기구 필요/ 기존 도-교육청 간 실무협의체인 교육정책협의회를 민간 전문가, 교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충남교육발전협력위원회로 확대 재편
-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기존 교육청지원위주 사업 외에 평생 교육 등 도가 직접 주관하는 교육사업의 영역이 확대된 새로운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남교육발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이 필요함

5. 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① ‘충남교육발전협력위원회’ 구성
	②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 6.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 충남희망교육재단은 충남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확보 및 배분 역할을 하고 서울지역 충남 학사는 지역민의 서울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충남의 미래 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이에 필요한 행정정적 지원 체계 강화
- ‘서울지역 충남학사 설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3,000여명의 학생에 대한 학생기숙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과제

6.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① ‘충남희망교육재단’ 설립
	② ‘서울지역 충남학사’ 설치

2. 전략별 추진사업

가.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실시

■ 친환경 의무급식사업

- 사업 필요성: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의무교육을 실시함/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는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지역 농산물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농업 생산의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또한 친환경 농산물 경작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개요:

- 사업 내용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함.
- 친환경 음식의 비중을 점차 높임으로써, 급식의 질을 제고시켜 나감.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추진함.
-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에는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100% 친환경 농산물로 만들어진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업 추진 방법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 것인가 하는 점임.
- 다음 <표 3>은 2010년의 각급 학급별 학생 수 자료 및 음식 단가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계획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을 정리한 것임.
- 우선 대상 학생 수는 2010년 3월 현재 도내 학급별 학생 수를 기초로 하였음.
- 급식 단가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2010. 8. 10. 자료의 급식 단가를 이용하였음. (<참고자료 표1>) 초등학교의 경우 2,500원, 중학교의 경우 3,000원 수준임.
-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식품비의 단가가 어느 정도나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우선 도교육청 자료에서는 식품비가 1.8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반면 ‘안전한학교급식을 위한 충남 운동본부’에서는 18.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가공식품과 수산물은 일반상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나머지는 30% 정도 가격이 더 비싸

다고 산정) 충남도에서는 48-66% 더 비쌀 것으로 전망.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 있으며 또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이 지금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큼.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여기서는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경우 식품비가 50%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운영비와 인건비는 일정하다고 가정) 이렇게 가정하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할 경우 급식 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3,300원, 중학교의 경우 4,000원임.
- 이에 따라 <표69>에 나타나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 일반급식의 경우 1,049억원이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 1,3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급식일수 180일 가정)

• 기대효과:

- o 초중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한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히 적지 않은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자명함.
- o 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을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연하고 시급한 정책임.
- o 또한 환경 문제나 지역 농업 활성화 문제를 감안할 때 친환경 급식의 활성화는 지역 농업 생산을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o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도 무상급식의 문제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에서 도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소요예산

<표 69> 학급별 학생 수 및 무상급식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학생수	급식단가 (일반급식)	급식단가 (친환경)	소요예산 (일반급식)	소요예산 (친환경)
초등학교 읍면지역	73,712	2,500	3,300	332	438
초등학교 동지역	65,022	2,500	3,300	293	386
중학교 읍면지역	34,383	3,000	4,000	186	248
중학교 동지역	44,179	3,000	4,000	239	318
합계				1,049	1,390

• 사업 범위

- 교육 관련 사업은 도 교육청 및 일반 시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중요함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어떠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56>)
- 표를 보면 도 교육청에서 2011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읍면지역 학생 117,780명에 대해 무상급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표 70〉 사업 범위(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읍면지역	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	무상급식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지역	50%보조	70%보조	90%보조	100%보조 (무상급식)
친환경 급식	50% 수준	70%	90%	100%

- 이상의 총 소요예산을 <표57>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도 다르게 적용하여 소요 예산을 추정한 것이 다음 <표 4>임.

〈표 71〉 연도별 무상급식 소요 예산 (단위 :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소요예산	910	1,092	1,287	1,390
읍면지역	601	635	669	685
동지역	309	457	618	704
중첩예산				
식품비지원 (초등학교+중학교)	141	141	141	141
농산어촌 초등지원	196	196	196	196
저소득층 지원 (학기외 지원 제외)	34	48	61	68
인건비 지원 (초등학교+중학교)	49	49	49	49
순 추가예산	490	658	839	935

- 표에서 총 소요예산은 읍면지역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과 동지역 학생들에 대한 급식 보조비(2011년 50%보조에서 2014년 완전 무상급식까지) 항목을 합한 것임. 2011년 910억원에서 2014년 1,390억원으로 증가함.

- 현재 무상급식 예산 중 지금 계획하고 있는 예산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예산 196억원, 친환경 식품비 보조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식품비지원비 141억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인건비 지급액 49억원은 2011년부터 지금의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함. (관련 자료로 <참고자료 표2>를 제시하였음)

-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금 중 학기내 급식 지원비는 현재의 사업과 중첩되기는 하지만, 이들 수혜 대상이 읍면지역 거주자인지 아니면 동지역 거주자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예산 68억원이 지금의 사업과 2011년에는 50%, 2012년에는 70%, 2013년에는 90% 중첩되다가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2014년 100% 중첩되게 된다고 가정함.

- 이와 같은 중첩 예산을 제외할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소요되는 순수한 추가 예산은 2011년 490억원 2012년 658억원, 2013년 839억원, 2014년 935억원으로 추정됨.

- 연도별 친환경 식자재 사용 비율의 증가로 인해 급식 단가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2,900원, 2012년 3,060원, 2013년 3,220원, 2014년 3,300원으로 상승함. 중학교의 경우에는 2011년 3,500원, 2012년 3,700원, 2013년 3,900원, 2014년 4,000원으로 상승. 따라서 동 지역 중학교 학부모는 2011년 1,750원, 2012년 1,100원, 2013년 390원을 납부하다가, 2014년 완전 면제됨.

o 재원조달 방안

-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따르는 추가 예산은 도와 시군 지자체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조달하여야 함. 이 때 각 주체의 부담 비율은 기존 관례에 따르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식.

- 지금까지 교육 관련 예산은 지자체와 도교육청이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부담하여 왔고, 지자체 내에서는 도와 시군이 역시 30%와 70%의 비율로 부담을 분담하여 왔음. 이러한 관례에 따른다면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은 각 주체들 간에 다음 <표 5>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분배될 수 있음.

〈표 72〉 무상급식 소요 예산의 주체별 분담 안 (단위 : 억원)

	부담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	0.09	44	59	76	84
시군	0.21	103	138	176	196
교육청	0.7	343	461	588	655
도(전체 급식 예산)		103	118	134	143
시군(전체 급식 예산)		241	276	314	334

- 도의 경우 추가 예산은 2011년 44억원, 2012년 59억원, 2013년 76억원, 2014년 84억원이며, 기존 교육 예산이 59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인 급식 예산은 2011년 103억원, 2012년 118억원, 2013년 134억원, 2014년 143억원으로 설정할 수 있음.

o 사업 추진 일정

- 우선 시군 및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연도별 프로그램 및 각 주체의 부담액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하여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부서를 두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 식자재의 조달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학교급별 급식 단가

급별	조사 학교수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계
초	429(5)	1,600	210	690	2,500
중	189(2)	2,000	240	760	3,000
총합계	618(7)	1,800	225	725	2,750

※ () 는 분교수임



〈참고자료 2〉 학교급식 관련 자원별 지원액(2010년)

구분	지원대상	재원별(단위 : 백만원)				비고
		계	도	시군	교육청	
총계	총계	88,937	5,862	13,778	69,297	
	유치원	3,037	346	807	1,884	
	미 취학아동 및 3끼지원학생	1,100	300	800		
	소계	50,753	3,615	8,435	38,703	34,023
	초등학교	36,775	2,173	5,069	29,533	27,193
	중학교	13,978	1,442	3,366	9,170	6,830
	고등학교	15,419	1,581	3,690	10,148	
	특수학교 및 기타인건비	4,807	20	46	4,741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친환경식품 비만)	급식 시설 기구비	13,821			13,821	
	소계	21,086	5,562	12,978	2,546	
	병설유치원 379개교 8,663명 도식품비 추가는 전유치원생(22,087명)	1,222	346	807	69	병설만 지원
	초등학교 430개교 138,734명	8,396	2,173	5,069	1,154	
	중등학교 190개교 78,562명	5,699	1,442	3,366	891	
	고등학교 118개교 76,890명	5,690	1,581	3,690	419	
	특수학교 6개교 992명	79	20	46	13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소계	19,591	300	800	18,491	(6,950)
	미 취학아동 및 3끼지원학생		300	800		
	초등학교 개교 10,820명	5,261			5,261	(2,340)
	중등학교 개교 10,821명	6,235			6,235	(2,340)
	고등학교 개교 10,500명	6,995			6,995	(2,270)
농산어촌초등 , 병설유치원 무상 급식	소계	21,420			21,420	
	병설유치원 5,474명	1,683			1,683	
	단설유치원 5 개교 584명	105			105	
	초등학교 354개교 76,799명	19,632			19,632	
다자녀 특수학교	소계	225			225	
	초등학교 250명	67			67	
	중등학교 250명	90			90	
	고등학교 150명	68			68	
특수학급	소계	758			758	
	유치원 67명	18			18	
	초등학교 912명	246			246	
	중등학교 685명	246			246	
	고등학교 550명	248			248	
인건비	소계	12,036			12,036	
	유치원	9			9	
	초등	3,173			3,173	
	중등	1,708			1,708	
	고등	2,418			2,418	
	특수 및 기타인건비	4,728			4,728	
시설비	소계	13,821			13,821	
	시설비	12,124			12,124	
	기구비	1,697			1,697	

- ※ 특수 및 기타인건비는 이동급식교사 인건비등을 포함, 무상급식 인건비 제외된 부분임
- ※ 비교난의()내서는 저소득층무상급식 관련 도교육청에서 자금 전출을 받아 토·일요일 및 공휴일 도에서 급식비를 집행한 금액임
- ※ 총계의 비교난은 저소득층 학기외(토·일·공휴일) 급식관련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나. 도민 평생교육 기회확대

■ 평생교육 추진기반 구축사업

- (1) 사업의 필요성: ○ ‘학습, 고용, 복지, 문화’를 연계한 공적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 절실
- ○ “교육”을 지역 발전의 키워드로 생각하는 지자체 증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하드웨어(기업유치, 재개발, 도로 건설 등), 소프트웨어(교육, 문화, 복지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 78개 지자체 선정  소프트웨어 측면 강조를 위한 지자체들의 전담부서 신설 및 일원화 추세
- ○ 도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책무 : 교육감 → 도지사(2007년 전면 개정 평생교육법에 의거)
- ○ 도민 평생교육 사업의 정확화 시급: 추진체제·사업 등 구체적 성과 미약
- (2) 사업개요:
 - 사업 범위 : 충남도 어디서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충남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도청 이전신도시 「내포시」 건설과 연계)
 - 시·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원
 - ※ 시·군별 주민교육을 비롯한 교양교육, 직업교육, 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공동체교육 등 종합적인 학습공간으로서 「평생학습관」 설립
 -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지속
 - 사업 추진 방법
 - 연도별로 충남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평생교육법 제11조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건립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조직 구성 및 인력 확정
 - 평생교육 전문인력 채용 ※ 평생교육법 제26조 제3항
 - 시·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원: 연도별 2개 시·군을 심사에 의해 지원

-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등)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개정 : 주민교육센터, 주민자치학습센터 등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전담 인력 배치
 - 주민자치센터의 평생교육시설 활용 운영 지원
- 재원조달 방안 : 도비 확보 및 시·군 대응투자
 - 충남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 도비 확보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 도비 확보
 - 시·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지원 : 도비 및 시·군 대응투자
 -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 도비 및 시·군 대응투자
- 사업 추진 일정

〈표 73〉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충남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시·군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 (2) 기대효과:
 - 도민의 평생학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 끊임없이 학습하는 풍토 조성 :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기여

- 소요예산

〈표 74〉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충남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	30	30	30	30	30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설립비 : 50억, 기자재 구입 : 5억, 사업비 : 4억) ※ 설립비는 내포시 건립비용에 포함 ※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제외	5,000 (내포시 건설비)	500	400	400	400
시·군 평생학습관 설치 지원 (도비 15억+시·군비 15억×2곳) ※ 운영 의지 부지 확보, 전담인력 배치 바전 등 심사 후 지원	-	-	3,000	3,000	3,000
주민자치센터를 평생교육시설로 활용 (시설 운영비 : 10,000천원×50곳) ※ 운영 의지, 전담인력 배치 등 심사 후 지원	-	1,000	1,500	2,000	2,500
총비용	5,030	1,530	4,930	5,430	5,930

■ 도민의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사업

(1) 사업 필요성

- o 인생60→인생90시대로 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 생애적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 o 계층 간·세대 간 학력 격차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농촌과의 격차 심화로 지역과 구성원 모두의 동반성장을 위해 평생교육 확대 시급

(2) 개요

o 사업 범위

- 도민 평생교육 기회의 질적 향상 및 공공성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개발
- 도민교육을 비롯하여 교양교육, 직업교육 등 영역별 전문적 교육 제공

o 사업 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도민교육적 기능 강화/프로그램 특성화
- 초중고교 활용 평생교육 확대: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전 생애 역량개발(Competencies)
 - 청소년 : 자원봉사, 주말체험교육 등
 - 여 성 : 육아교육, 부모교육, 심리상담 등
 - 노 인 : 사회참여, 교양취미, 경력활용 재교육 등
- 소외계층 대상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
 - 성인문해교육, 다문화가족교육, 저소득역량강화교육 등
- 권역별 평생교육대학 지정 :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연구
- 도내 전문계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o 사업 기간 : 2011년부터 지속

o 사업 추진 방법

-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분야별 평생교육 공모 사업 추진

※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사 후 차등 지원

- 권역별 평생교육대학은 위탁 사업으로 추진

※ 운영 의지, 특성화, 인력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o 재원조달 방안

- 시·군 대상 : 시·군비 50%이상 대응투자

- 대학 대상 : 대학 자체 20%이상 대응투자

o 사업 추진 일정

〈표 75〉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주민자치센터의 도민교육적 기능 강화/프로그램 특성화					
초중고교 활용 평생교육 확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전 생애 역량개발(Competencies)					
소외계층 대상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					
권역별 평생교육대학 지정					
도내 전문계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매년 상반기 사업 공모·공고·설명회·심사 실시 ⇒ 차등 지원

(3). 기대효과

o 장수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 사업 추진으로 사회 적응 및 재참여 기회 제공

o '학습=고용' 가능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4). 소요예산(안)

〈표 76〉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민자치센터의 도민교육적 기능 강화/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 10,000천원×50곳)		1,000	1,500	2,000	2,500
초중고교 활용 평생교육 확대 (프로그램 운영비 : 2,000천원×10개 학교×16개 시·군)	320	340	360	380	400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전 생애 역량개발(Competencies) (프로그램 운영비 : 10,000천원×16개 시·군)	160	180	200	220	240
소외계층 대상 제2의 교육기회(second chance)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 10,000천원×16개 시·군)	160	180	200	220	240
권역별 평생교육대학 지정 (프로그램 운영비 : 50,000천원×2개 대학)		100	150	200	250
도내 전문계고 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 2,000천원×10곳×16개 시·군)	320	340	360	380	400
총비용	960	2,140	2,770	3,400	4,030

■ 시민교육센터 설립

• 사업 필요성

- － 충남도민의 시민성 함양, 특히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촉진
- － 도덕성, 바람직한 윤리관,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나눔의 정신 등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 개요

－ 사업내용

-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도 내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영역별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시민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시민교육 리더, 강사 및 봉사자 양성

－ 사업기간 : 2011년부터 연중 지속

－ 사업 추진 방법

-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가칭)에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 도 내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 충남도의 자생적 시민단체를 발굴하여,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조 마련 및 각 단체의 시민교육 활동 지원
 - ▶ 도내 시·군별 지역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 지원

- 영역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충남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관 및 민주시민단체 등에 보급하여 운영
 - ▶ 시민교육프로그램의 주제영역은 크게 환경/평화·통일/국제이해/다문화 교육 등으로 나누고, 민주시민핵심 역량은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행위 능력 등으로 구분 추진
 - 시민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전문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
 - 시민교육 리더, 강사 및 봉사자 양성 : 시·군별로 리더 및 봉사자 추천 후 신청·추진
- － 사업추진일정

〈표 77〉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1	2012	2013	2014	2015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도 내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영역별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민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시민교육 리더, 강사 및 봉사자 양성					

- 기대효과
 - － 안정적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 성숙한 시민 사회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극대화
- 소요예산

〈표 78〉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설치비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포함	0	0	0	0	0
도 내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협의체 구성·운영 : 1,000천원×4회(분기별 1회)	4	4	4	4	4
영역별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5,000천원×16개 시·군×10종 프로그램	800	900	1,000	1,100	1,200
시민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30	30	30	30	30
시민교육 리더, 강사 및 봉사자 양성 ※ 10,000천원×3개 과정×2회(상·하반기)	60	70	80	90	100
총비용	834	934	1,034	1,134	1,234

다. 행복충남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 행복학교사업

1. 사업 필요성

가. 추진 배경

☐ 도지사의 교육공약사항

- 경쟁과 성적위주의 교육보다 참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교육개혁 지원 사업임

☐ 계층간·지역(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면지역 초·중등학교 공동화에 대한 지역차원 대책 시급

- 열악한 지역에서 교사, 학부모의 노력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운영한 사례들 있음
 - 경기 남한산초, 덕양중, 이우학교, 충남 거산초, 홍동중, 풀무농업고 등

☐ 학생들의 '다면적 역량' 향상을 위해 포괄적·복지적 접근 필요

- 특히 교육 소외계층 학생의 경우 학력 향상을 위해서 편협한 지식교육보다 다면적 역량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다면적 역량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민주시민의식, 신체 정서 건강, 사회문화 소양 등)

☐ 새로운 학교 모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대

- 편협한 입시교육이 아닌 보다 의미 있는 전인교육에 대한 갈망
 - 선진국 교육(북유럽의 학교교육, 일본 배움의 공동체 학교 등)

나. 행복학교의 기본개념

미래형 공교육 학교

입시 중심 교육 탈피, 미래 공교육이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

교육복지 구현 학교

배움과 돌봄 기능 확대, 학생의 다면적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

지역의 교육 자원 조직화 및 지역 연계 운영 학교

다. 교과부 관련 정책과의 차별성

1) 교과부 관련 정책들

☐ 자율형 공립학교

- 목적: 공립고 운영에 자율성,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 다양화하여 전인교육 실현
- 대상: 일반계 공립고 중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 신설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 자율형 사립고 지정 지역을 우선 고려
'09년 21교, '10년: 23교 지정

☐ 사교육 없는 학교

- 목적: 사교육 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선진학교 모델을 개발 확산하기 위한 지원대책
- 대상: 일반 초중고('09년 457교, '10년 600교, '12년 1,000교)

☐ 기숙형 고교

- 목적: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 대상: 농산어촌의 1군당 1개교 지정 운영('11년까지 150개교)

☐ 마이스터고

- 목적: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 대상: 우수특성화고 가운데 '08년 20개교 지정하고 '11년까지 50개교 운영

☐ 교육과정 선도학교

- 목적: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연구 시범학교
- 대상: 총 200교(연구학교 50교, 선도학교 150교)

☐ 학력향상중점학교

- 목적: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의지와 시도교육청의 실사를 거쳐 지정하며 3년간 행·재정 지원함
- 대상: 선정기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초등학교는 5%, 중·일반계고는 20%, 전문계고는 40%

☐ 농산어촌 전원학교

- 목적: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육성하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성공모델 창출
- 대상: 도교육청 소속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면소재 초중학교 중 학생수 61 - 200명인 학교의 약 10%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 목적: 면 소재 학교 교육력 강화 및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 이탈방지 및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

☐ 농산어촌 우수교

- 목적: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모델을 발전시킴으로써, 고교 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과도한 교육부담 완화
- 대상: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에서 전국 82개교 지정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 목적: 도시 내 교육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및 집중지원 강화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문화-복지 총체적 지원 강화
- 대상: 전국 100개 지역 538개교

2) 행복학교의 차별성

- ☐ 교과부정책의 경우, 단일한 유형의 학교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아래 종합적이며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효과가 제한적임 따라서 학교를 소재지와 지향목표에 기초하여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되,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예1) 농산어촌전원학교, 농산어촌연중돌봄학교, 농산어촌우수교, 기숙형고교

예2) 학력중점향상학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예3) 사교육 없는 학교, 자율형학교,

3) 행복학교 운영원칙

○ 의미와 즐거움이 있는 배움의 학교

-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의미 있는 지식과 기술을 탐구 적용,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

= 기초문해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민주시민의식, 직업의식 및 기술 습득

○ 배움과 돌봄의 조화

- 학생개별 맞춤교육

= 개별학생의 성장 속도, 흥미, 진로에 기초한 교육

- 건강한 신체, 정신,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 돌봄

=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의 적극적 돌봄

○ 교사조직을 행정업무중심에서 교수 학습 중심으로 개편

-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연구, 연수, 수업공개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 공문전담직원, 보조교사 지원

○ 민주적 학교 경영

- 학교경영에서의 자율성 확보

- 주체들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참여

○ 지역사회와 유기적 연계

-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학교 운영의 특성화

- 지역사회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연대

4) 행복학교 유형

☐ 농산어촌형 행복학교

○ 대상: 농산어촌 소재 학교

○ 목적: 학교 교육력 강화, 학생복지 강화, 자연과의 조화로운 교육을 통해 학생이탈방지, 도·농간 학력격차 감소, 지역사회활성화 도모

예: 거산초등학교, 남한산초등학교, 경기양평 조현초

☐ 도시형 행복학교

- 대상: 도시낙후지역 학교
- 목적: 교육력 강화, 학생복지 강화를 통해 학력과 돌봄의 조화
- 예: 교복투사업대상학교 가운데 성공적인 학교를 벤치마킹함

☐ 미래형 행복학교

- 대상: 도시일반학교
- 목적: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전환
- 예: 이우학교, 성남보평초

☐ 행복 전문계고

- 대상: 전문계고등학교
- 목적: 지역의 산업, 직업구조와 연계된 전문고 양성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
- 예: 풀무농업고

2. 사업개요 및 추진 절차

☐ 사업 범위

- 행복학교 지정
 - 운영 목표 : 총 15개교(15개 시도지역별 각 1개교)
 - 지정 계획 (2011년: 8개교, 2012년: 7개교)
- 행복학교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
 - 행복학교 평가 및 컨설팅
 - 행복전문고 모형 개발 연구
 - 행복학교 간, 혁신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 행복학교 지정
 - 2011년: 초등 7개교, 중학교 1개교 (8개교)
 - 2012년: 초등 3개교, 중학교 2개교, 일반고 1개교, 전문고 1개교 (7개교)

○ 행복학교 지원 시스템 구축

- 행복전문고 모형 개발 연구

= 지역의 산업, 직업구조와 연계된 전문고 모형개발을 대학 또는 연구소에 의뢰

= 시·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지역주민, 지역산업인사, 전문계고 교사 등의 의견 수렴 후 모형 확정

- 행복학교 평가 및 컨설팅

= 학교 급별 평가 및 컨설팅 모형 개발

= 2년차에 행복학교에 대한 평가 실시

= 평가 후 재지정 여부와 컨설팅 지원 방식 결정

- 행복학교 간, 혁신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행복학교 협의회 및 포럼 운영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 개발

= 기존 혁신학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점 해결과 발전방안 논의

□ 사업 기간

○ 2010 - 2014년

□ 사업 추진 방법

○ 시도지역별 1개교씩 총 15개교

○ 단계적 확대

- 지역 : 낙후지역 우선 지원 후 일반 지역으로 확대

- 급별 : 초·중학교 우선 지원 후 전문계고와 일반고로 확대

- 2011년: 초등 7개교, 중학교 1개교 (8개교)

- 2012년: 초등 3개교, 중학교 2개교, 일반고 1개교, 전문고 1개교 (7개교)

○ 전문계고는 혁신형 행복학교의 전문계 고등학교 모형 연구 1년 후 실시

- 지역의 산업, 직업과 직접적인 연계

예1) 지역농업 센터 역할, 농업관련 단체와 연구소 연계, 농업-유기농, 귀농, 우리 농산물 씨앗 등의 센터와 프로그램 연계

예2) 지역 중견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와 산업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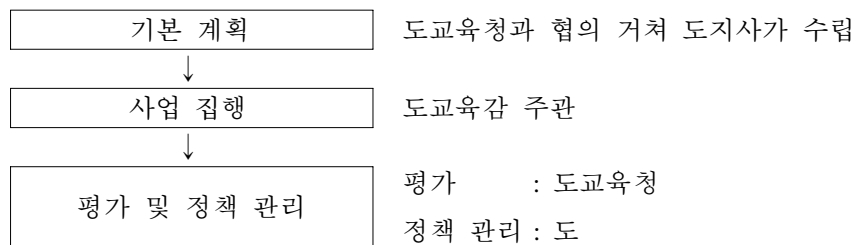
○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 현재 시행중인 교육과학기술부 재정지원사업: 사교육없는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혁신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농산어촌 우수고 등

- 교당 지원액: 2억
- 시·군 및 도교육청 대응투자 (도 : 시·군 : 교육청 = 5 : 3 : 2)
- 지정 기간 : 4년 (2년차 평가 거쳐 재지정 여부 판단)

☐ 추진 체계

- 도와 도교육청과의 관계



- 교육기획관 신설

- 현재 교육협력관은 교육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역할이 아닌 평생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도시자의 직접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함

☐ 지정 원칙(교육청 협의)

- 시·군민 의견 수렴 거쳐 대상학교 지정 신청
- 대상학교 지정 후 사업계획(교장) 심사
- 교장공모제 적용 원칙
- 대상학교 교장공모 심사 : 지역주민 포함 심사위 구성

☐ 사업 추진 일정

- 1차년도 사업 집행 과정

〈표 79〉

행복학교 추진방안 자문	충남교육혁신지원위원회	9월
행복학교 추진 기본 계획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거쳐 도지사 확정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10월
행복학교 지정 추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시장·군수 또는 지역교육장 추천	11월
행복학교 지정대상교 확정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거쳐 도교육감 확정	11월
대상학교 교장 공모	지역주민 포함 교장심사위원회 구성	12월
행복학교 재정 지원	도→도교육청	2월
행복학교 운영 관리·감독	도교육청	
행복학교 평가(2년차)	평가 도구 개발 : 충남교육혁신지원위원회 학교 평가 보고서 작성 : 도교육청	
평가 보고서 심의	충남교육혁신지원위원회	

〈표 80〉 기존 학교단위 추가재정지원 사업과 행복학교 사업 추진 절차 비교

항 목	기존 지원 사업	행복학교 사업
지원 사업 신청자	학교장	시장·군수 또는 지역교육장
선정 절차	사업계획 제출 후 학교 선정	학교 선정 후 사업계획 제출
지정자	도교육청	도-교육청 정책협의회 거쳐 도교육감 확정
관리 및 지원 업무	도교육청	도교육청
평가	도교육청	평가 : 도교육청 평가 심의: 충남교육혁신지원위원회

※ 기존 지원 사업과 달리할 필요성

1. 종전 학교장 신청 → 시·군 단위 신청

① 학교장의 잦은 이동(해당교 평균 재임 기간: 1~2년)으로 지원 사업을 신청한 학교장의 책임 운영이 사실상 어려움. 신청 당시 행복학교 구상을 최소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학교여건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 신청자를 시·군 및 지역교육청으로 할 필요가 있음.

- ② 지역과 소통하는 학교, 지역 주민의 교육 요구를 충족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행복학교 지정은 지역 차원의 의견 수렴이 전제가 되어야 함.

2. 종전 사업계획 제출 후 학교 선정 → 학교 선정 후 사업계획 제출

- ① 위 1의 ①의 이유(학교장의 잦은 이동)로 행복학교 지정 대상 학교를 우선 결정한 뒤 이 학교에 대한 운영계획을 심사하는 것이 목적 실현을 위해 타당함.
- ② 지정 대상 학교를 책임있게 운영할 학교장의 의지가 관건인 바 교장 공모를 통해 대상 학교에 대한 운영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교장 공모제를 적용하는 것을 도교육청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당해년도 지정 교장공모 대상학교에 행복학교 우선 반영 협조)

3. 도-교육청 간 정책협의회 거쳐 교육감이 대상학교 지정

도가 지원하는 정책 사업임을 감안해 기존 정책협의회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함.

4. 교육감은 평가, 충청남도교육발전협의회는 평가 결과 심의

행복학교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교육감이 실시함 다만 도 지원 정책 사업임을 감안해 목적 실현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혁신지원위원회가 평가 도구를 개발 제시하고 평가 결과를 심의함.

3. 기대효과

- 지역 학교 활성화로 지역 주민 자긍심 제고
- 참된 학교교육 실시로 교사와 학생의 학교 만족도 제고
- 낙후 지역 교육 활성화로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 다양한 공교육 정상화 모형 확산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교육 협력 모형 창출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108억원
- 교당 2억원 기준

〈표 81〉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지정 학교수	8	7	0	0	
학교수 누계	8	15	15	15	
도(50%)	8	15	15	15	53
시·군(30%)	4.8	9	9	9	31.8
교육청(20%)	3.2	6	6	6	21.2
계	16	30	30	30	106

- 전문계고 모형 개발 연구: 5천만원
- 평가와 컨설팅 연구 및 실시 : 1억 5천만원

■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 사업 필요성

o 지역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자생력 함양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지역의 교육력 전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지역 교육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가 필요함

o 위기관리가 필요한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돌봄 및 지원

위기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자아정체성 회복과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 등이 가장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아정체성 회복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이 요구됨.

<프로그램 예시>

자아정체성 프로그램 : 자아성장훈련, 의사소통훈련, 셀프리더십 훈련, 자신감증진 등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 성격진단 및 분석, 갈등해결, 미술치료, 음악치료, 가족 집단상담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 기초적인 건강진단 및 지식, 체력단련, 스포츠, 단체활동 등

일 대 일 맞춤형 코치 : 지역 자원 연계 집중 지원

자기성장 프로그램 : 읽기능력강화 프로그램, 진로교육 등

○ **다양한 교육 서비스 요구 증대에 따른 지역교육기관의 역할 증대**
 별이 부부, 다양한 가족 형태(조손, 한부모, 다문화, 새터민 등), 빈곤층,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 요구 증대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역사회교육기관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됨

→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 대상 홍보 및 기관간 정보 공유 필요

○ **학교 지원 중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한계 보완**

기존의 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학교 중심 지원 체제**로 지역 아동센터, 민간공부방, 탈학교학생, 시민사회단체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이나 지역사회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의 집중 지원을 담당하는 행복교육통합지원단체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방과후교육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해 지역사회와 학교의 균형있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교육복지 예산의 학교 집중**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전원학교, 돌봄학교 등 교육복지 예산 또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집중되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아동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청소년 교육 등 학교 밖 교육 활동기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려움

○ **주말이나 방학중 방과후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

방과후 학교 관련 예산은 학교에 집중됨에도 주말이나 방학 중 방과후 활동 등은 학생관리, 교사들의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이는 학교 밖 교육기관의 몫이 큼

* 주5일 근무제와 수업제가 완전히 정착되면 학교 사용일은 연간 180일 정도 → 지역사회교육기관의 역할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 범위**

- 충남 도내 지역아동센터, 민간 공부방,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교육시설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합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체제 형성

- 교육청(학교) 및 지자체와 연계망 구축 및 공동사업 운영
- 개인별 학습 지원 및 심리 상담을 통한 개인의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o 사업 내용

- 지역사회교육 사업 기획 및 개발

지역사회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프로그램 수요 분석
 지역사회 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지역 단위 지역사회교육 발전 전략 수립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교육 인적 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교육기관에 지원 및 파견 가능한 우수 강사풀 제공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강사 연계
 지역사회교육기관 실무자 및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부모 교육 연수
 강사 관리 및 평가
 무지개 방학캠프 운영자 및 강사 연수

- 지역사회교육기관 지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제공
 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리상담 전문가 상호간의 연계망 형성과 체계적인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교육 연결망 구축 및 교육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단위 교육기관 연계
 지역사회교육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교육기관 강사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기관통합형 교육 매뉴얼 개발
 지역사회교육기관 연계 공동사업 추진

지역 사회 문화 예술 및 문학 단체 등과의 공동 사업 추진

무지개 캠프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 교육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교육기관과 학교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교육 통합 정보망 구축

우수 프로그램 및 매뉴얼 보급

지역사회교육기관과 학교간 연계 사례 확산

각 기관별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공유

우수 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굴 및 보급

각 기관 프로그램 및 교육정보 홍보

o 사업 기간

- 2년 시범사업 후 재지정

- 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 위탁운영(1년으로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성과 평가 후 2년 단위 재지정

1년마다 운영 평가

o 사업 추진 방법

- 기존의 교육청 주관 방과후교육지원센터와는 별도 운영: 협력체제
구축

(학교 방과후 교육 지원 중심 - 교육청, 지역사회교육기관 방과후 교육
지원 중심 - 도청)

* 학교와 지역사회교육기관이 동등한 두 개의 축으로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충남교육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공모

* 공모시 교육분야 (예비)사회적기업 가산점 부여: 도내 사회적기업 지
원 및 육성 취지

<가산점 부여 근거>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3) 기대효과

o 지역사회교육기관 및 단체의 역량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 확보

→ 지역 교육 경쟁력의 향상

o 학교 밖 지역교육기관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 교육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로 교육 성과 및 주민 만족도 제고

o 종합적인 지역 교육안전망 서비스 체제 구축

→ 교육·문화·상담·복지 영역 교육 프로그램 교류, 박물관·도서관·청소년수련관·문화센터·복지관 등 지역교육시설 상호 개방 등 종합적인 지역 교육안전망 체제 구축

o 지역사회교육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교육력의 통합

→ 지역사회교육기관의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및 통합 서비스 제공의 중심 허브 역할

o 지역교육공동체 기능의 회복

→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토대 마련

→ 지역사회교육기관과 학교의 연계 강화

o 위기 청소년 집중 지원을 통한 행복지수 높이기

(4) 소요예산

- 연간 지원 예산

1차년도 9억, 2차년도 7억

센터운영 전문인력 채용 :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 실무경력자

o 예산 소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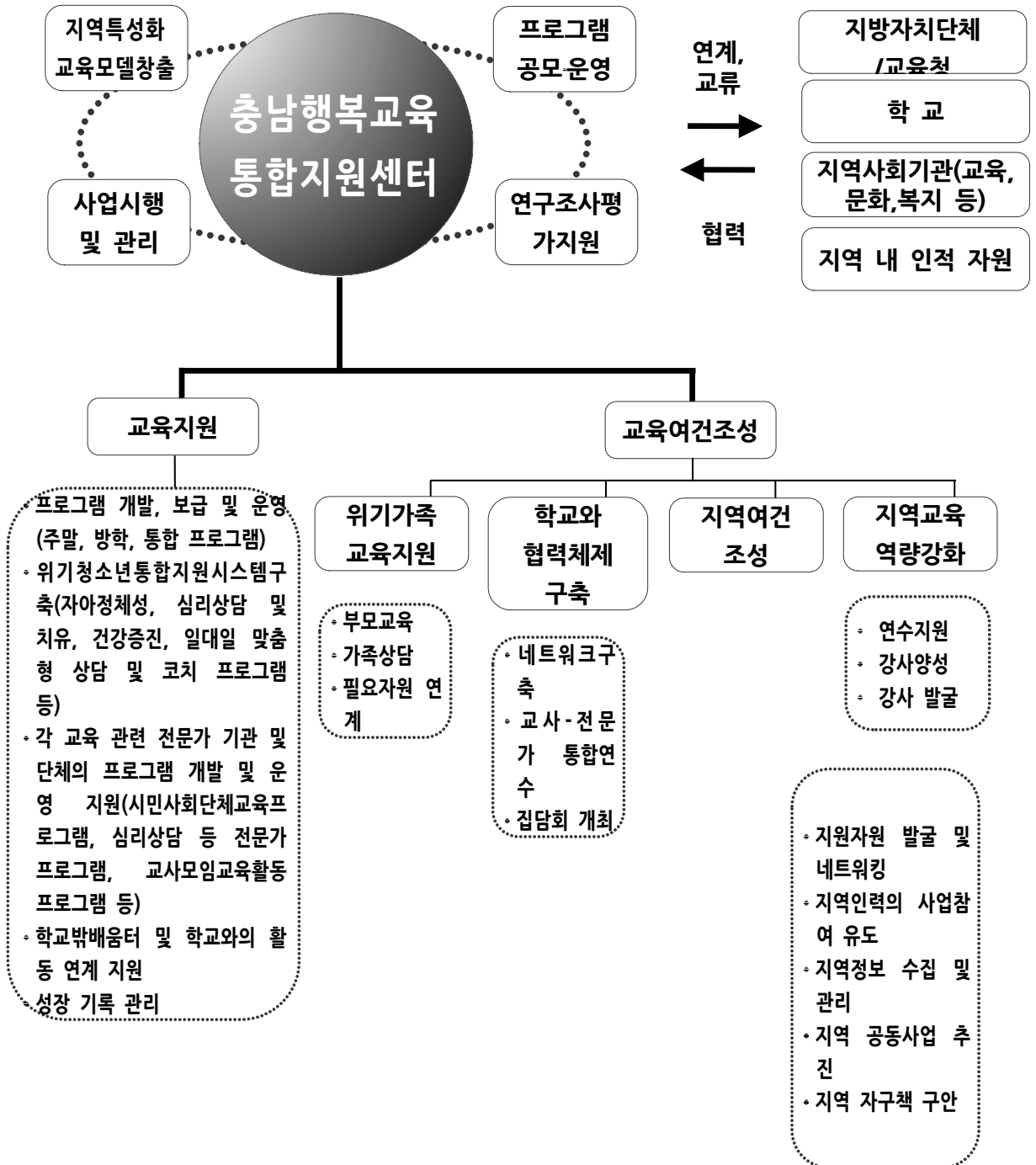
항	목	세부 내역	금액
운 영 비	인건비	실무책임자 2,500,000×13개월(퇴직금 포함)×1명=39,000,000 코디 2,000,000×13개월(퇴직금 포함)×1명=26,000,000 실무 1,800,000×13개월(퇴직금 포함)×2명=46,800,000	111,800,000
	운영비	2,000,000×12개월(기관 4대보험분 및 수당, 복지비, 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24,000,000
	회의비	회의비 10,000×10명×12회 = 1,200,000	1,200,000
	시설비(1차년도)	센터구축 및 시설 보완	200,000,000
사 업 비	프로그램개발비	10,000,000×5개 과제(예산범위 안에서 과제수 및 개발비 탄력 책정)	50,000,000
	프로그램운영비 (공모에 의해 선정)	주말프로그램(배움터지원프로그램) 5,000,000×20개 프로그램 = 100,000,000 지역교육프로그램(전문교육기관 및 단체 지원프로그램) 10,000,000×10개 프로그램 = 100,000,000 청소년위기관리 프로그램(심리상담) 7,000,000×10개 프로그램 = 70,000,000 지역특성화프로그램 5,000,000×16개 프로그램(16개시군)=80,000,000 네트워크통합프로그램 10,000,000×5개 사업(통합캠프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포함) = 50,000,000 *예산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수 및 운영비 탄력 책정	400,000,000
	네트워크사업비	네트워크(지역교육연계망) 구축 지역네트워크기관 연수 5,000,000×2회 =10,000,000 네트워크 협의회비 6,000,000 협의회참가수당 50,000×20명×5회 = 5,000,000 협의회진행비 10,000×20명×5회 = 1,000,000	16,000,000
	연수사업비	배움터교사연수 5,000,000×4회 = 20,000,000 학부모연수 2,500,000×4회 = 10,000,000 강사양성프로그램 5,000,000×4개 = 20,000,000	50,000,000
	교육복지지원비	배움터 교육복지비 지원 500,000×20개 기관 =10,000,000 (학교 밖 배움터 지원)	10,000,000
	정보사업비	브로셔, 리플릿, 광고 등 홍보비 8,000,000 소식지 제작 1,000,000×12개월 = 12,000,000 홈페이지 등 정보망 구축 6,000,000(1차년도)	26,000,000
	전문가협의회비	협의회참가수당 100,000×10명×10회 = 10,000,000 협의회진행비 10,000×10명×10회 = 1,000,000	11,000,000
			900,000,000

o 재원조달 방안

- 도비

구 분	합 계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30	9 (초기시설비 2억 포함)	7	7	7
도 비	30	9	7	7	7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개요도



■ 무지개 캠프 사업

1. 사업 필요성

교육 분야는 현재 도 교육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영역이다 교육감이 교장, 교감 및 교사 인사권, 교육과정운영권, 학교자율화, 교장공모제, 재정배분과 운영등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이 일정한 교육의 가치를 갖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면 교수학습활동의 방향은 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학습활동의 방향이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간 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들이 존중하지만 또한 새로운 교육요구를 갖고 있다. 도민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학교 밖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것이 ‘무지개 방학 캠프’의 취지이다.

학교 밖의 자유로운 시간이 많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로운 시간에도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시간이 많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학습활동에 집중하는 편이며 자신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시간이 거의 없다. 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의 여름방학 학습캠프에 가거나 또는 학원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방치된다. 이들에게 새로운 학습과 자기 재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학기간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예시하듯이 7개 ~8개의 지능 중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굴할 기회를 갖도록 여름 방학 캠프를 실시한다. 이 캠프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이 둘 다 의미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충남행복교육 통합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밖 프로그램의 방학 집중화

방학중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예술, 문학, 연극, 미술, 음악, 과학, 환경 등)을 활동을 통해 체험하게 함.

방학중 수업결손과 비효과적인 학교의 교과위주를 극복

지역의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문화예술 NGO, 대학, 지역 예술인을 포함한 등을 통한 여름 겨울 방학 동안의 프로그램/ 1주일, 2주일

2. 사업개요

o 사업 범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일정기간을 정해둔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프로그램을 다르게 설정

초등학교 대상 방학캠프

중학교 대상 방학캠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방학캠프

o 사업 내용

초등학교 32개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32x20x4=2,560명

중학교 32개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32x20x4=2,560명

고등학교 10개 프로그램 : 10x20x1=200명

1주 또는 2주 단위로 프로그램/ 한 학생이 두 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숙식제공 프로그램 1/3, 숙식복합 1/3, 가정에서 출퇴근 하는 형식으로 수행

〈표 82〉

	캠프 프로그램 주체	시설운영비 강사 인건비 지원	수요자 부담
음악(국악/고전/춤)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 및 학생, NGO, 교사 등의 마련	지역의 야영장, 산림수목원, 청소년 수련원, 교회 및 절, 기초자치단체의 공간 등을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미술(회화/조각/디자인)			차상위계층: 무료
환경 및 생태			기타 50%
과학			
연극-영화			
풍물 및 국악			
문학			
독서 및 글쓰기			
명상 및 치유			
부모와 함께 캠프			
농산어촌 체험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o 사업 기간

〈표 83〉

	여름방학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	겨울방학
2011년	4주	연간 방과후 지원과 연계	4주
2012년	4주		4주
2013년	4주		4주
2014년	4주		4주

○ 사업 추진 방법

‘충남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2011년 여름 방학 두 달 전까지 공모

-지역의 시민,사회문화단체, 기구, 예술가 그룹, NGO, 대학 등으로부터 ‘무지개 방학캠프’ 연간(여름방학/겨울방학 위주/방과후 연계) 프로그램 응모

-평가단의 평가: 프로그램의 품질, 강사 및 교사의 질, 건강 및 안전 책임/소외 저소득층의 배려방안

○ 기대효과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개발에 미치는 효과/행복한 학습과 활동경험 축적 /도 직접적 교육지원

○ 소요예산

1인당 20만원(일주일 프로그램/절반은 비숙박)

5231x20만원=1,046,200천원 이 중 도가 프로그램비와 운영비 3억원 지원 하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 및 개인(50%)부담하는 방식을 분담.

〈표 84〉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10억	10억	10억	10억
도 비	1억	3억	3억	3억

○ 재원조달 방안

〈표 85〉

도	기초자치단체	개인
30%	20%	50%

라. 충남산학협력체제 확대

■ 산학협력기반조성사업

(1) 사업의 필요성

- 충남의 학생들의 교육 및 기업의 문제해결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산학협력 기반이 필요한.
- 연구중심 산학협력이 아닌 학생과 기업중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구조가 필요함
- 충남발전연구원의 인적자원센터는 지역의 인적자원 역량을 축적하여 지역의 산학협력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구로 만들어 건설한 교육기관과 건설한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체제를 마련한 필요가 있음.

(2) 개요

- 충남발전연구원의 인적자원센터의 인력 및 연구활동 혁신

(3) 기대효과

- 충남발전연구원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예산: 충남발전연구원 예산 범위 안에서 해결

■ 대학과 전문대학의 기업 문제해결 산학협력 사업

- 사업 필요성: 대학과 기업이 서로의 독자성을 상호 존중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한편에서는 대졸자의 일자리 난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 예비졸업생과 졸업생의 portfolio와 졸업 작품(기업의 실제과제해결)을 연계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 개요: o 사업 범위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과 학과그룹/충남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제조업, 농임업, 서비스업 등) 대상 사업으로 재원에 따라 일정한 수의 기업(40)개과 학과(학생 그룹)을 선정 산학협력을 실시/사업 내용 충남지역의 중견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역

량을 확대하면서 상호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산학협력이자 기업-학생-교수-전문가의 협력을 조직하는 것임

- 중소/중견기업의 접수된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법적, 제도적, 통상적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와 애로를 접수(기업지원과에서 접수된 내용도 가능)기업의 문제와 애로 사항을 해결할 대학(학과/프로그램)에 집단으로 신청(학생, 교수, 현장 전문가-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지원조직)을 받음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학점과 포트폴리오(졸업 project)를 구축하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 사업 기간기업의 문제에 따라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1년에서 3년의 기간을 설정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사업 추진 방법 연구를 거쳐 현단계에서 충청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산학협력의 모형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추진/문제해결 산학협력 평가단 구성기업과 학교(학생)에 공모-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업의 지원신청 받음기술적 무역관련 경영상 애로와 문제점을 제시/기업지원과의 신청된 애로사항도 함께 분석대학과 대학(원)생들로부터 기업의 문제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제안 -공모된 문제와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학의 학과 및 대학생의 팀 구성 및 신청지도교수 등 필요/졸업 project 연계)전문가의 협력과 지원교육분과와 기업지원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
- 기대효과: 학생들의 기업의 문제해결 역량의 제고취업성과 한 개 사업당 10명 이면 300명의 문제해결 역량을 제고하여 취업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음 이와 동시에 공모제 방식과 평가과정을 통하여 대학의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기업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 충남의 기업유치 기대효과기업 경쟁력 (생산성) 제고 강화를 통해 일자리 제고
- 소요예산: 기업의 문제, 참여자의 역량기간 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각 산학협력의 성격별로 따라 재정소요가 크게 다를 것으로 판명됨

〈표 86〉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초연구	50					
산학협력 평가단 구축 및 운영		100	100	100	100	100
50백만원 규모 사업			50x5개=250	50x5개=250	50x10개=500	50x10개=500
100백만원 규모 사업			100x5개=500	100x5개=500	100x10개=1000	100x10개=1000
200백만원 규모 사업			200x5개=1000	200x5개=1000	200x10개=2000	200x10개=2000
총비용	50백만원	100백만원	1,850백만원	1,850백만원	3,600백만원	3,600백만원
도 재정부담	50백원	100백만원	1,025백만원	1,025백만원	1,900백만원	1,900백만원

• 이 자금은 도의 재원, 기업의 재원, 기업이 존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업지원재원, 대학의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 자금을 동원한다.

〈표 87〉

재원	도	기업	대학	기초자치단체
	도의 기업지원과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기업은 문제해결 산학협력의 일부를 부담	대학생의 취업지원 자금 및 산학협력 자 금	지역에 경제적 영 향을 미치는 기초자 치단체의 일부 책임
	50%	20%	10%	20%

■ 청양대학 평가 및 혁신 사업

(1) 사업 필요성: 청양대학은 도민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립대학으로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전문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기업활동의 지원 측면과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청양대학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없었으므로 청양대학이 그 재정투입에 맞게 충남도의 중견인력의 제대로 육성하고 있는지 또 전문대학 수준에서 지역의 산학협력을 주도하게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학교의 경영상태, 인력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임.

청양대학 혁신으로 지역의 선도적 역할 가능성 탐색

(2) 사업개요: 대학의 성과평가 및 대학 운영구조 개편 역할 혁신

(3) 기대효과: 공립 전문대학으로서의 역할: 지역 학생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중 소기업 지원 역할 확대 재정투자의 효율성

(4) 소요예산: 1억원 수준의 연구자금: 청양대학 예산으로 편성단기적인 사업

마. 교육 거버넌스 체계구축

■ 충남교육발전협의회

(1) 사업의 필요성

도지사의 교육분야 공약사항 추진 협의 및 심의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 심의,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 기구 필요

(2) 사업개요

○ 기존 도-교육청 간 실무협의체인 교육정책협의회를 민간 전문가 교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충남교육발전협력위원회로 확대 재편 이를 통해 민관협치형 교육발전 계획 구상체계를 신설토록 함

○ 본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행정기관:도, 교육청 각 4명)과 위촉직(민간 대표 각 8명)로 하도록 함,

(3) 기대효과

도와 도 교육청의 교육협력증진 및 도의 교육사업의 체계적 수행

(4) 소요예산

연간 4차례의 회의비 및 연구비

■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

- (1) 사업 필요성: 충남도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청사진 계획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임

- (2) 사업의 개요: 전문가, 도 교육청 전문가, 지역의 학부모 및 교사 등 다양한 관계자 그룹과 함께 도의 충남교육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함.

육아 및 보육,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의 교육, 전문계 고등학교 혁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양질의 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

- (3) 기대효과: 교육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평생교육의 단계적 확산 및 심화, 고등교육 체제의 질적 제고와 산학협력 등의 장기적 계획하에 추진

- (4) 예산

2011년 약 2억원으로 각 분야를 종합하는 교육계획수립

예산	2011	2012	2013	2014
위원회 운영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계획수립 및 평가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바. 충남희망교육재단

■ 충남희망교육재단설립 사업

- (1)사업 필요성: 재단법인충청남도장학회와 충청남도 학생기숙사를 충남희망교육재단으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구조 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

- (2) 사업의 개요

- 설립준비 등 규정마련
- 구재단을 해체하고 신규재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전환하고 기금

등을 확충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3) 기대효과

- 장학회와 학생기숙사의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도민과 시군의 참여를 통한 도민의 고등교육비 부담 해소와 장학금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4) 소요예산

〈표 88〉

단위: 억원

연도별	계(억원)	설립전 재산출연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계	500	260	80	80	80
도비	280	160	40	40	40
기금유치 (시군포함)	220	100	40	40	40

3. 사업 및 예산 조정안

가. 사업 및 예산 조정안

다음은 2010년 예산안과 2011년 잠정적인 예산안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예산과 비교한 것이다

〈표 89〉 2010년 교육경비 예산현황

1. 교육청지원(비법정) 예산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관계기관)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기타	
합 계		70,287	3,509	24,297	37,491	3,990	1,000	
방과 후 영어학교	171개교	8,550		2,565	4,275	1,710		교육협력
지역명문고 육성	2개교	3,200		800	800	1,600		교육협력
방과후 중국어학교	2개교	128		128				교육협력
중국어캠프운영		130		40	20	70		교육협력
전문계고 원어민배치	21명	1,050		315	525	210		교육협력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1개소	2,500		500	1,000		1,000	교육협력
아르헨티나교포학생 도서구입		5		5				교육협력
대안교육센터 운영비	1개소	500		500				교육협력 (교육청)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800		400		400		교육협력 (충발연)
학교 인조잔디 조성	6개교	3,425	2,100	450	875			체육 청소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20,570명	18,540		5,562	12,978			농업 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29,439명	2,013	1,409	252	352			축산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3,119명	10,151		2,030	8,121			농업 정책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620		310	310			도의 새마을과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27,000명	7,695		7,695				복지 정책과
아동급식비 지원	27,000명	10,980		2,745	8,235			복지정책과

2. 도 자체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관계기관)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기타	
합 계		7,594	400	6,810	384	-	-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5,000		5,000				교육협력 (청양대)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670	400	270				교육협력 (충발연)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지원		544		160	384			교육협력
충남 장학회 출연		400		400				교육협력 (장학회)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	2명	180		180				교육협력 (장학회)
충남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800		800				교육협력 (충남학사)

〈표 90〉 2011년 교육경비 예산현황

1. 교육청지원(비법정) 예산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관계기관)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기타	
합 계		113,471	3,410	28,639	49,696	31,726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38,734명	52,080		7,494	17,486	27,100		교육협력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	74,000명	740		222	518			교육협력
장애인체전 장애인 편의시설	1식	337		109	109	119		체육 청소년
방과 후 영어학교	171개교	7,695		1,924	3,847	1,924		교육협력
방과후 중국어학교	2개교	80		24	56			교육협력
중국어캠프운영	2회	130		40	20	70		교육협력
전문계고 원어민배치	21명	945		236	473	236		교육협력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600		300		300		교육협력 (충발연)
지역소규모 현안사업(시설, 프로그램)		2,200		1,100	1,100			교육협력
혁신형행복학교 지원	5개교	749		375	187	187		교육협력
학교 인조잔디 조성	10개교	5,000	1,710	450	1,050	1,790		체육 청소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320,570명	11,057		3,367	7,690			농업 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29,439명	2,412	1,700	218	494			축산과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3,119명	10,151		2,030	8,121			농업 정책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620		310	310			도의 새마을과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비	27,000명	7,695		7,695				복지 정책과
아동급식비 지원	27,000명	10,980		2,745	8,235			복지 정책과

2. 도 자체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백만원)						비 고 (관계기관)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교육청	기타	
합 계		11,017	400	7,464	2,153	-	1,000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1개소	3,500		1,000	1,500		1,000	교육협력
도립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		4,500		4,500				교육협력 (청양대)
지역인적자원개발지 원센터		600	400	200				교육협력 (충발연)
평생교육프로그램개 발 지원		933		280	653			교육협력
충남 장학회 출연		400		400				교육협력 (장학회)
도비유학 장학생 지원		225		225				교육협력 (장학회)
충남 학생기숙사 운영지원		859		859				교육협력 (충남학 사)

비법정으로 교육청을 지원하는 시군비와 국비를 제외한 도의 자체의 교육지원사업비는 2010년 예산안 약 243억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약 286억원으로 약 40억원 늘어났다. 이를 살펴보면 급식관련 사업비가 약 5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사업의 축소와 신규사업의 확대가 제한적이다. 도가 교육청의 협력 없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68억에서 74.6억원으로 6.6억 정도 늘어난 정도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 항목 중에 재정이 많이 투입된 '학기중 토요 공휴일 아동급식비'와 '아동급식비' 지원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의 교육예산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민정5기의 교육 분야 비전 학교교육의 내실화,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과 일자리 창출, 평생 및 시민 교육체제의 구축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투자이다. 다만 교육투자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친환경 무상급식과 같은 분야에서 사 군의 협조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육투자 전반의 지원을 확대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래의 <표 90> 본 연구에서 제기했던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에 적용했을 경우의 예산안과 2011년 충남 도청의 예산안과 비교한 것으로 그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2010년 예산과 2011년 예산안의 사업비 차이는 약 4,465 백만원으로 대부분 급식비에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정5기의 행복학교 지원과 같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이 지역 명문고 8억원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3.5억원 지나지 않는다. 행복학교 사업은 재정보다 성과가 더 중요하므로 이 사업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사업성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급식비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사업들의 축소를 통해 새로운 신규사업의 재정을 일부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낮은 수준의 교육재정 확대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생교육 체제구축 행복학교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3대 사업에 도가 당분간 집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산학협력은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비 이외의 도 사업비 책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는 새로운 도정의 교육비전이 2011년도에도 체계적으로 구체화 될 수 없음을 뜻한다. 조정안으로 기존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할 경우 예산증액은 60억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기존 사업을 지속하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재정부담의 수준은 크게 높지 않다. 최소한 2012년의 사업에서 이들 사업재정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민정 5기 교육분야의 성취는 매우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와 체제구축, 그리고 도청의 본청 조직에 교육관련 부서의 강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91〉 본 연구추정예산과 도 예산안 비교조정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예산액	조정예산액	증감	비고
		2010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안 (참조)	2011 -2012 조정예산안		
교육협력	친환경무상급식	5,562	1,0861	10,300	-560	조정
교육협력	평생교육관련사업	160	280	6,040	+5,760	확대
	(1)기반추진			5,080		
	(2) 평생교육			960		
교육협력	시민교육실시		0	834	+834	신규
교육협력	행복학교		375	800	+425	신규
교육협력	행복교육통합지원(무지개캠프 포함)		0	1,000	+1,000	신규
경제산업국	문제해결 산학협력		0	1,050	+150	신규
교육협력	청양대학진단평가 및 혁신			100	+100	확대
교육협력	청양대학육성지원	5,000	4,500	4,500	0	축소
교육협력	충남희망교육재단 및 학사운영	1,380	1,484	1,484	0	불변
교육협력	농어촌방과후 영어학습지원	2,565	1,924	1,000	-924	축소
교육협력	방과후 및 캠프 중국어 학습지원	148	64	0	-64	축소
교육협력	전문계고해외인턴 쉽	715	536	0	-536	축소
교육협력	한민족교육문화센 터	500	1,000	0	-1,000	축소
교육협력	지역 명문고 육성	800	0	0	0	축소
교육협력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0	232	232	0	신규
교육협력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아르헨티 나교포학생 도서 구입, 학교 인조잔디 조성, 학교 우유급식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16	18	18	검토필요(18)	
교육협력	대안교육센터운영 비	500	337	0		축소
	인적자원센터	270 (+국비 400)	200 (+국비 400)	200 (+국비 400)		
합계		17,616	21,811	27,558		

나. 조정안 설명

■ 신규, 축소, 확대 사업

- 신규사업은 친환경무상급식, 행복학교,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무지개캠프 및 학습준비물 지원), 산학협력, 평생교육기반조성, 시민교육 등이고 확대사업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무상급식은 기존의 급식예산이 있으나 사업의 성격변화와 사업규모로 볼 때 이를 신규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유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실현의 지원, 시민의 생애를 책임지는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일자리와 산업경쟁력을 위한 산학협력이라는 3대 구축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의 사업(지역명문고 지원, 농어촌방과후 영어학교, 중국어 학습지원, 전문계고등학교 해외인터쉽 지원, 한민족문화센터, 대안교육지원 사업들은 행복학교, 행복교육통합지원에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도 교육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과제

■ 위의 사업들을 조정하고 확대할 사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에 해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도청의 교육 관련 조직의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학교교육과 학교 밖교육의 지원확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체제의 구축과 확대, 산학협력체제의 구축 등은 지금과 같이 교육청을 통한 협력 사업만으로도 또는 단순한 예산지원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은 행정기구 내에서 조직과 확대하고 예산사업 등의 집행을 체계화함으로써 수행해야할 최소한의 단위를 갖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협력담당으로 이를 수행하는 체제는 교육사업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다. 최소한 과 단위를 넘어 국 단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 내년도 도의 예산안으로 보아도 행복교육통합지원센터나 평생교육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센터 또는 도의 산학협력체제의 구축은 현실적으로

2011년에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임시사업단을 꾸리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인, 전문가와 도의 교육협력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임시적인 사업 체제를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와 사업을 실행하는 구조가 없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 이 일종의 임시 사업단은 행복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의 확대(2012년 전문계 고등학교를 포함) 기반을 조성하며, 평생교육체제의 구축을 위한 준비와 현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시민교육체제의 준비, 산학협력기반구축과 실시를 준비한다. 임시사업단운영(느슨한 모임형태로 출발-협치의 출발)은 기존의 사업의 평가, 사업체제의 전환, 재정확보, 도 조직체제 내의 위상 확보 등의 단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
- 2012년 예산과 체제를 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민정5기 교육분야 비전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인식이다.

<참고문헌>

- 고전(2004),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발전·연계 방안, 경기논단 2004년 여름호.
- 김정원 외(2010), 2009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외(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석균(2009),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착 방향 대한문화아카데미.
- 박재운(2009),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 대한문화아카데미.
- 성열관 외 (200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및 집중지원효과연구, 한국교육, 35(3): 23-46.
- 이승희(2004), 경기도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인력 확보 방안 경기논단 2004년 여름호.
- 정순원(2007), 헌법상 교육자치의 법리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관계 교육법학연구 제19권 2호, pp.103~126.
- 조성호(2009), 민선 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9-69.
- 하봉운, 박봉수(2007), 실업계고(전문계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성과와 과제, 경기논단 2007년 겨울호.
- 하봉운(2004), 경기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발전방안 경기논단 2004년 여름호.
- 하봉운(2007),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 논쟁점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9권 2호, pp.187~209.
- 하봉운(2008),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0호 1호, pp.205~228.
- 하봉운(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의 전략적 확보 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1권 1호, pp.231~254.
- 한만길 외(2008), 농산어촌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초중학교, 한국교육개발원.

